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00-00

정책보고서 2017-63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정해식 · 김태완 · 류정희 · 안수란 · 여유진 · 이태진
오일석 · 정소연 · 전지현 · 김근혜



법무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Ⅲ) - 사회통합 국민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공동연구진】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수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일석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정소연 법률사무소 보다 변호사

전지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본 연구보고서는 2017년도 법무부 용역연구과제로서
연구내용은 법무부의 공식전해가 아님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 시행으로 사회서비스의 개념이 크게 확장되었다. 확장된 각 사회보장 영역에서 국민이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 역시 계속되고 있다. 법률복지 영역에서는 기존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여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의 효과적,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법률구조 서비스 공급의 확대가 이뤄지는 현 시점에서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체계 구성이 절실하다. 서비스 공급자 우위의 법률 시장이라는 전문적 영역에서 취약계층이라는 수요자의 특징을 고려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요자의 문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서비스 공급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가 위주로 편성된 시장에서는 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각 역할을 파악하고, 현재 복지 영역에서 이뤄지는 복지서비스와 법률구조 서비스를 짚어보면서 법률구조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법률구조 제도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서 잠재적 수요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분석하고, 외국의 법률구조 제도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법률구조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함의를 찾고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일선의 현장 활동가들과 함께 법률복지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법률복지의 새로운 단계를 모색하는데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정해식 부연구위원의 주관 하에 본원의 이태진 연구위원, 김태완 연구위원, 여유진 연구위원, 류정희 부연구위원, 안수란 부연구위원, 전지현 전문연구위원, 김근혜 연구위원이 참여하였고, 고려대학교 오일석 교수, 법률사무소 ‘보다’의 정소연 변호사가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취약계층 대상의 각 영역 복지서비스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고, 법률복지 발전을 위한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자문위원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의 실태조사가 원활히 진

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일선 통합사례관리 담당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2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4
제3절 보고서의 구성	26
제2장 법률구조 서비스 공급자 내용분석	27
제1절 법률구조의 체계 분류	29
제2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현황	38
제3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현황	57
제4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법률구조 현황	72
제5절 법률홈닥터의 법률구조 현황	79
제6절 마을변호사제도의 법률구조 현황	87
제7절 소결	98
제3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법률서비스 지원체계 진단	101
제1절 아동·가족 분야	103
제2절 금융·부채 분야	115
제3절 고용·노동 분야	123
제4절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체계	137
제5절 소결	143
제4장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 분석	145
제1절 조사 개요 및 방법	147
제2절 응답자 일반사항	151

제3절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	153
제4절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	178
제5절 법률복지 욕구	208
제6절 법의식 일반	229
제7절 국민실태조사	234
제8절 조사결과 요약	237

제5장 주요국 법률구조의 이해와 최근 동향 241

제1절 법률구조의 발전	243
제2절 주요국 법률구조 제도	246
제3절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현황 비교 및 최근 개혁 동향	276
제4절 법률구조의 발전방향	299

제6장 취약계층 지원 법률구조 제도 발전 방안 311

제1절 법률복지 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315
제2절 법률복지 지원체계의 홍보 개선	324
제3절 법률교육의 확대 및 부대비용 부담 완화	329

제7장 결론 331

제1절 연구결과 요약과 함의	333
제2절 정책제언	337

참고문헌 339

부록 344

표 목차

〈표 2-1〉 법률구조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액	36
〈표 2-2〉 대상별 법률구조 현황	37
〈표 2-3〉 최근 10년 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실적	40
〈표 2-4〉 법률구조 적용 대상자 소득기준(2017년)	43
〈표 2-5〉 유료 및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의 유형 및 구비서류	45
〈표 2-6〉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 구비서류	50
〈표 2-7〉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	51
〈표 2-8〉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실적	55
〈표 2-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사업 일람	64
〈표 2-1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경로	68
〈표 2-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 요건	69
〈표 2-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실적	70
〈표 2-1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실적-분류별	71
〈표 2-14〉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상담창구 일람	76
〈표 2-15〉 법률홈닥터 전국 배치 현황(2018년 1월 예정)	81
〈표 2-16〉 법률홈닥터 활동 실적	84
〈표 2-17〉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 (2017. 2. 27. 기준)	89
〈표 2-18〉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현황(2016년 말 기준)	96
〈표 2-19〉 서울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현황	96
〈표 3-1〉 드림스타트 욕구조사 영역	112
〈표 3-2〉 서민금융지원제도 현황	116
〈표 3-3〉 주요 서민금융상품 비교(2016년 기준)	118
〈표 3-4〉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123
〈표 3-5〉 2016년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 처리현황	124
〈표 3-6〉 대상별 고용복지사업 내용	126
〈표 3-7〉 연도별 무료 법률구조 실적	127
〈표 3-8〉 2016년 체당금 조력지원 현황	129
〈표 3-9〉 2016년 권리구제지원팀 사업 추진 현황	130
〈표 3-10〉 고용관련 법률지원서비스	132
〈표 3-11〉 희망복지사업단의 욕구영역	140

〈표 4-1〉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조사 내용	148
〈표 4-2〉 지역별 표본 수	150
〈표 4-3〉 응답자 분포	152
〈표 4-4〉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153
〈표 4-5〉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154
〈표 4-6〉 소득구간별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154
〈표 4-7〉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155
〈표 4-8〉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155
〈표 4-9〉 판결 뉴스에 대한 관심도별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156
〈표 4-10〉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156
〈표 4-11〉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157
〈표 4-12〉 소득구간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157
〈표 4-13〉 주관적 소득수준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158
〈표 4-14〉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158
〈표 4-15〉 판결 뉴스에 대한 관심도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159
〈표 4-16〉 계약과정 규정에 대한 관심도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159
〈표 4-17〉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160
〈표 4-18〉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160
〈표 4-19〉 소득구간별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161
〈표 4-20〉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161
〈표 4-21〉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162
〈표 4-22〉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별 편의 정도	163
〈표 4-23〉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163
〈표 4-24〉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164
〈표 4-25〉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별 비용 부담 정도	164
〈표 4-26〉 소득구간별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165
〈표 4-27〉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166
〈표 4-28〉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167
〈표 4-29〉 법률서비스 기관별 이용 비용	168
〈표 4-30〉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168
〈표 4-31〉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169

〈표 4-32〉 소득구간별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169
〈표 4-33〉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170
〈표 4-34〉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171
〈표 4-35〉 편의 정도별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171
〈표 4-36〉 법률서비스 종류별 이용 비용	172
〈표 4-37〉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173
〈표 4-38〉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173
〈표 4-39〉 소득구간별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174
〈표 4-40〉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174
〈표 4-41〉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174
〈표 4-42〉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 정도	175
〈표 4-43〉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 정도	175
〈표 4-44〉 소득 구간별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 정도	176
〈표 4-45〉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 정도	176
〈표 4-46〉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별 부담 정도	177
〈표 4-47〉 교육수준별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 정도	177
〈표 4-48〉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178
〈표 4-49〉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179
〈표 4-50〉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179
〈표 4-51〉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180
〈표 4-52〉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180
〈표 4-53〉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 여부별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180
〈표 4-54〉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경로	181
〈표 4-55〉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경로	182
〈표 4-56〉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경로	183
〈표 4-57〉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경로	184
〈표 4-58〉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 여부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경로	185
〈표 4-59〉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185
〈표 4-60〉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186
〈표 4-61〉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186
〈표 4-62〉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187

〈표 4-63〉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187
〈표 4-64〉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 여부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187
〈표 4-65〉 법률구조 사업 이용 기관	188
〈표 4-66〉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기관	189
〈표 4-67〉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기관	190
〈표 4-68〉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기관	191
〈표 4-69〉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 여부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기관	192
〈표 4-70〉 법률구조 사업 이용 종류	192
〈표 4-71〉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종류	193
〈표 4-72〉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종류	194
〈표 4-73〉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종류	194
〈표 4-74〉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195
〈표 4-75〉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196
〈표 4-76〉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196
〈표 4-77〉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197
〈표 4-78〉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198
〈표 4-79〉 법률구조 사업 이용 비용	199
〈표 4-80〉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199
〈표 4-81〉 법률구조 사업 이용 비용의 부담 정도(무료인 경우 제외)	200
〈표 4-82〉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비용의 부담 정도(무료인 경우 제외)	200
〈표 4-83〉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	201
〈표 4-84〉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	201
〈표 4-85〉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	201
〈표 4-86〉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	202
〈표 4-87〉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	202
〈표 4-88〉 법률구조 사업의 도움 정도	203
〈표 4-89〉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의 도움 정도	203
〈표 4-90〉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의 도움 정도	203
〈표 4-91〉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구조 사업의 도움 정도	204
〈표 4-92〉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의 도움 정도	204
〈표 4-93〉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추천 의향 여부	204

〈표 4-94〉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추천 의향 여부	205
〈표 4-95〉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 추천 의향 여부	205
〈표 4-96〉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구조 사업 추천 의향 여부	205
〈표 4-97〉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 추천 의향 여부	206
〈표 4-98〉 법률구조 사업 주요 이용기관별 만족도	206
〈표 4-99〉 법률구조 사업 주요 이용기관별 도움 정도	207
〈표 4-100〉 법률구조 사업 주요 이용기관별 추천 의향	207
〈표 4-101〉 지역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208
〈표 4-102〉 원하는 상담형태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209
〈표 4-103〉 과거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210
〈표 4-104〉 과거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211
〈표 4-105〉 법률상담터 배치 지역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212
〈표 4-106〉 수급지위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213
〈표 4-107〉 소득수준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213
〈표 4-108〉 주관적 소득계층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214
〈표 4-109〉 법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 인식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214
〈표 4-110〉 필요한 상담의 형태	215
〈표 4-111〉 과거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215
〈표 4-112〉 과거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216
〈표 4-113〉 법률상담터 배치 지역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217
〈표 4-114〉 수급지위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217
〈표 4-115〉 소득수준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217
〈표 4-116〉 주관적 소득계층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218
〈표 4-117〉 법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 인식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218
〈표 4-118〉 법률구조 변호사의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219
〈표 4-119〉 과거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219
〈표 4-120〉 과거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220
〈표 4-121〉 법률상담터 배치 지역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220
〈표 4-122〉 수급지위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221
〈표 4-123〉 소득수준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221
〈표 4-124〉 주관적 소득계층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221

〈표 4-125〉 법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 인식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222
〈표 4-126〉 법률구조 사업 이용을 위해 이동할 수 있는 시간	223
〈표 4-127〉 과거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223
〈표 4-128〉 과거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224
〈표 4-129〉 법률홍닥터 배치 지역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224
〈표 4-130〉 수급지위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225
〈표 4-131〉 소득수준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225
〈표 4-132〉 주관적 소득계층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225
〈표 4-133〉 법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 인식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226
〈표 4-134〉 법률구조 사업 이용을 위해 부담 가능한 금액	226
〈표 4-135〉 과거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별 부담 가능한 금액	227
〈표 4-136〉 과거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별 부담 가능한 금액	227
〈표 4-137〉 수급지위별 부담 가능한 금액	228
〈표 4-138〉 소득수준별 부담 가능한 금액	228
〈표 4-139〉 주관적 소득계층별 부담 가능한 금액	228
〈표 4-140〉 법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 인식별 부담 가능한 금액	229
〈표 4-141〉 주관적 소득계층별 생활법률 관련 정보 습득 경로	230
〈표 4-142〉 수급지위별 생활법률 관련 정보 습득 경로	230
〈표 4-143〉 주관적 소득계층별 판결 뉴스에 대한 관심도	231
〈표 4-144〉 수급지위별 판결 뉴스에 대한 관심도	232
〈표 4-145〉 주관적 소득계층별 계약 시 관련 내용의 확인 정도	232
〈표 4-146〉 수급지위별 계약 시 관련 내용의 확인 정도	233
〈표 4-147〉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의 편의 정도	233
〈표 4-148〉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의 편의 정도	234
〈표 4-149〉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개요	234
〈표 4-150〉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필요 경험	235
〈표 4-151〉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경험	235
〈표 4-152〉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편의	236
〈표 4-153〉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어려움 사유-1순위	236
〈표 4-154〉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어려움 사유-2순위	237
〈표 5-1〉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법령 및 기구	277

〈표 5-2〉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대상자 임금 수준	278
〈표 5-3〉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대상자 최대 임금 수준과 부담액	279
〈표 5-4〉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정보 제공 및 상담과 제공기관	281
〈표 5-5〉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관련 협상과 협의	282
〈표 5-6〉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관련 재판 절차 지원 내용	283
〈표 5-7〉 유럽 주요국의 형사 사건 법률구조 현황	285
〈표 5-8〉 유럽 주요국의 가사 사건 법률구조 현황	287
〈표 5-9〉 유럽 주요국의 난민과 이민 사건 법률구조 현황	288
〈표 5-10〉 유럽 주요국의 채무 및 화생 사건 법률구조 현황	289
〈표 5-11〉 유럽 주요국의 주택 문제 관련 법률구조 현황	290
〈표 6-1〉 법률복지 발전 방안 자문회의 개최 내역	314
〈표 6-2〉 가구원별 주요문제(읍면동 단위)	323
〈표 6-3〉 권역별 법률홍닥터 거점기관 현황	325
〈표 6-4〉 법률복지 관련 복지자원 통합DB 등록 내용	327

그림 목차

[요약그림-1] 본 연구의 구성 체계	2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체계	26
[그림 2-1] 법률홈닥터의 법률구조공단·복지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현황	30
[그림 2-2] 법률구조 서비스 전달체계	31
[그림 2-3]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38
[그림 2-4]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직도	41
[그림 2-5] 2015년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기준중위소득 기준)	42
[그림 2-6]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 및 가사 사건 처리절차	54
[그림 2-7]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 사건 처리절차	54
[그림 2-8]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	56
[그림 2-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직도	58
[그림 2-1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건처리절차	61
[그림 2-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상담 프로그램	66
[그림 2-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도별 상담실적	70
[그림 2-1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조직도	73
[그림 2-14]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온라인상담게시판	75
[그림 2-15]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 누적건수	78
[그림 2-16] 법률홈닥터 인원 현황	80
[그림 2-17] 법률홈닥터 처리 절차도	82
[그림 2-18] 법률홈닥터 서비스 전체 만족도 추이	85
[그림 2-19] 법률홈닥터 서비스 항목별 만족도	86
[그림 2-20] 지역 수 대비 마을변호사 배정 비율	93
[그림 2-21] 연차별 마을변호사 활동 현황	94
[그림 2-22] 마을변호사 활동 흐름도	95
[그림 3-1]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104
[그림 3-2] 아동학대 대응체계	107
[그림 3-3] 한부모 가족 법률구조절차	110
[그림 3-4] 드림스타트 사업구조	111
[그림 3-5] 희망복지사업단의 통합사례관리의 절차 개요	138
[그림 3-6] 통합사례관리 초기상담지	139

[그림 3-7] 희망복지지원단사업안내의 법률홈닥터 참고자료	141
[그림 3-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무료소송지원 안내	142
[그림 6-1] 통합사례관리-초기상담지	322
[그림 6-2] 복지ro '법률홈닥터' 검색결과	32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법률상담과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법률 상담 및 조력을 의도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소송 조력에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 중임.
 - 사회보장 정책 영역의 확대와 맞물려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복지 개념의 실질적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기관 간 체계적인 업무 차별화와 제공기관과 복지기관(시·군·구청, 각종 복지관, 각종 지원제도의 초기 상담기관)의 적절한 연계가 필요함.
 - 수요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구조기관 간 역할 분담 필요
- 본 연구는 법률구조 사업의 전반적 현황 및 공급 실태, 법률구조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법률복지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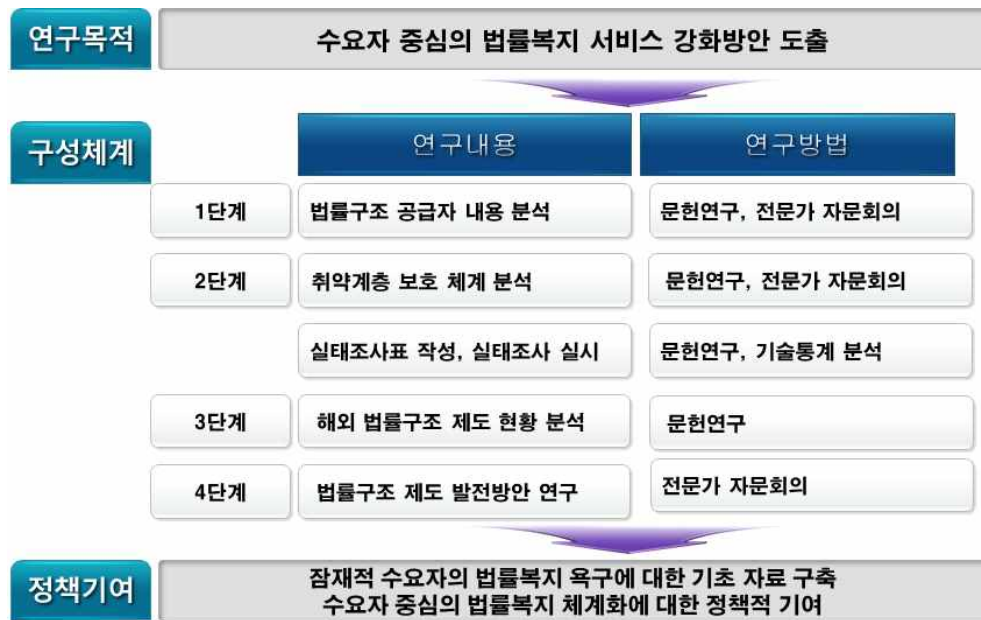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다음의 과제를 수행함.
 - 첫째, 현행 법률구조 서비스 공급기관 내용 분석을 실시
 - 둘째, 법률복지의 잠재적 수요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법률복지 수요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 셋째, 해외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
 - 넷째, 우리나라 법률구조 제도의 발전 방안을 도출

2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수요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요약그림-1] 본 연구의 구성 체계



3. 법률구조 서비스 공급자 내용분석

□ 법률복지는 국민에게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로 정의할 수 있음.

- 법률구조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법률복지는 빈곤 또는 요보호 대상자 뿐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사법예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
 - 법률복지는 보편적인 서비스 이용 기능성의 확대를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 법률구조 체계는 전통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인 공급 측면, 재원의 측면, 법률서비스의 형태 측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법률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따라 분류가 가능함.

- 공급측면에서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소송법에 따른 국선변호와 소송 구조, 변호사법에 따른 일반변호사의 공익활동으로 구분
- 재원 측면에서는 공적기금(정부예산 또는 공적기금)을 활용하는 법률구조와 그렇지 않은 법률구조로 구분
- 형태 측면에서는 법률상담에서부터 소송대리로 연결되는 형태와 서비스 자체가 소송대리에 국한되는 서비스로 구분
- 법률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따른 분류는 경제적 접근성 제고 방식과 수요자 중심 접근성 제고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함.
 - 전자는 금전적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 후자는 서비스 제공 방식을 다양하게 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임.
 - 최근에 상담 등 1차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제고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주요한 법률구조 서비스 공급기관의 법률구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살펴보았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6년 171,556건(민사 등 150,088건, 형사 21,468건)의 법률구조 및 약 560만 여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함.
 - 2016년 말부터 법률구조의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의 125%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무료 법률구조 대상은 별도로 적용하고 있음.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법률구조 사업 협약 체결 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적립금을 재원으로

4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로 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도 실시

- 다만, 무료구조대상자와 유료구조대상자의 범위와 조건이 협약단체 및 지원금, 출연금 규모에 따라 제각기 다르고, 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복잡
 - 대면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의 1차 상담부터 소송구조까지를 모두 담당하고 있음.
 - 법률 상담을 확대 중이며, 2008년 이후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이 증가 중
 - 대국민 법률서비스 증진을 위해 2017년 9월 29일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운영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취약계층 중 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가정 문제에 중점을 둔 법률구조기관으로, 법률상담과 화해조정, 소송구조 등의 법률구조 사업을 실시
- 설립 이후 총 373만 여건의 구조실적 중 소송구조는 1만여 건으로, 상담중심의 서비스 제공
- 대한가정법률상담원은 면접상담을 중심으로 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화해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향
- 법률홈닥터 제도는 수요자의 적극적인 이해와 행위를 전제로 했던 기존 법률구조의 약점을 보완하고, 법률구조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제도임.
- 2011년 시범사업 이후, 2012년 20명, 2014년 40명, 2017년 60명, 2018년 65명의 법률홈닥터가 시·군·구청 등 거점지역에 배치
 - 1차 법률서비스인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적,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
 - 법률서비스 소외자 발굴 및 맞춤형 법교육에 주력
 - 법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한 발굴 및 개입 실천
 - 대상자 맞춤형 법교육 실시

- 법률홈닥터 활동 실적은 2012년에 11,792건, 2013년에 17,611건, 2014년에 28,563건, 2015년에 37,663건, 2016년에는 39,361건으로 증가
 - 주요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지역 주민, 저소득 주민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
- 법률홈닥터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상담변호사 친절성, 상담시간 충분성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마을변호사 제도는 물리적·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7년 2월 1,419개 지역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었으며, 전국 개업변호사 2만여 명 중 8.5%가 참가
 - 2016년 기준으로 약 1만여 건의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
- 법률상담 제공 기관 간의 중복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각 서비스 간 차별성이 명확하므로 이를 강조하는 것이 서비스 이용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됨.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을, 마을변호사 제도는 전화를 이용한 상담을,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대면 상담을 각 특징으로 함.
- 취약계층의 경우 문제를 발굴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며, 인터넷, 전화 상담은 본인의 문제를 가능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때 활용 가능함.

4.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법률서비스 지원체계 진단

-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법률지원은 현재 가장 도움이 필요한 영역임.
- 취약계층의 피해가 증가함에도 사회적 무관심,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여성가족부에 의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와 보건복지부에 의한 학대 피해아동 지원체계로 구분되며, 각각 법률적 지원 체계가 작동하고

6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에게 무료 법률구조를 실시 중
- 현행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제도는 형사 절차상 권리보호, 접근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제도로 구분되며, 각각 변호사, 검사, 법원 등이 개입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실시 중에 있음.

○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위기도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법률 상담 및 법률복지 지원은 미비한 수준임.

- 소송구조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소송내 지원, 분쟁 해결에 대한 개입은 체계적으로 이뤄짐.
- 법률홈닥터 제도는 시·군·구 단위의 아동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인 드림스타트와도 유기적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금융 및 부채 관련하여는 복지서비스적 개입과 법률지원 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 및 부채 부담에 있는 사람들을 저금리로 전환, 채무 조정 등을 실시하는 복지서비스적 개입이 있음.

○ 법률지원 서비스는 채권자와의 법적 문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 조기 개입이 필요한 개인채무자와 금융 기관의 행정적, 법적 협의에 개입하지는 못함.
- 과도한 추심에 따른 문제, 사인간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

□ 고용 및 노동 분야는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로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노동시장 취약성이 높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보다는 중장년 남성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편제되어 있음.
 -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경험하는 노동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취약계층에게는 법률상담, 진정서 작성 등의 기초단위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취업 단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강조하는 보다 강화된 노동법률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특히 해당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관련 거점 지역(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 한편, 임금채불 무료 법률구조 사업의 경우 담당인력의 부족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고용·노동 분야에서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시도 중에 있음.
-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체계에서 법률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대응 중에 있음.
- ‘법률 및 권익 보장’의 필요를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법, 옹호, 인권 등과 관련하여 권리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특정하여 파악 중임.
 -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는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에 법률홈닥터 제도를 소개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 안내에서는 무료 법률구조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을 안내 중에 있음.
 -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책자에 법률홈닥터 제도 및 법률복지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급자 중심의 법률구조 지원 체계에서는 취약계층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적

인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문제 및 상황이 심각해진 이후에야 법률지원 체계가 작동
 - 상대적으로 저위기의 문제 상황에서 예방적 차원의 법률상담 및 법률복지 지원이 미비함.
- 문제의 발굴 차원에서의 개입이 미흡
- 법률복지 지원체계까지의 유도가 미흡
 - 전문지원 기관까지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보완체계가 필요

5.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 분석

- 법률복지 및 법률구조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조사」를 실시
 - 취약집단 1,000명을 목표로, 저소득층을 비롯하여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의 협조를 통해 조사대상자에게 개인정보 등 조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조사를 실시
 - 응답자 일반사항,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 법률구조 사업 인지 및 이용 경험, 법률복지 욕구, 법의식 일반에 대한 질문을 구성
 - 2017년 8월 28일에서 9월 27일까지 조사 진행
 - 통합사례관리사 150명이 조사에 협조하여, 1,004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1,001명을 분석에 활용
 - 응답자의 일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성별은 여성이 62.4%(남성 37.6%)이며, 연령은 40대가 30.4%, 50대가 26.2%, 30대가 18.5%의 순이었음.
 - 그 외 수급 유형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49.0%이었고, 차상위계층이 20.7%, 비수급자가 30.3%였음.

□ 실태조사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법률서비스의 욕구 및 이용 경험 분야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서 차상위수급자 집단이 법률문제가 있었을 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음. 법률복지 서비스가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제공되다 보니 취약계층의 이용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차상위층의 경우에는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소득이 매우 적거나 또는 높은 집단에서는 법률문제의 필요가 낮았고,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인 경우에서 법률문제를 경험했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응답하였음. 취약계층의 경우 경험할 수 있는 법률문제의 범위 내에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보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은 비용 부담이었음. 이에 따라 법률복지 제공에서는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법률서비스의 이용 분야는 민사 일반 분야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사 관련(혼인/이혼, 호적/친자, 상속, 가정폭력, 기타) 분야가 많았음. 소득이 높은 경우 민사 일반의 비중이 높고,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가사 관련 문제의 비중이 높았음. 취약계층이 경험하는 법률적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내용적으로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률서비스의 이용 종류를 보면 법률상담 및 정보 제공의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였음. 취약계층이 경험하고 있는 법률 관련 문제의 특징은 법률적인 다툼을 벌여야 할 사안보다는 관련된 내용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문제, 법절차 상의 문제 등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음.

○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 분야

- 법률구조 사업에 대해서는 다수(73.7%)가 인지하고 있었음.

-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는 대체로 시·군·구청 등 공무원을 통해서 이뤄지고, 다음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었음.
- 이들 취약계층이 평소에 법률적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지인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법률구조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기초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층 경우에는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가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이었음.
-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비용을 부담하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68만원 가량을 부담하였으며, 그 중 부대비용은 약 20만원 수준이었음.
-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함에도 부대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각종 서류 발급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의미
-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8점을 보였으며, 법률구조 사업이 본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정도도 5점 만점에 평균 3.82점을 보였고, 향후 타인에게 법률구조 사업을 추천하겠다는 의향은 88%가 나타내었음.
-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해석 가능함.
- 이용자 만족도는 법률홈닥터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 법률복지 욕구

- 법률구조 사업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적절한 배치 규모에 대해서는 읍·면·동별 1인 배치가 가장 높았음. 그러나 실제로 법률구조 사업을 경험해본 사람의 경우에는 시·군·구별 2인 배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법률구조 사업의 필요한 상담의 형태는 대면 상담의 필요가 매우 높았음.
- 특히, 과거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의 경우에는 대면 상담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음.
- 법률구조 사업 담당자의 적절한 배치 장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 내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음.

-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설문 응답자가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이내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부담가능한 금액은 20만원 미만 수준이었음.
- 종합하면, 법률구조 사업은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평소에 관련 업무를 보는 기관인 시·군·구청 근처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한 형태로 이뤄지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할 수 있음.

○ 법의식 일반 분야

- 취약계층일수록 법률관련 정보를 주위 사람에게 듣는 경향이 높았음.
- 언론매체가 주요한 법률정보 취득 매체이며, 2순위 정보 습득 매체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확인됨.
 - 소득하위층 및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로 구청, 주민센터, 주위사람을 이용하여 정보를 많이 얻는 편이고, 중간층 집단에서는 인터넷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하위층일수록 법률정보에 대한 관심도, 계약서 작성 시 관련 내용의 숙독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법률서비스 이용에서 어려움은 95% 이상 국민이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하위층은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46.5%로 높았음.

□ 국민실태조사

- 본 연구 진행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함.
- 우리 국민들은 지난 5년간 법적 문제의 발생으로 법률상담, 법률서류 작성 등의 법률서비스의 필요경험을 6.9% 가지고 있었음.
 - 이러한 법률서비스 이용 필요는 하위층에서 9.5%로 높았고, 다시 낮아지다가 중상층에서는 7.9%로 높아짐.
 - 법률서비스의 이용 필요가 있을 때, 실제로 이를 이용한 사람은 소득 계층에 따라 미세하게 차이가 있었음. 소득 하위층은 74.2%가 이용했고, 중간층은 78.7%, 중상층은 80.4%가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였음.

-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은 64.33%의 국민들에게 나타났다, 그 중 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47%로 나타났고, 비용문제가 37.34%로 나타났다.
- 내용이 어려워서라는 이유는 소득계층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비용문제를 지적하는 경향은 하위층에서 높은 비율로 제시되었음.

6. 주요국 법률구조의 이해와 최근 동향

□ 전 세계적으로 법률구조 제도는 확대 후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

- 법률구조 제도는 1970년대까지 유럽 각국과 미국으로 확대되었으며, 국가의 지원 예산과 지원 건수 및 지원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
 - 1960년대 중반부터 세계적인 ‘사법에의 접근’(access to justice) 운동이 발생
 - ‘정의에 대한 동등한 접근’(equal access to justice)이라는 이념과 이를 실효화하는 법률구조 제도는 법치주의의 보편적 작동기제로 자리잡았음.
-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장기적인 경제적 불황에 직면하면서 법률구조에 대한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음.
- ILAG(International Legal Aid Group)은 소송대리 지원제도의 틀에 맞춰 비용이 많이 들고, 법정 중심주의에 지배되어 실제 사회에서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구제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영국의 법률구조 제도를 비판
- 2000년 이후 법률구조 제도는 첫째, 보편적 법률구조의 이념을 수정하여 법률구조의 대상을 선별하며 그 대상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확립하고 있으며, 둘째, 법률구조에 대한 재정 또는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복지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구현하여야 하는바 법률구조에 대한 품질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미국의 법률구조 제도

- 형사 법률구조는 공공변호인(Public Defender), 국선변호인(Assigned

Counsel), 계약변호인(Contract Defender) 등에 의한 법률구조로 구분

- 공공변호인: 주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에 고용된 변호사가 형사 국선변호 사건만 전담하여 처리하는 방식
- 국선변호인: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형사 피고인을 위해서 법원이 개업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를 담당
- 계약변호인: 개업변호사나 로펌 또는 민간자선기금·공공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비영리법률구조기관이 주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선변호 사건을 담당

○ 민사 법률구조는 법률구조공사(Legal Service Corporation)에 의한 법률구조, 법률구조공사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나 각주의 법률구조 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법률구조, 법률구조공사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면서 법률구조 제도에 포섭되지 않는 개별적 법률구조로 구분

- 법률구조공사는 직접적으로 법률구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의회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지방의 독립된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 지역별로 비영리 법인이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운영
- 월급제로 고용되는 전담변호사는 법률구조 활동에 전념, 유사법조인으로서 paralegal이 지역 법률구조 프로그램에 고용되어 전담변호사의 법률구조를 지원
- 개업변호사도 법률구조 활동에 참여

□ 일본의 법률구조 제도

○ 일본의 법률부조제도는 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제도의 실현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05년 6월 종합법률지원법이 제정

- 민사·형사와 무관하게 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 종합법률지원법의 중심축으로 되는 운영주체로서 일본사법지원센터 설립

14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 정보제공, 상담 후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변호사회나 사법서사회, 지방공공단체 등)를 소개
- 사법지원센터의 애칭은 ‘법테라스’
- 자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서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나 사법서사에 지불하는 재판대리비용이나 서류작성비용의 대출 실시
-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변호에서부터 기소 후의 피고인변호까지 형사 절차의 각 단계를 통하여 일관된 형사 변호체제를 정비

○ 법률구조 활성화를 위한 요구

- 법률구조를 받기 어렵고 불충분한 지역에 지원센터의 거점을 증가할 필요
- 정보제공에 있어 콜센터 역할 충실 뿐 아니라 안내 홍보 등의 필요를 강조

□ 영국의 법률구조 제도

○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법률구조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축소나 삭감을 추진하면서, 2012년 법률구조와 범죄인양형처벌법에 의하여 완전히 변화

- 영국은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법률구조 제도를 구축하였다가, 1980년대 이후 법률구조의 축소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도로 1999년 정의에의 접근법(the Access to Justice Act 1999)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설립된 법률서비스협회(Legal Service Commission)를 통하여 법률구조 개선을 모색하였던 바 있음.

○ 법률구조와 범죄인양형처벌법(LASPO)

- 법률구조에서 제외되는 사건들에 대하여 명시하고 지원 대상에 대하여도 특정
- 가정폭력, 강제 혼인 및 아동 유괴 등과 관련한 가사 사건, 정신적 보건 사건, 모든 난민 사건 및 주택이 긴급한 위험 하에 있는 자의 채무 및 주택 사건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민사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법률구조 제도에 의하여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에게 지급되던 보수의 수준을 삭감하였으며,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지원 자격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

사하고, 근접한 거리의 면접 상담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전화로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였음.

- LASPO 시행 후 영국의 법률구조는 46% 감소, 특히 사회복지 관련 사건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88,378건이 법률구조의 지원을 받았지만 LASPO 시행 후 1년 동안 단 145건의 법률구조 지원이 이루어져 9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네덜란드의 법률구조 제도

- 소송 지향의 법률구조보다는 법률상담과 조언을 실시하고자 학생운동에서 로샵(Law shop)을 설립, 1974년에 법무부는 로샵과 같이 일선에서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법률구조사무소(Legal Aid bureau)'를 설립
- 그러나 급격한 비용 증가에 따라 비용 감축을 목적으로 1994년 네덜란드 법률구조법을 실시
 - 소득기준이 하향조정되면서 법률구조 대상자 수가 급격히 감소, 법률구조 예산 감소, 법률구조 대상자의 재정부담금 증가,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중앙에 집중

□ 법률구조 제도의 발전 방향

- 법률구조에 따른 재정적 한계를 경험하면서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보호 보험, 성공보수 및 제3자에 의한 소송비용의 제공 등 소송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음.
- 당사자 본인이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 형성 과정으로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가 확대
- 법률구조 수급 결정의 판단에 있어 운영 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
 - 통폐합, 민영화 결정 등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

□ 우리나라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률구조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점에

서 외국의 법률구조 개혁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 가능함.

- 또한 법률 상담터를 통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으며, 분쟁의 신속한 해결로 사회적 갈등 비용 또한 최소화시킬 수 있어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

7. 취약계층 지원 법률구조 제도 발전 방안

□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법률 문제는 취약계층이 가지는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부각되는 경우가 많음.

- 취약계층이 가진 문제는 한 두 개의 실타래만 풀어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음.

- 법률상담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위주로 발전 방안을 제시

- 소송과 같은 법률서비스 영역에서의 전문적인 분야를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전문적 서비스 공급자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요자 중심성이라는 목적 하에 일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련의 체계에 대해 검토

□ 법률복지 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 취약계층 중심의 법률복지 지원체계 강화 필요

- 일반적 수준의 문제를 가지는 취약계층 대상의 서비스 공급 체계가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서비스는 법적인 용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본인의 문제가 어떠한 법률적 쟁점 사안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 수요자 중심의 현장 접근성이 높은 형태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률상담터 제도, 마을변호사 제도가 대표적임. 수요자 중심 접근 중에서 법률상담터 제도는 취약계층 중심, 마을

변호사 제도는 지리적 접근성 제약의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음. 또한, 법률홈닥터는 1차 법률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고 있어 배치된 지역 내에서 매우 높은 상담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법률홈닥터를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필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검토
-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분야 쟁점 사례집 발간 필요
- 수요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서비스 공급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문 상담 사례집 작성·발간이 필요
- 법률상담, 법률교육 등 취약계층 중심의 사업 확대를 통한 법률구조 수요 확대 필요
- 법률서비스 제공 과정의 조력자 제도 필요

○ 전문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법률복지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취약계층 대상의 다양한 일반 수준의 지원 후, 법률(소송)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전문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검토
- 전문적인 업무 처리 기관과 패스트 트랙을 설치하여 서비스 연계 강화

○ 지역의 법률 및 권익보장 필요에 따른 법률홈닥터의 배치

- ‘취약계층 중심의 법률복지 지원체계 강화 필요’, ‘전문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법률복지 지원체계 구축 필요’에 대해서는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대응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법률홈닥터 배치에 있어 복지 관련 업무(법률복지 욕구)가 많은 지역에 법률홈닥터를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제기
-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필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우선 배치
-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인 행복e음의 사례관리 영역에 법률복지 욕구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계화하여 추출해서 지역별 욕구 파악에 활용 가능함.
- 타 제도와의 중복 문제 이전에 적절한 수준에서 법률복지 필요와 법률서

비스 공급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배치를 고민해야 함.

○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법률적 욕구 해결에도 개입이 필요

-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복지서비스 공급자들이 경험하는 법률적 제약 요건에 대한 해결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법률복지 지원체계의 홍보 개선

○ 취약계층의 특성을 이해하는 홍보 필요

-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홍보,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홍보
 - 법률홈닥터 제도의 연계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 ‘드림스타트 사업안내’에 법률홈닥터 소개 필요
 - 지역의 복지박람회 등에 법률홈닥터를 소개

○ 사회보장통합정보망의 복지자원 통합DB에 법률홈닥터 제도를 등록, 활용

- 사회보장정보원 ‘복지ro’에 법률홈닥터 내용 등록 필요(각 지역의 법률홈닥터 배치 내용 등 상세 정보 제공 필요)

□ 법률교육의 확대 및 부대비용 부담 완화

○ 취약계층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관련하여 잘못 알고 있는 법률정보에 대한 교육 필요

○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하는데 있어 부대비용의 문제가 접근성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개입 필요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1절 연구 필요성

본 연구는 법률구조 기관의 법률구조 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법률구조 기관의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차별화하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구조법」(법률 제14102호)은 법률구조를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법의 시행 목적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구조 제도는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체계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률구조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과 법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이 다를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우리나라 법률구조에서는 관련 비용을 면제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서비스 제공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수요자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은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각 수요자 특성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 중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법률홈닥터’ 제도이다. 법무부는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대상자 맞춤형 법 교육,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 기관과 연계를 목적으로 법률홈닥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수요자 특성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서울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다. 이들은 특정한 범위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법률서비스의 제공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방식에 이를 포함할 수도 있다.

법률서비스는 법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¹⁾, 법률구조는 이러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에서 소외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일련의 체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구조에서 국가가 소송 조력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재판 외의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149만 여건(황승흠 외, 2016, p.55), 민사 사건 등 법률구조에서 소송구조는 13만 8천 여건(황승흠 외, 2016, p.88)이었다. 그러므로 소송구조에서의 법률구조 제도의 활성화 및 체계화와 별도로, 법률상담과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즉, 법률 상담 및 조력을 의도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수요자 중심의 법률구조 체계는 사회보장의 정책 영역 확대와도 관련된다. 법률서비스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공급이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서비스 이용 가능성의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법률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격차를 줄이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의 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즉, 법률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인프라가 된다 할 수 있다(황승흠 외, 2016, p.6). 이에 따라 법률복지를 국민에게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률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한 방안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률구조 기관과 복지기관과의 네트워크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제2조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정책 영역 확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 두었던 것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생애주기 각각의

1) 황승흠(2012)은 법률서비스를 ‘법적 문제에 처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자에게 제공하는 법적 조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

보편적 위험에 따른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한 사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 경향에 맞춰 법률구조의 개념 역시 특수한 사회적 욕구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던 것에서 ‘사법절차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민·관 복지자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복지자원 통합 DB’에서는 안전 및 권익보장이라는 정책 영역 하에 ‘법률 및 재무상담’, ‘법률지원 관련 비용 지원’의 영역을 두고 있다(정해식 외, 2014, p.115).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과 더불어 금융, 부동산, 신용불량, 개인 파산 등 재무·행정적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대응해야 하는 각종 복지욕구 중의 하나로 법률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기관 간 체계적인 업무 차별화와 제공기관과 복지기관(시·군·구청, 각종 복지관, 각종 지원제도의 초기 상담기관)의 적절한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법률복지 제공기관들(대표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은 비록 전문화된 영역이 있다고는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중복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사업은 ‘소송 등의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사업의 실시 이전에 법률상담’으로 영역을 한정하고 있으나, 두 사업의 중복에 대한 지적은 법률홈닥터 사업실시 초기부터 지적된 바 있다(국회사무처 2012, p.33), 또한 당시부터 법률홈닥터의 배치지역이 법률구조공단이 주로 배치되는 수도권 지역을 피할 필요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수요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조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각 기관이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의 특징, 이용자 특성을 파악하여 체계적 역할분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 적절한 법률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법적 분쟁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법률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자기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수요자 특성에 맞는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알아볼 것’(63.4%가 동의)이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은 잘 알지 못하는(‘알고 있다’에 대한 동의는 33.5%) 상황에 있다(현대호·김명아, 2015, p. 327). 즉, 일상생활에서 법적 조력을 얻고자 하지만, 이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법률복지에 대한 이용 욕구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도록 복지기관(시·군·구청, 각종 복지관, 각종 지원제도의 초기 상담기관)과 법률복지 제공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기 상담기관(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신용회복위원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 아동센터 등)에서 초기 사정(Intake), 사정(Assessment) 단계에서 법률 복지의 필요를 진단하고, 이에 따라 법률복지를 연계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률구조 사업의 전반적 현황 및 공급 실태, 법률구조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법률복지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행 법률구조 서비스 공급기관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법률복지의 잠재적 수요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법률복지 수요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며, 해외의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법률구조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첫째, 공급자 내용분석은 현행 법률구조 체계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나라 주요 법률구조 사업의 종류, 각 사업별로 제공 주체와 구조 대상자의 범위, 구조 절차, 조직, 재원 등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법률복지 수요자 조사는 법률복지를 필요로 하는 잠재적 수요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요의 정도, 초기 서비스 접근 경로, 복지상담 과정에서 법률복지에 대한 안내 경험 등을 조사한다.

셋째, 외국의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사례연구는 법률구조의 특성, 법률구조 서비스의 제공형태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우리나라 법률복지시스템의 체계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법률구조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방향에 대한 연구방법은 다음 각각을 적용하고자 한다.

실태조사에서 공급자 내용분석은 해당 기관의 사업설명서, 성과보고서 등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공급자 내용분석의 주된 대상 기관은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이다. 공급자 내용분석에서는 첫째, 각 공급자 유형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 특성 분석을 포함하고자 하며, 둘째, 서비스 공급 유형에서 최근 변화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공급자 내용 분석을 통해 제공기관 간 체계적 역할분담의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수요자 조사는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거점 기관에서 설문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서비스의 필요를 느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집단을 잠재적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이 취약집단에서 더 높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한편, 수요자 조사에서는 법률홈닥터의 배치 유무, 수급자 지위 등에 따라 법률구조 성과 및 이용 형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문 대상으로 한다. 한편, 수요자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법률구조 관련 전문가, 각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초기 법률복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안내한 경험 등을 가지고 있는 각 기관 상담사가 참여하는 설문지 개발 회의를 거쳐 설계하도록 한다.

외국의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외국의 법률구조 제도의 특성 및 법률구조 서비스의 제공 형태 등에 대한 모범사례를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서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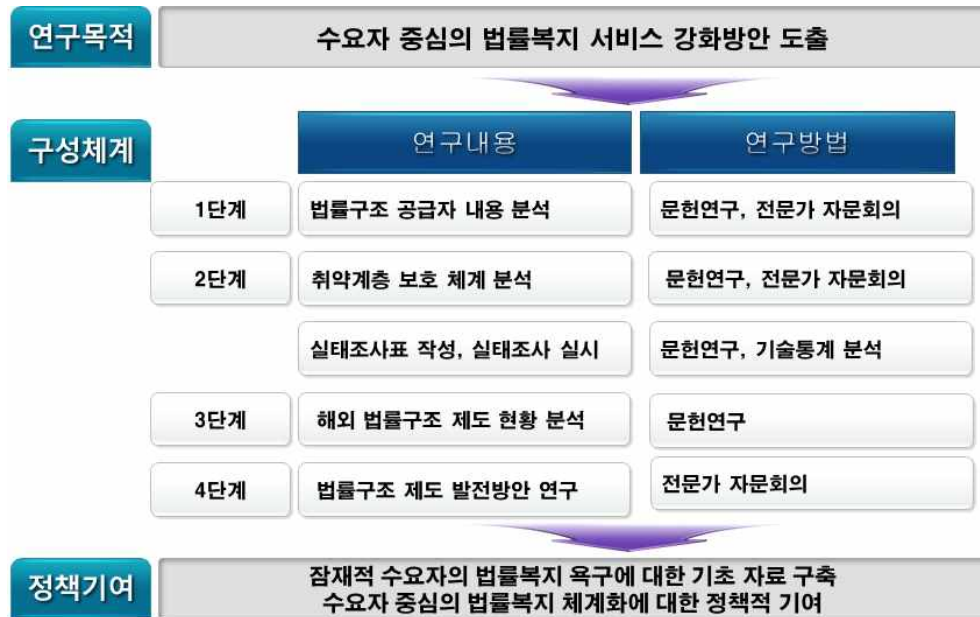
법률구조 제도 발전 방안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고, 이용자 관점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법무부 마을번호사 외에 법률복지를 직접 제공 또는 기획한 현장 전문가 대상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이상의 연구내용 및 방법에 따른 다음의 절차를 보고서 전반에 각각 배치한다.

서론인 1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반적 개요를 서술한다. 2장에서는 법률구조 공급자 내용 분석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뤄지는 취약계층 대상의 보호 체계와 그 속에서 법률구조의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법률복지 수요자 조사 결과와 함의를 제시한다. 5장에서는 해외의 법률구조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실태조사,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도출한 법률복지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7장은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체계



제 2 장

법률구조 서비스 공급자 내용분석

제1절 법률구조의 체계 분류

제2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현황

제3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현황

제4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법률구조 현황

제5절 법률홈닥터의 법률구조 현황

제6절 마을변호사제도의 법률구조 현황

제7절 소결

2

법률구조 서비스 공급자 내용분석 <<

제1절 법률구조의 체계 분류

1. 법률구조, 법률복지의 개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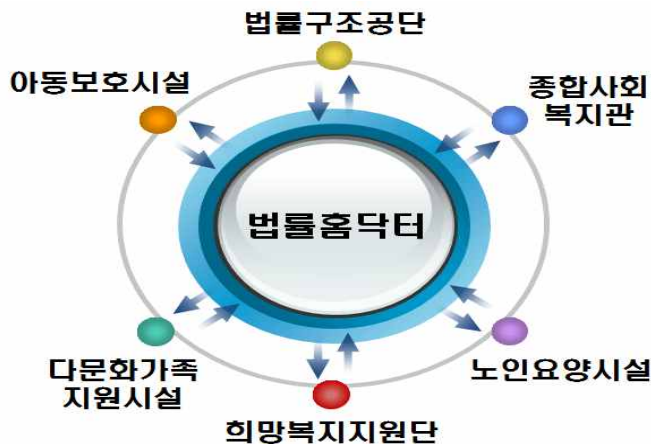
우리나라 「법률구조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률구조법」, 법률 제14102호). 이러한 법률구조는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률구조는 현행 「법률구조법」에 한정되는 개념은 아니다. 현대 법치국가에서 ‘법의 지배’원칙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법작용의 영역에서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 영역에서 법률구조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응하는 방어권 보장에 핵심적이고, 민사 사법 영역에서는 취약계층이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사회정의 실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황승흠, 2009, p.250). 또한 최근에는 법률구조가 국가의 사법절차에의 접근(access to justice) 및 보편적 복지 개념과 연결되면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한 보충적 수단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김대홍, 2012, p.136).

그러므로 법률복지는 국민에게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로 정의할 수 있다. 법률구조의 개념이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법률복지란 절대기준에 따른 빈곤 혹은 요보호 대상자 뿐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사법에의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황승흠, 2009, p.256). 법률구조가 법률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법률복지는 보편적인 서비스 이용 가능성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법률복지 관점에서 법무부는 법률구조 서비스 공급자를 다양화, 다각화하여 ‘법률 소외계층 해소’를 지향하고 있다. 법무부는 마을변호사를 전국에 배정 완료하고 (2015년 12월, 1,530명), 법률홈닥터와 사회복지협의회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률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법무부, 2016, p.31). 특히 법률홈닥터 제도는 무료법률상담, 법 교육, 외부기관 연계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군·구 단위의 일선 복지전달기관인 희망복지지원단과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2-1] 법률홈닥터의 법률구조공단·복지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현황



자료: 법무부(2016, p.33).

2. 법률구조 체계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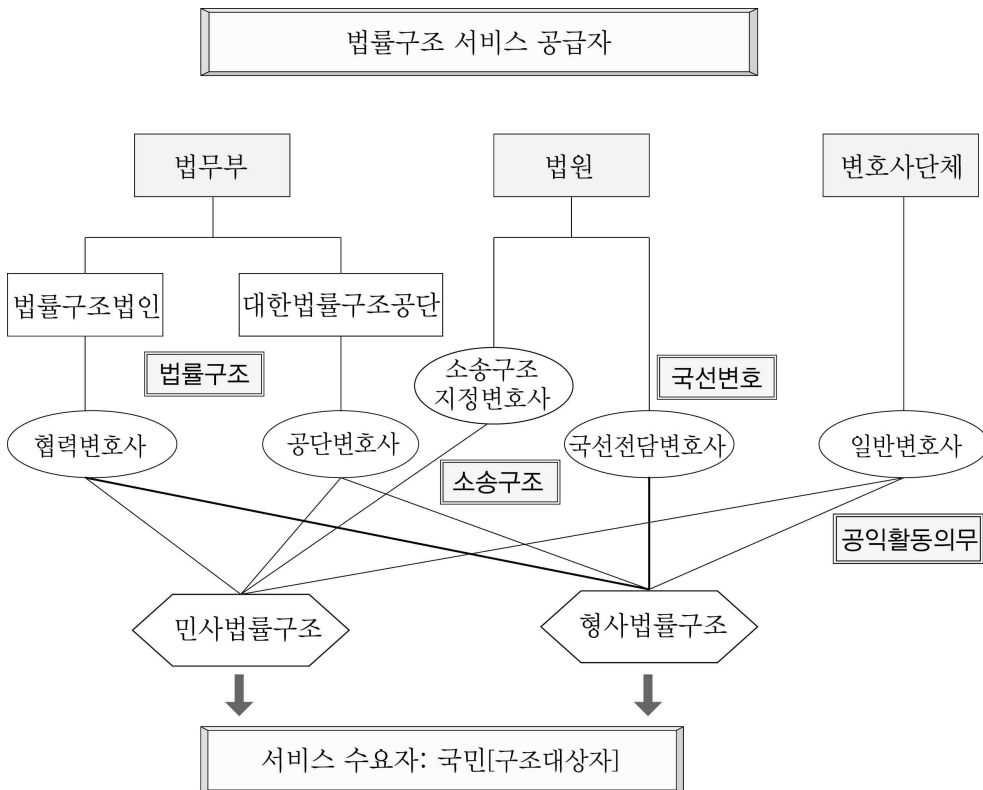
우리나라 법률구조 체계는 공급 측면, 재원의 측면, 법률서비스의 형태 측면에 따라 크게 구분할 수 있다(황승흠, 2012, pp.80-81). 그리고 이에 더해서 법률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공급측면으로 보면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구조법에 따라 법무부의 보조금을 통해 제공되는 법률구조, 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제공하는 국선변호와 소송구조, 그리고 변호사법의 공익활동 의무에 따라 제공되는 일반변호사의 공익활동으로서의 법률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황승흠, 2012, p.80).

다음으로 재원 측면에서 보면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는 정부예산 또는 공적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황승흠, 2012, p.81). 최근 확대되고 있는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제도도 정부예산으로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일반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비예산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법률서비스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법률상담에서 출발하여 소송대리로 나아가는 형태와 서비스 자체가 소송대리에 국한되는 서비스 형태로 구분해볼 수 있다(황승흠, 2012, p.81).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구조법인, 일반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전자에 속하여, 상담을 통하여 소송의 필요성, 승소 가능성을 진단한 후 소송 과정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구조나 국선변호 서비스는 소송대리에 국한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그림 2-2] 법률구조 서비스 전달체계



자료: 황승흠(2012, p.82).

최근에는 법률상담에만 집중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데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제도가 대표적이다. 즉, 이 제도는 1차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소송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으로 연계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류체계에 더해 법률서비스의 제공 방식을 추가하고자 한다. 우리 「법률구조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라는 문구로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각 경제적 접근성 제고 방식과 수요자 중심 접근성 제고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우리나라 법률구조에서는 관련 비용을 면제하거나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민사소송 소송구조에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대법원, ‘소송구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형사 소송 국선변호인제도에서 ‘피고인의 가정 형편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와 같이 민·형사 소송과정에 필요한 도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서비스 제공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법률서비스의 제공 기관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과 같은 별도의 법률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1로 연결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변호사 제도, 각 지자체별로 각기 운영하고 있는 시민법률상담 제도 등이 있다²⁾. 수요자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은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각 수요자 특성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법률홈닥터’ 제도이다. 법무부는 법률 상담 및 정보제공, 대상자 맞춤형 법 교육,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 구조기관 등 조력 기관과 연계를 목적으로 법률홈닥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하는 서민 법률서비스 지원네트워크 도입방안을 검토하였고

2)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배치하여,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legal.seoul.go.kr의 법률상담 페이지 참고 2017. 12. 8.인출).

(최균 등, 2011), 그 결과 법률홈닥터를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하는 방식의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를 통해 시·군·구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읍면동 및 일선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요자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체계가 확보되었다. 2016년 11월 실시한 법률홈닥터 제도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 만족도는 높으며 시·군·구청 등의 공무원을 통해서, 복지관을 통해서 제도를 알게 되는 이들이 약 4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요자 특성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서울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다. 이들은 특정한 범위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법률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이들을 법률구조의 한 형태에 포함할 수 있다.

3. 소송구조와 국선변호

일반적으로 법률구조 제도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소송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위한 사회정책적인 제도’(이동률, 2010, p.791), 또는 ‘무자력으로 권리의 신장·옹호가 곤란한 사람을 구조하는 사회적 제도를 총칭하는 것’(법원행정처, 2002, p.6)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재판 외의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법률구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법률구조를 법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구조 제도가 체계적 복잡성을 가지지만 현재의 법률구조는 민·형사 소송법 및 헌법재판소법 등에 따른 법원, 헌법재판소의 법률구조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취약계층의 다양한 법률적 욕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을 논하는 본 연구에서는 법원의 법률구조에 대해서는 이 절에서 간략히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법원은 법률구조 대상 사건을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으로 크게 구분하여 민사 소송에서는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형사 소송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하 법제처, 2017 및 대한민국법원, 2017을 참조하여 작성함).

민사 소송법상의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자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

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승소 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 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또는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외국인 및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소송비용은 인지액(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송달료, 증인여비(증인을 세운 경우), 검증·감정비용(검증·감정을 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소송구조의 대상은 민사 소송, 행정 소송, 가사 소송의 본안 사건은 물론이고, 독촉 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 사건도 대상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①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이하 법제처, 2017 및 대한민국법원, 2017을 참조하여 작성함).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데, 이를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이라 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농아자(聾啞者)인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

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 사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를 따르고 있는데,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2017년 10월 1일부터는 대법원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665호)에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빈곤 및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월평균 수입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이에 해당한다.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 외 변호인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하 2절에서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상담센터와 같이 국고보조가 이뤄지는 사업부터, 마을변호사와 같이 「변호사법」의 공익활동 의무에 따라 제공되는 일반변호사의 공익활동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중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매해 약 400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다. 또한 세 기관은 2015년 기준으로 연간 약 18만 여건의 법률구조를 진행하고 있다.

〈표 2-1〉 법률구조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35,406	35,454	37,83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981	1,263	1,495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78	282	403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 법률구조관련국고보조금 지원액. <https://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17. 12. 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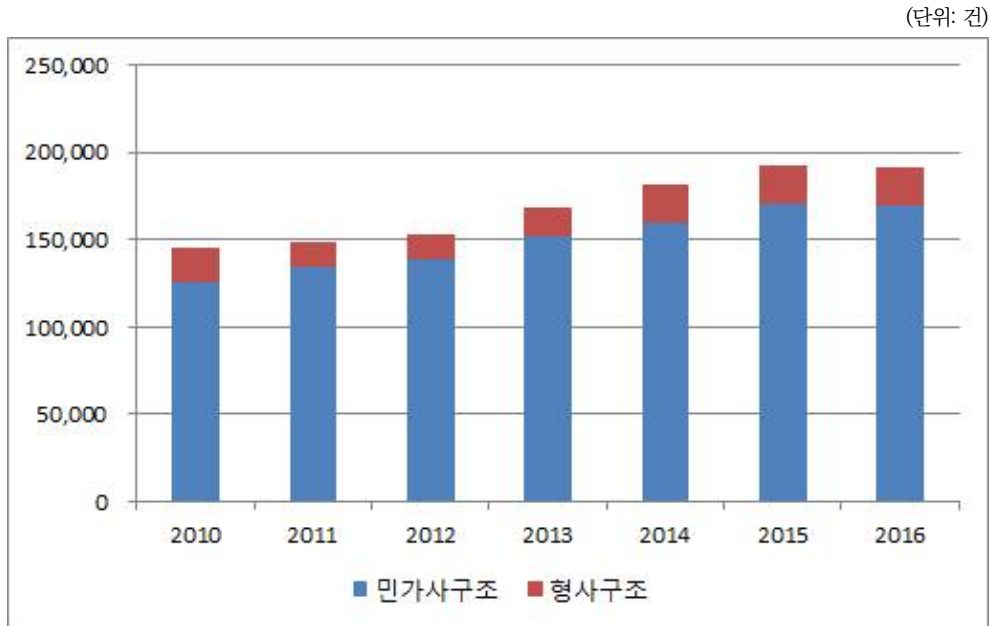
〈표 2-2〉 대상별 법률구조 현황

(단위: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대한 법률 구조 공단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대한 가정 법률 복지 상담원	소계	대한 법률 구조 공단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대한 가정 법률 복지 상담원	소계	대한 법률 구조 공단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대한 가정 법률 복지 상담원	소계
한부모가족		769	72	841		713	42	755		734	38	772
체불근로자	6,938		30	6,968	8,902		31	8,933	9,006		34	9,040
장애인	29,108			29,108	30,573			30,573	30,966			30,966
소상공인	7,837			7,837	7,923			7,923	8,381			8,381
생활보장수급자·영세민	8,991		3,569	25,120	9,864		4,779	29,286	10,334		4,529	29,726
새터민 및 결혼이민귀화자	15,871		27	31,796	15,680		21	31,402	17,092		18	34,220
보호대상아동	5,653		2	5,655	7,262		9	7,271	7,431		4	7,435
범죄피해자	7,383			7,383	7,643			7,643	6,934			6,934
농어민	44,853		87	89,880	48,440		109	97,098	49,648		90	99,476
기타	1,930	4,343		6,273	2,039	3,377		5,416	2,081	5,676		7,757
국가유공자	5,570			5,570	5,924			5,924	5,511			5,511
개인회생파산신청자	8,403	249	40	8,692	9,496	316	29	9,841	10,259	382	66	10,707
가정폭력피해자	4,538	5,451	494	10,483	5,441	6,206	424	12,071	5,860	9,656	695	16,211
계	147,075	10,812	4,321	162,208	159,187	10,612	5,444	175,243	163,503	16,448	5,474	185,425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 법률구조관련대상별 법률구조 현황. <https://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17. 12. 8. 인출.

[그림 2-3]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www.index.go.kr),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자료인출일: 2017년 12월 8일)

제2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현황

1. 대한법률구조공단 연혁 및 개관³⁾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이미 1970년대부터 정부에 의한 법률구조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김형길, 2006, p.8), 그에 따라 1972년 6월 민법 제32조 비영리 재단법인 조항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를 설립하게 된다. 같은 해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대한법률구조협회 지부(9개 지부)가 설치되었다. 그렇지만 대한법률구조협회가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의 주도하에 운영됨으로 인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여야 할 민사 분쟁이 거대한 힘을 가진 검찰 조직에 의존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

3) 세부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에서 2017. 12. 8. 인출)의 공단소개-연혁 부분을 참조하였다.

제점이 발생하였고, 특히 신체적으로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을 변호하여 주는 것은 검찰의 특성상 엄두도 낼 수 없었다(김형길, 2006, p.8).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법률구조법」(법률 제3862호)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 법률에 따라 1987년 9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한법률구조협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본부(2부 1국 2실 6과), 11개 지부, 4개 직할출장소, 32개 출장소로 구성되었으며 법률구조 대상자는 농어민, 월수입 4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이하 공무원, 위관급 이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기타 생활보호대상자 등이었다.

법률구조 대상자의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 법률구조 대상자를 월수입 4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5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였고, 1993년 1월에는 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를 월수입 5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7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였다. 또한 1995년에는 100만원 이하로, 1999년에는 130만원 이하로, 2000년에는 150만원으로, 2004년에는 170만원 이하로, 2005년에는 200만원 이하로, 2006년에는 220만원 이하로, 2007년에는 240만원 이하로, 2008년에는 260만원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렇게 소득기준을 매해 조정해왔는데, 이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른 소득기준 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5년 10월 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를 일부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에 대해 월 평균 소득 260만원 이하 소득기준 적용, 일부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를 유료 법률구조 대상자로 전환하여 축소하였으나, 2016년 1월에 법률구조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로 변경하고, 2017년 1월에 무료 법률 소송구조 승소금액 2억에서 3억으로 상향하였다.

1994년 12월에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제정 및 공포(법률 제4836호)되었고, 「법률구조법」 개정으로 공익법무관 관련규정이 신설되어 공익법무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995년 5월 공익법무관 15명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배치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공익법무관의 주요 근무처 중 하나이다.

2016년 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총 171,556건(민사 등 150,088건, 형사 21,468건)의 법률구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구조금액으로는 3조 8,328억 원에 해당한다. 2017년 기준으로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483억 11백만원이며, 이전수입이 336억 93백만원이며, 그 외 정부의 간접지원 사업수입으로 110억 93백만원, 부대수입으로 31억 80백만원 등을 지원받고 있다(기획재정부, 2017).

40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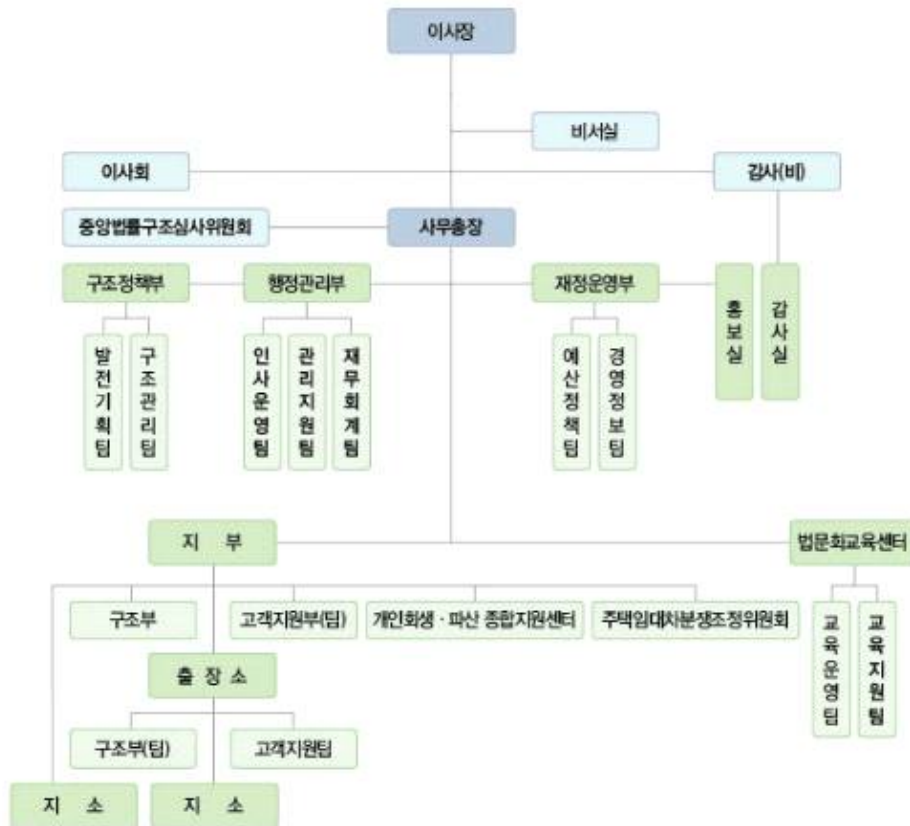
2017년 현재 법률구조공단은 본부와 전국 대도시 18개 지부, 시군 72개 지소를 포함하여 모두 130개 사무소에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를 진행 중에 있고, 전체 직원 708명 중 변호사는 94명이다(기획재정부, 2017).

〈표 2-3〉 최근 10년 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실적

연도	민사, 가사 사건 등 (행정, 헌법소원 사건 포함)				형사 사건		
	계	소송전 구조	소송 구조	구조 금액 (억원)	소계	형사 국선	형사 일반
2007	77,653	271	77,382	16,143	22,494		
2008	99,043	190	98,853	21,435	25,952		
2009	108,654	120	108,534	36,040	24,619		
2010	113,092	115	112,977	28,367	19,579		
2011	122,057	133	121,924	29,241	13,888		
2012	126,898	123	126,775	34,996	13,612	9,924	3,686
2013	136,747	116	136,631	37,140	16,257	11,927	4,330
2014	143,853	98	143,755	36,984	21,546	16,962	4,584
2015	148,161	112	148,049	40,629	21,759	17,372	4,386
2016	150,088	64	150,024	38,328	21,468	17,294	4,182
설립 총누계	1,773,447	133,374	1,640,073	386,565	314,418		

자료: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실적 통계. www.klac.or.kr에서 2017. 11. 28. 인출.
2) 통계청 e-나라지표.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www.index.go.kr에서 2017. 12. 8. 인출.

[그림 2-4]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직도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에서 2017. 12. 8. 인출.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서비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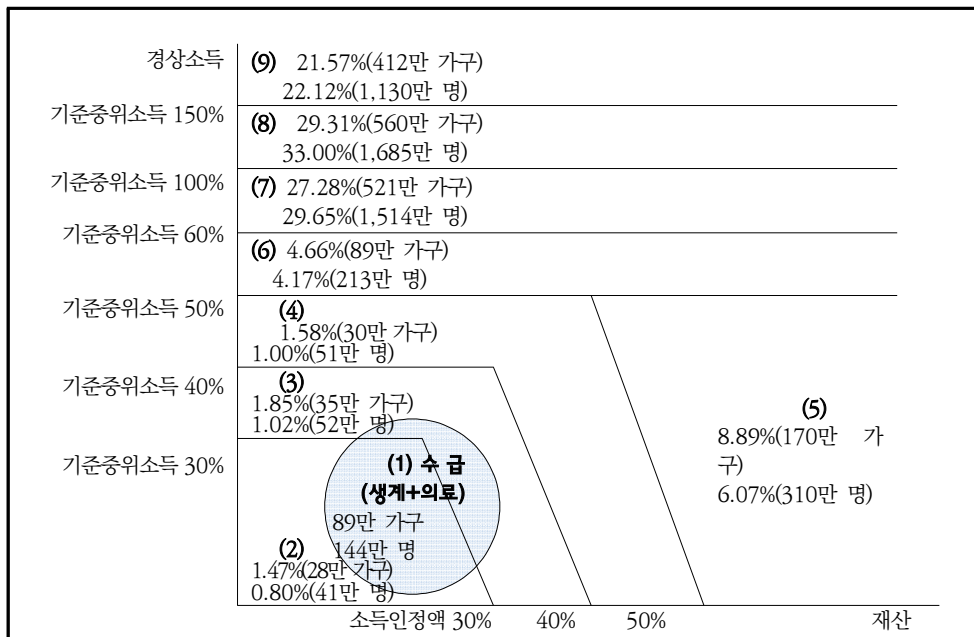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대상자를 기존 월평균 소득 260만원 이하인 자였던 서비스 대상자 범위를 2016년 말 ①‘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내규를 변경하여 크게 확대하였고, ②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이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우 ‘일부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일부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는 변호사보수를 제외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중위소득 80%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임금체불 근로자는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편된 규정에 따라 법률구조 대상자로서 중위소득의 125%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미 2007년 법률구조 대상자 범위확대 필요를 확인하고, 2008년까지 전 국민의 50%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계획한 바 있었다.

[그림 2-5] 2015년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기준중위소득 기준)

(단위: %, 가구, 명)



주: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2015년 전체가구수는 19,111,030가구, 전체인구수는 51,069,375명. 단, 집단별 가구(개인)수는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

2) 수급가구의 경우 행정데이터 상 중복을 제외한 생계급여(803,385가구), 의료급여(83,128가구)를 수급하는 가구의 합(886,513가구), 수급자의 경우 행정데이터 상 중복을 제외한 시설수급자 포함하여 생계급여(1,259,407명), 의료급여(176,922명)를 합한 값(1,436,329명)

자료: 관계부처합동(2017, p. 7).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기준은 2인 가구의 경우에 가구소득이 월 351만 8천원 이하인 경우 법률구조의 대상자가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위한 무료법률상담의 대상임을 말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 변호 지원은 별도의 기준

을 적용한다. 즉,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⁴⁾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유료 법률구조 대상자이다. 그렇지만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이다.

〈표 2-4〉 법률구조 적용 대상자 소득기준(2017년)

(단위: 월소득, 원)

구분	기준 중위소득	법률구조 대상자	참고 (‘18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652,931	2,066,000	1,672,105
2인가구	2,814,449	3,518,000	2,847,097
3인가구	3,640,915	4,551,000	3,683,150
4인가구	4,467,380	5,584,000	4,519,202
5인가구	5,293,845	6,617,000	5,355,254
6인가구	6,120,311	7,650,000	6,191,307
7인가구	6,946,776	8,683,000	7,027,360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에서 2017. 12. 8. 인출.

이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기준 등 경제적 이유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완책으로 여러 기관과 무료 법률구조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들로부터 출연받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1997년 9월 8일, 생활수준이 열악한 생활보장수급자 등 도시영세민에 대하여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약(누적 출연금 392억 원)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임금채불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1일, 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채불피해근로자들에게 민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누적 출연금 761억원). 2007년 여성가족부와 '성폭력피해여성 무료 법률구조 사업', '한부모가족 무료 법률구조 사업' 협약,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복지인권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

4)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42% 수준이다.

하였다. 2008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울시 저소득·취약계층 가정 무료 법률구조 사업' 업무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과 법률서비스와 노후설계서비스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년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업무협약, 보건복지가족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 금융소외자 종합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협약, 여성가족부·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단」발족 및 업무협약 등 다양한 민관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으로 무료 법률구조의 재원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한편 2008년 8월 1일,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2년 이후 순차적으로 협약 확대(공탁금관리위원회 누적출연금 384억 원)하였다. 그 외에도 2014년 5월 설치한 수원 및 울산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전국 7개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15년 전국 5개 법률보호 소외지역에 5개 지소를 추가 설치(총 72개 지소)하는 등 국민의 공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법률보호 취약계층 법적 지원을 확대하여 온 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향후 법률구조 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외부기관과 및 정부부처와의 협약 등을 근거로 신분(자격)이나 사건의 유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현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자와 사건유형, 당사자 비용을 일람하면 아래와 같다. 형사 사건은 무료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소득기준이 기본 적용된다.

〈표 2-5〉 유료 및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의 유형 및 구비서류

법률구조 대상자	민사 및 가사		형사 (무료)	구조대상 소명 구비서류
	무료	유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독립유공자	○	○(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5·18민주유공자	○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보호대상아동	○		○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 또는 시설, 보건 복지부 또는 기타 법률에서 보호아동을 위해 설치된 상담소 또는 시설 등에서 보호대상아동임을 확인한 사실확인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1~3급)	○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4~6급, 일부)	○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발행의 장애인증명 또는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증명서 [미혼]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증인진술서 등 [조손] (외)조부모 및 손자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조손가족임을 증명하는 증인진술서 등
농·어업인	○		○	시·군·읍·면장이 발행하는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발행의 회원증명 등
참전유공자	○		○	참전유공자증 사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2세 환자 포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	○		○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원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또는 하나원 수료증명 등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영세담배소매인	○		○	월평균 담배판매수입금액이 26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관할 지점장 또는 담당직원 의 확인서
소년·소녀가장	○		○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상공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징수결정내역상세조회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세무서장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일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수를 소명할 서류(영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을 소명 할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증명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금지

46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법률구조 대상자	민사 및 가사		형사 (무료)	구조대상 소명 구비서류
	무료	유료		
				급대장 등)
의사상자	○ (가족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상자 증서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미등록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구), 읍, 면의 장이 발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 증명서 등
6.25전쟁 전시납북자 가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 원회가 발행한 전시납북자 결정통지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보훈처 발행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 확인원
결혼이민자·귀화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발행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예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징수결정내역상세조회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예술인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확인서」
재도전 기업인	○ (근로관계 사건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 보험공단 징수결정내역상세조회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전지원센터가 발행한「재도전 기업인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 확인서」
청년미취업자·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미취업자는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저소득 재해근로자 및 유족 (경상남도 소재 사업장 소속에 한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요양급여 신청이나 유족급여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근로복지공단 경상남도 관할 지사에서 발행한 부지급 또는 불승인 통보서나 심사결정서, 재심사결정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등 [최초 요양급여 신청이나 유족급여 신청이 승인 결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 경상남도 관할 지사에서 발행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나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 등
국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인 외국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국내거주 외국인 입증 서류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선원법상의 선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확인서 승무경력증명서 (단, 실직선원의 경우는 구직등록필증을 함께 제출)
범죄피해자 (교통사고로 대물피해만 발생한 사건은 제외)	○	○ (사기, 절도 등 재산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신사고 : 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등 기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인 구속피의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상담사실확인원,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고소장접수증명서 중 택일

법률구조 대상자	민사 및 가사		형사 (무료)	구조대상 소명 구비서류
	무료	유료		
또는 피고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사실확인서, 전치2주 이상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접수증명서 중 택일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사실확인서, 전치2주 이상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접수증명서 중 택일
법원, 검찰청의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 피해자·피의자·피고인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사실확인서, 전치2주 이상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접수증명서 중 택일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서 등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한국증권금융나눔재단 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한국증권금융나눔재단이 발행한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 확인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지원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부채증명서와 사회소외계층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 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이 발행한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 확인서」또는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동시에 제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부채상당보고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사]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시설에서 확인한 (가정폭력·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 진단서(가정·성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 발행 고소장 접수증명서 중 택일 [성폭력 형사] 피해사실확인서, 전치2주 이상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접수증명서 중 택일
임금등 체불 피해근로자	○ (유관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임을 입증하는 고용노동부 발행 무료 법률구조 신청용 임금 및 퇴직금 체불확인서
임금등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선원	○ (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원해양수산부 발행 무료 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 품확인서선원임을 소명할 자료(지방해양항만청 발급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선박소유자 발급 선원보증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사고임을 소명할 자료(진단서 등)
물품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 소비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48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법률구조 대상자	민사 및 가사		형사 (무료)	구조대상 소명 구비서류
	무료	유료		
불법사금융피해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사금융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금전차용 관련 서류(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대부약정서 등) • 변제관련서류(영수증, 송금증 등) • 피해소명서류(공소장, 판결문 등) •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학교폭력피해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단서,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건강보험산정내역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일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저소득교통사고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증명서류(단, 교통안전공단 발급 지원내역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소득증명자료 제출 생략) • 세대주와 세대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 •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건강보험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공단 발행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일) • 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하는 지원내역증명서 또는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 고소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서류 등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정 사건 청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선대리인 선정결정 정보 또는 그 사본
법원의 소송(절차)구조 결정 사건 피구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구조결정 정보 또는 그 사본
법원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사건 신청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구조결정 정보 또는 그 사본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지정서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주거, 재산, 가족사항, 학력, 건강상태 등 제 반사정에 비추어 구조합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징수결정내역상세조회표 첨부),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국내 거주 외국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위 해당 서류)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재구성. www.klac.or.kr에서 2017. 12. 8. 인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와 같이 신분이 불확실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전국 각지에 조직되어 있고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라는 우수한 전문가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광범위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료구조대상자인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는 전액 직접 부담하여야 하지만 변호사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42%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예를 들어, 무료구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임차인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는다고 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택임대차보호법」(2016년 5월 29일 개정 2017년 5월 30일 시행)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경우 임차보증금 1억 원 미만 사건이므로 수수료 1만원으로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유료구조대상자에 선정된다면 약 150만원 정도의 변호사보수를 공단에 납부함으로써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민사 사건의 통상적인 변호사보수가 500만원 내외, 대법원규칙이 정한 변호사비용은 3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다.

다만, 무료구조대상자와 유료구조대상자의 범위와 조건이 협약단체 및 지원금, 출연금 규모에 따라 제각기 다르고, 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복잡하여 저학력자,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소명자료 구비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표 2-6〉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 구비서류

용도		구비서류 및 설명
가구원 수 확인	국민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단, 국내거주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안 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미가입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아래)를 제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개인별로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구원별로 따로 발급,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전원이 등재된 서류이므로 한 장만 발급받아 제출 ※ 지역보험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에 피보험자와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래 3) 기재 서류 생략 가능 ※ 피부양자 등록사실은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	아래 서류 중 택일 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보수지급명세서 ③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④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⑤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에서 2017. 12. 8. 인출.

민간 공익변호사 및 시민단체에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서비스는 높이 평가하나 소명자료 등 구비서류 준비가 취약계층에게 너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임에도 민간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물색하는 수요자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구조대상자에 소득기준이 존재하는 이상 소득증빙은 필수적이고, 기타 사건유형별 구조에 있어서도 개별기관 등과의 협약에 정하여진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각 서류가 필수적이므로 소명자료의 간소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표 2-7〉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

(단위: 건)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소계		92,301	96,683	104,032	107,486	116,137	121,377	123,833	135,577
임금채불근로자	민사 등	61,869	59,703	59,002	64,425	66,706	67,338	73,244	89,759
생활보장수급자	민사 등	5,075	6,698	7,293	5,949	6,053	6,438	10,521	9,549
	형사 등	490	437	371	385	454	446	412	546
장애인	민사 등	4,728	5,706	6,007	5,571	5,561	5,761	3,926	1,968
	형사 등	461	384	359	362	393	343	279	187
개인회생및파산·면책신청 대상자	공탁금관리위원회	8,550	6,961	7,595	8,112	9,242	10,662	8,579	11,867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	.	257	268	270	257	156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	225	176
	한국자산관리공사	14
국가보훈대상자	민사 등	926	1,113	1,244	1,347	1,419	1,500	1,404	737
	형사 등	92	62	73	53	91	75	71	41
농어업인	민·가사	4,285	4,342	4,452	4,372	4,547	4,687	4,846	5,531
	형사	563	420	412	307	247	273	289	221
소상공자	민사 등	346	400	314	357	390	427	497	494
가정폭력·성폭력	민사 등	2,637	2,853	2,565	2,605	2,529	2,354	2,418	2,140
	형사	10	0	0	0	1	5	1	0
한부모가족	민사 등	496	645	719	948	1,133	1,238	5,386	4,751
	형사 등	-	-	-	-	2	-	-	-

52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범죄피해자	민사 등	1,505	6,530	11,960	10,085	14,378	16,723	8,166
담배소매인	민사 등	106	67	75	47	43	31	29
	형사	11	6	4	2	2	1	1
선원	민사 등	151	155	317	184	111	142	137
소액입차인	민사 등							240
가족관계미등록자	민사 등		201	206	278	195	131	131
의사자유족 등	민사 등			8	4	0	0	3
다문화가족	민사 등			1,030	1,756	2,267	2,408	2,499
	형사			1	4	2	2	4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민사 등			24	59	67	86	88
	형사			1	5	4	5	7
학교폭력 피해학생	민사 등				12	32	31	31
외국인								86
청년미취업자·대학생	민사 등							56
저소득 재해근로자 및 유족	민사 등							

주: 소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총 실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안내-무료 법률구조안내-대상자별 도움정보'를 재구성. www.klac.or.kr에서 2017. 8. 9. 인출.

3.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절차 및 대상자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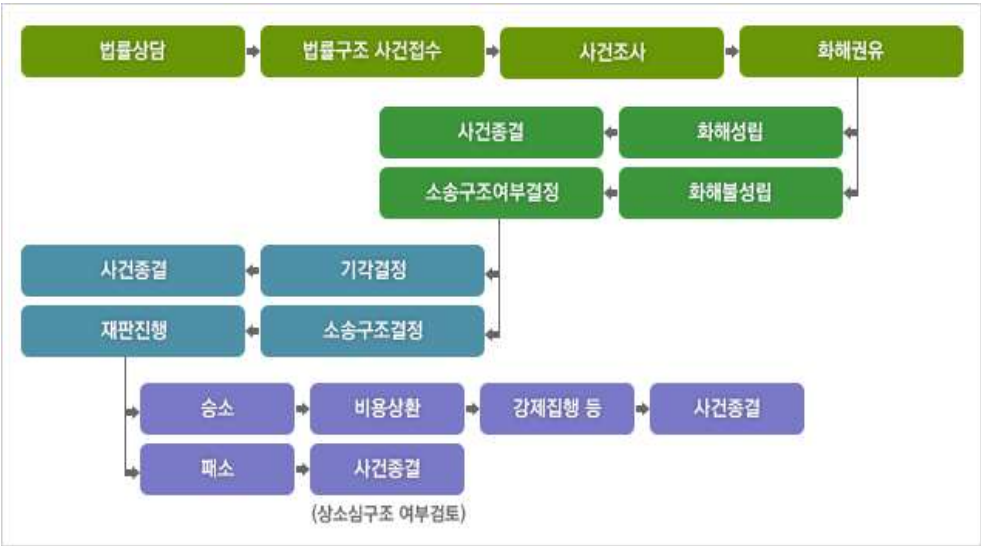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위 법률구조 대상자 해당사실을 소명할 자료,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거나, 전화 국번없이 129번,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klac.or.kr> 사이버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홈페이지에서 30분 단위 예약 시스템을 구축, 방문상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전화, 사이버 1차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단 직원은 접수된 사건에 대한 사건조사에 착수하는데, 사실조사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적절한 화해 및 해결 방법을 권유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기도 한다.

만약 사건이 화해 종결되지 아니하거나, 형사 사건 등 그 본질상 소송을 필요로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①구조의 타당성, ②승소 가능성, ③집행 가능성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여부를 결정한다. 이중 ‘승소 가능성’ 조건에 대하여 사건의 승패를 사전에 공단에서 판단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게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더 많은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 소송구조요건 대비 소송대리서비스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승소 가능성 판단에 남소를 방지하고 법적 갈등의 심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승소 가능성 조건을 삭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황승흠, 2012, pp.76-77). 소송구조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소송은 공단 소속변호사 혹은 공단 파견 공익법무관이 수행하게 된다.

54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그림 2-6]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 및 가사 사건 처리절차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에서 2017. 12. 8. 인출.

[그림 2-7]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 사건 처리절차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에서 2017. 12. 8. 인출.

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 변화

가. 상담서비스 확대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서비스의 시작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직접상담, 132 전화상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률 상담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법률 상담은 치료적·법적 대화라고 할 수 있다(황승흠 외, 2016, p.87). 즉, 법률 상담을 통해서 상담의 퇴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불만을 돌보고 치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들어 상담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데, 2008년 이후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의 양이 급증하고 있다.

〈표 2-8〉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실적

연도	직접 상담	132 음성, 팩스 정보 제공	인터넷 정보 제공	계
계	25,150,156	6,190,624	52,230,982	83,571,762
1987~1994	2,035,163	327,964	114,346	2,477,473
1995~2002	5,710,097	2,805,523	7,490,284	16,005,904
2003	1,001,370	251,500	4,682,673	5,935,543
2004	996,255	201,537	4,280,237	5,478,029
2005	1,002,908	159,090	4,274,940	5,436,938
2006	1,035,714	148,047	3,061,695	4,245,456
2007	1,085,712	166,328	2,506,979	3,759,019
2008	1,194,603	255,870	1,921,828	3,372,301
2009	1,260,401	297,053	1,934,431	3,491,885
2010	1,218,792	247,254	2,141,009	3,607,055
2011	1,242,783	305,293	2,323,068	3,871,144
2012	1,409,916	307,987	2,926,370	4,644,273
2013	1,482,762	238,054	3,166,275	4,887,091
2014	1,505,699	162,922	3,602,936	5,271,557
2015	1,486,795	158,261	3,798,537	5,443,593
2016	1,481,186	157,941	4,005,374	5,644,501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상담실적 통계. www.klac.or.kr에서 2017. 11. 28. 인출.

나.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국민 법률서비스 증진을 위해 2017년 9월 29일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https://support.klac.or.kr>)”를 오픈하였다. 법률지원센터는 나 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법률서식·법률상담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된 법률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법률지원센터는 간단하고 단순한 소장 등 법률서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또는 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식을 작성한 후에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법원 가까이 있는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서식 작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받고 제출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그림 2-8]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



제3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현황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개관 및 연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이태영 변호사가 창설한 법률구조기관이다. 창립당시의 명칭은 ‘여성법률상담소’로 ‘여성문제연구소’의 부설기관이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인간의 존엄성과 만민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약자 등 빈민하는 이웃의 편익에 서서 이들의 인권옹호에 필요한 모든 법률구조 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인권을 회복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천정아, 2014, p. 149).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61년 태창방직 등 취약한 여공들이 근무하는 현장에 출장상담을 시작하였고, 1963년부터 가정법원 설치를 주장하여 가정법원의 체계화에 기여하였다. 1966년 ‘가정법률상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무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1970년 국제법률구조협회(International Legal Aid Association)에 가입하여 이사가 되어, 국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법률구조 담론에 적극 참가하였다. 1976년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자 공익법인으로 승인되면서 단체의 명칭을 현재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개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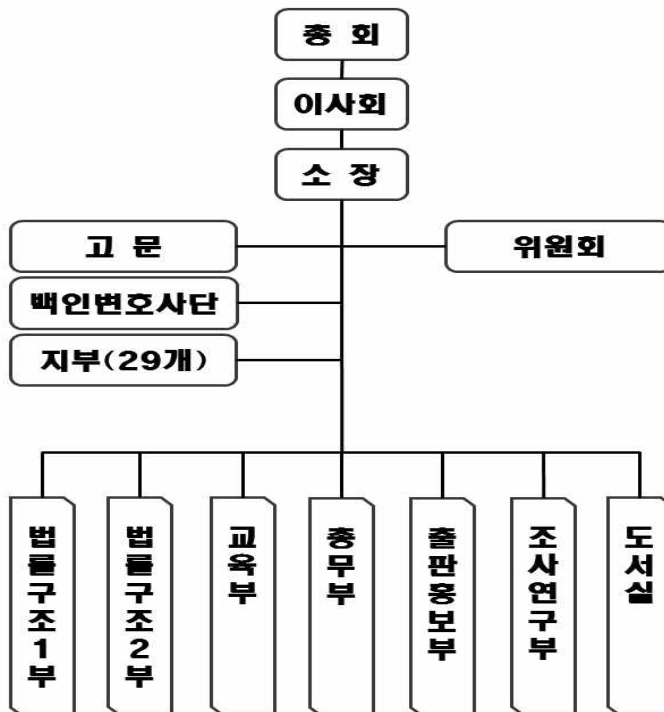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88년에 「법률구조법」에 근거하여 법무부에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 이후 법률구조법인으로서 법무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98년 8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고 1999년 5월부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다. 또한 2002년 2월부터는 여성부 운영 포털사이트 ‘위민넷’의 사이버상담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8년 10월부터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가정문제에 관한 사회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적극적인 법률구조 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70년대 동성동본 금혼 폐지, 2000년대 호주제 폐지, 부부 재산제 폐지, 양육비이행법제화와 같은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였다. 즉,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취약계층 중에서도 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가정 문제에 중점을 둔 법률구조기관이다. 법률상담과 화해조정, 소송구조 등의 법률구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조직 및 구조⁵⁾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서울 여의도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27개의 지부가 있다. 또한 미국에 6개의 해외지부를 두고 있다(로스앤젤레스 한인가정상담소,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가정상담소, 시애틀 한인생활상담소, 필라델피아 필라여성회 가정법률상담소, 뉴저지 뉴저지한인가정상담소, 워싱턴 워싱턴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본부에 근무하며 상담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할하고, 그 산하에 소송구조, 지부관리, 출판·홍보, 기획관리, 교육기능을 맡는 기구가 있다.

[그림 2-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직도



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상담소소개-기구표'를 재구성. <http://lawhome.or.kr>에서 2017. 12. 8. 인출.

5) 이하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http://lawhome.or.kr>)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법률구조 1부는 법률문제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사, 민사, 형사, 파산 사건 등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며 주간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매주 월요일 야간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의 요청이나 동의를 얻어 화해조정을 시도하거나 간단한 소송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주는 등, 단순 법률상담만이 아니라 상담소를 찾는 이들의 실질적인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 힘쓰고 있다.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내담자의 경우에는 상담소에 등록된 백인변호사단과 협의하여 무료 소송구조를 진행하기도 한다.

법률구조 2부는 가정폭력 특화 부서로,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가정폭력행위자 중 자발적인 참여자와 가정법원 및 검찰청에서 위탁받은 참여자의 폭력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가정폭력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교안을 개발하고 교안 보급 및 교육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문화진흥센터를 운영하고, 법률구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법률임상실습을 실시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실무수습기관으로 지정되어 법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하여 예비법조인들의 실무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상담소는 1978년 4월에 출판사 등록을 하고 내부에 출판홍보부를 두어 심포지엄, 간담회, 토론회 자료집을 비롯한 상담 사례집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1971년 10월 창간된 「가정상담」은 연간, 격월간으로 발행되다가 1986년 1월 창립 30주년을 맞아 월간으로 승격하여, 법률구조 사업을 홍보하고 가정문제에 관한 법적 쟁점사항을 다루는 전문지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상담소는 2009년 창립 53주년을 맞이하여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1956~2008)'와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1948~2008)'를 각 출간하였다.

조사연구부는 가정문제, 가족법 등에 대한 폭 넓은 조사, 연구 사업을 진행한다. 10년 단위로 발간하고 있는 「한국의 이혼율 연구」를 비롯해 「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연구서를 출간하였다. 또한 해마다 상담통계집을 발행하여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 변화양상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호주제에 대한 최초의 설문조사 및 분석작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2008년에는 1956년부터 2007년까지 50년

간의 총 상담을 분석한 상담 통계집 「통계로 본 현대 한국 가족의 제 문제Ⅱ」를 펴냈다. 뿐만 아니라 가족법 개정,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아동 문제, 인권 문제 등을 주제로 가정 문제 전반에 대한 학술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도서실은 1962년부터 아시아 재단의 지원으로 시작한 도서 수집을 1977년 여성백인회관을 건립하며 개관한 곳이다. 이태영 박사, 가족법 학자 정광현 박사, 언론인 최은희 여사 문고 등 1만 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그 외에 여성 관련 법률, 여성·노인·청소년·아동 등 가정문제 관련 정기간행물, 논문집, 신문기사 클리핑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별도 기구인 ‘백인변호사단’은 상담소에서 매주 월요일 야간상담과 소송구조를 담당한다. 변호사들의 자원봉사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2017년 기준 전국의 변호사 715명이 가입해 있다.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사업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사업은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크게 법률상담과 화해조정과 무료대서, 소송구조, 교육상담, 가정폭력 상담 등이 있다.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는 상담소 소속변호사, 상담소에 등록된 자원봉사기구인 백인변호사단⁶⁾, 상담소에 배정된 법무부 공익법무관 등이 진행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소송 전 화해조정이거나 교육프로그램 연결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천정아, 2014, p. 15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건처리 절차는 아래 [그림 2-8]과 같다.

6) 이들은 월요일 야간상담 및 소송구조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전국의 변호사 715명이 가입하고 있다(한국가정법률 상담소, <http://lawhome.or.kr>에서 2017. 12. 8. 인출).

[그림 2-1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건처리절차



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법률구조-처리절차도표. <http://lawhome.or.kr>에서 2017. 12. 8. 인출.

가. 법률 상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면접, 서신, 전화, 순회상담의 형식으로 나뉜다. 특히 청소년상담실, 노인복지상담실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정 문제에 관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나. 화해조정과 소장 등 서류 작성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개입이 필요한 상담자에게 화해조정과 무료대서 등의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화해조정은 상담한 사건 중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또는 상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상담자의 동의를 얻어 상대방을 상담소로 나오게 하여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권고, 화해시키는 방법이다.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시도하며 상담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소장 등 서류 작성(과거 무료대서)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만한 자력이 없거나 스스로 소송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무료로 작성해 주는 방법이다.

다. 소송구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상담한 사건 중에서 법을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한다. 소송구조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가정폭력 피해 여성(여성가족부 지원), 한부모가정 양육비(여성가족부 지원),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 북한이탈주민 및 기타 법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소송구조를 제공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들의 소송구조신청을 받아 사건내용을 법률구조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다음 백인변호사단⁷⁾에 의뢰하여

7) 이태영 변호사(초대 가정법률상담소장)가 1979년 불우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변호사 한 명이 1년에 1건씩만 무료로 변론을 맡아주면 변호사 100명이면 1년에 100건의 법률구조가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변

구조해 주기도 한다. 소송구조는 백인변호사단이 결성된 1979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승소금액의 10%를 의뢰자로부터 상환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사건의 대부분이 순수한 이혼 사건, 양육자변경 사건, 인지청구 사건 등이라 대부분 면제해 주고 있다.

라. 교육 사업

1977년 목요법률강좌를 개설하여 국내 최초로 사회 교육 사업 및 법 교육을 실시한 이래, 교육 사업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현재 가족구성원 전체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 가족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여 가정파탄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는 목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의 법 교육 프로그램과 정기 강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호사의 가입신청을 받아 결성하였으며, 사무실은 『상담소』안에 있다. 대표변호사는 김춘봉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600여명의 변호사가 등록되어 있다.

〈표 2-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 사업 일람

법 교 육	생활법률강좌	가족법, 가족관계등록법 및 가사소송법, 재산법, 세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을 안내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출장 법 교육	복지관, 여성 관련 시설, 구청 등을 방문하여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법 교육을 진행한다.
	전문가를 위한 전국 순회 출장 법 교육	전국의 1366 여성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및 각종 복지관에 근무하는 상담원, 공무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가족법과 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하는 전국순회 출장 법 교육을 운영한다.
	교원 직무연수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가족법 및 가정폭력특별법, 성인지적 폭력예방프로그램을 교육하며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다.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서울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학교를 찾아가 가족법, 가정폭력특별법 등의 법 교육 및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 사업, 가족법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사업과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도록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및 실무종사자 교육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노숙인과 실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파산, 면책, 개인회생 관련 법 교육을 진행하고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상담한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출장 법 교육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정에게 꼭 필요한 주거복지 관련 교육 및 양육비 청구, 빚 청산 방법 등을 가르친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법 교육 및 부모역할 교육	한부모가정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부모역할 교육과 관련 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기 강좌	가정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가정문제 전반에 걸쳐 폭 넓은 이해를 가진 가정폭력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가정폭력상담 필수교육과정과 법률강좌를 병행하는 전문교육 과정이다.
	미성년 한부모를 위한 일일교육	미성년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및 심리적, 정서적, 법적 도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무료 일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 가정문제 전문 상담가의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결혼 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공개강좌를 운영한다.
	한마음 가족캠프	양성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온 가족이 참여하여 배우고 즐기는 1박2일 무료 가족동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시로 참가 접수를 받는다.
	이혼 전 상담 프로그램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를 대상으로 이혼에 따른 법적 문제 상담과 집단 심리상담을 통해 2단계에 걸쳐 이혼당사자 및 이혼 가정의 복리를 기하기 위한 무료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법률과 예술, 문학의 만남 광장	전문가를 초빙해 법률과 예술의 접합점과 영향력을 모색해 보는 인문학 공개강좌를 진행한다.

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http://lawhome.or.kr>에서 2017. 12. 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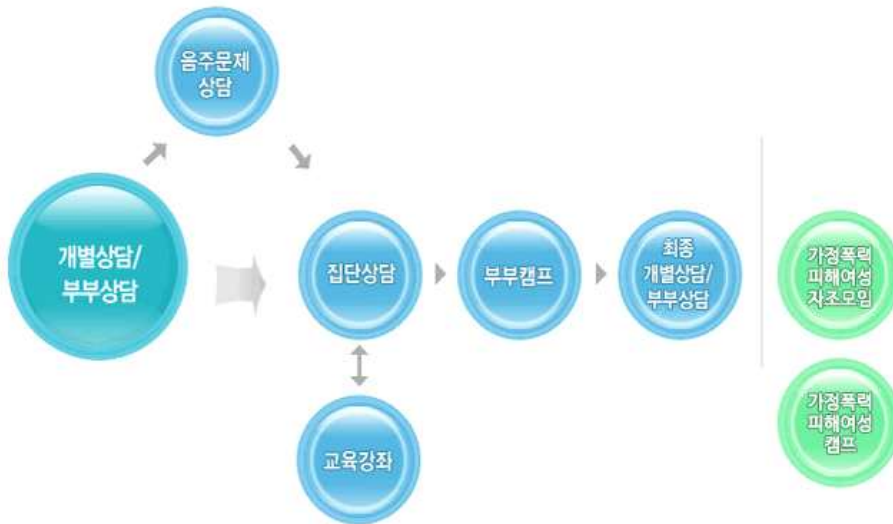
그리고 상담소는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돕기 위해 1964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비롯해 각 대학사회사업, 사회복지, 심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임상실습과 사법연수생들의 사회봉사 및 전문기관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및 서강대학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무수습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사회봉사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 가정폭력상담

상담소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른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구조, 가정폭력 행위자를 위한 교정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98년 이후로는 개별 지원자만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남부지방경찰청, 서울서부지방경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담위탁보호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행위자와 피해자(배우자 및 가족)를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소의 가정폭력상담 프로그램은 개별/부부상담, 음주 문제 상담, 집단상담, 교육 강좌, 부부캠프, 최종 개별/부부상담 6단계로 구성된다. 평균 교육 횟수는 20회, 평균 교육 시간은 60시간이다.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과 별도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조모임과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2-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상담 프로그램



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교육-프로그램안내. <http://lawhome.or.kr>에서 2017. 12. 8. 인출.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만약 집단상담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오후 6시 30분~오후 9시 30분으로 변경된다.

바. 기타 사업

상담소는 법률상담이나 소송구조 등 협의의 법률구조 사업 외에도 비소송적인 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조사연구, 법 개정 운동 등 여러 영역의 법률구조 활동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계층은 물론 전 국민의 법적 보호 및 법의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기타 사업으로는 첫째, 조사·연구 사업이 있다. 상담소는 가정문제, 가족법 등에 대해 폭넓은 조사 및 연구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10년 단위로 이혼에 관한 조사연구를 집대성해 한국의 이혼율 연구를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통계집을 발행하여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 전반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호주제,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비, 부부재산제,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부부간의 성, 가정폭력,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위탁가정, 노년여성, 사실혼, 별거, 면접교섭, 아동·

청소년 폭력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여론화시키는 한편 법 개정 운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심포지엄·세미나·강연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가족문제를 진단하고 홍보하기 위한 각종 심포지엄과 세미나, 강연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조사연구 주제뿐만 아니라 법률구조, 친양자, 북한이탈주민, 입양가정, 비혼모, 음주와 가정폭력, 성년후견, 가족정책, 연금분할 등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심포지엄 및 세미나 등을 열어 정책 및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1977년부터 전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당시 여성법률상담소)는 1962년 아시아 재단의 지원으로 가정, 여성법률 관계 도서를 기증받으면서 도서 수집을 시작하였고, 1977년 여성백인회관을 건립하면서 전문 도서관을 개관하며 이태영 박사, 가족법 학자인 정광현 박사, 언론인 최은희 여사 기증도서와 특히 가족법 영역을 중심으로 가정, 여성, 법률, 청소년, 노인, 사회복지, 사회과학 관련해 1만8천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관련 학술지, 논문집, 기사클리핑 자료를 보유한 가족법 관련 자료 전문 도서관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여성, 가정법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장서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서관은 관련 분야 종사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외부 이용자도 직접 방문 시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도서관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료조사 및 제공, 원문복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30분이며, 점심시간은 오후 12시 30분 ~ 오후 1시 30분이다.

넷째, 법 개정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법률에 입각한 법률구조 사업만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돕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 상담소는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가족법에서의 부부차별·남녀차별적 요소를 개정하고 폐지하기 위해 지난 50여 년 동안 주도적으로 가족법 개정운동을 벌였다. 그 방법으로 관계기관에 건의문, 진정서, 청원서를 제출함은 물론 국회의원에게 편지 보내기 등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3차에 걸친 가족법 개정을 이끌어 상당부분 부부평등, 양성평등을 이루었고 특히 지속적으로 호주제 폐지운동을 주도해온 결과 2005년 3월 국회에서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였다. 또한 상담소에서는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제도 양육비 이행확보의 입법을 추진하여 가족법 개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였고,

양육비 선급과 비혼모 부양청구권 그리고 부부재산제 및 연급분할 관련법 개정 등 완전한 양성평등, 부부평등에 입각한 가족법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판 및 홍보 활동이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8년 「여성법률 상담실기」 출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단행본을 출간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개정판, 연구자료인 「한국의 이혼율 연구」 등을 출간했으며, 통계자료집 「통계로 본 현대 한국가족의 제 문제(2001)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43년 상담통계집」과 여러 영상자료를 제작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로 월간 「가정상담」과 연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통계」를 간행하고 있다.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요건

직접 방문을 요하는 면접상담 외에도 전화, 인터넷, 서신 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있다. 그러나 상담 내용의 특성상 상담소에서는 면접상담을 권하고 있다.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사전예약자에 한해 매주 월요일 야간상담 시간에 영어상담을 진행하며, 서울가정법원에서 평일 오전 10시~5시에 무료 출장상담을 하고 있다.

〈표 2-1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경로

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오후 4시 접수 마감) 점심시간: 오전 12시 30분 - 오후 1시 30분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오후 7시 접수 마감)
전화상담	02) 1644 - 7077
인터넷상담	http://www.lawhome.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이버 상담실 http://miznet.daum.net 미즈넷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상담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송을 무료로 수행하여 주는 소송구조를 진행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 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 2-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 요건

소송구조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 가정폭력피해여성 (여성가족부 지원) - 한부모가정(양육비 소송에 한함) (여성가족부 지원) -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 - 북한이탈주민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구조신청서 - 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입증방법 및 소명자료

신청자가 필요서류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는 구조대상자 및 구조 사건 해당여부와 구조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소송구조결정을 내린다. 소송구조대상으로 결정된 사건은 상담소 소속변호사, 백인변호사단의 소속변호사, 상담소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는 소송비용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 종료 후 소요비용과 승소가액에 따라 구조비용상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구조에서 확보된 상환금은 소송구조사업 확대를 위해 사용된다.

한편, 상담소는 무료소송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재원마련을 위한 후원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가입은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webmaster@lawhome.or.kr로 제출하면 가능하다. 2017년 현재 일반회원은 연회비 5만원, 평생회원은 일시후원 50만원, 그리고 가정상담 후원회원은 연 1만원의 후원회원비를 받고 있다. 온라인 회원가입은 무료이며, 온라인 회원이 되면 상담소 홈페이지의 각종 자료와 온라인 상담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 다양한 자원봉사회원을 모집한다.

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실적

상담소는 1956년 창립 이래 2016년 말 기준으로 본부에서 총 1,547,526건, 지부에서 총 2,188,276건, 합계 3,735,802건을 상담하였다. 상담 처리 유형은 본부 기준으로 법률상담 1,502,266건, 화해조정 32,336건, 소장 등 서류작성 8,280건, 소송구조 4,644건 순으로 많았다. 상담 방법은 본부 기준으로 면접상담 561,195건, 자녀·노인상담 2,932건, 전화상담 461,712건, 온라인상담(통신, 인터넷 상담 및 실시간 사이

버 상담) 87,150건, 서신상담 3,980건, 지상상담 1,591건, 순회상담 1,675건 등이었고, 서울시청 시민상담실에서 임대차나 주택관련 문제 등을 상담하는 출장상담이 360,355건,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진행한 긴급 전화 1366상담이 66,936건이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http://lawhome.or.kr>에서 2017. 12. 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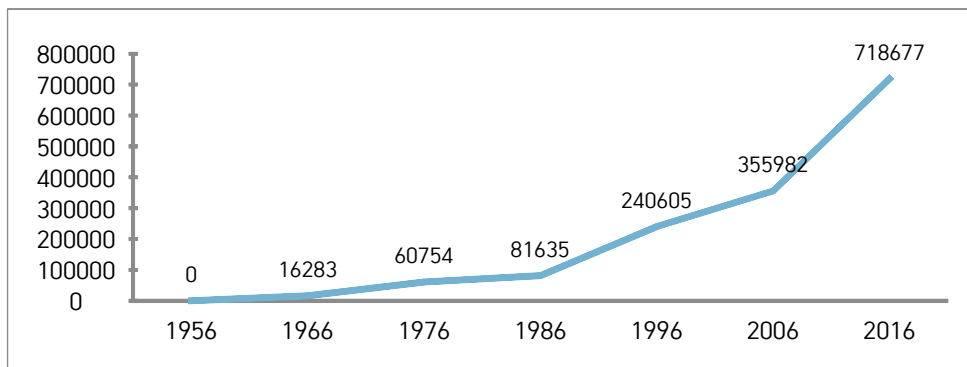
〈표 2-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실적

상담처리	소송전구조		소송구조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서류작성			
본부	32,336	8,280	4,644	1,502,266	1,547,526
지부	62,337	25,720	5,867	2,094,352	2,188,276
합계	94,673	34,000	10,511	3,596,618	3,735,802

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처리건수. <http://lawhome.or.kr>에서 2017. 12. 8. 인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접수되는 상담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하고 지역지부를 전국적으로 개설했던 1980년대 이후 상담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대의 상담건수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이 집안 내 갈등이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대두되고, 법률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도별 상담실적



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처리건수. <http://lawhome.or.kr>에서 2017. 12. 8. 인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전체 법률구조 실적 중에서 소송구조는 그간 1만여 건 수준이다. 본부 상담내용 중에서도 법률상담,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 작성이 많고, 소송구조로 연계되는 경우는 2014년 439건, 2015년 578건, 2016년 561건에 그치고 있다.

〈표 2-1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실적-분류별

(단위: 건)

분류		2014	2015	2016
사업실시 기관별	본부	74,898	74,468	77,626
	지부	78,989	81,751	72,375
	소계	153,887	156,219	150,001
본부 사업 중 지원형태별	법률상담	70,664	38,474	71,343
	화해조정	3,004	3,757	3,602
	소장등 서류작성	791	1,659	2,120
	소송구조	439	578	561
본부 사업 중 상담방법	면접상담	16,084	22,360	22,067
	전화상담	49,418	48,762	52,685
	통신상담	4,180	3,289	2,825
	지상(서신)상담	15	3	18
	순회(출장)상담	5,201	54	31
본부 면접상담 건 중 사건형태별	이혼상담	6,516	7,438	6,969
	부부갈등	2,333	3,017	2,868
	유언·상속	1,010	1,811	2,239
	가사기타		1,363	1,520
	파산	1,191	1,278	954
	양육비	610	1,042	928
	위자료·재산분할			920

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각년도). 상담통계 자료집을 재구성함.

제4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⁸⁾의 법률구조 현황

1.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설립 취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고자 설립되었다.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등 법률서비스는 물론이고 법률강연과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전 국민의 법률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부터 평등과 정의가 실현되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약혼, 파혼, 이혼, 사실혼, 부부관계, 부양, 상속, 유언, 채권·채무, 소송절차, 가정폭력, 자녀문제, 재산관계, 주택임대차, 교통사고, 성폭력, 폭행, 상해, 협박, 사기, 남녀차별 등의 문제에 대해서 돈이 없거나 법을 몰라서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법률상담과 조정, 화해, 무료대서를 해주고 있다.

2.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연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1999년 8월 26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개원하였다. 초대 이사장은 배경숙 박사, 초대 원장은 양정자 박사가 맡았다. 배경숙 박사는 이후 상담원의 명예 이사장으로, 양정자 박사는 창립 이후 상담원의 원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1999년 12월에는 법무부 사단법인 및 공익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2000년 5월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 상담을 시작하였으며, 동년 6월 여성단체 연대 장애인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참가하며 시민단체 연대활동을 개시하였다. 2000년 6월 20일부터 용산구청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 상담원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설립, 9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출판부' 등록으로 상담 및 출판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2000년 한 해 동안 4,608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12월 18일 가정폭력 신고전화 1366과 연

8)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홈페이지(lawqa.jinbo.net)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제한 응급상담전화를 설치하였다.

2001년 5월 법률구조변호사단을 창단하여 첫 소송구조 사건을 착수하였다. 2001년 10월 집계 결과 설립일부터 2001년 10월까지 약 2년의 단기간에 법률상담 사건 총 12,493건을 상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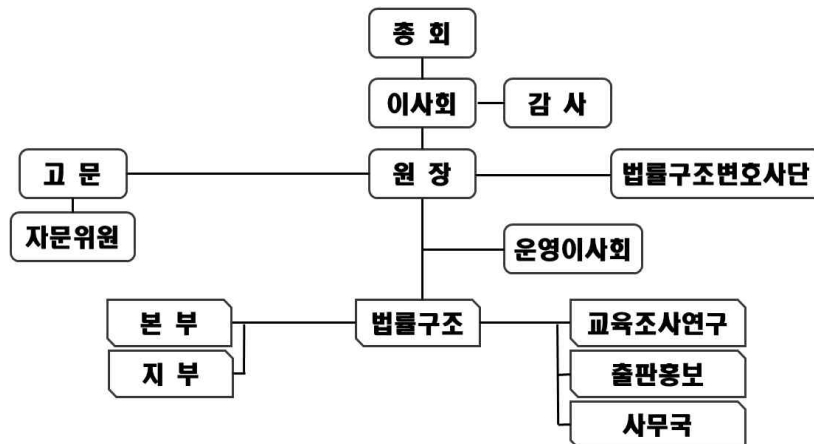
2002년 「법률구조법」상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하였고, 2004년부터 사법연수생 사회봉사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같은 해 창립 5주년 기념 강연회 “현행 국제형사법상 피해자 보호법리”와 “한국의 아동학대 현황과 법적과제”를 개최하였다.

2007년 양천구 신정동 교육원 겸 분원을 개원하는 한편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훈련원을 개설하여,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기관으로 성장하였다.

3. 조직 구성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조직도는 아래 [그림 2-13]과 같다.

[그림 2-1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조직도



자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홈페이지 재구성. lawqa.jinbo.net에서 2017.12. 6. 인출.

상담원은 최고 기구인 총회 아래 이사회와 감사를 두고, 원장이 그 지휘를 받는 구조이다. 법률구조변호사단과 고문단, 국내·국외의 자문위원을 두어 법률 전문가를 비롯

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본부와 전국 7개 지부를 통해 상담 신청자에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제공한다. 또한 본부에 교육원을 두어 각종 생활강좌와 대중강좌를 실시하며, 법률구조 사업에 힘쓸 후진을 양성하기 위한 법률임상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4.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 사업

가. 법률 상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면접상담을 중심으로 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화해와 조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층적인 면접상담을 통해 대화의 통로를 이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양천경찰서, 강서경찰서, 관악경찰서와 가정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가정폭력 사건현장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워 면접상담이 불가능한 경우를 위해 전화상담, 편지상담, 온라인상담도 접수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상담센터나 복지관과 연계하여 상담원 외부에서 출장상담, 이동순회상담, 지상상담을 실시하여 수요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일 서울 지역 외의 거주자가 면접상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한다.

온라인상담의 경우 공개상담과 비공개상담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공개상담은 상담원 홈페이지의 공개게시판으로 접수를 받는다. 상담자가 게시글을 작성하면 상담원이 답변하는 댓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상담원은 이를 통해 간단한 절차 및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며 온라인 게시판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다. 비공개상담은 비공개 게시판으로 접수를 받으며,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만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게시글 작성자 본인과 상담원만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밀이 보장된다. 그리고 상담원은 자주 마주치는 가정 내 법률문제와 생활 법률문제에 관해 ‘자주 하는 질문’ 게시판을 개설함으로써 각 유형에 따른 관련 법령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4]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온라인상담게시판

온라인상담

자주하는질문

공개게시판

비공개게시판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자원봉사신청

 오시는길

 지부모집

 후원안내

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고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성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3,23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236	감사합니다 1	lovejj5712	2017-12-03	17
13235	매느리 상술 재산 요청 1	민석	2017-11-30	4
13234	전세보증금 1	김희연	2017-11-29	38
13233	동생 사망후 한정상속중인 절차 1	문제네요	2017-11-29	35
13232	세무서 압류와 소유권 포기 1	세금문제	2017-11-28	39
13231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낙동강	2017-11-28	36
13230	관리규약 1	김진이	2017-11-27	9
13229	상속 포기 심판청구 중에 사망한 경우 1	쫄루	2017-11-27	10
13228	부동산 임차 승계 매도하였는데 이사비용과 복비를 요구합니다. 1	매도인	2017-11-24	53
13227	재산상속문의 1	써니	2017-11-22	61
13226	월세 1년계약 자동연장하지 문의드려요 1	shu	2017-11-22	55
13225	실거려가신고? 1	매매	2017-11-22	44
13224	부동산매매 1	추가문의	2017-11-22	54
13223	성년후견인 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김도연	2017-11-20	47
13222	밀에 중간누수 문의글 tt 이요..tt 1	임미	2017-11-20	56
13221	세입자확정일자 1	확정	2017-11-19	55
13220	고발사건 1	강선정	2017-11-18	58
13219	피부와 두드러기 검사가 잘못나왔습니다. 1	보험쪽쪽	2017-11-17	60
13218	계약만료 전 전세보증금 반환 1	이은석	2017-11-16	68

자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홈페이지 재구성. lawqa.jinbo.net에서 2017.12. 6. 인출.

또한 상담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법률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문서 작성 등 무료대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리고 소송구조 지원 대상자가 소송구조가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변호사단의 지원이나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소송구조를 진행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법률구조 사업을 일람하면 아래와 같다.

〈표 2-14〉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상담창구 일람

상담창구	내용
면접상담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오전 10시 ~ 오전 11시 30분
전화상담	02) 2697 - 0155 02) 3675 - 0142~3
서신상담	[08020]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6, 산호빌딩 4층 (신정동)
출장상담	목동역, 신정네거리역 서울 어르신 상담센터, 양천 어르신 상담센터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전화로 문의 요망)
온라인 상담	http://lawqa.jinbo.ne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홈페이지 공개상담 게시판
비공개 상담	http://lawqa.jinbo.ne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홈페이지 비공개상담 게시판 LawQA@chol.com 이메일

자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홈페이지 재구성. lawqa.jinbo.net에서 2017.12. 6. 인출.

나. 취약계층을 위한 임시보호소 설립 및 교육 사업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당장 거주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임시보호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포스터 홈(Foster Home)은 부모의 별거 및 이혼으로 처지가 불안정한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는 시설이다. 또한 자녀 등 부양자와 갈등을 겪거나 학대 받는 피부양자 노인을 보호하는 임시보호소를 설립하는 사업을 한다. 그리고 노인과 자녀를 위한 교육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민 여성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 문화 및 법률강좌를 운영하며 조기정착 프로그램과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대에 노출되는 이주민 여성을 위한 ‘친정 만들어주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다. 교육 및 예방사업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가정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의식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각종 법률 강좌를 개설하고, 자체 출판 및 홍보 활동이나 대중매체 노출 등

의 방법으로 법률계몽 사업을 펼친다. 산하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출판부’를 두어 출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출판물로는 2010년 발간『법률구조의 현황과 발전방향』, 결혼이주민들을 위해 7개 국어로 발간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률가이드』 등이 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위탁기관으로 위촉되어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법 개정 운동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가정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 운동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족법 개정, 법률구조 사업 확대, 법률복지사제도 제정, 법률구조법 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가족법 개정 운동은, 과거 가부장제 문화에 기반을 두는 현행 가족법을 한층 민주적으로 개정하여 현재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정법원 전국 설치 운동은, 가사 사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의 전국 확대 설치 운동이다.

한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독자적으로 법률복지사제도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법률구조 전문가, 특히 가정법률복지사를 양성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이다. 법률구조 사업이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화해와 조정을 통해 신속한 갈등해소와 예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 기해, 변호사 외에도 법률구조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주장으로 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의의 등에 이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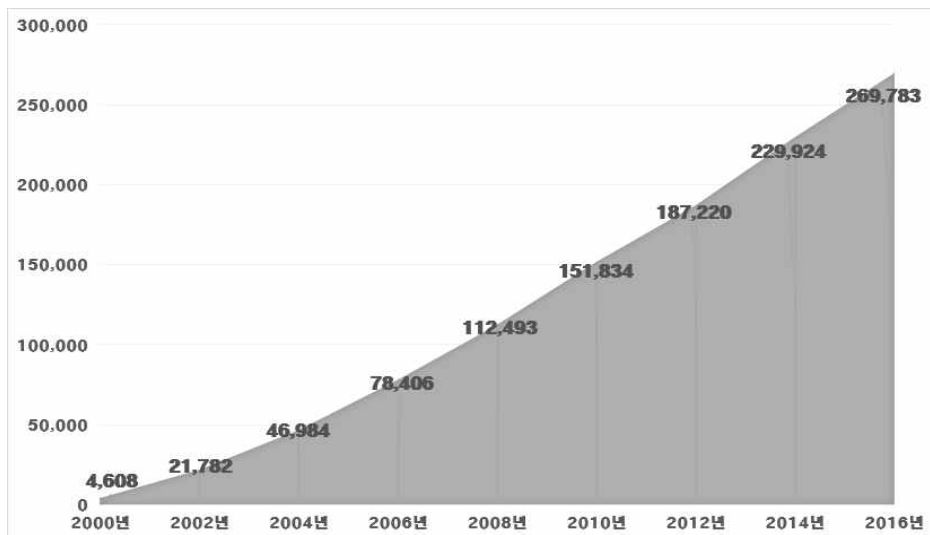
마. 지부 설치 및 지원 사업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법률구조 사업의 확충을 위해 국내·국외의 지부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상담원 지부의 원장이 되는 데 필요한 요건은 없으며, 법률 전공자가 아니라도 지원할 수 있다. 상담원 지부의 실무를 담당할 법률가는 상담원 본부에서 파견한다. 본부는 지부에 비치할 기본적인 상담 관련 도서와 기타 교육자료, 상담원 정기간행물인 <법률복지> 소식지를 제공하여 법률구조 취약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지부가 개설되고 기본 자료를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5.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 현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1999년 8월 26일 개원한 이후 2017년 6월 30일 까지 본부와 지부에서 누적 285,977건의 법률상담, 화해조정, 무료대서 및 소송구조를 진행했다. 다만 누적 총계를 제외한 상세한 통계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전체 법률구조 중 각 유형별 구조건수와 비중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 2-15]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 누적건수



자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홈페이지 재구성. lawqa.jinbo.net에서 2017.12. 6. 인출.

제5절 법률홈닥터의 법률구조 현황

1. 법률홈닥터 시행 취지 및 연혁

법률홈닥터는 2011년 법무부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법률보호가 필요한 서민들에게 무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법률구조 제도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은 모두 법률구조법에 근거한 법률구조기관으로, 기관을 찾는 수요자들에게 1차로 직원 혹은 상담원이 상담을 제공하고, 2차로 변호사가 상담 혹은 소송구조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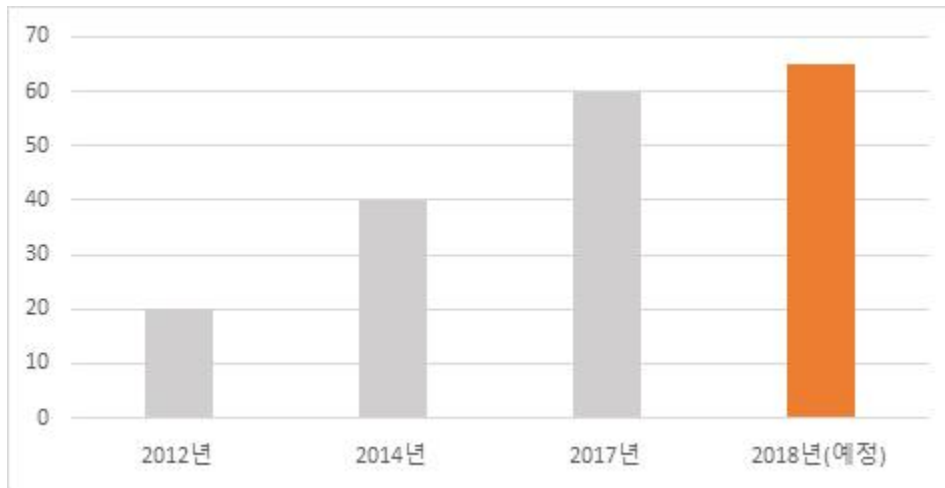
법률구조의 시작은 법률상담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법률상담전문가로 육성하여 일선에서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법률상담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법률구조 제도를 통한 법률복지 실현이 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민경식, 2002, p.29-30).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률전문가(변호사)의 수가 부족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1차 상담은 변호사 자책자가 아닌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고, 다른 법률구조기관들도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수요자가 법률전문가를 직접 만나 법률상담을 받기는 어려웠다. 특히 취약계층인 수요자의 경우,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법률구조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는 이처럼 수요자의 적극적인 이해와 행위를 전제로 했던 기존 법률구조의 약점을 보완하고 법률구조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새로운 제도로, 법률구조법의 전통적인 법률구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부처인 법무부 인권국에서 정책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법률구조로의 전환을 꾀하였다는 점에 특히 의미가 있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2011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5월부터 법무부가 전국 20

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정식사업을 시작하였다. 2012년 5월 최초 법률홈닥터 20명이 지방자치단체 등 거점기관에 배치되었다. 법무부는 2014년 5월 변호사 20명을 신규 채용하여 무변촌 등 법률복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40곳에 배치하였고, 2017년에는 20명을 추가 채용하여 현재 총 60명의 변호사가 전국 60개 지역의 시청, 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등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8년 법률홈닥터를 65명으로 증원하여 법률홈닥터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법무부 인권구조과, 2017. 5. 1.). 법률홈닥터의 조력기관에는 법률구조공단, LH·SH 공사, 장애인인권문제연구소 등이 있다.

[그림 2-16] 법률홈닥터 인원 현황



2. 법률홈닥터 운영 현황

가. 법률홈닥터 배치 현황

법률홈닥터 예산은 2013년 9억원, 2014년 22억원, 2015년 24억원, 2016년 24억 49백만원, 2017년에는 42억 35백만원, 2018년에는 42억 27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

다. 2017년의 예산 확대는 20명의 법률홈닥터 증원 및 법률홈닥터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건비, 일반연구비 및 자산취득비 증액에 의한 결과이다.

2017년 현재 전국에 60곳의 시·군·구청,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있으며, 2018년에는 65곳에 배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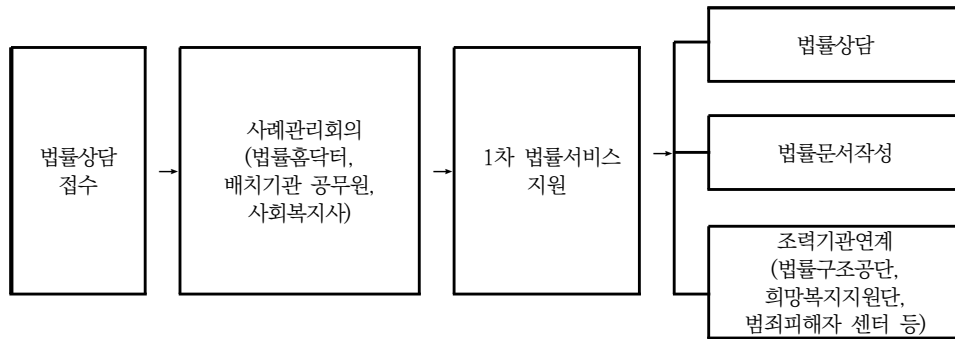
〈표 2-15〉 법률홈닥터 전국 배치 현황(2017년 12월말 현재)

권역	배치기관	권역	배치기관
서울	강서구청	충청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도봉구청		대전 동구청
	동작구청		대전사회복지협의회
	마포구청		논산시청
	서대문구청		서산시청
	양천구청		천안시청
	은평구청		충주시청
	종로구청		아산시청
	서울사회복지협의회		전주시청
	강동구청	광주 전라	광주 남구청
인천 경기	관악구청		광주 서구청
	노원구청		순천시청
	인천 강화군청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전북사회복지협의회
	광명시청		익산시청
	남양주시청	대구 경북	광주 광산구청
	안산시청		대구 달서구청
	오산시청		대구 수성구청
	이천시청		경산시청
	수원사회복지협의회		영주시청
	인천 남구청		대구 동구청
	고양 덕양구청		대구 북구청
	동두천시청		포항시청
	성남시청	부산 울산 경남	부산광역시청
강원	안성시청		부산 남구청
	속초시청		부산 사상구청
	강원사회복지협의회		울산광역시청
	삼척시청		김해사회복지협의회
	원주시청		부산 수영구청
제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

나. 법률홈닥터의 법률구조 서비스

[그림 2-17] 법률홈닥터 처리 절차도



자료: 법무부(2015, p.33).

1) 1차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는 서민들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담당한다. 법률홈닥터가 제공하는 1차 법률서비스란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적, 체계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중 법률상담과 법교육이 중점 사업이다. 법률홈닥터는 배치기관에 상주하면서 구청, 시청 등 배치기관의 담당자와 사례관리회의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법률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망과 연계한 다각적 네트워크를 구축, 법률문제 전반에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법률홈닥터 업무범위에는 소송수행이 제외되어 있다. 법률홈닥터는 소송보다는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신 법률홈닥터는 소송이 필요한 사안을 발견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이 소송구조를 실시하는 법률구조공공급자와 취약계층 수요자를 연계하며 이를 보완하고 있다.

법률홈닥터가 법률상담과 정보제공을 담당하는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을 포함한다. 법률홈닥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활법률 문제에 관한 개인 상담 및 기관 단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의 경우 정기적인 방문 상담

도 가능하다. 소송 이전의 포괄적인 1차적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작성 등 상대적으로 간소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지도받을 수 있다(법무부, 2017).

2) 기관 연계 활동

법률홈닥터는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법률서비스 소외자를 발굴하는 일에도 적극 이용되고 있다. 지역의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기관의 담당자가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계층을 발굴해 법률홈닥터에게 연계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자력으로 소송 진행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법률구조를 알선하는 등 조력기관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각 시·군·구청 및 복지기관의 사례관리회의에 참여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한다.

또한 법률홈닥터는 대상자 맞춤형 법교육도 실시한다. 요청에 따라 각종 대상자 집단의 수요에 맞춘 생활법률 교육이나 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법령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하는 인권 교육 등을 진행하며, 인권지킴이단 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스마일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법률홈닥터와 연계하여 법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정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집단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다. SH·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해 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법률상담신청서를 비치하고, 신청기간 내에 이를 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을 받았다(세계일보, 2015. 6. 10.).

다. 법률홈닥터 이용 방법

법률홈닥터의 법률상담 및 법교육 등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률홈닥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로 문의하여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혹은 방문상담이나

팩스 접수도 가능하며, 법률홈닥터 사이버 상담 게시판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3. 법률홈닥터 법률구조 실적

가. 법률홈닥터 활동 실적

법률홈닥터 수가 늘어날수록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수요를 소화하는 정도도 늘어나고 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법률홈닥터 활동은 2012년에 11,792건, 2013년에 17,611건, 2014년에 28,563건, 2015년에 37,663건, 2016년에는 39,361건으로 순조롭게 증가했다. 2016년에 40명의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었음을 고려하면, 1인당 연간 약 1천여 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요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지역 주민, 저소득 주민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이다. 그리고 개인만이 아니라 관련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도 법률홈닥터의 지원을 받고 있다. 법률홈닥터 수요는 법률홈닥터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표 2-16〉 법률홈닥터 활동 실적

연도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소송구조· 조력기관 연계	계
'12.(5.~12.)	10,168	295	199	1,130	11,792
'13.(1.~12.)	15,143	633	432	1,403	17,611
'14.(1.~12.)	24,149	767	1,084	2,563	28,563
'15.(1.~12.)	31,569	934	1,763	3,397	37,663
'16.(1.~12.)	33,324	841	3,525	1,671	39,361
합계	114,353	3,470	7,003	10,164	134,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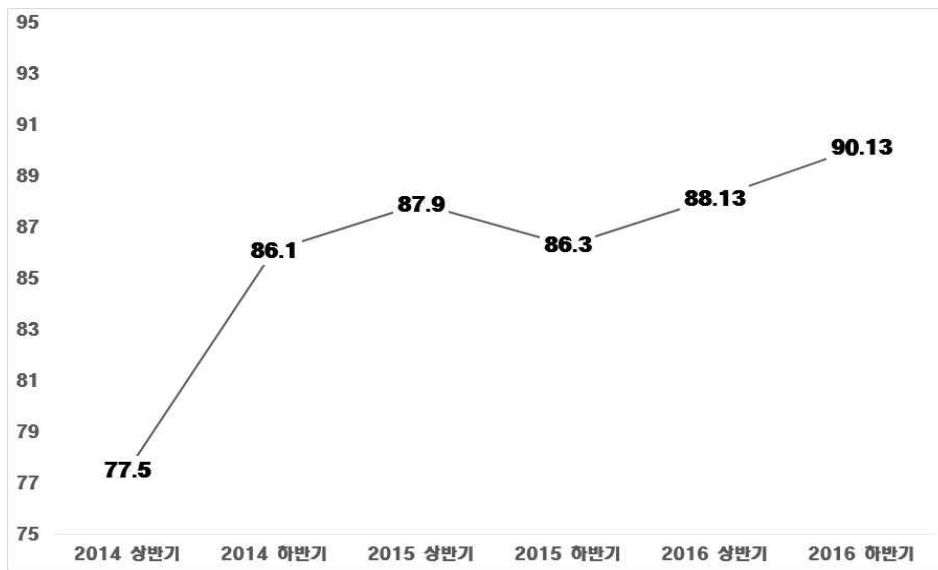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인권구조과 (2017, 5. 1.).

나. 법률홈닥터에 대한 만족도 평가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인권국 소속 공무원으로, 법무부가 직접 채용한다. 법률홈닥터로 채용된 다음에는 5급 사무관 상당의 급여를 받으며 각 지역에 파견되어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활동을 전담한다. 법무부 인권국 소속이기 때문에 근무지는 지역이라도 고용 관계가 안정적이고, 각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통일되고 일관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용이하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법률홈닥터 제도 도입의 취지는 현재 상당히 잘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코리아리서치를 통해 시행한 법률홈닥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법률홈닥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2014년 상반기 첫 조사에서 77.5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고, 현재 100점 만점 기준 90.13점으로 ‘매우 만족’ 수준으로 대단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코리아리서치, 2016, p.16).

[그림 2-18] 법률홈닥터 서비스 전체 만족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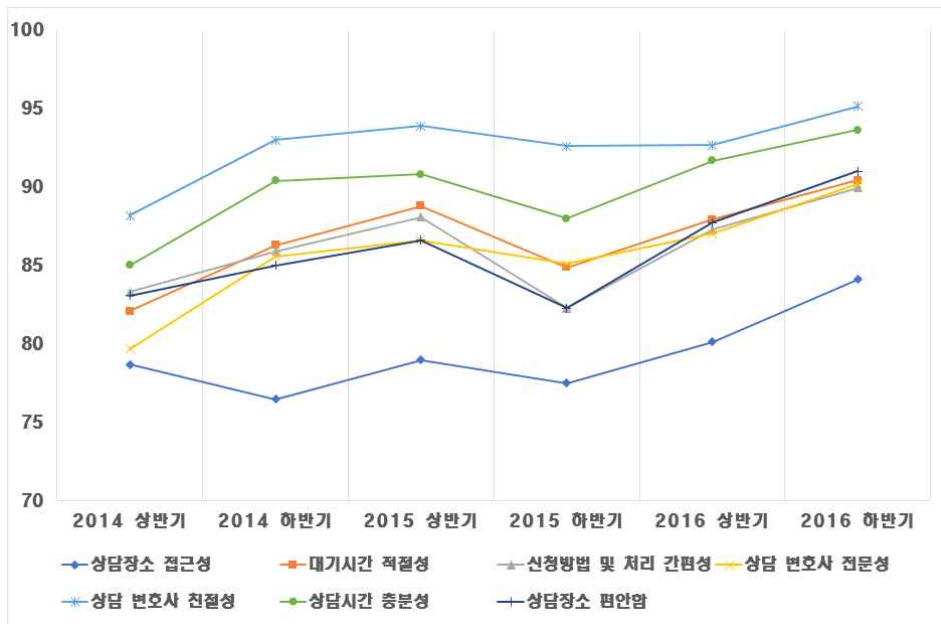


자료: 2016년 11월 코리아리서치 조사결과 가공

법률홈닥터 서비스 항목별 만족도에 있어서도, 2016년 11월 현재 ‘상담장소 접근성’ 84.13점, ‘상담 대기시간 적절성’ 90.44점, ‘신청 및 처리 간편성’ 89.94점, ‘상담

변호사 전문성' 90.19점, '상담변호사 친절성' 95.13점, '상담시간 충분성' 93.63점, '상담장소 편안함' 91.00점으로 모든 항목이 80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9] 법률홈닥터 서비스 항목별 만족도



자료: 2016년 11월 코리아리서치 조사결과(가공)

4. 법률홈닥터 제도에 대한 평가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표방하면서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내용이 있다.

첫째, 법률홈닥터 배치지역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다. 2014년 법률홈닥터 배치지역 40곳 중에서 18곳인 45%가 수도권이며, 또 무변촌이나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지소가 없는 곳에 설치된 곳은 10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는 법률홈닥터의 배치지역을 무변촌 지역이나 비수도권 지역, 도서·산간지역 등으로 다양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법률홈닥터 증원 시에 수도권 이외 배치 기관을 기존 7곳에서 22곳으로 확대하고, 무변촌 5곳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

소 미설치 지역 6곳에 법률홈닥터를 배치하였다.

둘째, 서비스 중복 이용자를 거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유사한 형태의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으며, 소송구조로 갈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송구조 중심의 기존 법률구조 사업과 차별화된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경우와 같이 상담 위주의 사업 진행으로도 수요자들의 법률적 욕구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차 법률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 확대도 바람직하다.

특히 법률홈닥터 제도는 기존 법률구조 기관이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의 해당 쟁점이 법률적 개입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해당지역에서 사회복지 거점 기관에서 상담을 실시함에 따라서 쉽게 방문하여 상담하고, 본인의 문제가 법률적 개입이 필요함을 인지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법률홈닥터 제도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6절 마을변호사⁹⁾제도의 법률구조 현황

1. 마을변호사 도입 배경

마을변호사 제도는 도시 지역에 비해 실질적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읍면 등의 주민들에게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창설된 제도이다. 국내 변호사 수가 근 2만 명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률서비스 접근성의 지역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컸다.

9) 마을변호사 블로그(<http://mabyun.blog.me>)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마을변호사라고 칭하는 경우에는 대한변협, 각 지방변호사회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말한다. 그 외에 서울시 마을변호사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칭한다.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법률서비스 역시 신속하고 편리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물리적·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배려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5일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을변호사 제도를 출범하였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모든 국민들에게 1차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변호사가 마을변호사로 자원하면 이들을 각 마을(읍·면)에 배정하여 주민들이 법적인 문제를 겪을 때 1차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균형 잡힌 지역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마을변호사 선정 및 현황

가. 마을변호사 선정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2013년 6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운영을 위한 공동노력에 관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회원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를 모집하였는데, 2013년 6월 최초 시행 당시에는 415명의 변호사가 마을변호사 활동에 자원함으로써 전국 250개 읍면지역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었다. 마을변호사 활동에 자원하는 변호사들은 희망지역을 신청할 수 있는데,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연고지 혹은 근무지 근처 읍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6월부터 마을변호사 배정, 관리 권한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 지방변호사회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서울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각 지방의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한다. 이에 따라 지역 변호사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설립 취지에 따라 읍면 지역에 한해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었으나,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도시지역 주민들을 위해 2016년 6월부터는 수원시 등 일부 동 지역에도 마을변호사를 배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법무부, 2016. 6. 2.).

나.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3년 6월 경 전국 250개 읍·면에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해 2016년 5월 말에는 시행 3년 만에 처음의 5배가 넘는 1,413개 읍·면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마을변호사로 참여하는 변호사 수도 2013년 6월 415명에서 2016년 5월 기준 1,514명으로 3.5배 증가하였다. 2017년 2월 현재는 일부 동 지역을 추가하여 1,439개 지역 중 미배정지역 26개 지역을 제외한 1,419개 지역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있다. 이는 전국 개업변호사 2만여 명 중 8.5%가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2-17〉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 (2017. 2. 27. 기준)

지역	시군구	지역 수	배정 수 (변호사 수)	미배정지역
경기도	용인시	8	37	0
	광주시	7	55	0
	가평군	6	7	0
	수원시	3	27	0
	양평군	12	34	0
	여주시	12	28	0
	연천군	10	11	0
	평택시	9	44	0
	화성시	14	77	0
	포천시	12	20	0
	이천시	10	25	0
	안성시	12	42	0
	남양주시	9	22	0
	파주시	13	42	0
	양주시	5	16	0
	김포시(인천회)	6	42	0
	계	151	529 (264)	0
인천광역시	강화군	14	33	0
	옹진군	7	17	0
	계	21	50 (43)	0
강원도	춘천시	10	10	0
	원주시	9	9	0
	강릉시	8	9	0
	삼척시	8	9	0
	태백시	2	2	0
	인제군	6	6	0
	홍천군	10	11	0
	양구군	5	5	0
	화천군	5	5	0

90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지역	시군구	지역 수	배정 수 (변호사 수)	미배정지역
	영월군	9	9	0
	고성군	6	7	0
	양양군	6	6	0
	정선군	9	10	0
	평창군	8	8	0
	횡성군	9	9	0
	철원군	11	11	0
	계	121	126 (85)	0
충청북도	충주시	13	15	0
	제천시	8	8	0
	청주시	13	26	0
	괴산군	11	13	0
	증평군	2	4	0
	진천군	7	10	0
	음성군	9	13	0
	보은군	11	13	1
	옥천군	9	16	0
	영동군	11	14	0
	단양군	8	13	0
	계	102	145 (81)	1
충청남도 및 세종시	공주시	10	25	0
	보령시	11	13	0
	당진시	10	10	3
	천안시	12	17	2
	아산시	11	27	0
	서산시	11	7	6
	논산시	15	22	0
	계룡시	3	9	0
	금산군	10	19	0
	태안군	8	11	1
	서천군	13	15	0
	예산군	12	14	0
	홍성군	11	36	0
	부여군	16	17	1
	청양군	10	3	7
	세종시	10	28	0
	계	173	273 (126)	20
경상북도 및 대구	경산시	8	34	0
	경주시	12	14	0
	고령군	8	11	0
	구미시	9	13	0
	군위군	8	9	0
	김천시	16	16	0
	달성군	9	22	0
	문경시	9	9	0
	봉화군	10	10	0
	상주시	18	18	0

지역	시군구	지역 수	배정 수 (변호사 수)	미배정지역
	성주군	10	20	0
	안동시	14	14	0
	영덕군	9	9	0
	영양군	6	6	0
	영주시	15	15	0
	영천시	11	12	0
	예천군	12	12	0
	울릉군	3	3	0
	울진군	10	12	0
	의성군	18	19	0
	청도군	9	21	0
	청송군	8	9	0
	칠곡군	7	17	0
	포항시	14	22	0
	계	253	347 (100)	0
울산광역시	울주군	12	41	0
	계	12	41 (36)	0
부산광역시	기장군	5	74	0
	계	5	74 (41)	0
경상남도	거제시	9	9	0
	거창군	12	14	0
	고성군	14	15	0
	김해시	7	12	0
	남해군	10	10	0
	밀양시	11	11	0
	사천시	8	8	0
	산청군	11	12	0
	양산시	5	8	0
	의령군	13	13	0
	진주시	16	16	0
	창녕군	14	16	0
	창원시	8	16	0
	통영시	7	9	0
	하동군	13	13	0
	함안군	10	13	0
	함양군	11	11	0
	합천군	17	17	0
	계	196	223 (105)	0
전라남도	여수시	7	7	0
	순천시	11	14	0
	나주시	13	27	0
	광양시	9	12	0
	보성군	12	12	1
	장성군	11	22	0
	장흥군	10	15	0
	영광군	11	21	0
	신안군	14	18	0
	강진군	11	12	0

지역	시군구	지역 수	배정 수 (변호사 수)	미배정지역
	진도군	7	8	0
	고흥군	16	17	0
	해남군	14	16	0
	담양군	12	23	0
	구례군	8	8	0
	화순군	13	30	0
	영암군	11	21	0
	곡성군	11	11	0
	무안군	9	16	0
	함평군	9	16	0
	완도군	12	12	0
	계	231	338 (138)	1
전라북도	고창군	14	17	3
	군산시	11	34	0
	김제시	17	103	0
	남원시	17	30	1
	무주군	6	7	0
	부안군	13	23	0
	순창군	11	19	0
	완주군	13	74	0
	익산시	15	43	0
	임실군	12	66	0
	장수군	7	9	0
	정읍시	15	21	0
	진안군	11	57	0
	계	162	503 (152)	4
제주도	제주시	7	14	0
	서귀포시	5	9	0
	계	12	23 (20)	0
합계		1,439	2,672 (1,19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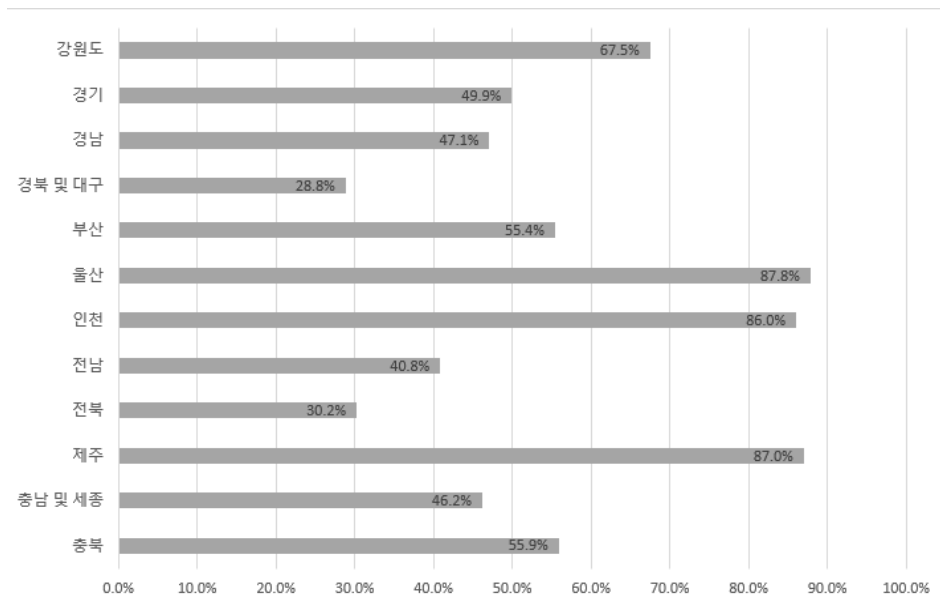
자료: 마을변호사 블로그, <http://mabyun.blog.me>에서 2017. 12. 8. 인출.

마을변호사 미배정 지역이 26개 지역으로 극히 줄어들었지만 대신 변호사가 중복하여 배정되는 비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배정된 마을변호사 수가 충분히 많은 지역은 지역 수 대비 마을변호사 배정 비율이 100%에 가깝게 나타난다. 그러나 마을변호사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배정 비율이 0%에 가깝게 나타난다. 마을변호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87.8%의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다. 그 다음은 제주 87%, 인천 86%이다. 반면 경북 및 대구가 28.8%로 비율이 가장 낮고, 전북이 30.2%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렇듯 마을변호사 수가 적은 지역은 1명의 변호사가 여러 지역을 중복해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 2~3명이 한 시군구 전체를 담당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북

영양군의 경우 변호사 1명이 모든 마을을 담당하는 마을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이러한 높은 중복 배정 비율은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선해나가야 할 지점이다.

[그림 2-20] 지역 수 대비 마을변호사 배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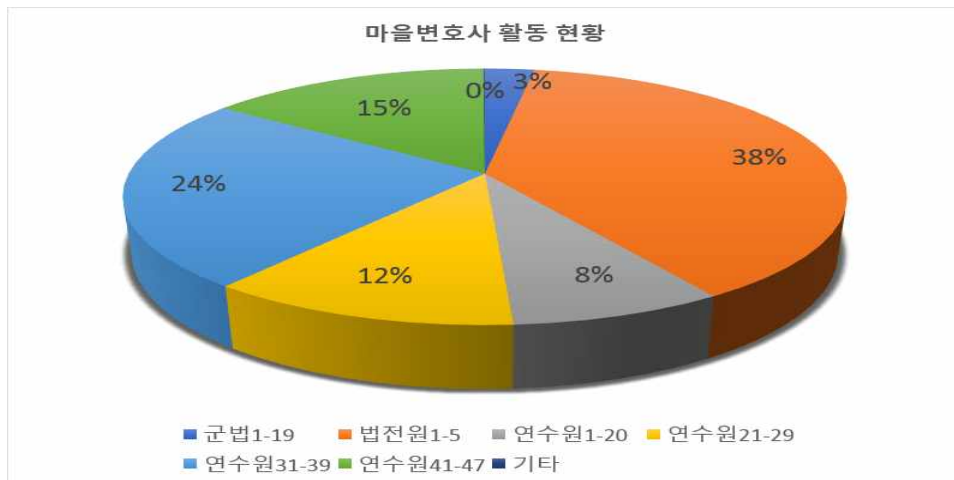
자료: 마을변호사 블로그, <http://mabyun.blog.me>에서 2017. 12. 8. 인출.

서울시에서도 2014년 12월부터 개업변호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83개동을 시작으로 마을변호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7월에는 183개동, 2016년 8월에는 344개동으로 시행동을 늘렸으며, 2017년 7월부터는 80개동이 추가되어 모두 424개 전체 동으로 시행되었다(서울시, 2017.7.7.). 한편 서울시는 마을변호사의 전면 시행과 더불어 동주민센터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을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전화상담에 비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한 대면상담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 마을변호사 지원 변호사 비율

마을변호사로 지원하는 변호사들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59%,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38%,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마을변호사 제도에는 다양한 연차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림 2-21] 연차별 마을변호사 활동 현황



3. 마을변호사 법률구조 절차

마을변호사는 각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주민들의 법률문제에 대한 신속한 법률 조언과 1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장의 법률문제 해결뿐 아니라 이후 법률서비스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여 자기 마을에 배정된 변호사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마을변호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으로 데이터가 개방·공유되어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

마을변호사의 상담은 주민이 필요한 경우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간편한 방법을 통

하여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상담이 아닌 일반 진정이나 민원 상담은 받지 않는다. 소송대리 활동은 하지 않으므로, 만일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마을변호사는 관련 법률구조기관을 안내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신속한 법률구조를 지원한다. 또한 마을변호사는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담당 마을을 찾아가 현장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그림 2-22] 마을변호사 활동 흐름도



4. 마을변호사 법률구조 현황

각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협이 함께 협업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민관 협력의 모범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무엇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담하던 마을변호사 관리업무가 2016년 5월 지방변호사회로 이관되면서, 지방변호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검찰청의 업무협약이 체결되는 등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역별 민관 협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마을변호사의 상담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3년 상담 건수는 232건에 그쳤으나, 2014년 상담 건수는 311건, 2015년 상담 건수는 811

건, 2016년 상담 건수는 2,060건으로 증가했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공식 집계된 누적 상담건수는 법률상담카드 작성 수와 현장 방문상담 수를 합쳐 총 2,689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 후 상담카드를 제출하지 않는 마을변호사가 78%에 달해, 실제 상담 건수는 약 1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경우는 2017년 7월부터 80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서울시, 2017.7.7.). <표 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총 상담 건수는 1만 2천여 건 정도이다. 월평균 방문상담이 236건, 전화상담이 185건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화비율을 줄이고,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는 대면상담을 정착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을 지정하기로 하였다(서울시, 2017.7.7.). 서울의 경우에는 교통 편의 등 방문의 편리성으로 방문상담 비율이 상당한 수준이지만, 마을변호사의 경우에는 방문상담보다는 전화 상담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18>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현황(2016년 말 기준)

구분	2013	2014	2015	2016	합계
법률상담카드	213건	277건	640건	1,383건	2,513건
방문상담	19건	34건	171건	677건	901건
합계	232건	311건	811건	2,060건	3,414건

자료: 국무조정실(2017. 4. 25.).

<표 2-19> 서울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현황

구분	2014.12	2015	2016	~2017.5	합계
방문상담	113건	2,258건	3,052건	1,663건	7,086건
전화상담	37건	1,473건	2,898건	1,155건	5,563건
합계	150건	3,731건	5,950건	2,818건	12,649건

자료: 서울시(2017. 7. 7.).

마을변호사 제도는 만족도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 및 2015년 읍·면 주민 상대 만족도 설문조사의 경우, 2014년 대비 2015년의 '만족' 이상 응답비율이 12.5포인트 향상(55.6%→68.1%)되는 등 마을 주민에게 사랑받는 제도로 점차 정착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의 이유로는 전화나 메일로 원격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물리적 거리로 인한 한계를 해소했다는 점이 꼽힌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을 덜고 법률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마을 전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의 변호사라는 생각으로 친근함을 품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17년 현재 시행 5년째에 접어든 마을변호사 제도는 유사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시 마을세무사,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등의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5. 마을변호사 홍보 및 정책 변화

마을변호사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을변호사 상담 사례집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마을변호사 홍보를 위한 자료집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소개하는 마을변호사 이야기』도 제작 및 배포되었다. 이 자료집은 드라마로도 제작된 인기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작가가 웹툰 형식으로 제작하여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홍보 방식에서 마을변호사제도는 법률서비스의 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한 소개는 여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법무부는 2015년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설명회」를 개최하여, ① 주민들의 대소사를 알고 있는 이장, ② 지역의 소외 계층과 직접 접촉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 등에게 마을변호사 제도를 소개하였다(법무부, 2015.6.5.). 또한 마을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제도 이용방법 설명 및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제도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문제 발생 시 신속한 법률조언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법률구조 지원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률구조 기관과 마을변호사 사이에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마을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 사이에 전화연락망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마을변호사가 상담 후 구조요건을 파악하여 구조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축된 연락망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공단에 송부하면, 신청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직접 주민에게 연락하여 구비서류 안내, 상담일정 예약 등 절

차를 진행하는 등의 체계를 갖추었다(법무부, 2015).

제7절 소결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법률구조 공급자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법률복지는 국민에게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법률구조와 차이가 있다. 최근 복지의 관점이 빈곤 또는 요보호 대상자 뿐 아니라 보편적인 서비스 이용 가능성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률복지 역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사법예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법률구조 체계의 분류에는 전통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인 공급 측면, 재원의 측면, 법률서비스의 형태 측면에 더해서 법률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따른 분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따른 분류는 경제적 접근성 제고 방식과 수요자 중심 접근성 제고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금전적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적 접근성 제고 방식이며, 서비스 제공 방식을 다양하게 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수요자 중심 접근성 제고 방식이라 할 것이다. 최근에 상담 등 1차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제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본 주요한 법률구조 서비스 공급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제도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법률상담에 대한 국민의 욕구에 대응하여 법률상담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을 통하여 소송구조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인터넷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상담원은 그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상담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1차 법률서비스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홈닥터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마을변호사도 기본적으로 상담서

비스를 우선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실적 등을 살펴보면 전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제도의 상담실적이 월등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법률상담 등 1차 서비스 제공 이후 소송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되는 체계이다.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제도는 무료 법률구조의 대상인 취약계층이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하고 있다. 각 법률구조 기관이 모두 소송구조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전문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1차 법률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최근 1차 법률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법률홈닥터 제도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 법률홈닥터 제도는 1차 법률서비스를 전담하고 있어서, 변호사 1인당 상담 실적 등이 월등히 뛰어나고, 이용자 만족도 또한 다른 제도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법률홈닥터 제도가 각 배치지역의 사회복지 거점 기관에서 상담을 실시함에 따라서 쉽게 방문하여 상담하고, 본인의 문제가 법률적 개입이 필요함을 인지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률구조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들 법률구조 기관 간의 기능적 중복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담 등 1차 서비스는 경제적·지리적 접근가능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 친화적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을, 마을변호사 제도는 전화를 이용한 상담을,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대면 상담을 각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의 특징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본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쟁점사안별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전화 상담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위의 활용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여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굴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는 대면 상담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이 주로 활용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를 동시에 수집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각의 서비스 간에 존재하는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이용자 중복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제 3 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법률서비스 지원체계 진단

제1절 아동·가족 분야

제2절 금융·부채 분야

제3절 고용·노동 분야

제4절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체계

제5절 소결

3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법률서비스 지원체계 진단

제1절 아동·가족 분야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법률지원은 법률복지 서비스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되었던 「법률구조실태조사」의 결과, 취약계층 열 명 중 네 명이 과거 법률적 도움이 가장 필요했던 분야로 혼인, 이혼, 호적, 상속, 가정폭력 등을 포함하는 가사 관련 분야로 응답하였다. 이는 부동산, 채권/채무, 매매/증여, 손해배상, 계약/해제, 경매, 임대차, 근로관계 등 민사 일반에서 도움이 가장 필요했다는 응답과 더불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들어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폭력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및 아동, 노인 등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회적 무관심, 낮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인한 법률지식의 부족, 소송에 따른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서비스는 읍면동의 통합사례관리,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와 희망복지지원단 등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전문적 법률지원서비스는 가족해체 및 가족위기 등 가정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상담 및 지원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이에 아동·가족 분야 복지 서비스 현황 분석에서는 현재 취약계층 가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의 단계에서 법률복지의 개입의 필요성을 진단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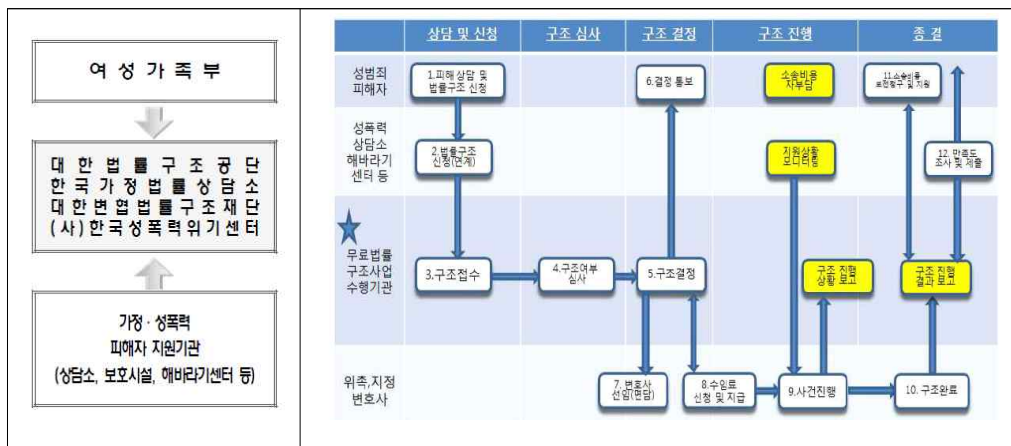
1. 취약아동·가족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현황

가. 가정폭력 피해 가족 및 아동지원 법률서비스

현행 중앙부처의 업무분담구조는 아동정책과 여성 및 가족정책의 소관부처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하위유형인 부부폭력 및 성폭력은 여성가족부의 소관으로,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구분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통한 가정폭력·성폭력 지원현황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서비스로 나누어 가정 내 학대 및 폭력에 대한 법률지원현황을 정리하기로 한다.

먼저, 가정폭력의 위기에 노출된 취약가족 및 아동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에 의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와 보건복지부에 의한 학대 피해아동 지원체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1]에서 나타난 바처럼, 여성가족부는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법률구조를 제공한다.

[그림 3-1]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2015, p.3).

가정학대 및 성학대 피해자를 위한 법률서비스는 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민·가사 사건 청구를 할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여성, 아동 등 폭력에 취약한 집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03년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당년도 1월 1일부터 가정폭력 피해 여성, 2007년 2월 1일부터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법률구조를 실시해왔으며, 2011년 3월 1일부터 모든 가정폭력·성폭력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민·가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안내. www.klac.or.kr에서 2017. 10. 20. 인출).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여성을 포함)로 소득 및 피해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서 확인한 가정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진단서(가정폭력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무료 법률구조 범위는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민사 사건 또는 가사 사건 청구 시 사건 승소가액이 3억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구조비가 1인당 350만원을 초과할 때 심사기구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2017. 10. 2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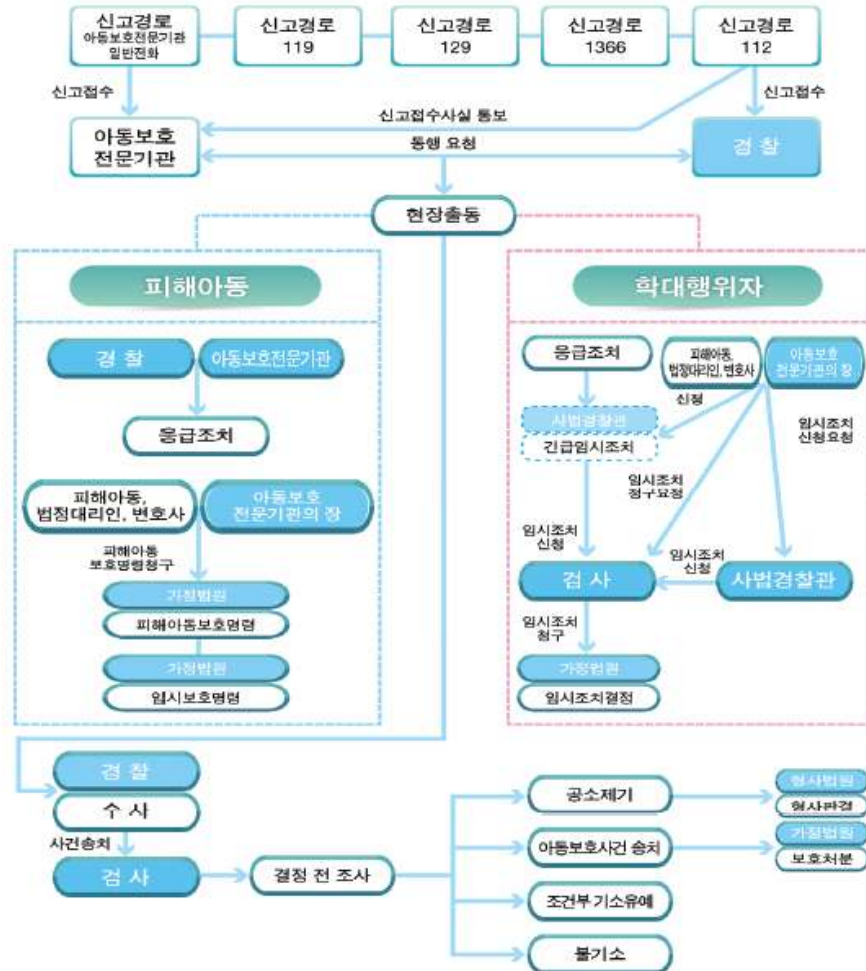
사건처리 절차는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 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한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안내. www.klac.or.kr에서 2017. 10. 20. 인출).

한편,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취약계층과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사

· 가사·형사 소송 전반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 대상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상담위탁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 및 그 배우자, 가정폭력 피해 자녀, 일반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다.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가정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으로부터 상담위탁보호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행위자와 피해자(배우자 및 가족)를 대상으로 폭력적인 성향과 습관을 교정하고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면접, 서신 및 전화, 순회, 인터넷, 출장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하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간단한 소송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주고 있다.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해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소송구조는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그리고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www.lawhome.or.kr에서 2017. 10. 20. 인출).

한편,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는 [그림 3-2]와 같이 학대의심사례로 112로 신고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출동 및 조사가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제도는 형사 절차상의 권리, 접근금지명령 등 임시조치,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 및 피해아동을 위한 기타 법률서비스 연계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3-2] 아동학대 대응체계



자료: 전경숙 (2016).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사회적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2014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으로 칭함)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 일부를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의 개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아동학대특례법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가 명시되었고,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으로써 학대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이 보다 구체화되었다(김성규, 2014; 허남순, 2015). 아동학대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처리절차에 특례를 두는 한편, 아동

보호 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가정 내 훈육으로 간주되었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현행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제도는 형사 절차상 권리보호, 접근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제도 등으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첫째, 형사 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선정하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할 수 있다.

둘째, 아동학대의 재발우려 등 접근금지명령 등 임시조치가 필요할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가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조치,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의 권한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 (긴급)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셋째, 아동학대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가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조치, 피해아동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 제한, 전화·이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피해아동 보호위탁, 의료기관에 피해아동 치료위탁, 연고자 등에게 피해아동 가정위탁,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넷째, 학대피해 아동은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제도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쉼터제공, 심리치료, 의료 및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아동의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심리치료, 양육교육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타법률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형사 법률구조는 이러한 일련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국가개입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대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2014년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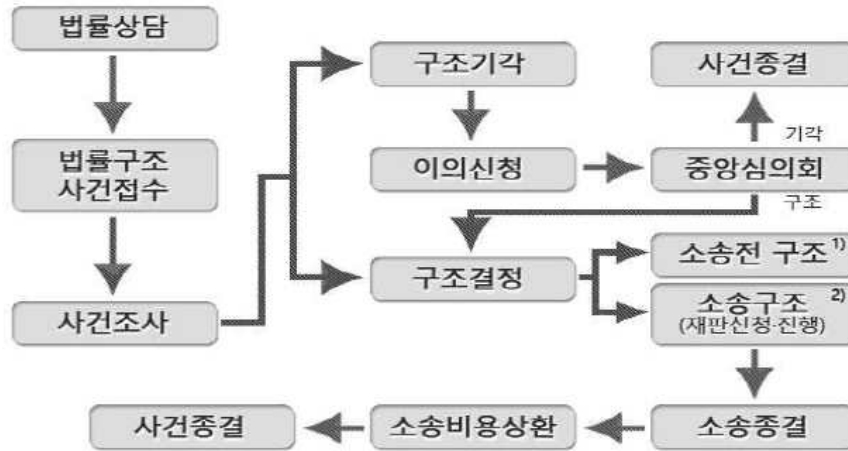
구조공단은 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에게 형사 법률구조를 제공했으며,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의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내거주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로 규정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증빙 서류와 함께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 시설에서 확인한 아동학대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한부모 가족 지원 법률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8월 발표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는 1,540천 가구에 이르며 이중 미혼자녀의 연령이 18세 이하인 한부모 가구는 446천가구에 이른다(통계청, 2017). 이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2016년 기준 231,411가구로 나타났으며(여성가족부, 2017) 2010년 이후 기초보장수급자 한부모 및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 수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여유진 등, 2016). 한부모 가족의 경우, 경제적 빈곤의 위험뿐만 아니라 아동양육 및 돌봄, 사회적지지 등의 영역에서 양부모가족보다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그러한 취약성으로 인하여 법률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을 수 있다. 예컨대, 법적으로 양육비를 정기지급받기로 한 한부모 중 실제로 최근 1년간 양육비를 받은 형태를 살펴보면, 수급 한부모의 경우 정기지급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비율 자체도 낮지만,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과반에 가까운 44.1%가 실제로 양육비를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은지 등, 2015).

한부모 가족 무료 법률지원 사업은 한부모 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지원을 포함하는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가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8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서 양육비관련 지원 사건(양육비이행 관리원)을 제외하고 기타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한부모 가족(Single-Parent Families)으로 모자(母子) 가정, 부자(父子) 가정, 미혼모(未婚母) 가족, 미혼부(未婚父) 가족, 기타 한부모 가족(재혼가족 포함), 조손(祖孫) 가족을 포함한다.

[그림 3-3] 한부모 가족 법률구조절차



1) 소송전 구조 : 소송 제기 전 화해 또는 조정 성립 사건
2) 소송구조 :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민사소송대리 및 형사변호사건

자료: 여성가족부(2017, p.321).

2.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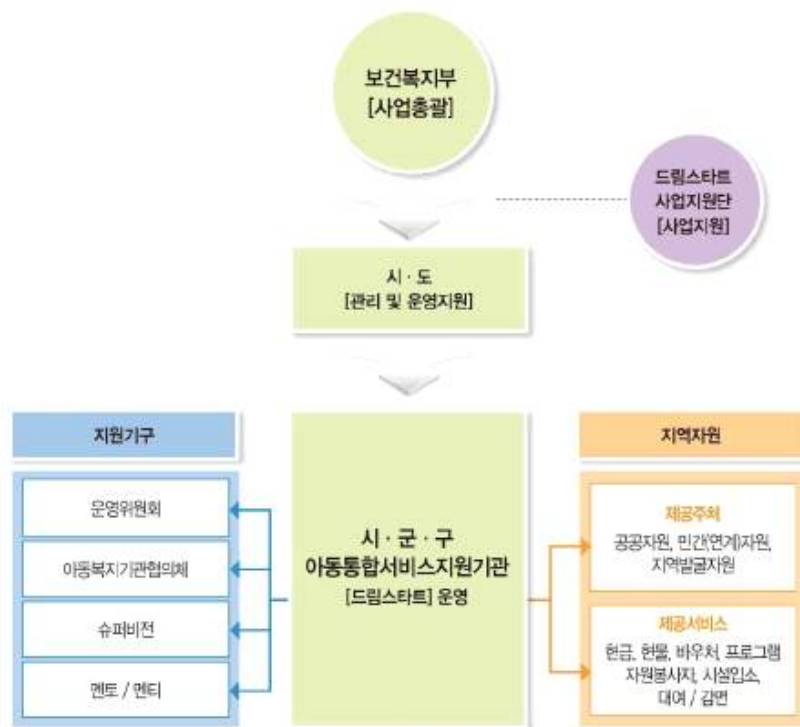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돕기 위한 복지지원서비스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드림스타트와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아동과 가족 중심의 서비스는 주로 드림스타트가 복지서비스 지원의 중심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드림스타트를 통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현황을 개괄하고 법률지원 서비스가 요청되는 욕구영역에 대해 정리하기로 한다.

드림스타트는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및 사회양극화 등에 따른 아동빈곤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부적절한 양육환경에 노출성이 높은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지원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¹⁰⁾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이 적용된다. 전국 시군구 지역 내 설치되어 평균 3.5명의 전담공무원과 4.5명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2016년 기준)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

10)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위기개입·집중사례관리 등급에 한정하여 사례회의 및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사례관리 기간을 최대 1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록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아동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자원과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정방문 상담을 통하여 위기아동 등 사례관리 대상아동을 발굴하며, 취약계층 아동 및 가구에 대한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에 기초하여 아동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그림 3-4] 드림스타트 사업구조



자료: 보건복지부(2017a, p.21).

드림스타트 서비스 대상 이용아동의 58.3%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아동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의 <표 3-1>과 안전, 건강,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의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적 지원욕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재산 및 위자료 등의 법률처리

문제, 신분상실, 사고보상처리, 신용불량, 국적 문제 등의 법률적 지원 욕구, 둘째는 차별과 권리침해의 문제해결을 위한 권익보장으로 나눌 수 있다.

〈표 3-1〉 드림스타트 욕구조사 영역

욕구영역		주요현상
0. 안전	01. 가족 내 안전유지	폭력, 성추행, 성폭력, 유기, 방임, 학대, 실종
	02. 가족 외부로부터의 안전유지	폭력, 성폭력, 협박·위협, 학대, 착취
1. 건강	01. 신체적 건강유지	신체장애, 일시적 질병 및 상해,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비만, 영양결핍
	02. 정신적 건강유지	환청/환각/망상, 자해(자살)행위, 약물오남용·중독, 식사 거부, 수면문제, 음주문제
2. 일상유지	01. 의식주관련 일상생활 유지	식사 및 준비곤란, 의복착용곤란, 외출곤란, 약물복용곤란, 위생관리 곤란, 긴급상황 대처곤란
	02. 여가생활 활용	여가활동 부족, 부적절한 여가활동
3. 가족관계	01. 관계형성	부부갈등, 부모자녀갈등, 고부갈등, 형제갈등, 가족간 관계 소원, 가족간 관계단절, 가족간 갈등
	02. 가족돌봄	장애인돌봄 곤란, 노인돌봄 곤란, 아동돌봄 곤란, 환자돌봄 곤란
4. 사회적 관계	01. 친인척 및 이웃 간 관계 형성	친인척 갈등, 관계소원, 관계단절, 이웃간 갈등, 관계소원, 관계단절
	02. 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종교생활, 기타 사회생활의 어려움
5. 경제	01. 기초생활해결	식비, 주거비, 의복지, 난방비 부족, 공과금 체납, 통신비 부족, 의료비 부족
	02. 자산관리	자산관리 능력부재, 부채, 과태료·벌금, 과소비·낭비
6. 교육	01. 기초지식습득 및 향상	읽기, 쓰기, 말하기 문제, 수리계산능력부족, 그 외 기초학습능력부족
	02. 교육환경개선	수업료, 급식비 부족, 특수교육문제, 상급학교진학의 어려움, 무단결석, 학업성적부진
7. 고용	01. 취(창)업	실업·실직, 열악한 근로환경, 저임금, 비정규직, 구직의 어려움, 창업의 어려움, 기술교육의 필요, 취업동기 부족
	02. 고용유지	찾은 직장이동, 반복적인 재취업, 창업실패, 만성적인 실업 상태, 취업동기부족, 사업체유지의 어려움
8. 생활환경	01. 주거내부환경개선	화장실, 주방시설, 위생환경, 도배·장판열악, 냉난방, 전기, 가스시설, 상하수도 시설열악, 지붕노후, 벽/담 등 노후, 주택 내 이동곤란, 사생활 공간 부족
	02. 주거외부환경개선	학습환경, 교통접근성 열악, 상습침수, 철거 등 공공수용, 거주지 이전, 화재폭발 위험물 노출, 생활환경열악
9. 법률 및 권익보장	01. 법률적 지원	법률처리(재산/위자료 등) 문제, 신분상실, 사고보상 처리, 파산/신용불량, 국적문제
	02. 권익보장	차별대우, 권리침해

자료: 보건복지부(2017a, p.176-186.)

일선 드림스타트 담당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들은 드림스타트 이용대상 가정의

주된 욕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한부모 가정의 경우, 정기적으로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상담 및 자문을 가장 필요로 하며, 둘째, 재혼부모 가정의 아이들의 성씨를 어머니의 성으로 통일하거나 호적을 정리하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적 상담을 필요로 하며, 셋째, 다문화가정 중 귀화를 하지 못하고 외국인 신분인 경우 시설 및 복지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외국인 지원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 등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경우, 가정의 부채 및 채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률적 상담요구가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법률지원 욕구영역은 상대적으로 위기도의 수준이 높고 가족 중심의 문제 접근과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에서 제기되는 욕구와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통합사례관리사들의 경우에도 사례관리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아동학대를 포함하는 가정폭력의 위기수준 판별, 신고의무 이행의 판단기준 등에서 많은 경우 판단의 자의성 및 모호함이 존재하며, 신고했을 때 신변의 위협 및 신변보호의 필요성에 따른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일선의 관련기관들은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하여 학대로 의심되는 보다 경미한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및 이를 위한 논의 구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드림스타트의 통합사례관리사들은 드림스타트 이용대상자에게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자문 및 구조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것 이상의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드림스타트 등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법률지원서비스 체계 간의 연계수준은 아직까지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3.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 및 법률지원서비스의 연계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의 경우, 심각한 학대 및 폭력에 이미 노출된 아동 및 한부모 가족 등에 한정하여 전문적인 법률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드림스타트를 통해 복지지원을 받는 상대적으로 저위기도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법률상담 및 법률복지 지원은 아직도 미비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소송구조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소송 내 지원, 분쟁해결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법률상담 및 자문 등 분쟁이전에 이루어지는 소송 외 법률지원서비스의 경우, 다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 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욕구 중 하나이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수의 취약계층 가족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취약가정 아동 및 부모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무료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 제도의 확대 및 아동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연계강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2012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집중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소송 중심의 법률서비스에서 나아가 복지적 관점에서 취약계층 가정에게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법률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소송이 아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의 법률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그 활용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법률 소외 계층 해소를 위하여 법률홈닥터제도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연계시스템은 사회복지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희망복지지원단, 아동보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시설 등을 포괄하고 있는데, 향후 시·군·구 단위의 아동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인 드림스타트와의 유기적 연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복지의 영역과 결합한 법률서비스체계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좁혀갈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금융·부채 분야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오랜 기간 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로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생활비, 주거비 마련 등을 위해 금융부채를 많이 가지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¹¹⁾. 특히 2000년대 초반 신용위기로 인해 많은 가구와 개인이 카드 대출, 고리 대금, 강제 추심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를 돕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는 저소득층 및 금융부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한계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금융 및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지원 서비스를 우선 개괄하고 이외에 법률적 지원서비스로서 무엇이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금융·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복지지원 서비스

가. 서민 금융지원제도

금융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계층을 돕기 위한 복지지원 서비스는 2000년대 들어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 그렇지만 금융부채, 즉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였음에도 지원제도 역시 대출을 통한 지원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이다.

아래 <표 3-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금융부채로 인해 생활고와 과도한 추심으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을 위한 제도 역시 대출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서민금융을 위한 지원제도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과도한 이자로 인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아 더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각각의 (금융)복지제도가 가지는 의의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동 제도를 통해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대상층이 금융부채를 벗어나고 탈

11) 김태완 외(2016) 분석에 의하면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은 생활비 및 주택관련 부채가 64.5%(2014년 기준)로 부채사유에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중 생활비가 32.1%로 절반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에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계층은 주택관련 부채가 50% 이상을 점유하여 부채 용도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김태완 등, 2016, p177-178).

빈곤 혹은 정상적 사회활동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인지는 현재의 제도로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다른 복지 및 노동지원 제도와 연계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서민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지원제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3-2〉 서민금융지원제도 현황

구분	제도		비고
생계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임금채불근로자 생계비 용자	노후긴급자금 대부 새희망홀씨 햇살론	대부
주거자금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 보증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보증	버팀목대출보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환경 개선자금 대출	대부
고용지원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용자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부
학자금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취업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자금 대출	대부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부, 창업 및 채무조정

자료: 대한민국 정부(2016, p.324).

넓은 의미에서 위에 소개한 서민금융제도 중 저소득층 및 저신용층과 금융부채를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복지제도는 미소금융 등의 대부제도와 채무조정제도이다. 이외에 주거자금 지원, 고용지원, 학자금 지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과도한 부채를 지원하기 보다는 저소득층과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소금융 제도 및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는 아래 〈표 3-3〉에서 보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론, 바꿔드림론과 사잇돌 대출을 들 수 있다. 먼저 미소금융은 2000년대 초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던 마이크로 크레딧제도(Micro credit)를 정부가 받아들여 직접 운영하면서 마이크로 크레딧이란 용어를 미소금융으로 바꾸고 관련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미소금융제도의 경우 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지원, 운영·시설지원, 긴급생계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창업자에 대한 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소금융의 특징은 초기 설립 당시 재원을 휴면예금을 활용하는 측면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후원을 통해 마련하면서 이원화된 운영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재단이 직접 관리하는 미소금융지점이 있으며, 기업 및 금융기관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은행 및 기업소속의 미소금융기관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관리 및 운영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정부는 2016년 2월 관련법(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온스톱 혹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였다. 즉 기존 서민금융지원기관인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했으며, 동 통합과정이 마무리되어 2016년 하반기부터는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론, 바퀴드림론은 모두 저소득,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부제도로 햇살론은 제2금융기관이고 서민금융기관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새희망홀씨론은 16개 은행을 중심으로, 바퀴드림론은 한국자산공사의 지역조직을 통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바퀴드림론은 한국자산공사에서 운영해 오던 저신용자를 위한 전환대출사업을 2011년 이름을 바꾸어 운영한 것으로 2013년부터 국민행복기금이 생기면서 함께 운영되는 제도이다(김태완 등, 2016, p.64). 최근에는 사잇돌 대출이 저신용층을 돕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져 운영하고 있다. 사잇돌 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졸업한 대상자를 위해 2017년 7월부터는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중금리 대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표 3-3〉 주요 서민금융상품 비교(2016년 기준)

구분	미소금융 지정 대출	햇살론	새희망출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자격	①7등급 이하 저신용자 ②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	①연소득 3천만원 이하 & 6~10등급 저신용자 ②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저소득자	①연소득 4천만원 이하 & 6등급 이하 저신용자 ②연소득 3천만원 이하	①6등급 이하 저신용자 ②연소득 4천만원 이하 (자영업자 4천5백만원) ③6개월 이상 정상상환	① 4~7등급 이하 저신용자 ②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자, 연소득 2천만원 이상(자영업자 1년이상 사업소득 1천2백만원) 등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
대출 한도	창업(7천만원, 자기자금 100%이내) 운영·시설(2천만원) 무등록사업자 및 긴급생계자금(500만원)	창업(5천만원) 운영(2천만원) 생계(3천만원) 대환(3천만원)	사업운영(2천만원) 생계자금(2천5백만원) ※등급에 따라 차등	대출 3천만원 (고금리 대출원금범위내)	대출 2천만원 이하
금리	기본상품: 연 4.5% 무등록: 2% 특성화: 1~4.5%	연 7.25~9.05% (1% 보증수수료 별도)	연 6~10.5% (은행자율)	연 6.5~10.5% (은행자율)	연 6~10%
대출 기간	상환기간 3~5년 이내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창업·사업운영자금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생계·대환자금 (3.5년 거치 없이 균등분할)	5년이내(만기일시, 또는 분할상환)	최장 5년(근로자) 최장 6년(자영업자)	5년이내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상환
취급	164개 미소금융지점 (기업, 은행, 지역재단)	서민금융기관(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16개 은행 영업지점	한국자산공사 15개 은행 영업지점	시중 및 저축은행 영업점
재원	휴면예금, 기부금	서민금융 출연금, 재정지원(지역신보 95% 보증)	은행 자체 자금	신용회복자금, 캠퍼스입금, 부실채권정리 잉여금 등	은행 자체 자금

자료: 오윤해(2013, p. 13-18) 재인용 및 저자 추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nifa.or.kr>)에서 2017. 10. 13. 인출.

나. 채무조정제도

지금까지 설명한 지원제도가 주로 높은 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저신용등급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층을 위한 지원제도였다면, 현재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로 인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제도로는 채무조정제도를 들 수 있다.

채무조정이란 부채가 과도하게 축적되어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채무와 관련된 상환기간을 연장 혹은 유예하거나 분할상환을 돕고, 이자율 조정 및 채무를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채무조정제도는 다시 크게 두 가지 방식을 들 수 있다. 하나는 정부에서 설립한 민간 지원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는 방식과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으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채무조정이 있으며,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은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제도가 있다. 여기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제도 및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에 대해 살펴보고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인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제도는 법률지원서비스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에 기초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공적지원이기 보다는 사적채무조정제도를 의미한다(이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www.ccrs.or.kr에서 2017. 10. 13. 인출).

개인워크아웃제도는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를 가진 과부채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대상자에 대해 신용회복과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은 부채가 15억 원 이하(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로 채권금융회사에 해당 채무를 기일 내에 갚지 못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 3월을 초과하였으며,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이다. 여기서 채무감면으로는 무담보채무 감면과 담보채무 감면이 있으며 무담보채무 감면은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기관에서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 중 해당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60%)하며 취약계층의 경우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있다. 상환기간은 최대 8년 내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하는 것으로 최대 20년 내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프리워크아웃제도는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연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2곳 이상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할 부채가 있으며, 이중 한 곳 이상 기관의 회사에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자로 부채가 15억 원 이하(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프리워크아웃 신청 후 6개월 내 신규채무가 남은 총 채무액의 30% 이상 인 사람,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상환액이 총소득금액의 30% 이상인 자, 보유 자산가액 10억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같이 무담보 채무와 담보채무가 있으며 무담보 채무는 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을 감면하며,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하고 있다. 상환기간은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담보채무는 최대 20년 이내 분할상환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2013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행복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로서 채무 신청자의 능력(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60%의 채무를 감면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 법률 지원서비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는 행정부가 아닌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혹은 면책하는 제도이다. 이중 개인회생제도는 현재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해 있지만, 개인적 여력, 미래에 대한 담보 등을 통해 향후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채무자가 가용 가능한 소득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것으로 법원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제도의 대상은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개인채무자이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급여소득자) 및 자영업자(=영업소득자)로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채무상환의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가 속한 관할 법원에의 신청을 통해 절차가 진행된다.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법원에서 행하는 채무조정제도이지만, 개인회생제도가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면, 파산면책 제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통해서도 채무변제가 불가능에 직면할 경우(=한계채무자) 개인은 법원에 채무의 정리를 신청하게 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남아 있는 부채 혹은 채무에 대해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부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과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 혹은 회생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불이행의 재정상황에 직면한 개인이다. 파산의 결정은 신청자 모두에게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파산 및 회생은 법원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을 요구한

다. 대부분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파산 등을 신청하기 위한 소송 등이 직접 개인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해야 한다는 점, 법률지식 미비로 인한 문제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어 법률구조공단의 지원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아직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와 다르게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법원에서 결정됨으로써 제도적 복잡성, 법적 절차를 모르는 개인의 접근성의 어려움, 복잡한 서류 및 절차 등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및 과부채 가구를 돕기 위해 관련 법률서비스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 최근 1년 이내 새로운 채무발생이 40% 이하,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개인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초기 채무자에 대해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생 및 파산절차가 필요시 관련 서비스 및 서류작성을 무료로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 혹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법률지원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 및 부채 관련하여 복지서비스와 관련 법률지원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기초로 보면,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금융 및 부채에 대해 부담을 지고 있는 개인에 대해 저금리로의 전환, 채무조정 등을 통한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복지지원서비스는 바람직하고 지향할 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 역시 대출을 전제로 한 지원제도라는 점에서 일정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원을 받더라도 금융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층 및 저신용 계층이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과 연계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법률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부족한 법률지식을 고려하여 채권자 특히 주요 대상인 금융기관과의 어려운 법적 문제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회생 및 파산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최후의 수단인 개인회생 및 파산에 이르기 전에 개인채무자가 금융 기관 등과의 행정적, 법적 협의를 통해 사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이외에 언론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형사적, 민사적 문제, 사인과 대부업체

(비금융기관 등), 사인과 사인 간에 발생하는 금융 및 부채 관련 서비스는 온전히 저소득 및 저신용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개인회생 및 파산에서 좀 더 확대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법률서비스 지원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요구하고 특별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관리 등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직접 사례 관리 활동 등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충남 아산의 복지관, 인천광역시활센터 등에서는 법률전문가가 직접 사례관리 활동을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혹은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된 전문가 등이 필요하다. 또한 동 기관 등과 연계된 전문가 등이 주기적으로 지역주민과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지식 관련 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면 일상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금융과 법률문제(금융문제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법률 문제 등의 교육)에 대한 주민과 저소득층의 이해도를 높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의 직접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최소한의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변호사 등의 조력이 아닌 부채 증명서 발급, 소송서류 접수 등에 일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제3절 고용·노동 분야

외환위기 이후 고용과 노동 분야에서 경제·사회적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이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일자리의 감소는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고,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증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환경 격차 문제는 단일 정책이나 제도로 접근하기 어려운 난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노동환경의 변화 속에서 취약계층 근로자는 고용차별,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전문적 법률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노동 분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수는 217,530명으로, 총 체불금액은 14,286억 원(월평균 체불임금액 1,185억 원)에 달하며, 2010년대 들어서 체불금액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이후 6년간 임금체불 권리구제 현황을 보면, 지도해결 건수 금액(11년 6,105억 원-16년 6,866억 원)과 비교해 사법처리 건수 금액(11년 4,195억 원-16년 6,623억 원)이 급격한 증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표3-1참조)(고용노동부, 2017).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 재판 절차까지 거쳐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박근후 외, 2016, p.15). 특히, 임금체불의 67.7%가 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임금체불의 주원인이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주의 지급능력 부족인 것을 감안하면(고용노동부, 2017), 체불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취약계층 근로자가 입게 될 이차적 피해가 커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표 3-4〉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단위: 억 원, %)

연도	근로자수	금액	지도해결		사법처리		처리 중	
			근로자수	금액	근로자수	금액	근로자수	금액
2011	278,494	10,874	188,098	6,105	80,585	4,195	9,811	574
2012	284,755	11,882	172,003	6,252	101,420	4,873	11,332	647
2013	266,508	11,930	157,644	5,565	100,198	5,826	8,666	539
2014	292,558	13,195	176,209	6,452	107,615	6,264	8,734	479
2015	295,677	12,993	178,926	6,020	105,608	6,309	11,143	664
2016	325,430	14,286	198,392	6,866	114,262	6,623	12,776	797

자료: 고용노동부 (2017, p.604).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차별 시정,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노동 분쟁 문제도 심각하다. 2016년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 사건, 차별시정 신청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심판 사건 접수건수는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사건이 11,224건(85.5%)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이 1,305건(9.9%)이다(〈표3-2〉 참조)(고용노동부, 2017). 차별 사건 접수는 137건으로 이중 시정명령이 이루어진 경우는 36건에 불과하다.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차별 시정과 관련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관계 존속 및 차별시정, 노조활동을 위한 법적 장치가 구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고용보호 및 근로활동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는 요원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비정규직 근로자나 영세사업자 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해고가 쉽기 때문에 노조탄압의 대상이 되고, 부당행위 대한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단기 근로계약 특성 상 계약기간 종료로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되는 한계가 있다.

〈표 3-5〉 2016년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판정				화해·취하	
			소계	인정	기각	각하		
계	12,990	11,381	4,461	1,685	1,984	792	6,920	1,609
부당노동행위	1,305	1,129	675	183	476	16	4554	176
부당해고 등	11,224	9,932	3,605	1,404	1,442	759	6,327	1,292
기타	461	320	181	98	66	17	139	141

자료: 고용노동부 (2017, p.696).

산업재해 관련 분쟁은 또 다른 문제이다. 정부는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수립, 산재보험 적용 사업대상 확대를 통해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 사업장의 안전보건역량 제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고용형태별 산재발생위험률과 산재발생률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로환경조사 4차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형태별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최대 1.8배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비전형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들의 위험 노출 확률이 높다(이재성, 안준기, 2016). 위험한 근로환경 또는 근로방식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경우 산재발생 비율이 높음을 간주해 볼 때, 비정규직의 산재발생률 또한 정규직보다 높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원칙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산재보험 이용률이나 산재인정 비율은 현실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산재보험에 대한 낮은 인지 수준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용보장을 미끼로 한 사업주의 산재보험 청구 포기 유도, 노동조합과 같은 보호 장치의 부재, 급여 신청 절차에서의 차별적 대우, 비정규 노동의 증가로 인한 작업장 유해 환경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은 임금소득 및 가계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생계, 주거 등의 다른 차원의 물질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갈등, 가정 해체, 가정 내 폭력 등의 문제는 또 다른 영역에서의 법률 서비스 욕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 분야에서 선제적 법률 서비스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노동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취약계층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한계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고용·노동관련 법률지원 서비스

취업 및 고용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는 다양한 고용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2017)’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용 및 노동관련 복지사업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청(소)년, 여성, 장애인, 장년/노인, 다문화, 저소득 등 대상별로 매우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6〉 참조). 이 서비스들은 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및 창업지원이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co.kr)’을 통해, 나이, 욕구, 가족상황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

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3-6〉 대상별 고용복지사업 내용

대상	고용복지사업
청(소)년	청년취업아카데미, 해외취업지원, 일학습병행제, 국가기간·전략사업 직종훈련, 취업사관학교(학교박 청소년 직업훈련, 자립장려금, 취업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여성	육아휴직급여,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 여성기업 판로지원, 여성창업지원, 여성창업경진대회
장애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장애인창업점포지원사업,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고용시설 장비 용자 지원,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
장년/노인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 임금피크제 지원, 장년고용지원금
다문화	결혼이민여성인턴지원
저소득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정부지원일자리 제공,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타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제대군인 전직지원, 취약계층(노숙인, 건설인력,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 산재보험 요양급여(보조기), 임금체불생계비 대부,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진폐근로자 보호,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 케어센터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전체	실업급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자료: 보건복지부 (2017f). 참고하여 저자 구성.

그러나 고용복지서비스 중, 고용 및 노동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법률적 지원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부재하다. 이는 고용·노동관련 법률지원서비스가 다른 고용복지서비스와 분리되어 독립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 ‘복지’ 서비스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임금체불, 고용차별, 산업재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 내용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제도 및 소액체당금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이유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동 기관들로부터 출연 받은 적립금을 재원으로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고용·노동 분야와 관련된 법률구조 사업 내용을 대상별로 살펴보면,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가 대표적이다. 체불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고용노동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하여 체불피해 근로자들에게 민사 소송 일체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구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로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다. 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실적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 144,303명의 근로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접수된 총 임금체불은 9,357억 원이다. 임금 등 체불피해 근로자 대상 법률구조 건수는 89,759건으로 이는 법률구조공단이 담당한 무료 법률구조 전체 건수의 50%를 상회하는 비중이다.

〈표 3-7〉 연도별 무료 법률구조 실적

(단위: 건, 억 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체불근로자 (민사 등)	59,002 (8,751)	64,425 (9,440)	66,706 (9,111)	67,338 (8,408)	73,244 (8,672)	89,759 (9,357)

자료: 고용노동부 (2017, p.279).

선원에게는 별도로 무료 법률구조가 제공된다. 2008년 1월부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협약을 맺어 선원법상 임금, 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 선원에 대해 무료로 소송 등을 지원하며, 2017년 4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선원법상 선원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수행 중이다. 2016년 기준 선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는 총 167건이 접수되었으며, 16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재해근로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도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체불과 달리 산업재해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는 적용대상 및 지원내용이 제한적이며 지원규

모도 크지 않다. 2016년 4월부터 STX 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남 소재 사업장에 소속된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인 저소득 재해 피해 근로 및 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해 무료로 민·가사 사건의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적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실시 이후 11건의 법률구조를 진행하였으며, 지원규모는 총 6억 원이 소요되었다.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주장할 입증사실을 포함한 해당 자료를 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공단은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권유하는데,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한다. 소송이 결정된 사건은 공단의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2015년 7월 1일부터 무료 법률구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중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제도도 이용가능하다. 소액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통해서 지급된다.

나. 고용노동부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부터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장, 또는 특별고용조정 지원이 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도산 등 사실인정이나 체당금을 신청할 때 무료로 국선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2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조력지원은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조력지원 공인노무사에게 노무사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지원업무의 내용, 체당금 지급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조력지원 공인노무사에게 사업장별 3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90만원, 불인정은 45만원, 체당금 지급 1명당 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6년 기준 679건의 신청 건수가 발생하였으며, 총 206백만원이 지급되었다.

〈표 3-8〉 2016년 체당금 조력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		확인신청서
		인정	불인정	
건수	679	192	11	476
금액	206	173	5	28

자료: 고용노동부 (2017, p.279).

다.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2008년 3월 도입된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무료로 사건처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17년 7월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월평균 임금 250만원 (이전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법률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사건 종료 시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7.7.3.). 현재 노동위원회에는 공인노무사 355명, 변호사 220명으로 구성된 575명의 권리구제 대리인이 있으며, '08년부터 '16년 말까지 총 14,900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라. 고용노동부 권리구제지원팀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적용 사업장 확대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증가한 노동분쟁해결 서비스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 2월부터 민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권리구제지원팀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민간조정관(민간경력자),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되며, 취약근로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 등 노동분쟁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호사 23명, 공인노무사 28명, 민간조정관 117명 등 총 168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체불, 부당해고, 체당금, 산재, 차별시정 관련 총 상담건수는 502,715건으로 전년도 248,848건과 비교하여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체

불근로자 소송지원 1,680건(무료법률구조 지원대상자 1,311건, 비지원 대상자 369건), 부당해고 구제지원 1,032건 등 권리분쟁 조정 대상의 약 54%를 조정·해결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7).

〈표 3-9〉 2016년 권리구제지원팀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체불 사건 상담	부당해고 사건상담	체당금 사건상담	산재 사건 상담	차별시정 상담	기타 상담	합계
건수	502,715	272,222	49,952	9,382	9,381	1,536	160,242

구분	체불근로자 소송지원		부당해고 구제지원	특고 등 상담지원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자	무료 법률구조 비지원 대상자			지도과 소관	센터 소관	지도과 소관	센터 소관
건수	1,311	369	1,032	1,515	197	160	90	337

자료: 고용노동부 (2017, p.275).

마.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들은 주로 편의점, 음식점 등 영세사업장에서 임시직으로 아르바이트로 활동하지만,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조건이 취약하여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폭언, 업무 중 재해 미 보상 등 부당경험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김지경, 이상준, 2015).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14년 11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약을 맺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신설하여, 청소년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상담,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만 15세에서 24세 청소년 근로자 또는 만 25세 이상의 대학생 근로자는 노동 현장에서 부당대우, 부당고용 등 근로 조건의 침해를 경험할 경우 전화, 온라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무료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담 후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가 필요하거나 청소년이 지방관서를 통한 진정 사건 등으로 접수를 희망할 경우 관할 지역 청소년 보호위원(공인노무사)을 배정하여 1:1 심층 상담 및 임금체불 신고 및 소송을 무료로 대행하는 권리구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 근로지원센터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 건수는 총 7,490건, 권리구제 해결은 333건, 임금체불 해결금액

은 204,843천 원으로 나타난다(청소년 근로권익센터, 2017).

여성가족부도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통해 청소년 근로피해 사례 상담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전화나 문자로 근로관련 문제 상담 요청을 하면, 청소년 상담사가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현장도우미(해피워크매니저)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중재·해결하고 있다. 임금체불, 성희롱, 폭행 등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 지방노동관서나 경찰서로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바. 법무부 법률홈닥터 및 마을변호사

2012년 시작된 법무부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집중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상기된 제도들과의 차이점은 법률 지원이 고용·노동관련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소송 중심의 법률서비스에서 벗어나 복지적 관점에서 취약계층 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법률서비스를 지향한다는 특징이 있다. 법률홈닥터는 구청·시청·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상시 근무하면서, 소송을 제외한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소송구조, 조력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60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법률홈닥터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하려면,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구청·시청·사회복지협의회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되고, 간단한 법률문제는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무변론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마을변호사들은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지역에 배치되어 재능기부 봉사활동의 형식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데,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법률구조 대상자인 경우 변호사 협회의 법률구조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소송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지원 주요 법률지원서비스의 지원기관과 적용대상, 지원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면 표 <3-10>과 같다.

〈표 3-10〉 고용관련 법률지원서비스

법률지원서비스	지원기관	적용대상	지원내용
무료 법률구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	임금체불 관련 민사 절차 일체에 대한 비용지원
소액채당금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체불임금 확정 판결된 대상	체불임금 중 300만원까지 국가가 지원
선원 무료 법률구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선원	임금 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 무료 소송 지원
재해근로자 무료 법률구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남소재 사업장 소속, 중위소득 125% 이하 저소득 재해 피해 근로자	민·가사 사건 소송대리 서비스
채당금 조력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청	월평균 보수액 250만원 이하 사업장 퇴직근로자	도산 등 사실인정이나 채당금 신청 시 무료 국선공인노무사 지원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취약근로자	임금체불,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산재 등에 대한 법률상담 및 조정업무 담당
권리구제 무료법률 지원 서비스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 근로자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신청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5-24세 청소년, 25세 이상 대학생 근로자	부당대우, 부당고용에 대한 근로상담,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 및 일반국민	근로 부당처우에 대한 밀착상담, 현장방문, 노동관서 신고 등 문제해결 서비스 제공
법률홈닥터	법무부 (구청, 시청, 사회복지협의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소송을 제외한 법률상담, 문서작성, 조력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마을변호사	법무부	읍·면 지역 거주자	무료 법률상담

자료: 저자구성

2. 고용·노동 관련 법률지원서비스의 한계

지금까지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발생 등 노동분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취약계층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법률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상기된 법률지원서비스는 적용 대상의 포괄성 및 서비스의 실효성, 서비스의 접근성 및 통합성 측면에서 한계가 많다는 비판이 있다.

먼저, 적용 대상의 포괄성 및 서비스 실효성 측면에서 고용, 노동 분야 법률지원서비스가 실제 어떤 특성을 가진 취약계층에게 주로 제공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용, 노동 분야 법률지원서비스는 주로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관련된 법률지원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행 제도가 노동시장 취약성이 높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보다는 중장년 남성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인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구제신청인은 전반적으로 40세 이상 중장년 남성, 임금수준은 200~300만원, 고용형태로는 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중앙노동위원회, 2011). 이 같은 특성은 근로기준법(제23조)상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2개월 이내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 6개월 이내의 계절적 업무 근로자 등이 부당해고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 제도가 일용, 단기, 계절 근로자 등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경험하는 노동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소송 등 사후적 대응보다는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 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더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서면근로계약의 교부는 취약계층의 근로권리보호를 위한 선제적 과제일 수 있다. 이전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중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그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서면근로계약의 교부가 근로자 요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도록 법제화하였으나,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이 61.4%로 여전히 낮게 나타난다(고용노동부, 2017, p. 280). 서면근로계약서는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일차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반드시 지참하고 있어야 할 서류이다. 취업 단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강조하는 보다 강화된 노동법률 교육이 필요하고, 이

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알리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거나, 진정서 제출 의지를 사업주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사업주에게 권리를 행사하여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법률상담, 진정서 작성 등의 기초단위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보다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법률서비스 욕구의 발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약계층의 고용노동관련 법률서비스 욕구의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 경로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팀의 사례관리를 통해서일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통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 및 민간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하고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위해 대상자가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할 경우, 초기접수(intake) 단계에서 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의 10개 주요 영역에서 욕구 사정이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7c). 특히 경제, 고용, 법률 및 권익보장 영역의 위기도 평가에서 고용노동관련 법률지원서비스의 필요가 확인될 수 있다. 서비스 욕구가 발견되면 사례관리 담당자는 법률홈닥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사무소에 연락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연계해야 한다.

고용노동문제에 특화된 법률지원서비스 욕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 2014년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현재 95곳에 설치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지자체 복지지원팀, 서민금융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다종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욕구에 한 번의 방문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초기상담 통해 방문자의 상황과 성향을 분석한 후 개인에게 알맞은 서비스 경로가 설정되고, 복합적 욕구가 발견될 경우 창구간 연계 및 참여기관간의 합동 사례관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일부 지역(예: 대구동부, 충남서산)의 경우 법률홈닥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상시 배치되어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일자리 상담이나 실업급여 신청을 목적으로 방문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법률지

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법률지원 전문 인력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관계기관 연계를 통해 출장 상담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취약계층 근로자의 법률지원 욕구에 보다 유연히 대응할 수도 있다(예: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원스톱 서비스도 관계기관들의 지리적 통합에 따른 기능의 병렬적 결합에 불과할 뿐, 사실상 고용-복지 기능이 긴밀히 연결되지 않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많다는 비판이 존재한다(길현중, 2014). 예컨대 방문 초기 상담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거나, 초기 상담을 하더라도 센터 내에 배치된 창구에 대한 단순 안내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칸막이 현상으로 센터 내 기관들간의 정보공유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오은진, 이택면, 길현중, 2015).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 서비스 지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 제한의 문제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금체불 무료 법률구조 사업의 경우, 소송대리(송무)를 전담하는 변호사 인력 부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법률구조업무 중 송무수행 사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확보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전국 132개의 구조공단 사무실 중 송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변호사가 배치된 곳은 48개소에 불과하며, 매년 송무수행 인력을 공익법무관으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무부로부터 파견받은 공무법무관은 매년 정확한 인력을 예측할 수 없고, 송무수행 경험이 부족하여, 무료 법률구조 사업에서 지속적인 송무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유재원, 2016, p.44). 이로 인해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소송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 뿐만 아니라 업무과중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계 및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관련 노동분쟁 문제 해결에 있어 지자체, 지방고용노동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근로복지공단의 연계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금체불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업무체계상 임금체불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은

후에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지급명령신청, 민사 조정신청, 임금청구소송)를 신청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무료 법률구조 사업 소송지원을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도 소액채당금 지급과 같은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므로,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쟁해결 상담부터 종료까지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노동청이 임금체불에 관한 수사를 마친 후에 근로자에게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업무연계를 하지 않거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채당금을 지급받도록 충분히 안내받지 못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 피해근로자들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유재원, 2016).

2017년 4월 구축된 다부처연계 법률지원시스템은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원스톱 법률지원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시스템을 통해 관할 고용노동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근로복지공단 간의 전자 자료 이송이 가능해졌으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법률구조과정에서 서류 신청이나 발급을 위해 복수의 기관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체불임금 사건별 진행상황 조회도 가능해져 이용자의 완전한 피해구제 및 사후추적을 위한 업무체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연계시스템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간의 업무공조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지는 추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4절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체계¹²⁾

1 희망복지지원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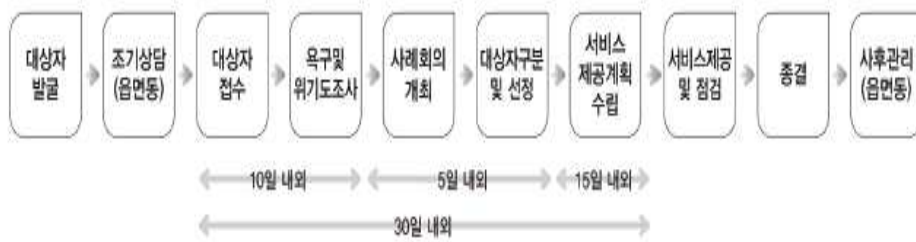
2012년 시군구에 설치하며 출범한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 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의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빈곤층의 탈빈곤과 빈곤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17c, p. 8).

희망복지지원단의 업무 수행 체계는 대상자 발굴,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등의 순서로 이루어 지는데, 먼저 대상자 발굴 과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각 부서, 지역주민 및 관련 기관에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실시한다. 통합사례관리 단계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내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대상자별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끝으로 자원관리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중심으로 수행하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보건복지부, 2017c, p. 8).

통합사례관리사업은 희망복지지원단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로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17c, p. 23). 통합사례관리는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조사, 사례회의, 대상자 구분·선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희망복지지원단의 경우,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후 의뢰된 사례관리가구에 대해 대상자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12) 희망복지사업단의 법률복지 제공 현황 및 연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와 2017년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3-5] 희망복지사업단의 통합사례관리의 절차 개요



자료: 보건복지부(2017c, p. 24.)

2. 희망복지사업단의 법률복지 제공 내용

희망복지사업단의 법률복지 제공 현황 및 연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안내와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를 참고하였다. 먼저 희망복지 지원사업에서는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초기상담 시 주요문제 파악 과정에서 대상자의 법률문제 유무를 조사하게 된다. 초기상담은 통합사례관리 절차에서 대상자 발굴 이후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위기사례를 포함한 모든 대상자는 초기상담을 받는다.

초기상담에서는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상담경로, 상담유형, 가구유형, 주거유형, 가족사항, 상담내용, 주요문제, 상담결과 판정의견, 상담자 종합의견 등의 상담내역을 기록한다. 대상자의 주요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초기상담은 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 보장의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및 권익 보장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법, 옹호, 인권 등과 관련하여 권리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대해 파악한다.

[그림 3-6] 통합사례관리 초기상담지

서식 1 초기상담지

초기 상담 내역														
① 상담번호					② 상담일자					③ () 차 상담				
④ 상담자					소속					연락처				
⑤ 상담경로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요청(방법 :) <input type="checkbox"/> 사례관리자의 발굴() <input type="checkbox"/> 기관 내 의뢰()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의뢰() <input type="checkbox"/> 동중 및 이웃주민 등() <input type="checkbox"/> 129콜센터 이관() <input type="checkbox"/> 줄은이온콜() <input type="checkbox"/> 범정부의뢰() <input type="checkbox"/> 보건소의뢰() <input type="checkbox"/> 복지기관지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⑥ 상담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기관 방문 <input type="checkbox"/> 가정방문 <input type="checkbox"/> 내방 <input type="checkbox"/> 전화													
⑦ 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락처	집(직장)					주소	<input type="checkbox"/> 통분주소 <input type="checkbox"/> 실거주주소							
	휴대전화													
⑧ 가구유형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구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가구 <input type="checkbox"/> 초혼가구 <input type="checkbox"/> 혼동모가구 <input type="checkbox"/> 새터민가구 <input type="checkbox"/> 공동체가구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가구 <input type="checkbox"/> 노인부부가구 <input type="checkbox"/> 청장년1인가구 <input type="checkbox"/> 귀무중성가구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⑨ 주거유형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사글세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 무상임대 <input type="checkbox"/> 기타(무허가, 고시일 등)													
⑩ 가족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 여부	장애 등록	가구원특성 성여 주기 특성	학력	직업	대상자·상각하는 가구원별 문제				개인별 전화번호	
									문제	문서원인	원하는 지원	무산순위		
⑪ 상담내용														
⑫ 주요문제	<input type="checkbox"/> 안전(화재, 방범, 기타 안전)의 문제 <input type="checkbox"/>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유지 문제 <input type="checkbox"/> 가족생활 문제(가족관계, 보육, 간병 등)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관계(전안, 애용, 동료관계 등) 문제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문제 <input type="checkbox"/> 교육 및 학습의 문제 <input type="checkbox"/> 취·창업 및 직무수행상의 문제 <input type="checkbox"/> 생활환경 문제 <input type="checkbox"/> 법률 및 권익보장 문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⑬ 상담결과 판정의견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input type="checkbox"/> 아동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특별지원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input type="checkbox"/> 긴급복지 <input type="checkbox"/> 기타(사회복지서비스)													
⑭ 상담자 종합의견	<input type="checkbox"/> 통합사례관리대상 / 서비스 연계 (<input type="checkbox"/> 통합사례관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서비스연계)													

자료: 보건복지부. (2017, p. 159).

읍면동에서 초기상담을 거쳐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한 통합사례관리사업 대상가구가 접수되면 희망복지사업단에서 욕구 및 위기도조사가 이루어진다. 욕구조사는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욕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연계 가구로 구분 선정하기 위한 심층조사 과정이며, 위기도조사는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대상가구의 위기정도 파악 및 사례관리 종결의 적정성 판단 등에 활용된다(보건복지부, 2017c, p. 35).

욕구조사에서는 초기상담과 마찬가지로 10대 욕구영역을 파악하는데, ‘법률 및 권익보장’은 이에 포함된다. 법률 및 권익보장은 세부영역인 법률적 지원과 권익보장으로 나뉜다. 법률적 지원에는 5개의 주요 현상이 포함되는데 이는 법률처리(재산/위자료 등) 문제, 신분상실, 사고보상처리, 파산/신용불량, 국적문제이다. 권익보장에는 2개의 주요 현상이 있는데 차별대우와 권리침해가 그것이다. 법률적 지원에는 8개의 주요 원인이 있는데, 1. 법률지식 및 정보부족, 2. 법적후견인부재(장애·미성년등), 3. 폭력/범죄, 4. 이혼, 5. 사고(의료·산재·교통사고 등), 6. 결혼이민/이주/난민/탈북, 7. 주민등록말소, 8. 경제적 능력 부족이 있다. 권익보장의 주요원인은 3가지로 1. 고용기회 차별, 2. 관련 법률조항의 문제, 3. 부당한 철거나 이주 요구가 있다.

〈표 3-11〉 희망복지사업단의 욕구영역

욕구영역 별 조사	욕구 영역		주요 현상	주요 원인
욕구영역 별 현상 및 원인	법률 및 권익보장	법률적 지원	법률처리(재산/위자료 등) 문제,	1. 법률지식 및 정보부족, 2. 법적후견인부재(장애·미성년등), 3. 폭력/범죄, 4. 이혼, 5. 사고(의료·산재·교통사고 등), 6. 결혼이민/이주/난민/탈북, 7. 주민등록말소, 8. 경제적 능력 부족
			신분상실,	
			사고보상처리,	
			파산/신용불량,	
			국적문제	
	권익보장	차별대우 권리침해	차별대우	1. 고용기회 차별, 2. 관련 법률조항의 문제, 3. 부당한 철거나 이주 요구
			권리침해	

자료: 보건복지부. (2017, p. 174).

2017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에서는 복지담당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가 서비스 연계 및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에 복지자원을 정리해두었는데, 여기에 법률홈닥터 제도에 대한 소개가 있다. 업무안내에 따르면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c, p. 254). 또한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5월 정식사업을 시작하여 2014년 현재 전국 40곳 지방자치 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전국 배치기관 현황에서는 법률홈닥터가 상주하는 주소와 기관, 전화번호까지 상세히 담고 있으며, 법률홈닥터 거점기관과 연계 자치단체 명단을 통해 권역별 거점기관 현황 정보도 제공한다.

[그림 3-7] 희망복지지원단사업안내의 법률홈닥터 참고자료

참고 4 법률홈닥터

□ 제도소개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제도

□ 배치 현황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5월 정식사업을 시작하여 2014년 현재 전국 40곳 지방자치 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활동 중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대상

[전국 배치기관 현황]

연번	주소 및 기관	전화번호
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복지정책과	02-330-1558
2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마포구청 3층 법률상담센터	02-3153-8529
3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동작구청 5층 주민생활지원과	02-820-9612
4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은평구청 7층 기획예산과	02-351-6290

자료: 보건복지부, (2017, p. 25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부터 선정기준, 소득 및 재산조사, 급여의 실시, 수급자 관리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서도 무료소송지원 이용안내와 같은 법률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내용이 한 페이지 가량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 정도다. 사회복지공무원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책자에 법률홈닥터 제도 및 법률복지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포함한다면 복지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무료소송지원 안내

Ⅱ. 무료소송지원 이용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법률복지서비스 공공기관입니다.
공단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 어려움을 겪는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부터 소송지원까지 무료로 법률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떤 분들이 무료소송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은 수입이 없는 경우 법률지원
- 학업 등의 사유로 부득이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에 준함

■ 어떤 법률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대여금, 손해배상, 임금채불, 임대차보증금, 보이스피싱피해 사건 등)
 - 가사사건(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부양료, 개명신청 등)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형사변호(폭행, 상해, 절도, 강도, 음주운전사고 등)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피해 구제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 가까운 공단사무소 방문하여 법률상담
 - 공단 사무소는 전국 법원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130개가 있으며, 방문 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

• 다음 서류는 꼭 준비해주세요!

- 소송지원대상자 소명자료 :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 주장사실 입증자료(예, 대여금반환청구 시 차용증, 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등)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p. 446).

제5절 소결

3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관련 문제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아동·가족 분야, 금융·부채 분야, 고용·노동 분야는 우리가 가족, 타인과 생활하며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두드러지는 분야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군구, 읍면동의 희망복지지원단의 업무 체계 내에서 법적인 문제 발생 시 지원체계도 함께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각 분야로 구분하였을 때, 법률문제에 대한 지원 체계는 상당히 갖춰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동·가족 분야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부채 분야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혹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법률지원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제도가 작동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소액채당금 제도,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적인 문제가 가지는 특징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 이유로 순차적으로 다음의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문제 및 상황이 심각해진 이후에야 법률적 지원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의 경우에 이미 심각한 학대 및 폭력에 노출된 아동 및 한부모 가족에 한정하여 전문적인 법률구조가 이뤄진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위기의 문제 상황에서 예방적 차원의 법률상담 및 법률복지 지원은 미비하다.

둘째, 문제의 발굴 차원의 개입이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당 분야의 지원체계는 관련 문제를 깊게 다룰 때 접근할 수 있는 체계이다. 일반적으로 일선의 복지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당 사안이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모든 사람들이 각 해당 사안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앞서의 다양한 공급자 중심의 법률복지 지원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는 점이 명확해진 이후에야 지원체계를 찾게 된다.

셋째, 법률복지 지원체계까지의 유도가 미흡하다. 각 기관들은 해당 문제들-아동의 학대·폭력 피해, 과도한 채무 문제, 부당한 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등이 각 기관의 소관 업무임을 홍보하고,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담 및 대응이 가능함을 알리고 있다. 그렇지만 각각의 전문적 지원 체계에 취약계층을 도달하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때 전문적 지원 기관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 지원기관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특히 이런 전문지원 기관의 진입장벽이 높을 경우에는 지원체계의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는 보완 체계가 필요하다.

제 4 장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및 방법

제2절 응답자 일반사항

제3절 법률복지 욕구 및 이용 경험

제4절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

제5절 법률복지 욕구

제6절 법의식 일반

제7절 국민실태조사

제8절 조사결과 요약

4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 분석 <<

제1절 조사 개요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법률복지 및 법률구조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서 2장에서 주로 법률구조 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 주요 기관별, 영역별로 서비스 현황을 검토하였고, 3장에서는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현장의 상황을 진단하였다면, 4장에서는 수요자의 측면에서 법률복지에 대한 욕구와 이용 실태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려고 한다.

본 조사의 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의 목표 집단 및 규모는 법률복지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집단 1,000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저소득층을 비롯하여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의 협조를 통해 조사대상자에게 개인정보 등 조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시간과 예산 상 현실적인 제약으로 시·구 단위로 한정하였으며, 시·구의 통합사례관리사 명단은 보건복지부의 협조로 확보하였다. 지역 선정은 법률홈닥터 배치·미배치 지역과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분포 등을 고려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선정은 지역별로 사례관리사의 규모가 다르고 사례관리사가 담당하는 사례관리 대상자 수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구 단위의 사례관리자 수와 조사완료 목표 수를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이후 선정된 지역과 통합사례관리사 명단을 토대로 보건복지부를 통해 해당 지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후, 개별적인 전화 연락을 통해 다시 한 번 조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협조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조사협조대상 사례관리사 명단을 확정하였다.

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약 7인의 사례관리 참여자 및 과거 참여자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사례관리 대상자 중 과거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였던 사람, 또는 현재 법률서비스 욕구가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조사하였다. 이때 만약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부족하다면 60대 이하의 사례관리 대상자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는 통합사례관

리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 작성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의 자기기입식 작성의 원칙이나 취약계층의 특성 상 필요할 경우 사례관리 담당자가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¹³⁾

조사내용은 크게 응답자의 개인 및 가구 특성,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 법률복지 욕구, 그리고 일반적 법의식에 대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영역별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조사 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응답자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학력, 가구규모 - 월평균 소득, 주관적 소득계층, 복지제도 수급지위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서비스 필요 및 이용 경험 유무 - 법률서비스 필요 분야 -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 법률서비스 이용 내용 -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및 비용 부담 정도
법률구조 사업 인지 및 이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및 경로 - 법률구조 사업 이용 기관, 종류, 분야 - 법률구조 사업 이용 총 비용과 부대 비용 - 법률구조 사업 이용 비용 부담 정도 -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 - 법률구조 사업의 문제해결에 대한 도움정도 - 법률구조 사업의 추천 의사 여부
법률복지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적절한 공익변호사 수 - 법률구조 사업 지원 변호사와의 적절한 상담형태 - 법률구조 사업 지원 변호사의 적절한 배치 기관 -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률구조 사업 종류 - 법률구조 사업 이용에 활용 가능한 이동시간 - 법률구조 사업 이용을 위해 부담 가능한 비용
법의식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법률 관련 정보 습득 경로 - 평소 판결 관련 기사나 보도에 대한 관심도 - 부동산 등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상 규정을 자세히 읽어보는 정도 - 법률서비스 이용의 용이성 인식 - 법률관련 교육 수요 여부

13)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기기입식 설문 방식을 취함에 따라서 설문의 논리적 구조를 따르지 않는 응답이 일부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는데, 이용만족도에는 응답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응답에 대해서는 다음의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첫째, 설문구조 상 상위 응답을 우선하여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만족도 문항에 응답하는 경우, 만족도 문항 응답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둘째, 상위응답이 모호할 경우에는 하위 응답의 성실도를 기준으로 상위 응답을 조정하였다. 예를 들어,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경험에 응답하지 않았는데, 만족도, 주변추천 등에 응답하였을 경우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처리하는 것이다.

조사는 2017년 8월 28일에서 2017년 9월 27일까지 약 1개월 간 진행되었다. 조사 기간 내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으나 조사협조 의사를 밝힌 경우에 대해서는 표본 규모의 확보를 위해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차로 설문지를 취합하였다. 설문지 수거 이후에는 데이터 입력 및 오류 점검·수정을 거쳐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협조대상 통합사례관리사 총 201명 중 150명이 실제 조사에 협조하였으며, 조사완료 지역은 <표 4-2>와 같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약 5~7인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총 1,004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 중 신뢰성이 떨어지는 3개 케이스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이용한 표본은 1,001명이다.

〈표 4-2〉 지역별 표본 수

(단위: 명)

시도	시군구	표본 수	소계
서울특별시	강북구	7	188
	관악구	42	
	노원구	28	
	도봉구	28	
	서대문구	28	
	성북구	28	
	양천구	14	
	영등포구	13	
인천광역시	남구	25	74
	부평구	49	
대전광역시	동구	42	69
	서구	27	
대구광역시	서구	28	68
	수성구	40	
광주광역시	광산구	33	54
	동구	21	
부산광역시	사상구	6	99
	사하구	35	
	수영구	14	
	해운대구	44	
경기도	고양시	33	184
	남양주시	8	
	부천시	28	
	성남시 수정구	13	
	성남시 중원구	14	
	시흥시	38	
	안산시 단원구	12	
	안산시 상록구	31	
	하남시	7	
강원도	원주시	35	63
	춘천시	2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5	53
	청주시 서원구	13	
	청주시 흥덕구	7	
	충주시	28	
경상남도	김해시	21	21
경상북도	포항시	61	61

제2절 응답자 일반사항

본 조사의 응답자는 총 1,001명으로 응답자 일반사항으로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구원 수, 월평균 수입, 주관적 소득계층, 수급 유형을 조사하였다. 먼저 성별은 여성이 62.4%이며, 남성이 37.6%이다. 연령은 40대가 30.4%, 50대가 26.2%, 30대가 18.5% 등이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24.4%이었다. 가구 유형으로는 1인 가구 비율이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3인 가구 25.5%, 2인 가구가 23.0%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구간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먼저 50만원 이하는 21.5%, 51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는 35.4%, 101만원에서 150만원 이하는 20.13%이었다. 주관적 소득계층을 묻는 질문에 하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3.0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18.15%가 중하층이라고 응답하였다. 수급 유형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49.0%이었고, 차상위계층이 20.7%, 비수급자가 30.3%로 나타났다.

〈표 4-3〉 응답자 분포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1,001	100.00
성별	남성	376	37.60
	여성	624	62.40
	합계	1,000	100.00
연령	20대 이하	78	7.82
	30대	185	18.54
	40대	303	30.36
	50대	261	26.15
	60대	115	11.52
	70대 이상	56	5.61
	합계	998	100.00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30	13.07
	중학교 졸업	182	18.29
	고등학교 졸업	440	44.22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	243	24.42
	합계	995	100.00
가구원 수	1인	269	26.90
	2인	230	23.00
	3인	255	25.50
	4인	172	17.20
	5인	57	5.70
	6인	8	0.80
	7인	4	0.40
	8인	2	0.20
	9인	1	0.10
	10인	1	0.10
	13인	1	0.10
	합계	1,000	100.00
월평균 수입	50만원 이하	205	21.49
	51~100만원 이하	338	35.43
	101~150만원 이하	192	20.13
	151만원 이상	219	22.96
	합계	954	10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위층	728	73.02
	중하층	181	18.15
	중간층	81	8.12
	중상층	7	0.70
	합계	997	100.00

제3절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에서는 법률상담, 소송대리, 법률사무지원 등의 법률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이용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 되어 있다.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이용 경험을 파악하기 전, 전반적 법률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설계하였다.

〈표 4-4〉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의 75.8%는 과거에 법률상담, 소송대리, 법률사무지원 등 법률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49.9%) 이 경우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법률문제가 있었으나 이용하지 못한 응답자는 25.8%였고, 24.1%는 법률문제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4-5〉는 이러한 법률서비스 이용 경험을 수급지위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복지제도 수급지위별로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는 다른 계층에 비해 법률문제가 있었으며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56.5%), 차상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법률문제가 있었으나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30.9%).

〈표 4-4〉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N	%
법률문제 있었으며 이용했음	490	49.85
법률문제가 있었으나 이용 못함	255	25.94
법률문제 없었음	238	24.21
합계	983	100.00

〈표 4-5〉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법률문제 있었으며 이용했음	N	271	98	118
	%	56.46	48.04	39.86
법률문제가 있었으나 이용 못함	N	122	63	70
	%	25.42	30.88	23.65
법률문제 없었음	N	87	43	108
	%	18.13	21.08	36.49
합계	N	480	204	296
	%	100.00	100.00	100.00

소득이 51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인 응답자의 56.2%, 101만원에서 150만원 이하인 응답자는 53.7%가 법률문제가 있었고, 이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이 50만원 이하이거나, 101만원에서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각각 28.1%, 27.9%가 법률문제가 있었으나 이용하지 못하였다. 151만원 이상인 소득구간에 있는 35.1%는 법률문제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4-6〉 소득구간별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법률문제 있었으며 이용했음	N	95	186	102	92
	%	46.80	56.19	53.68	42.99
법률문제가 있었으나 이용 못함	N	57	86	53	47
	%	28.08	25.98	27.89	21.96
법률문제 없었음	N	51	59	35	75
	%	25.12	17.82	18.42	35.05
합계	N	203	331	190	214
	%	100.00	100.00	100.00	100.00

주관적 소득계층을 묻는 질문에서 본인의 가구를 하위층이라 응답한 가구의 54.3%가 법률문제가 있었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중간층 또는 중상층의 경우 51.2%는 법률문제가 없었다.

〈표 4-7〉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이상
법률문제 있었으며 이용했음	N	388	79	22
	%	54.27	43.65	26.19
법률문제가 있었으나 이용 못함	N	191	43	19
	%	26.71	23.76	22.62
법률문제 없었음	N	136	59	43
	%	19.02	32.60	51.19
합계	N	715	181	84
	%	100.00	100.00	100.00

응답자 중 중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는 50%이상이 법률문제가 있었으며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 응답자는 다른 응답자에 비해 법률문제가 있었으나 이용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5%포인트 이상 낮았다.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법률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4-8〉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
법률문제 있었으며 이용했음	N	62	92	216	116
	%	48.44	50.83	50.12	48.95
법률문제가 있었으나 이용 못함	N	35	48	119	51
	%	27.34	26.52	27.61	21.52
법률문제 없었음	N	31	41	96	70
	%	24.22	22.65	22.27	29.54
합계	N	128	181	431	237
	%	100.00	100.00	100.00	100.00

뉴스에 보도되거나 신문에 실린 판결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매우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법률문제 발생 시 법률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 뉴스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63.4%는 법률문제 발생 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였지만, 판결 뉴스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의 47.3%만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마찬가지로 판결 관련 뉴스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의 26.8%는 법률문제가 있었으나 이용하지 못하였지만, 판결 뉴스에 매우 관심이 있는 사람은 19.5%만 법률문제가 있었으나 이용하지 못하였다.

〈표 4-9〉 판결 뉴스에 대한 관심도별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편이다	관심이 있는 편이다	매우 관심이 있다
법률문제 있었으며 이용했음	N	53	145	238	52
	%	47.32	44.89	51.29	63.41
법률문제가 있었으나 이용 못함	N	30	96	113	16
	%	26.79	29.72	24.35	19.51
법률문제 없었음	N	29	82	113	14
	%	25.89	25.39	24.35	17.07
합계	N	112	323	464	82
	%	100.00	100.00	100.00	100.00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어디서 이용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였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비용이 부담되어서’(24.0%)와 ‘상담, 서류 작성 등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13.69%)로 나타났다. 법률적 문제로 지원이 필요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한 기타 사유로는 건강상의 문제,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귀찮아서, 처리속도가 느려서 등이 있었다.

〈표 4-10〉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법률서비스를 이용 못한 사유	N	%
어디서 이용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였다	128	48.67
주변에 관련단체 혹은 기관을 찾기가 힘들었다	30	11.41
상담, 서류 작성 등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36	13.69
비용이 부담되었다	63	23.95
기타	6	2.28
합계	263	100.00

특히 차상위 계층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서 이용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해서’가 3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용의 부담이 23.5%, ‘상담, 서류 작성 등의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가 20.6%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이 법률지원을 이용하는 데 정보부족, 시간의 제약, 비용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1〉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법률서비스를 이용 못한 사유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어디서 이용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였다	N	67	26	35
	%	54.03	38.24	49.30
주변에 관련단체 혹은 기관을 찾기가 힘들었다	N	17	9	4
	%	13.71	13.24	5.63
상담, 서류 작성 등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N	10	14	12
	%	8.06	20.59	16.90
비용이 부담되었다	N	28	16	20
	%	22.58	23.53	28.17
기타	N	2	3	0
	%	1.61	4.41	0.00
합계	N	124	68	71
	%	100.00	100.00	100.00

〈표 4-12〉 소득구간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법률서비스를 이용 못한 사유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어디서 이용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였다	N	32	47	21	23
	%	53.33	52.81	37.5	48.94
주변에 관련단체 혹은 기관을 찾기가 힘들었다	N	5	13	6	6
	%	8.33	14.61	10.71	12.77
상담, 서류 작성 등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N	8	6	9	8
	%	13.33	6.74	16.07	17.02
비용이 부담되었다	N	13	23	17	10
	%	21.67	25.84	30.36	21.28
기타	N	2	0	3	0
	%	3.33	0.00	5.36	0.00
합계	N	60	89	56	47
	%	100.00	100.00	100.00	100.00

주관적 소득수준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유를 살펴보면, 중간층 이상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52.9%)은 ‘어디서 이용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여’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 ‘상담, 서류 작성 등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는 응답은 35.3%로 나타났다. 하위층은 49.3%가 ‘어디서 이용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였다’고 응답했으며, 24.1%는 비용의 부담 문제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4-13〉 주관적 소득수준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법률서비스를 이용 못한 사유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이상
어디서 이용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였다	N	98	20	9
	%	49.25	44.44	52.94
주변에 관련단체 혹은 기관을 찾기가 힘들었다	N	24	4	1
	%	12.06	8.89	5.88
상담, 서류 작성 등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N	25	5	6
	%	12.56	11.11	35.29
비용이 부담되었다	N	48	15	1
	%	24.12	33.33	5.88
기타	N	4	1	0
	%	2.01	2.22	0.00
합계	N	199	45	17
	%	100.00	100.00	100.00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응답자는 법률서비스를 어디서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71.4%로 다른 사유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았다.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의 집단은 상담, 서류 작성 등의 시간을 내기 어려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 정보 부족 다음으로 높았다(23.1%).

〈표 4-14〉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법률서비스를 이용 못한 사유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
어디서 이용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였다	N	25	22	59	20
	%	71.43	43.14	47.97	38.46
주변에 관련단체 혹은 기관을 찾기가 힘들었다	N	2	8	14	6
	%	5.71	15.69	11.38	11.54
상담, 서류 작성 등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N	3	6	15	12
	%	8.57	11.76	12.2	23.08
비용이 부담되었다	N	5	13	33	13
	%	14.29	25.49	26.83	25.00
기타	N	0	2	2	1
	%	0.00	3.92	1.63	1.92
합계	N	35	51	123	52

뉴스나 신문에 보도되는 판결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의 63.3%는 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지만 판결 뉴스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고 답변한 집단은 36.8%만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유로 정보 부족을 꼽았다. 마찬가지로 계약서 작성 시 규정을 대충 읽거나, 매우 자세히 읽는다고 응답한 집단도 규정을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법률서비스를 이용 못한 사유로 정보부족을 선택한 비율이 낮았다. 반면 계약과정 규정에 대한 관심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이 시간적 한계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 높았다.

〈표 4-15〉 판결 뉴스에 대한 관심도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법률서비스를 이용 못한 사유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편이다	관심이 있는 편이다	매우 관심이 있다
어디서 이용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였다	N	19	58	42	9
	%	63.33	56.31	36.84	56.25
주변에 관련단체 혹은 기관을 찾기가 힘들었다	N	3	12	15	0
	%	10.00	11.65	13.16	0.00
상담, 서류 작성 등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N	3	5	27	1
	%	10.00	4.85	23.68	6.25
비용이 부담되었다	N	4	26	28	5
	%	13.33	25.24	24.56	31.25
기타	N	1	2	2	1
	%	3.33	1.94	1.75	6.25
합계	N	30	103	114	16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6〉 계약과정 규정에 대한 관심도별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법률서비스를 이용 못한 사유		전혀 읽지 않는다	별로 읽지 않는다	대충 읽는다	매우 자세히 읽는다
어디서 이용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였다	N	23	41	50	14
	%	52.27	53.25	46.73	40.00
주변에 관련단체 혹은 기관을 찾기가 힘들었다	N	7	8	11	4
	%	15.91	10.39	10.28	11.43
상담, 서류 작성 등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N	3	7	18	8
	%	6.82	9.09	16.82	22.86
비용이 부담되었다	N	10	19	26	8
	%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를 살펴보면 민사 일반(39.8%)과 가사 관련(35.8%)에 대한 이용이 높다. 다음으로는 형사 관련이 14.6%이었으며, 행정 일반과 상사 관련은 각각 8.5%와 1.3%로 나타났다. 기초보장 수급자인 경우 이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차상위복지제도 수급자는 타 그룹에 비해 가사 관련 법률지원 이용률(39.6%)이 높았다.

〈표 4-17〉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N	%
민사 일반	362	39.82
행정 일반	77	8.47
가사 관련	325	35.75
형사 관련	133	14.63
상사 관련	12	1.32
합계	909	100.00

주: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표 4-18〉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민사 일반	N	187	72	102
	%	38.80	36.55	44.93
행정 일반	N	37	20	19
	%	7.68	10.15	8.37
가사 관련	N	177	78	70
	%	36.72	39.59	30.84
형사 관련	N	75	25	32
	%	15.56	12.69	14.10
상사 관련	N	6	2	4
	%	1.24	1.02	1.76
합계	N	482	197	227
	%	100.00	100.00	100.00

주: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가구소득수준별로는 151만원 이상의 월 소득 가구는 다른 집단에 비해 민사 일반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높았으며(48.5%) 101만원에서 150만원 이하의 소득 가구는 가사 관련 분야의 법률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았다(44.4%). 51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은 민사 일반이 39.1%로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사 관련이 35.3%였다.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에서는 계층이 높아질수록 민사 일반 분야 이용률이 높았으며, 가사 관련 분야는 하위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4-19〉 소득구간별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민사 일반	N	68	133	68	81
	%	36.36	39.12	35.98	48.50
행정 일반	N	17	32	10	13
	%	9.09	9.41	5.29	7.78
가사 관련	N	68	120	84	46
	%	36.36	35.29	44.44	27.54
형사 관련	N	31	49	27	24
	%	16.58	14.41	14.29	14.37
상사 관련	N	3	6	0	3
	%	1.60	1.76	0.00	1.80
합계	N	187	340	189	167
	%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표 4-20〉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이상
민사 일반	N	268	65	27
	%	37.69	44.22	56.25
행정 일반	N	63	13	1
	%	8.86	8.84	2.08
가사 관련	N	267	44	14
	%	37.55	29.93	29.17
형사 관련	N	104	22	6
	%	14.63	14.97	12.5

주: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 모든 교육 집단에서 민사 일반에 대한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나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집단에서만 가사 관련 법률서비스 이용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형사 관련 법률서비스의 이용은 중학교 졸업 이하의 응답자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응답자에 비해 더 많았다.

〈표 4-21〉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
민사 일반	N	41	67	149	103
	%	35.96	37.64	37.53	47.91
행정 일반	N	14	13	32	16
	%	12.28	7.30	8.06	7.44
가사 관련	N	40	66	150	68
	%	35.09	37.08	37.78	31.63
형사 관련	N	19	31	61	22
	%	16.67	17.42	15.37	10.23
상사 관련	N	0	1	5	6
	%	0.00	0.56	1.26	2.79
합계	N	114	178	397	215
	%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에 따른 난이도를 묻는 질문에서 형사 관련 분야를 이용한 응답자의 46.8%가 매우 어려웠거나 어려운 편이라고 답하였다. 가사 관련 분야와 민사 일반 분야를 이용한 집단은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6.5%와 54.6%로 매우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인 39.2%와 39.9% 보다 높았다.

〈표 4-22〉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별 편의 정도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쉬운 편이다	매우 쉽다	합계
민사 일반	N	144	197	18	2	361
	%	39.89	54.57	4.99	0.55	100.00
행정 일반	N	36	36	5	0	77
	%	46.75	46.75	6.49	0.00	100.00
가사 관련	N	127	183	14	0	324
	%	39.20	56.48	4.32	0.00	100.00
형사 관련	N	63	62	6	1	132
	%	47.73	46.97	4.55	0.76	100.00
상사 관련	N	3	8	1	0	12
	%	25.00	66.67	8.33	0.00	100.00
합계	N	373	486	44	3	906
	%	100.00	100.00	100.00	0.33	100.00

주: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법률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을 묻는 질문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한 비율이 3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변호사(22.3%)와 법률홈닥터(21.2%)였다. 기초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각각 40.8%, 41.0%), 다음으로 기초보장수급자는 법률홈닥터(24.8%), 차상위계층은 일반변호사(23.8%)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급층은 일반변호사를 이용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36.0%).

〈표 4-23〉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법률서비스 이용 분야	N	%
일반변호사	115	22.33
대한법률구조공단	196	38.0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또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4	10.49
법률홈닥터	109	21.17
마을변호사	9	1.75
공익변호사	8	1.55
기타	24	4.66

〈표 4-24〉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일반변호사	N	43	25	45
	%	15.25	23.81	36.00
대한법률구조공단	N	115	43	38
	%	40.78	40.95	30.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또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N	30	14	10
	%	10.64	13.33	8
법률홈닥터	N	70	17	21
	%	24.82	16.19	16.8
마을변호사	N	5	2	2
	%	1.77	1.9	1.6
공익변호사	N	5	1	2
	%	1.77	0.95	1.6
기타	N	14	3	7
	%	4.96	2.86	5.6
합계	N	282	105	125
	%	100.00	100.00	100.00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별 비용의 부담 정도에 대한 분석에서 일반변호사를 이용한 경우 77.4%가 비용이 매우 부담되었으며, 17.4%는 조금 부담되었다고 답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한 경우 53.3%는 매우 부담되었으며, 22.2%는 조금 부담되었다고 하였으며, 13.3%는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25〉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별 비용 부담 정도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별로 부담되지 않았다	보통 이다	조금 부담되었다	매우 부담되었다	합계
일반변호사	N	3	0	3	20	89	115
	%	2.61	0.00	2.61	17.39	77.39	100.00
대한법률구조공단	N	6	3	2	10	24	45
	%	13.33	6.67	4.44	22.22	53.33	100.0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또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N	1	1	0	6	4	12
	%	8.33	8.33	0.00	50.00	33.33	100.00
법률홈닥터	N	1	1	1	0	4	7
	%	14.29	14.29	14.29	0.00	57.14	100.00
마을변호사	N	0	0	0	1	2	3
	%	0.00	0.00	0.00	33.33	66.67	100.00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을 소득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응답자의 34.7%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였고, 법률홈닥터를 24.8%, 일반변호사를 22.8% 이용하였다. 51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소득 구간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42.9%로 가장 이용률이 높았고, 다음으로 23.7%가 법률홈닥터를 이용하였다. 101만원에서 150만원 이하의 소득 구간에서는 36.2%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였고 23.8%는 일반변호사, 다음으로 16.2%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이용하였다.

〈표 4-26〉 소득구간별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일반변호사	N	23	27	25	35
	%	22.77	13.64	23.81	36.46
대한법률구조공단	N	35	85	38	34
	%	34.65	42.93	36.19	35.4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또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N	10	20	17	5
	%	9.9	10.1	16.19	5.21
법률홈닥터	N	25	47	21	13
	%	24.75	23.74	20	13.54
마을변호사	N	2	4	1	2
	%	1.98	2.02	0.95	2.08
공익변호사	N	1	6	1	0
	%	0.99	3.03	0.95	0
기타	N	5	9	2	7
	%	4.95	4.55	1.90	7.29
합계	N	101	198	105	96
	%	100.00	100.00	100.00	100.00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분석 결과 하위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용이 3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2.4%가 법률홈닥터 제도를 이용하였다. 중하층과 중간층 이상 역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는데, 중하층은 39.0%, 중간층 이상은 50.0%였으며, 다음으로 일반변호사 이용 비율은 중하층은 22.0%, 중간층 이상은 40.9%이었다.

〈표 4-27〉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이상
일반변호사	N	87	18	9
	%	21.22	21.95	40.91
대한법률구조공단	N	153	32	11
	%	37.32	39.02	50.0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또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N	44	10	0
	%	10.73	12.20	0.00
법률홈닥터	N	92	16	1
	%	22.44	19.51	4.55
마을변호사	N	7	2	0
	%	1.71	2.44	0.00
공익변호사	N	7	1	0
	%	1.71	1.22	0.00
기타	N	20	3	1
	%	4.88	3.66	4.55
합계	N	410	82	22
	%	100.00	100.00	100.00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분석에서는 대학교(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일반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이 각 37.1%로 동등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일반변호사 이용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41.5%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서비스를 지원 받았으며, 일반 변호사를 이용한 비율은 10.8%였다.

〈표 4-28〉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
일반변호사	N	7	18	43	46
	%	10.77	18.37	19.28	37.10
대한법률구조공단	N	27	38	84	46
	%	41.54	38.78	37.67	37.1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또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N	6	12	25	9
	%	9.23	12.24	11.21	7.26
법률상담터	N	17	21	53	17
	%	26.15	21.43	23.77	13.71
마을변호사	N	1	3	5	0
	%	1.54	3.06	2.24	0.00
공익변호사	N	2	2	3	1
	%	3.08	2.04	1.35	0.81
기타	N	5	4	10	5
	%	7.69	4.08	4.48	4.03
합계	N	65	98	223	124
	%	100.00	100.00	100.00	100.00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별 비용을 살펴보면, 일반변호사를 이용한 경우 35.6%는 201만원 이상 지출하였고, 32.7%는 100만원 이하로 지출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자는 82.2%는 무료로 이용하였고 13.5%는 100만원 이하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법률상담터 이용자의 96.1%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도 이용자의 81.6%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표 4-29〉 법률서비스 기관별 이용 비용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무료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이하	201만원 이상	합계
일반변호사	N	7	34	26	37	104
	%	6.73	32.69	25.00	35.58	100.00
대한법률구조공단	N	152	25	6	2	185
	%	82.16	13.51	3.24	1.08	100.0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또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N	40	7	1	1	49
	%	81.63	14.29	2.04	2.04	100.00
법률상담원	N	99	3	1	0	103
	%	96.12	2.91	0.97	0	100.00
마을변호사	N	6	2	0	0	8
	%	75.00	25.00	0.00	0.00	100.00
공익변호사	N	8	0	0	0	8
	%	100.00	0.00	0.00	0.00	100.00
기타	N	19	3	0	0	22
	%	86.36	13.64	0.00	0.00	100.00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분석 결과 법률 관련 상담을 받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가 4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송방법이나 절차를 안내받은 경우로 이는 29.4%였다.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비수급층 응답자의 절반은 법률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를 받은 경우는 21.8%로 다른 계층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낮게 나타났다.

〈표 4-30〉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N	%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242	46.54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153	29.42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24	4.62
소송 제기 및 응소	75	14.42
권리 보전	26	5.00
합계	520	100.00

〈표 4-31〉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N	127	51	62
	%	44.56	47.22	50.00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N	92	34	27
	%	32.28	31.48	21.77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N	16	5	3
	%	5.61	4.63	2.42
소송 제기 및 응소	N	38	16	20
	%	13.33	14.81	16.13
권리 보전	N	12	2	12
	%	4.21	1.85	9.68
합계	N	285	108	124
	%	100.00	100.00	100.00

50만원 이하의 월평균 소득 가구는 49.5%가 상담이나 정보 제공을 이용하였으며, 28.3%는 소송 방법이나 절차를 안내받았다. 51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42.7%가 상담이나 정보 제공을 이용하였으며, 31.6%는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1만원 이상의 소득 계층은 53.3%가 법률 상담이나 정보 제공을 받았으며, 이는 다른 소득구간 집단보다 3.7%포인트 이상 높은 비율이다.

〈표 4-32〉 소득구간별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N	49	88	49	49
	%	49.49	42.72	45.79	53.26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N	28	65	34	22
	%	28.28	31.55	31.78	23.91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N	3	14	4	2
	%	3.03	6.80	3.74	2.17
소송 제기 및 응소	N	15	29	14	14
	%	15.15	14.08	13.08	15.22
권리 보전	N	4	10	6	5
	%	4.04	4.85	5.61	5.43
합계	N	99	206	107	92

주관적 소득계층이 중간층 이상이라 응답한 집단의 22.7%는 소송제기 및 응소, 권리 보전과 같은 소송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층은 19.3%, 중하층은 18.2%만이 소송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중하층은 57.3%가 법률 상담이나 정보 제공을 이용함에 반해 하위층은 44.6%, 중간층 이상은 45.5%만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표 4-33〉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이상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N	185	47	10
	%	44.58	57.32	45.45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N	129	19	5
	%	31.08	23.17	22.73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N	21	1	2
	%	5.06	1.22	9.09
소송 제기 및 응소	N	61	10	3
	%	14.70	12.20	13.64
권리 보전	N	19	5	2
	%	4.58	6.01	9.09
합계	N	415	82	22
	%	100.00	100.00	100.00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응답자는 다른 교육 수준의 집단에 비해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응답자는 53.7%가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비해 대학교나 전문대 졸업자는 41.1%만이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또한 대학교 또는 전문대 졸업자는 소송 제기 및 응소 서비스 이용률은 21.8%로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의 7.5%에 비해 14.3%포인트나 높다.

〈표 4-34〉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N	36	45	109	51
	%	53.73	46.88	47.60	41.13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N	21	32	67	32
	%	31.34	33.33	29.26	25.81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N	3	4	9	8
	%	4.48	4.17	3.93	6.45
소송 제기 및 응소	N	5	12	30	27
	%	7.46	12.50	13.10	21.77
권리 보전	N	2	3	14	6
	%	2.99	3.13	6.11	4.84
합계	N	67	96	229	124
	%	100.00	100.00	100.00	100.00

이용한 법률서비스의 편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권리 보전을 이용한 응답자는 96.2%가 매우 어려웠거나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를 경험한 이용자는 79.2%만이 매우 어렵거나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법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평가는 어려운 편이었다는 응답이 매우 어려웠다는 응답보다 높았지만,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서비스는 매우 어려웠다는 응답이 어려운 편이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법률서비스 연계 기관과의 연계의 한계로 이용자들이 조력기관 연계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해석 된다.

〈표 4-35〉 편의 정도별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쉬운 편이다	매우 쉽다	합계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N	96	131	13	1	241
	%	39.83	54.36	5.39	0.41	100.00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N	63	79	10	1	153
	%	41.18	51.63	6.54	0.65	100.00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N	10	9	5	0	24
	%	41.67	37.50	20.83	0.00	100.00
소송 제기 및 응소	N	24	47	4	0	75

법률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 법률구조 알선과 같은 조력기관 연계 시는 80%이상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였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와 같은 지원은 40.0%만이 무료로 이용하였고, 25.7%는 201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법률서비스 종류별 이용 비용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무료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01만원 이상	합계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N	186	28	9	7	230
	%	80.87	12.17	3.91	3.04	100.00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N	90	28	9	12	139
	%	64.75	20.14	6.47	8.63	100.00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N	18	2	2	0	22
	%	81.82	9.09	9.09	0	100.00
소송 제기 및 응소	N	28	15	9	18	70
	%	40.00	21.43	12.86	25.71	100.00
권리 보전	N	12	4	4	3	23
	%	52.17	17.39	17.39	13.04	100.00

법률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9.4%가 법률지원을 무료로 이용했으며, 이용 비용이 100만원 이하가 15.8%, 201만원 이상이 8.3%였다. 법률서비스 평균 이용 비용은 206만원이었다.

기초보장수급대상과 차상위층은 각각 74.7%, 65.2%가 법률지원을 무료로 이용했지만 기초보장수급자의 16.0%와 차상위층의 14.6%는 100만원 이하의 비용을 지불하였고, 차상위계층의 9.0%는 101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11.2%는 201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였다. 차상위계층이 무료법률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법률서비스 이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37〉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N	%
무료	317	69.37
100만원 이하	72	15.75
101~200만원 이하	30	6.56
201만원 이상	38	8.32
합계	457	100.00

〈표 4-38〉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무료	N	192	58	66
	%	74.71	65.17	61.11
100만원 이하	N	41	13	18
	%	15.95	14.61	16.67
101~200만원 이하	N	12	8	9
	%	4.67	8.99	8.33
201만원 이상	N	12	10	15
	%	4.67	11.24	13.89
합계	N	257	89	108
	%	100.00	100.00	100.00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응답자의 69.3%는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 것에 반해 151만원 이상의 소득구간에 속한 응답자는 60.2%가 무료로 이용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전체의 8.3%가 법률서비스로 201만원 이상 지출하였으나, 151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14.5%가 201만원 이상 지출하였다.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분석 결과 초등학교 이하의 응답자는 85.0%가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했고, 이 비율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졌다.

174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표 4-39〉 소득구간별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무료	N	61	129	66	50
	%	69.32	74.14	68.04	60.24
100만원 이하	N	15	27	16	13
	%	17.05	15.52	16.49	15.66
101~200만원 이하	N	4	10	5	8
	%	4.55	5.75	5.15	9.64
201만원 이상	N	8	8	10	12
	%	9.09	4.60	10.31	14.46
합계	N	88	174	97	83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40〉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이상
무료	N	253	49	15
	%	69.51	69.01	71.43
100만원 이하	N	61	8	3
	%	16.76	11.27	14.29
101~200만원 이하	N	21	7	1
	%	5.77	9.86	4.76
201만원 이상	N	29	7	2
	%	7.97	9.86	9.52
합계	N	364	71	21
	%	100.00	100.00	100.00

〈표 4-41〉 교육수준별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
무료	N	51	61	138	66
	%	85.00	71.76	67.65	62.26
100만원 이하	N	7	16	37	12
	%	11.67	18.82	18.14	11.32
101~200만원 이하	N	2	6	13	8
	%	3.33	7.06	6.37	7.55
201만원 이상	N	0	2	16	20
	%	0.00	2.35	7.84	18.87

법률지원 이용료가 어느 정도 부담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65.8%가 매우 부담되었다고 응답했으며, 20.5%가 조금 부담되었다고 답했다. 비수급층은 수급층보다 법률지원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수급층의 70.8%, 기초보장 수급층은 64.86%, 차상위층은 59.5%가 매우 부담되었다고 응답했다.

〈표 4-42〉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 정도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N	%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11	6.83
별로 부담되지 않았다	5	3.11
보통이다	6	3.73
조금 부담되었다	33	20.50
매우 부담되었다	106	65.84
합계	161	100.00

〈표 4-43〉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 정도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정도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N	5	3	3
	%	6.76	8.11	6.25
별로 부담되지 않았다	N	3	2	0
	%	4.05	5.41	0.00
보통이다	N	4	0	2
	%	5.41	0	4.17
조금 부담되었다	N	14	10	9
	%	18.92	27.03	18.75
매우 부담되었다	N	48	22	34
	%	64.86	59.46	70.83
합계	N	74	37	48
	%	100.00	100.00	100.00

〈표 4-44〉 소득 구간별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 정도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정도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N	5	5	1	0
	%	15.63	9.62	2.78	0.00
별로 부담되지 않았다	N	2	1	1	1
	%	6.25	1.92	2.78	2.70
보통이다	N	0	3	0	3
	%	0.00	5.77	0.00	8.11
조금 부담되었다	N	7	8	6	11
	%	21.88	15.38	16.67	29.73
매우 부담되었다	N	18	35	28	22
	%	56.25	67.31	77.78	59.46
합계	N	32	52	36	37
	%	100.00	100.00	100.00	100.00

주관적 의식수준별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 정도는 하위층의 68.5%, 중하층의 57.7%가 매우 부담되었으며, 중간층 이상은 42.9%만이 매우 부담되었다고 응답했다. 법률 서비스 이용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우 부담되었다는 응답이 54.3%이며 조금 부담되었다는 비율은 27.1%이었으나, 101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지출한 응답자는 90.0%가 법률지원 이용료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표 4-45〉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 정도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정도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이상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N	9	2	0
	%	7.09	7.69	0.00
별로 부담되지 않았다	N	5	0	0
	%	3.94	0.00	0.00
보통이다	N	2	4	0
	%	1.57	15.38	0.00
조금 부담되었다	N	24	5	4
	%	18.9	19.23	57.14
매우 부담되었다	N	87	15	3
	%	68.50	57.69	42.86
합계	N	127	26	7
	%	100.00	100.00	100.00

〈표 4-46〉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별 부담 정도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정도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이하	201만원 이상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N	4	0	1
	%	5.71	0.00	2.63
별로 부담되지 않았다	N	5	0	0
	%	7.14	0.00	0.00
보통이다	N	4	0	0
	%	5.71	0.00	0.00
조금 부담되었다	N	19	3	4
	%	27.14	10.00	10.53
매우 부담되었다	N	38	27	33
	%	54.29	90.00	86.84
합계	N	70	30	38
	%	100.00	100.00	100.00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 집단은 66.7%, 중학교 졸업 이상은 96.4%가 법률지원 이용료가 부담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는 69.3%가 법률지원 이용료가 매우 부담되었다고 답하였다.

〈표 4-47〉 교육수준별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 정도

법률지원 이용료 부담정도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N	3	0	3	5
	%	33.33	0.00	4.00	10.42
별로 부담되지 않았다	N	0	1	4	0
	%	0.00	3.57	5.33	0
보통이다	N	0	0	3	3
	%	0.00	0.00	4.00	6.25
조금 부담되었다	N	1	8	13	11
	%	11.11	28.57	17.33	22.92
매우 부담되었다	N	5	19	52	29
	%	55.56	67.86	69.33	60.42
합계	N	9	28	75	48
	%	100.00	100.00	100.00	100.00

제4절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

1.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및 경로

앞서 일반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이용 경험을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을 통해 제공되는 법률구조 사업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법률구조 서비스가 필요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응답자들이 법률구조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법률구조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 중 73.7%로 많은 수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가 주로 법률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응답자의 약 70%가 기초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대상 복지제도 수급자로 나타났다.

〈표 4-48〉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N	%
들어본 적 있음	734	73.69
들어본 적 없음	262	26.31
합계	996	100.00

아래 표에서 복지제도 수급지위별로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복지제도 수급계층일수록 법률구조 사업에 대해 더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초보장 수급자 77.1%, 차상위 수급자 72.3%, 비수급자 68.9%). 이는 복지 수급자의 경우 수급 과정에서 관련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거나 안내 혹은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표 4-49〉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들어본 적 있음	N	374	149	208
	%	77.11	72.33	68.87
들어본 적 없음	N	111	57	94
	%	22.89	27.67	31.13
합계	N	485	206	302
	%	100.00	100.00	100.00

소득구간별로도 가구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계층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일수록 법률구조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하위 소득계층의 경우는 65.5%로 오히려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4-50〉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들어본 적 있음	N	133	260	144	162
	%	65.52	77.61	75.00	73.97
들어본 적 없음	N	70	75	48	57
	%	34.48	22.39	25.00	26.03
합계	N	203	335	192	219
	%	100.00	100.00	100.00	100.00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아도 스스로 가장 낮은 하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앞서 소득구간별 결과와는 반대로 인식하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인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계층 간 큰 차이는 없다.

〈표 4-51〉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이상
들어본 적 있음	N	532	134	66
	%	73.58	74.03	75.00
들어본 적 없음	N	191	47	22
	%	26.42	25.97	25.00
합계	N	723	181	88
	%	100.00	100.00	100.00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64.3%로 가장 낮고,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80.3%로 그 어느 집단보다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2〉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
들어본 적 있음	N	83	130	323	195
	%	64.34	72.22	73.74	80.25
들어본 적 없음	N	46	50	115	48
	%	35.66	27.78	26.26	19.75
합계	N	129	180	438	243
	%	100.00	100.00	100.00	100.00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구 특성 외에 지역적 특성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 여부별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배치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에게서 법률구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배치 지역 77.7%, 미배치 지역 69.6%).

〈표 4-53〉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 여부별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법률홈닥터 미배치 지역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
들어본 적 있음	N	343	391
	%	69.57	77.73

다음은 법률구조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결과들이다.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50%에 가까운 수가 시·군·구청 등 지자체의 공무원이나 사례관리사 등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대상의 많은 수가 기초보장 혹은 차상위 복지 수급자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순으로는 주변사람(15.6%)이나 언론매체(15.2%)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4-54〉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경로

법률구조 사업 인지 경로	N	%
홍보책자를 통해서	38	4.70
TV, 신문광고 및 언론을 통해서	123	15.22
인터넷을 통해서	57	7.05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126	15.59
시·군·구청 등 공무원을 통해서(사례관리사 포함)	372	46.04
상담소 및 복지관 등 복지기관을 통해서	59	7.30
법원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23	2.85
기타	10	1.24
합계	808	100.00

다양한 범주별로 구분하여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지자체를 통한 경우가 1/2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세부적으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복지제도 수급지위별로 비교해보면, 복지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지자체, 복지기관, 법원·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이나 주변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비율이 높고(관련 기관 통한 경우 기초보장 수급자 63.2%, 차상위 수급자 55.4%, 비수급자 44.6%), 비수급자인 경우에는 책자나 언론,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기초보장 수급자 18.6%, 차상위 수급자 27.7%, 비수급자 40.7%). 세부적으로는 기초보장 수급자의 경우 특히 지자체를 통해 듣는 경우가 많고, 차상위 수급자의 경우에는 복지기관을 통해, 비수급자인 경우에는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듣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4-55〉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경로

법률구조 사업 인지 경로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홍보책자를 통해서	N	13	9	15
	%	3.27	5.08	6.49
TV, 신문광고 및 언론을 통해서	N	45	31	47
	%	11.34	17.51	20.35
인터넷을 통해서	N	16	9	32
	%	4.03	5.08	13.85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N	68	28	30
	%	17.13	15.82	12.99
시·군·구청 등 공무원을 통해서 (사례관리사 포함)	N	214	67	89
	%	53.90	37.85	38.53
상담소 및 복지관 등 복지기관을 통해서	N	22	25	12
	%	5.54	14.12	5.19
법원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N	15	6	2
	%	3.78	3.39	0.87
기타	N	4	2	4
	%	1.01	1.13	1.73
합계	N	397	177	231
	%	100.00	100.00	100.00

실제 소득구간별로도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151만원 이상인 가장 상위의 구간에 서 언론 및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지자체나 복지관 등 기관을 통해서 는 특히 101만원~150만원 이하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4-56〉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경로

법률구조 사업 인지 경로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홍보책자를 통해서	N	5	13	3	13
	%	3.45	4.44	1.99	7.22
TV, 신문광고 및 언론을 통해서	N	20	39	15	40
	%	13.79	13.31	9.93	22.22
인터넷을 통해서	N	11	10	8	22
	%	7.59	3.41	5.30	12.22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N	28	52	22	16
	%	19.31	17.75	14.57	8.89
시·군·구청 등 공무원을 통해서 (사례관리사 포함)	N	67	144	84	68
	%	46.21	49.15	55.63	37.78
상담소 및 복지관 등 복지기관을 통해서	N	10	20	15	13
	%	6.90	6.83	9.93	7.22
법원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N	3	10	2	6
	%	2.07	3.41	1.32	3.33
기타	N	1	5	2	2
	%	0.69	1.71	1.32	1.11
합계	N	145	293	151	180
	%	100.00	100.00	100.00	100.00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인 경우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경우에 비해 지자체나 법원 및 수사기관, 그리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에는 홍보매체나 상담소, 복지관 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4-57〉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경로

법률구조 사업 인지 경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
홍보책자를 통해서	N	3	6	14	15
	%	3.49	4.20	3.93	6.85
TV, 신문광고 및 언론을 통해서	N	7	16	54	46
	%	8.14	11.19	15.17	21.00
인터넷을 통해서	N	0	2	25	30
	%	0.00	1.40	7.02	13.70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N	20	26	57	23
	%	23.26	18.18	16.01	10.50
시·군·구청 등 공무원을 통해서 (사례관리사 포함)	N	46	74	170	79
	%	53.49	51.75	47.75	36.07
상담소 및 복지관 등 복지기관을 통해서	N	6	10	26	16
	%	6.98	6.99	7.30	7.31
법원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N	3	6	9	5
	%	3.49	4.2	2.53	2.28
기타	N	1	3	1	5
	%	1.16	2.1	0.28	2.28
합계	N	86	143	356	219
	%	100.00	100.00	100.00	100.00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 여부별로도 차이가 다소 나타나는데, 배치 지역은 책자나 인터넷, 주변 사람, 그리고 특히 복지기관을 통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미배치 지역에 비해 높고, 미배치 지역은 지자체나 법원 및 수사기관을 통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58〉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 여부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경로

법률구조 사업 인지 경로		법률홈닥터 미배치 지역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
홍보책자를 통해서	N	17	21
	%	4.46	4.92
TV, 신문광고 및 언론을 통해서	N	58	65
	%	15.22	15.22
인터넷을 통해서	N	25	32
	%	6.56	7.49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N	58	68
	%	15.22	15.93
시·군·구청 등 공무원을 통해서 (사례관리사 포함)	N	181	191
	%	47.51	44.73
상담소 및 복지관 등 복지기관을 통해서	N	24	35
	%	6.30	8.20
법원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N	11	12
	%	2.89	2.81
기타	N	7	3
	%	1.84	0.70
합계	N	381	427
	%	100.00	100.00

2. 법률구조 사업 이용 경험과 지원 내용

이하에서는 법률구조 사업을 실제로 이용한 경우 이용한 기관과 서비스 종류, 그리고 지원 분야 등 이용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를 보면 이용해본 적이 없는 비율이 51.4%로 좀 더 높으나 유사한 수준이다.

〈표 4-59〉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법률서비스 이용 여부	N	%
이용해본 적 있음	354	48.63
이용해본 적 없음	374	51.37

복지수급 여부별로 살펴보면 비수급자인 경우에는 이용 경험이 없는 비중이 59.9%로 높은 반면, 기초보장 및 차상위 수급자는 이용해본 적이 있는 응답자 비중이 더 크다(각각 51.7%, 53.1%). 수급지위별로는 기초보장 수급자에 비해 차상위 수급자가 약간 더 이용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60〉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이용해본 적 있음	N	193	77	83
	%	51.74	53.10	40.10
이용해본 적 없음	N	180	68	124
	%	48.26	46.90	59.90
합계	N	373	145	207
	%	100.00	100.00	100.00

소득구간별로는 소득이 51만원~100만원과 101만원~150만원인 가구에서 이용해본 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54.8%, 55.7%). 15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5.4%로 이용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4-61〉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이용해본 적 있음	N	64	142	78	57
	%	48.12	54.83	55.71	35.40
이용해본 적 없음	N	69	117	62	104
	%	51.88	45.17	44.29	64.60
합계	N	133	259	140	161
	%	100.00	100.00	100.00	100.00

주관적 소득계층별로는 하위층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을 제외하고 이용해본 적 있는 비중이 더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중간층 이상(상위층이라고 응답한 경우 부재)인 경우 이용 비율이 29.2%로 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4-62〉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이상
이용해본 적 있음	N	270	64	19
	%	50.94	48.85	29.23
이용해본 적 없음	N	260	67	46
	%	49.06	51.15	70.77
합계	N	530	131	65
	%	100.00	100.00	100.00

교육수준별로는 특별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이용 비율이 55.4%로 높게 나타났다.

〈표 4-63〉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
이용해본 적 있음	N	46	59	164	83
	%	55.42	45.38	51.41	43.01
이용해본 적 없음	N	37	71	155	110
	%	44.58	54.62	48.59	56.99
합계	N	83	130	319	193
	%	100.00	100.00	100.00	100.00

법률상담터 배치 지역 여부별로도 마찬가지로 이용한 비중이 더 낮기는 하나, 배치 지역이 미배치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약간 더 높았다(각각 49.4%, 47.8%).

〈표 4-64〉 법률상담터 배치 지역 여부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법률구조 사업 이용 여부		법률상담터 미배치 지역	법률상담터 배치 지역
이용해본 적 있음	N	163	191
	%	47.80	49.35
이용해본 적 없음	N	178	196
	%	52.20	50.65
합계	N	341	387

그렇다면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한 한 경우 어떠한 기관, 종류, 분야 등을 이용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용한 기관을 살펴보면, 약 50% 이상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법률홈닥터가 27.6%,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각각 11.4%와 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5〉 법률구조 사업 이용 기관

법률서비스 이용 기관	N	%
대한법률구조공단	226	50.3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1	11.36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7	6.01
법률홈닥터	124	27.62
마을변호사	9	2.00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7	1.56
기타	5	1.11
합계	449	100.00

주: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복지제도 수급지위별로도 공단 이용률은 약 50% 내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차상위층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고, 기초보장 수급자에게서 가장 낮았다(차상위 53.7%, 기초보장 48.4%).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해 차상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각각 17.2%, 8.6%). 반면, 두 번째로 이용 비중이 높았던 법률홈닥터의 이용률은 차상위층에서는 특히 낮게 나타났다(17.2%), 기초보장 수급자에게서 가장 높았다(31.8%). 비수급자인 경우에는 마을변호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나, 마을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의 경우 이용 사례수 자체가 적어 집단별로 패턴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표 4-66〉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기관

법률구조 사업 이용 기관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대한법률구조공단	N	117	50	59
	%	48.35	53.76	52.6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N	24	16	11
	%	9.92	17.20	9.82
대한국가정법률복지상담원	N	14	8	5
	%	5.79	8.60	4.46
법률홈닥터	N	77	16	30
	%	31.82	17.20	26.79
마을변호사	N	2	2	4
	%	0.83	2.15	3.5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N	5	1	1
	%	2.07	1.08	0.89
기타	N	3	0	2
	%	1.24	0.00	1.79
합계	N	242	93	112
	%	100.00	100.00	100.00

주: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가장 이용률이 높은 법률구조공단은 다른 구간에 비해 151만원 이상의 구간에서 이용 비중이 가장 높고(55.3%), 그 다음의 법률홈닥터는 101만원~150만원 구간에서 높게 나타났다(35.0%).

〈표 4-67〉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기관

법률구조 사업 이용 기관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대한법률구조공단	N	36	94	47	42
	%	48.00	51.37	47.00	55.2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N	8	20	12	8
	%	10.67	10.93	12.00	10.5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N	5	15	3	4
	%	6.67	8.20	3.00	5.26
법률홈닥터	N	19	50	35	18
	%	25.33	27.32	35.00	23.68
마을변호사	N	1	1	3	3
	%	1.33	0.55	3.00	3.9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N	2	3	0	1
	%	2.67	1.64	0.00	1.32
기타	N	4	0	0	0
	%	5.33	0.00	0.00	0.00
합계	N	75	183	100	76
	%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응답자의 교육수준별 집단 간 비교를 해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의 가장 고학력 집단에서(56.6%), 법률홈닥터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가장 저학력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35.1%).

〈표 4-68〉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기관

법률구조 사업 이용 기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
대한법률구조공단	N	28	34	98	64
	%	49.12	47.22	48.04	56.6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N	4	9	25	13
	%	7.02	12.50	12.25	11.50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N	3	5	15	4
	%	5.26	6.94	7.35	3.54
법률홈닥터	N	20	20	58	25
	%	35.09	27.78	28.43	22.12
마을변호사	N	1	1	5	2
	%	1.75	1.39	2.45	1.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N	0	3	2	2
	%	0.00	4.17	0.98	1.77
기타	N	1	0	1	3
	%	1.75	0.00	0.49	2.65
합계	N	57	72	204	113
	%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에서는 미배치 지역에 비해 법률홈닥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의 이용률이, 미배치 지역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마을변호사의 이용률이 높았다.

〈표 4-69〉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 여부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기관

법률구조 사업 이용 기관		법률홈닥터 미배치 지역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N	103	123
	%	50.49	50.2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N	29	22
	%	14.22	8.98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N	12	15
	%	5.88	6.12
법률홈닥터	N	48	76
	%	23.53	31.02
마을변호사	N	7	2
	%	3.43	0.8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N	3	4
	%	1.47	1.63
기타	N	2	3
	%	0.98	1.22
합계	N	204	245
	%	100.00	100.00

주: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다음은 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어떠한 종류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로,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이 45.2%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도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가 25.3%, 법률서류 및 문서 작성 도움이 13.8%로 비교적 높은 이용을 보였다. 소송 방법 안내 및 소송 제기 등 소송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 비율은 약 31%로 나타났다.

〈표 4-70〉 법률구조 사업 이용 종류

법률서비스 이용 종류	N	%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236	45.21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132	25.29
법률서류 및 문서작성 도움	72	13.79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27	5.17

주: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복지수급 지위별로 비교해보면 기초보장 수급자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법률서류 및 문서작성 도움,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소송 제기(원고의 소송에 피고로서 응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높았으며, 차상위 수급자의 경우에는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이나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이용 비율이,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권리 보전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보장 수급자의 경우에는 차상위층과 비교해볼 때 단순 정보 제공이나 서비스 안내보다 보다 적극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71〉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종류

법률구조 사업 이용 종류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N	131	49	55
	%	45.02	46.23	44.72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N	70	30	32
	%	24.05	28.30	26.02
법률서류 및 문서작성 도움	N	47	10	14
	%	16.15	9.43	11.38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N	18	6	3
	%	6.19	5.66	2.44
소송 제기(원고의 소송에 피고로서 응함)	N	17	6	7
	%	5.84	5.66	5.69
권리 보전(압류, 가압류, 가처분 관련)	N	8	5	12
	%	2.75	4.72	9.76
합계	N	291	106	123
	%	100.00	100.00	100.00

주: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소득구간별로는 가구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체 혹은 상위 소득구간에 비해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과 소송 제기의 비율이 높고, 15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 보전 관련 이용 비율이 높았다. 중간 소득구간인 51만원~150만원인 경우에는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서류 및 문서작성 도움,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관련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72〉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종류

법률구조 사업 이용 종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N	49	93	46	39
	%	53.85	43.26	38.66	49.37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N	21	58	31	20
	%	23.08	26.98	26.05	25.32
법률서류 및 문서작성 도움	N	10	30	20	9
	%	10.99	13.95	16.81	11.39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N	2	15	9	1
	%	2.20	6.98	7.56	1.27
소송 제기(원고의 소송에 피고로서 응함)	N	7	11	8	3
	%	7.69	5.12	6.72	3.80
권리 보전(압류, 가압류, 가처분 관련)	N	2	8	5	7
	%	2.20	3.72	4.20	8.86
합계	N	91	215	119	79
	%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교육수준별로 서비스 이용 종류를 살펴보면,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인 경우 소송 제기나 권리 보전과 관련된 이용 비중이 높고,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이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높았다.

〈표 4-73〉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종류

법률구조 사업 이용 종류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N	36	37	109	53
	%	48.65	43.53	45.61	43.44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N	19	23	63	27
	%	25.68	27.06	26.36	22.13
법률서류 및 문서작성 도움	N	12	15	28	17
	%	16.22	17.65	11.72	13.93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N	5	4	14	4
	%	6.76	4.71	5.86	3.28
소송 제기(원고의 소송에 피고로서 응함)	N	1	3	17	9
	%	1.35	3.53	7.11	7.38
권리 보전(압류, 가압류, 가처분 관련)	N	1	3	8	12
	%	1.35	3.53	3.35	9.84

주: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다음으로 어떠한 분야의 문제로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했는지 살펴보면, 민사 사건과 가사 사건 모두 각각 39.4%로 전체 중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는 형사 관련이 14.2%, 행정 일반이 6.8%로 나타났다.

〈표 4-74〉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전체
민사 일반 (부동산, 채권/채무, 매매/중여, 손해배상, 계약/해제, 경매,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기타)	N	167
	%	39.39
행정 일반 (행정 처분, 조세, 행정 심판, 행정 소송, 기타)	N	29
	%	6.84
가사 관련 (혼인/이혼, 호적/친자, 상속, 가정폭력, 기타)	N	167
	%	39.39
형사 관련 (고소, 재산범죄, 명예훼손, 성관련범죄, 사기/공갈죄, 교통사고, 폭행, 기타)	N	60
	%	14.15
상사 관련 (회사 관련,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N	1
	%	0.24
지식 산업 담당 (특허, 저작권/상표)	N	0
	%	0.00
합계	N	424
	%	100.00

주: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전체적으로 민사 일반과 가사 관련 사건이 동일하게 각각 약 40% 미만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수급지위별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타난다. 기초보장 및 차상위 수급자의 경우에는 민사 일반보다 가사 관련 문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차상위층의 경우 가사 관련 비중이 45.7%로 더 높았다. 기초보장 수급자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형사 관련 사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민사 일반이 43.7%로 가사 관련 문제로 인한 이용 비중보다 높았고, 행정 일반 분야에서 이용 비중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4-75〉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민사 일반 (부동산, 채권/채무, 매매/중여, 손해배상, 계약/해제, 경매,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기타)	N	86	35	45
	%	37.89	38.04	43.69
행정 일반 (행정 처분, 조세, 행정 심판, 행정 소송, 기타)	N	14	5	10
	%	6.17	5.43	9.71
가사 관련 (혼인/이혼, 호적/친자, 상속, 가정폭력, 기타)	N	90	42	35
	%	39.65	45.65	33.98
형사 관련 (고소, 재산범죄, 명예훼손, 성관련범죄, 사기/공갈죄, 교통사고, 폭행, 기타)	N	37	10	12
	%	16.3	10.87	11.65
상사 관련 (회사 관련,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N	0	0	1
	%	0.00	0.00	0.97
지식 산업 담당 (특허, 저작권/상표)	N	0	0	0
	%	0.00	0.00	0.00
합계	N	227	92	103
	%	100.00	100.00	100.00

주: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151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민사 일반(47.1%)이 가사 관련(31.4%)보다 큰 차이로 높았고, 하위 구간에서는 대체로 가사 관련으로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한 비중이 더 높거나 비교적 유사한 수준임을 볼 수 있다. 가사 관련 이용 비중은 101만원~150만원 이하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47.3%).

〈표 4-76〉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민사 일반 (부동산, 채권/채무, 매매/중여, 손해배상, 계약/해제, 경매,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기타)	N	27	70	31	33
	%	35.06	40.70	34.07	47.14
행정 일반 (행정 처분, 조세, 행정 심판, 행정 소송, 기타)	N	8	10	2	7
	%	10.39	5.81	2.20	10
가사 관련 (혼인/이혼, 호적/친자, 상속, 가정폭력, 기타)	N	30	67	43	22
	%	38.96	38.95	47.25	31.43
형사 관련 (고소, 재산범죄, 명예훼손, 성관련범죄, 사기/공갈죄, 교통사고, 폭행, 기타)	N	12	25	15	7
	%	15.58	14.53	16.48	10.00
상사 관련 (회사 관련,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N	0	0	0	1
	%	0.00	0.00	0.00	1.43
지식 산업 담당 (특허, 저작권/상표)	N	0	0	0	0
	%				

주: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주관적으로 인식한 소득계층이 하위층과 중간층 이상이라고 생각한 경우 민사 일반에 비해 가사 관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간층 이상에서 가사 관련 이용 비중이 44.0%로 더 높았다. 중하층에서는 민사 일반이 44.4%로 가사 관련 33.3%에 비해 높았다. 하위층에서는 다른 계층에 비해 형사 사건으로 인한 이용 비중이 높았고, 중간층 이상에서는 행정 일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77〉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이상
민사 일반 (부동산 채권/채무, 매매/중여, 손해배상, 계약/해제, 경매, 압대차, 근로관계 임금 등)	N	120	36	10
	%	37.85	44.44	40.00
행정 일반 (행정 처분, 조세, 행정 심판, 행정 소송, 기타)	N	19	7	3
	%	5.99	8.64	12.00
가사 관련 (혼인/이혼, 호적/친자, 상속, 가정폭력, 기타)	N	129	27	11
	%	40.69	33.33	44.00
형사 관련 (고소, 재산범죄, 명예훼손, 성관련범죄, 사기/공갈죄, 교통사고, 폭행, 기타)	N	49	10	1
	%	15.46	12.35	4.00
상사 관련 (회사 관련,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N	0	1	0
	%	0.00	1.23	0.00
지식 산업 담당 (특허, 저작권/상표)	N	0	0	0
	%	0.00	0.00	0.00
합계	N	317	81	25
	%	100.00	100.00	100.00

주: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 가사 관련 분야에서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한 비중이 민사 일반보다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에서는 민사 일반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행정 일반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 형사 관련 분야 이용과 관련해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78〉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
민사 일반 (부동산, 채권/채무, 매매/증여, 손해배상, 계약/해제, 경매,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기타)	N	21	23	76	46
	%	35.00	34.85	40.21	42.99
행정 일반 (행정 처분, 조세, 행정 심판, 행정 소송, 기타)	N	6	3	12	8
	%	10.00	4.55	6.35	7.48
가사 관련 (혼인/이혼, 호적/친자, 상속, 가정폭력, 기타)	N	23	28	75	40
	%	38.33	42.42	39.68	37.38
형사 관련 (고소, 재판법죄 명예훼손 상간변법죄 사기/공갈죄 교통사고 폭행 기타)	N	10	12	26	12
	%	16.67	18.18	13.76	11.21
상사 관련 (회사 관련,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N	0	0	0	1
	%	0.00	0.00	0.00	0.93
지식 산업 담당 (특허, 저작권/상표)	N	0	0	0	0
	%	0.00	0.00	0.00	0.00
합계	N	60	66	189	107
	%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3.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부담과 만족도

법률구조 사업의 이용 경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장 최근에 이용하였던 법률구조 사업 분야와 관련하여 지불한 비용 부담과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법률구조 사업 이용에 지불한 총 비용, 즉 변호사 상담 비용과 더불어 법원에 지급한 인지대 및 송달료,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한 비용 부담을 살펴보면 무료인 경우가 75.2%로 가장 많았다. 무료인 경우를 포함하여 전체 평균 비용은 약 17만원이며, 무료를 제외한 평균 비용은 68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비용이 무료가 아니었던 경우로 한정하여 총 비용 중 부담한 기타 부대비용을 보면 10만원 이하(무료 제외)가 55.2%, 11만원 이상도 40.3%, 그리고 무료는 4.5%로 나타났다. 부대비용 평균은 약 20만원으로 전체 평균 비용 68만원 중 약 30%가 부대비용 부담이고, 70% 정도인 약 48만원은 변호사 상담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9〉 법률구조 사업 이용 비용

법률구조 사업 이용 비용		N	비율(%)/ 평균(만원)
총 비용	무료	246	75.23
	50만원 이하	61	18.65
	51만원 이상	20	6.12
	합계	327	100.00
	전체 평균 비용	327	17
	무료 제외한 평균 비용	81	68
부대비용 (총 비용이 무료인 경우 제외)	무료	3	4.48
	10만원 이하	37	55.22
	11만원 이상	27	40.30
	합계	67	100.00
	전체 평균 비용	67	20

복지제도 수급 지위에 따른 이용 비용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복지 수급자일수록 대체로 실제 지불한 비용 부담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기초보장 수급자의 경우 차상위 계층이나 비수급자에 비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가 약 7~8%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기초보장 수급자 78.7%, 차상위 69.9%, 비수급자 71.8%), 무료로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지불한 비용을 살펴보면 기초보장 수급자 42만원, 차상위 89만원, 비수급자 90만원으로 50만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표 4-80〉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

법률구조 사업 이용 비용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무료	N	138	51	56
	%	78.86	69.86	71.79
50만원 이하	N	29	14	18
	%	16.57	19.18	23.08
51만원 이상	N	8	8	4
	%	4.57	10.96	5.13
합계	N	175	73	78
	%	100.00	100.00	100.00
무료 제외한 평균 비용		N 37	22	22

법률구조 사업 이용에 지출한 비용과 이에 대해 응답자가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52.6%)이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26.8%)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표 4-81〉 법률구조 사업 이용 비용의 부담 정도(무료인 경우 제외)

이용 비용의 부담정도	N	비율(%) / 평균(점)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13	13.40
별로 부담되지 않았다	13	13.40
보통이다	20	20.62
조금 부담되었다	17	17.53
매우 부담되었다	34	35.05
합계	97	100.00
평균 점수	97	3.47

주: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1점, '별로 부담되지 않았다' 2점, '보통이다' 3점, '조금 부담되었다' 4점, '매우 부담되었다' 5점으로 하여 평균 계산

복지제도 수급지위별로 비용 부담 정도를 보면 기초보장 수급자의 경우 3.33점, 비수급자 3.35점, 차상위 수급자 3.91점으로, 세 집단 중 기초보장 수급자가 비용부담을 가장 적게 느끼고, 그에 반해 오히려 차상위 복지제도 수급자의 비용부담은 비수급자에 비해서도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용 비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차상위층의 경우 무료로 이용한 비율이 비수급자보다 약간 더 낮은 수준이었고(차상위 69.9%, 비수급자 71.8%), 평균 지출 비용 또한 높은 수준으로 비수급자와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차상위 89만원, 비수급자 90만원).

〈표 4-82〉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이용 비용의 부담 정도(무료인 경우 제외)

이용 비용의 부담정도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N	51	23	23
평균 점수(점)	3.33	3.91	3.35

주: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1점, '별로 부담되지 않았다' 2점, '보통이다' 3점, '조금 부담되었다' 4점, '매우 부담되었다' 5점으로 하여 평균 계산

다음은 응답자가 이용한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 도움 정도, 추천 의사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57.4%로 불만족하는 경우 14.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4-83〉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N	비율(%) / 평균(점)
매우 불만족한다	20	5.71
약간 불만족한다	30	8.57
보통이다	99	28.29
약간 만족한다	95	27.14
매우 만족한다	106	30.29
합계	350	100.00
평균 점수	350	3.68

주: '매우 불만족한다' 1점, '약간 불만족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만족한다' 4점, '매우 만족한다' 5점으로 하여 평균 점수 계산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만족도는 기초보장 수급자가 3.86점, 비수급자가 3.47점, 차상위 수급자가 3.43점 순으로 높았다. 이는 앞서 비용 부담 정도 인식과 비교해볼 때 가장 부담이 적었다고 응답한 기초보장 수급자에게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비용 부담을 가장 크게 느낀 차상위 수급자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84〉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N	191	75	83
평균 점수(점)	3.86	3.43	3.47

주: '매우 불만족한다' 1점, '약간 불만족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만족한다' 4점, '매우 만족한다' 5점으로 하여 평균 점수 계산

수급 여부와 관계 없이 가구 소득구간별로 보면 가장 높은 소득구간인 151만 이상 구간에 속한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3.50으로 가장 낮고, 그 외에는 소득이 낮은 구간일 수록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표 4-85〉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	---------	-----------	-----------	----------

주: '매우 불만족한다' 1점, '약간 불만족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만족한다' 4점, '매우 만족한다' 5점으로 하여 평균 점수 계산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소득계층별로 보면 하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만족도가 3.75점으로 가장 높고, 중간층 이상 3.63점, 그리고 중하층에서 3.38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86〉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이상
N	266	64	19
평균 점수(점)	3.75	3.38	3.63

주: '매우 불만족한다' 1점, '약간 불만족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만족한다' 4점, '매우 만족한다' 5점으로 하여 평균 점수 계산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만족도가 높고(중학교 졸업 3.97점, 초등학교 졸업 이하 3.74점), 학력이 비교적 높은 집단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고등학교 졸업 3.64점, 대학교 졸업 이상 3.49점).

〈표 4-87〉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
N	46	58	163	81
평균 점수(점)	3.74	3.97	3.64	3.49

주: '매우 불만족한다' 1점, '약간 불만족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만족한다' 4점, '매우 만족한다' 5점으로 하여 평균 점수 계산

만족도와 별개로 응답자가 이용한 법률구조 사업이 문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보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0.1%로 낮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비율이 6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만족도와 비교해볼 때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의 결과이며, 다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정도가 만족하는 수준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점수 또한 도움정도가 3.82로 만족도 3.68점보다 높았다.

〈표 4-88〉 법률구조 사업의 도움 정도

도움 정도	N	비율(%)/평균(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6	4.61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	5.48
보통이다	73	21.04
도움이 되었다	142	40.92
매우 도움이 되었다	97	27.95
합계	347	100.00
평균 점수	347	3.82

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점, '도움이 되지 않았다' 2점, '보통이다' 3점, '도움이 되었다' 4점, '매우 도움이 되었다' 5점으로 하여 평균 점수 계산

세부 범주별 도움 정도 인식 또한 만족도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데, 먼저 복지수급 지위별로 보면 기초보장 수급자가 가장 긍정적으로(4.0점), 차상위 수급자가 가장 부정적인 인식(3.6점)을 보였다.

〈표 4-89〉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의 도움 정도

도움 정도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N	190	75	81
평균 점수(점)	3.96	3.60	3.69

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점, '도움이 되지 않았다' 2점, '보통이다' 3점, '도움이 되었다' 4점, '매우 도움이 되었다' 5점으로 하여 평균 점수 계산

소득구간별로는 151만원 이상의 구간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3.63으로 가장 낮고, 51만원~100만원 이하에서 3.92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4-90〉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의 도움 정도

도움 정도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N	63	140	78	54
평균 점수(점)	3.75	3.92	3.88	3.63

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점, '도움이 되지 않았다' 2점, '보통이다' 3점, '도움이 되었다' 4점, '매우 도움이 되었다' 5점으로 하여 평균 점수 계산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에 따라서는, 하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3.88점으로 가장 높고, 중간층 이상 3.84점, 중하층 3.5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1〉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구조 사업의 도움 정도

도움 정도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이상
N	265	62	19
평균 점수(점)	3.88	3.58	3.84

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점, '도움이 되지 않았다' 2점, '보통이다' 3점, '도움이 되었다' 4점, '매우 도움이 되었다' 5점으로 하여 평균 점수 계산

교육수준별로는 역시 비교적 저학력 집단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높고, 고학력 집단에서는 그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92〉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의 도움 정도

도움 정도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
N	46	58	163	78
평균 점수(점)	3.93	4.21	3.72	3.68

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점, '도움이 되지 않았다' 2점, '보통이다' 3점, '도움이 되었다' 4점, '매우 도움이 되었다' 5점으로 하여 평균 점수 계산

다음은 이용한 법률구조 사업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거의 90%가 이용한 법률구조 사업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추천할 의사가 없는 비율도 10% 이상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93〉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추천 의향 여부

추천 의향 여부	N	%
추천 의향 있다	307	88.22
추천 의향 없다	41	11.78
합계	348	100.00

추천 의사도 역시 기초보장 수급자에게서 가장 높고(90.0%), 비수급자 86.6%, 차상위 8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4〉 복지제도 수급지위별 법률구조 사업 추천 의향 여부

추천 의향 여부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추천 의향 있다	N	171	64	71
	%	90.00	85.33	86.59
추천 의향 없다	N	19	11	11
	%	10.00	14.67	13.41
합계	N	190	75	82
	%	100.00	100.00	100.00

가구 소득구간별로는 가장 낮은 5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추천 의사가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84.1%), 나머지 상위 구간에서는 전체 추천 비율이었던 88.2%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4-95〉 소득구간별 법률구조 사업 추천 의향 여부

추천 의향 여부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추천 의향 있다	N	53	126	69	49
	%	84.13	90.00	88.46	89.09
추천 의향 없다	N	10	14	9	6
	%	15.87	10.00	11.54	10.91
합계	N	63	140	78	55
	%	100.00	100.00	100.00	100.00

주관적 소득계층별로는 중하층 이상에 비해 스스로 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그 비율이 좀더 높게 나타났다(89.4%).

〈표 4-96〉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구조 사업 추천 의향 여부

추천 의향 여부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이상
추천 의향 있다	N	237	53	16
	%	89.43	84.13	84.21
추천 의향 없다	N	28	10	3
	%	10.57	15.87	15.79
합계	N	265	63	19
	%	100.00	100.00	100.00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추천하는 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83.5%에 비해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9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97〉 교육수준별 법률구조 사업 추천 의향 여부

추천 의향 여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
추천 의향 있다	N	42	54	143	66
	%	91.30	93.10	87.73	83.54
추천 의향 없다	N	4	4	20	13
	%	8.70	6.90	12.27	16.46
합계	N	46	58	163	79
	%	100.00	100.00	100.00	100.00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아닌 이용기관별로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해보았다. 이를 위해 가장 최근 이용한 법률구조 사업 분야로 한정¹⁴⁾하여 해당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한 기관별로 분석을 하였으며, 이 때 앞서 이용 기관 비중이 높게 나타났던 4개 기관에 대해서만 살펴해보았다. 법률구조 사업 이용 만족도, 도움 정도, 추천의향 모두 법률홈닥터를 이용한 경우 가장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용 만족도와 도움 정도를 보면 평균적으로 3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이었는데 반해, 법률홈닥터를 이용한 경우에는 만족도와 도움 정도 모두 4점 이상으로 ‘약간 만족하는(도움이 된)’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추천의향 여부 역시 차이를 보였는데, 법률홈닥터를 이용한 경우 추천 의향 있는 비율이 95% 이상으로 이용 비중이 컸던 타 기관과 비교해볼 때 약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표 4-98〉 법률구조 사업 주요 이용기관별 만족도

만족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체 이용기관
N	154	87	50	1,048
평균점수(점)	3.49	4.16	3.76	3.70

주: 1) 이용기관은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2) ‘매우 불만족한다’ 1점, ‘약간 불만족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만족한다’ 4점, ‘매우 만족한다’ 5점으로 하여 평균 점수 계산

3) 전체 이용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외에도 마을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기타 기관 등을 모두 포함함.

14) 최근 이용한 사례로 한정된 것은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식 문항의 경우 앞선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 문항에서 가장 최근에 이용한 사례(1순위 사례)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구조 사업 이용 분야에서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에만 응답한 경우로 한정하여 이용기관별 인식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이용분야에서 1순위와 2순위에 모두 응답을 한 경우 1순위 분야에 대해 이용하였던 기관을 정확하게 매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4-99〉 법률구조 사업 주요 이용기관별 도움 정도

도움 정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체 이용기관
N	152	87	50	1,040
평균점수(점)	3.70	4.20	3.76	3.82

주: 1) 이용기관은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2)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점, '도움이 되지 않았다' 2점, '보통이다' 3점, '도움이 되었다' 4점, '매우 도움이 되었다' 5점으로 하여 평균 점수 계산
 3) 전체 이용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외에도 마을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기타 기관 등을 모두 포함함.

〈표 4-100〉 법률구조 사업 주요 이용기관별 추천 의향

추천 의향 여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체 이용기관
추천 의향 있다	N	130	83	42	920
	%	84.97	95.40	84.00	88.12
추천 의향 없다	N	23	4	8	124
	%	15.03	4.60	16.00	11.88
합계	N	153	87	50	1,044
	%	100.00	100.00	100.00	100.00

주: 1) 이용기관은 최근 경험 순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카운트 함.
 2) 전체 이용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외에도 마을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기타 기관 등을 모두 포함함.

제5절 법률복지 욕구

1. 선호하는 법률구조의 형태

가. 법률구조 사업 제공 변호사의 적정 규모

설문응답자에게 각 지역에 배치되었으면 하는 적절한 공익변호사의 수에 대해서 물었다. 이것은 각자가 판단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의 적절한 필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질문과 함께 설문응답자들이 어떠한 형태의 법률구조 사업을 요구하는 지를 분석하면, 원하는 법률구조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적절한 배치 규모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1인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고, 시·군·구별로 2인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2.9%로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 3인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1.2%였으며, 시·군·구별로 1인이 배치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은 17.0%를 차지했다. 시·군·구 단위별로 보면 2인 배치가 가장 선호가 높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101〉 지역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지역의 적정 공익변호사 수	N	%
① 읍/면/동별 1인 배치	376	37.79
② 시/군/구별 3인 배치	211	21.21
③ 시/군/구별 2인 배치	228	22.91
④ 시/군/구별 1인 배치	169	16.98
⑤ 2~3개 시군구에 1인 배치	11	1.11
합계	995	100.00

현재 대표적인 법률구조 사업의 일환인 마을변호사 제도는 1개 동을 1인의 변호사 이상이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2~3개 시군구에 1인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마을변호사 제도가 주로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홈닥터가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표 4-102〉에서 보듯이 설문응답자들은 대면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작

은 단위의 지역단위별로 변호사가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원하는 상담형태와는 무관하게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배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02〉 원하는 상담형태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지역의 적정 공익변호사 수		전화상담으로 충분	대면 상담이 필요함	중복 응답	소계
① 읍/면/동별 1인 배치	N	52	324	0	376
	%	36.11	38.21	0.00	37.79
② 시/군/구별 3인 배치	N	30	181	0	211
	%	20.83	21.34	0.00	21.21
③ 시/군/구별 2인 배치	N	31	195	2	228
	%	21.53	23	66.67	22.91
④ 시/군/구별 1인 배치	N	26	142	1	169
	%	18.06	16.75	33.33	16.98
⑤ 2~3개 시군구에 1인 배치	N	5	6	0	11
	%	3.47	0.71	0.00	1.11
합계	N	144	848	3	995
	%	100.00	100.00	100.00	100.00

설문응답자들이 판단한 적절한 규모의 법률구조 서비스에 대한 판단은 과거의 법률 서비스 이용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과거에 법률서비스의 필요를 가졌었으나 이용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읍·면·동별 1인 배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대로 법률서비스 욕구가 있었으며,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평균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읍·면·동별 1인 배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군·구별 2인 배치의 선호도가 평균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03〉 과거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지역의 적정 공익변호사 수		있었으며 이용했음	있었으나 이용하지 못함	없음	소계
① 읍/면/동별 1인 배치	N	164	113	91	368
	%	33.68	44.66	38.24	37.63
② 시/군/구별 3인 배치	N	95	53	60	208
	%	19.51	20.95	25.21	21.27
③ 시/군/구별 2인 배치	N	127	47	51	225
	%	26.08	18.58	21.43	23.01
④ 시/군/구별 1인 배치	N	94	40	32	166
	%	19.30	15.81	13.45	16.97
⑤ 2~3개 시군구에 1인 배치	N	7	0	4	11
	%	1.44	0.00	1.68	1.12
합계	N	487	253	238	978
	%	100.00	100.00	100.00	100.0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법률구조를 실시하는 변호사의 읍·면·동 단위 배치에 대한 선호가 조금 낮아진다. 법률구조 사업의 이용 경험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인된다. 〈표 4-104〉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구조 사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따라서 답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법률구조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읍·면·동별 1인 배치에 대한 선호가 명확했지만, 들어보았던 사람들은 시·군·구별 2인 배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 비교에서도 확인된다. 즉,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읍·면·동별 1인 배치를 가장 선호했고, 그 다음으로 시·군·구별 2인 배치를 선호하였다.

일반적으로 복지 제도의 기능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서비스 공급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들은 적절한 규모의 서비스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법률구조 사업의 적절한 변호사 배치에 대한 응답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단을 해볼 수 있다.

〈표 4-104〉 과거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지역의 적정 공익변호사 수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법률구조 사업 이용 경험		
		들어봄	못 들어봄	소계	있음	없음	소계
① 읍/면/동별 1인 배치	N	253	120	373	102	146	248
	%	34.71	45.98	37.68	29.06	39.25	34.30
② 시/군/구별 3인 배치	N	153	58	211	65	88	153
	%	20.99	22.22	21.31	18.52	23.66	21.16
③ 시/군/구별 2인 배치	N	181	46	227	100	80	180
	%	24.83	17.62	22.93	28.49	21.51	24.90
④ 시/군/구별 1인 배치	N	134	34	168	79	55	134
	%	18.38	13.03	16.97	22.51	14.78	18.53
⑤ 2~3개 시군구에 1인 배치	N	8	3	11	5	3	8
	%	1.10	1.15	1.11	1.42	0.81	1.11
합계	N	729	261	990	351	372	723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법률구조 서비스의 이용 경험에 따라 적정 수준의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면, 법률상담터 배치 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표 4-105〉는 설문 응답자들을 법률상담터 배치 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응답 경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이 경우에도 미세하게나마 앞서와 마찬가지로 판단이 나타난다. 즉, 시·군·구별 2인 배치 또는 시·군·구별 1인 배치에 대한 선호가 약간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터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 지역의 법률상담터의 법률적 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배치·미배치의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표 4-105〉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지역의 적정 공익변호사 수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	법률홈닥터 미배치 지역	소계
① 읍/면/동별 1인 배치	N	181	195	376
	%	36.71	38.84	37.79
② 시/군/구별 3인 배치	N	99	112	211
	%	20.08	22.31	21.21
③ 시/군/구별 2인 배치	N	118	110	228
	%	23.94	21.91	22.91
④ 시/군/구별 1인 배치	N	91	78	169
	%	18.46	15.54	16.98
⑤ 2~3개 시군구에 1인 배치	N	4	7	11
	%	0.81	1.39	1.11
합계	N	493	502	995
	%	100.00	100.00	100.00

〈표 4-106〉, 〈표 4-107〉과 〈표 4-108〉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급지위, 소득수준에 따라서 법률복지의 배치 요구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느 경우든 응답자들이 읍·면·동별 1인 배치를 가장 선호한다는 사실은 명확하지만, 수급지위가 비수급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읍·면·동별 1인 배치에 대한 선호는 적어지고, 시·군·구별 3인 배치, 또는 시·군·구별 2인 배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 반면에 시·군·구별 1인 배치에 대한 선호는 집단 차이와 유의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표 4-106〉 수급지위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지역의 적정 공익변호사 수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소계
① 읍/면/동별 1인 배치	N	198	78	100	376
	%	40.82	37.68	33.33	37.90
② 시/군/구별 3인 배치	N	87	41	82	210
	%	17.94	19.81	27.33	21.17
③ 시/군/구별 2인 배치	N	106	54	67	227
	%	21.86	26.09	22.33	22.88
④ 시/군/구별 1인 배치	N	90	32	46	168
	%	18.56	15.46	15.33	16.94
⑤ 2~3개 시군구에 1인 배치	N	4	2	5	11
	%	0.82	0.97	1.67	1.11
합계	N	485	207	300	992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07〉 소득수준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지역의 적정 공익변호사 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소계
① 읍/면/동별 1인 배치	N	86	124	76	75	361
	%	41.95	36.90	39.58	34.72	38.04
② 시/군/구별 3인 배치	N	38	72	29	59	198
	%	18.54	21.43	15.10	27.31	20.86
③ 시/군/구별 2인 배치	N	47	74	48	51	220
	%	22.93	22.02	25.00	23.61	23.18
④ 시/군/구별 1인 배치	N	31	63	36	30	160
	%	15.12	18.75	18.75	13.89	16.86
⑤ 2~3개 시군구에 1인 배치	N	3	3	3	1	10
	%	1.46	0.89	1.56	0.46	1.05
합계	N	205	336	192	216	949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08〉 주관적 소득계층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지역의 적정 공익변호사 수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이상	소계
① 읍/면/동별 1인 배치	N	287	55	31	373
	%	39.70	30.56	35.23	37.64
② 시/군/구별 3인 배치	N	135	54	22	211
	%	18.67	30.00	25.00	21.29
③ 시/군/구별 2인 배치	N	164	42	22	228
	%	22.68	23.33	25.00	23.01
④ 시/군/구별 1인 배치	N	129	28	11	168
	%	17.84	15.56	12.50	16.95
⑤ 2~3개 시군구에 1인 배치	N	8	1	2	11
	%	1.11	0.56	2.27	1.11
합계	N	723	180	88	991
	%	100.00	100.00	100.00	100.00

마지막으로 〈표 4-109〉는 평소 법률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에 따른 지역의 적정한 법률구조 제공 변호사 규모에 대한 답변이다. 법률서비스 이용이 쉽다고 생각할수록 시·군·구별 3인 배치, 또는 2인 배치에 대한 선호가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09〉 법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 인식별 적정 법률구조 사업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지역의 적정 공익변호사 수		“평소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쉬운 편이다	소계
① 읍/면/동별 1인 배치	N	178	182	15	375
	%	44.84	33.09	33.33	37.80
② 시/군/구별 3인 배치	N	58	137	14	209
	%	14.61	24.91	31.11	21.07
③ 시/군/구별 2인 배치	N	78	139	11	228
	%	19.65	25.27	24.44	22.98
④ 시/군/구별 1인 배치	N	77	87	5	169
	%	19.4	15.82	11.11	17.04
⑤ 2~3개 시군구에 1인 배치	N	6	5	0	11
	%	1.51	0.91	0.00	1.11
합계	N	397	550	45	992
	%				

주: '쉬운 편이다'와 '매우 쉬운 편이다'를 한 그룹으로 묶어서 제시하였음.

나. 법률구조 사업의 적절한 상담 형태

〈표 4-110〉은 법률구조 사업을 제공하는 변호사와 어떠한 형태의 상담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 응답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85.2%의 응답자들은 대면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표 4-110〉 필요한 상담의 형태

필요한 상담의 형태	N	%
전화 상담으로도 충분	145	14.51
대면 상담이 필요함	851	85.19
중복응답	3	0.30
합계	999	100.00

주: 면접원에 의한 대면면접조사가 아니어서 중복응답이 발생하였음. 이하 분석에서는 중복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설문응답자들이 판단한 필요한 법률구조 상담의 형태는 과거 법률서비스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과거 법률서비스의 필요를 가졌었고 이용했던 사람은 대면 상담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경향이 확연히 높아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용하지 못했거나, 이용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화 상담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의 경향이 평균보다 높았다. 법률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으나, 전화 상담으로는 충분한 상담을 받지 못했으리라 유추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표 4-111〉 과거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필요한 상담의 형태		있었으며 이용했음	있었으나 이용하지 못함	없음	소계
전화 상담으로도 충분	N	50	49	42	141
	%	10.22	19.37	17.65	14.39
대면 상담이 필요함	N	439	204	196	839
	%	89.78	80.63	82.35	85.6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전화 상담에 대한 선호가 평균보다 낮고, 대면 상담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즉, 법률구조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대면 상담의 필요에 대해 86.8%가 동의하였지만, 들어보지 못한 경우는 82.1%만이 동의하였다. 비슷한 경향은 법률구조 사업의 이용 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확인된다.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9.7%가 대면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은 84.1%만이 대면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112〉 과거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필요한 상담의 형태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법률구조 사업 이용 경험		
		들어봄	못 들어봄	소계	있음	없음	소계
전화 상담으로도 충분	N	96	47	143	36	59	95
	%	13.17	17.94	14.43	10.26	15.86	13.14
대면 상담이 필요함	N	633	215	848	315	313	628
	%	86.83	82.06	85.57	89.74	84.14	86.86
합계	N	729	262	991	351	372	723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법률구조 서비스의 이용 경험에 따라 필요한 상담 형태에 대한 답이 달라질 수 있다. 〈표 4-113〉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즉, 대면 상담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법률상담자가 배치된 지역의 설문 응답자들이 오히려 전화 상담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률상담자 배치 지역 유무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은 앞서도 언급하였다. 즉, 법률상담자 배치 지역 거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률상담자의 법률구조 사업을 경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표 4-113〉 법률홍닥터 배치 지역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필요한 상담의 형태		법률홍닥터 배치 지역	법률홍닥터 미배치 지역	소계
전화 상담으로도 충분	N	81	64	145
	%	16.43	12.72	14.56
대면 상담이 필요함	N	412	439	851
	%	83.57	87.28	85.44
합계	N	493	503	996
	%	100.00	100.00	100.00

전화 상담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은 수급지위, 소득수준에 따라서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전화 상담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평균 대비 높은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표 4-114〉에서 볼 수 있듯이 비수급층은 전화 상담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16.3%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8%에 불과하였다.

〈표 4-114〉 수급지위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필요한 상담의 형태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소계
전화 상담으로도 충분	N	67	29	49	145
	%	13.76	14.08	16.33	14.60
대면 상담이 필요함	N	420	177	251	848
	%	86.24	85.92	83.67	85.40
합계	N	487	206	300	993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15〉 소득수준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필요한 상담의 형태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소계
전화 상담으로도 충분	N	28	48	28	35	139
	%	13.66	14.33	14.58	16.13	14.65
대면 상담이 필요함	N	177	287	164	182	810
	%	86.34	85.67	85.42	83.87	85.35
합계	N	205	335	192	217	949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16〉 주관적 소득계층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필요한 상담의 형태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이상	소계
전화 상담으로도 충분	N	97	36	11	144
	%	13.40	20.00	12.50	14.52
대면 상담이 필요함	N	627	144	77	848
	%	86.60	80.00	87.50	85.48
합계	N	724	180	88	992
	%	100.00	100.00	100.00	100.00

마지막으로 〈표 4-117〉은 평소 법률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에 따른 필요한 상담의 형태를 묻고 있다. 확실한 것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쉬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화 상담으로도 충분하다는 경향이 평균보다 높았다(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평소에 법률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웠던 사람들, 앞서 언급지 위, 소득수준, 주관적 소득계층에서 보듯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면 상담에 대한 선호가 미세하게 높았다.

〈표 4-117〉 법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 인식별 필요한 상담의 형태에 대한 의견

필요한 상담의 형태		“평소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쉬운 편이다	소계
전화 상담으로도 충분	N	56	80	9	145
	%	14.07	14.55	20.00	14.60
대면 상담이 필요함	N	342	470	36	848
	%	85.93	85.45	80.00	85.40
합계	N	398	550	45	993
	%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쉬운 편이다’와 ‘매우 쉬운 편이다’를 한 그룹으로 묶어서 제시하였음.

다. 법률구조 사업 담당자의 적절한 배치 장소

설문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법률구조 변호사의 배치 위치는 시·군·구청이었다. 앞서의 응답을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취약계층은 필요할 때 상담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전화 상담보다는 대면 상담을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상담의 장소로 가장 선호하는 장소가 시·군·구청으로 67.6%가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이 지역사회복지관 등 취약계층이 평소에 이용하였던 복지시설로 22.3%가 선택하였다.

〈표 4-118〉 법률구조 변호사의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적정한 배치 장소	N	%
각급 법원·검찰청 근처	88	8.81
시·군·구청 내	675	67.57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내	223	22.32
중복응답	13	1.30
합계	999	100.00

주: 이하 분석에서는 중복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설문응답자들이 판단한 필요한 법률구조 상담의 형태는 과거 법률서비스 이용 경험 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과거 법률서비스의 필요를 가졌었고 이용했던 사람은 시·군·구청 내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에 이러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지역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선택한 것이 25.5%로 평균인 22.4%보다 높았다.

〈표 4-119〉 과거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적정한 배치 장소		있었으며 이용했음	있었으나 이용하지 못함	없음	소계
각급 법원·검찰청 근처	N	29	24	35	88
	%	5.98	9.56	14.89	9.06
시·군·구청 내	N	344	182	140	666
	%	70.93	72.51	59.57	68.59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내	N	112	45	60	217
	%	23.09	17.93	25.53	22.35
합계	N	485	251	235	971
	%	100.00	100.00	100.00	100.00

법률구조 사업의 대략적인 형태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배치 선호 지역에서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내에 대한 선호가 73.4%로 평균보다 높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65.2%로 평균보다 낮았다. 어느 경우든 사회복지시설 내 배치에 대한 선호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4-120〉 과거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적정한 배치 장소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법률구조 사업 이용 경험		
		들어봄	못 들어봄	소계	있음	없음	소계
각급 법원·검찰청 근처	N	66	22	88	19	47	66
	%	9.13	8.53	8.97	5.49	12.67	9.21
시·군·구청 내	N	499	174	673	254	242	496
	%	69.02	67.44	68.60	73.41	65.23	69.18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내	N	158	62	220	73	82	155
	%	21.85	24.03	22.43	21.10	22.10	21.62
합계	N	723	258	981	346	371	717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법률상담터가 배치된 지역의 사람들은 시·군·구청 내 배치되는 것에 대한 선호가 평균보다 조금 높았다. 그러나 앞서 법률상담터 배치 지역별 차이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법률상담터가 지역 내에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인지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는 법률상담터가 반드시 시·군·구청 내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할 내용이다.

〈표 4-121〉 법률상담터 배치 지역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적정한 배치 장소		법률상담터 배치 지역	법률상담터 미배치 지역	소계
각급 법원·검찰청 근처	N	46	42	88
	%	9.47	8.40	8.92
시·군·구청 내	N	341	334	675
	%	70.16	66.80	68.46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내	N	99	124	223
	%	20.37	24.80	22.62
합계	N	486	500	986
	%	100.00	100.00	100.00

법률구조 사업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배치 지역에 대해서 각급 법원·검찰청 근처를 선택하는 경우는 비수급,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 주관적 계층 지위가 중간층 이상인 집단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어느 경우든 시·군·구청 내 배치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지만, 그 외의 집단 간 차이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표 4-122〉 수급지위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적정한 배치 장소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소계
각급 법원·검찰청 근처	N	39	13	36	88
	%	8.11	6.34	12.12	8.95
시·군·구청 내	N	333	144	195	672
	%	69.23	70.24	65.66	68.36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내	N	109	48	66	223
	%	22.66	23.41	22.22	22.69
합계	N	481	205	297	983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23〉 소득수준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적정한 배치 장소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소계
각급 법원·검찰청 근처	N	10	26	17	32	85
	%	5.03	7.76	8.90	14.88	9.04
시·군·구청 내	N	133	239	137	134	643
	%	66.83	71.34	71.73	62.33	68.4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내	N	56	70	37	49	212
	%	28.14	20.9	19.37	22.79	22.55
합계	N	199	335	191	215	940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24〉 주관적 소득계층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적정한 배치 장소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이상	소계
각급 법원·검찰청 근처	N	54	22	12	88
	%	7.54	12.36	13.64	8.96
시·군·구청 내	N	490	124	59	673
	%	68.44	69.66	67.05	68.53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내	N	172	32	17	221
	%	24.02	17.98	19.32	22.51
합계	N	716	178	88	982
	%	100.00	100.00	100.00	100.00

마지막으로 〈표 4-125〉는 평소 법률서비스 이용을 매우 어려워하거나, 어려운 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시·군·구청 내 배치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내 배치를 선호하였는데,

그 원인을 알기는 어렵다.

〈표 4-125〉 법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 인식별 적정한 배치 장소에 대한 의견

적정한 배치 장소		“평소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쉬운 편이다	소계
각급 법원·검찰청 근처	N	41	46	1	88
	%	10.49	8.41	2.22	8.95
시·군·구청 내	N	257	390	28	675
	%	65.73	71.30	62.22	68.67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내	N	93	111	16	220
	%	23.79	20.29	35.56	22.38
합계	N	391	547	45	983
	%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쉬운 편이다’와 ‘매우 쉬운 편이다’를 한 그룹으로 묶어서 제시하였음.

2. 법률구조 사업의 조건에 대한 탐색

앞서 법률구조 사업을 제공하는 형태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제부터는 잠재적인 법률복지 이용자들이 법률구조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해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이동시간과 관련한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접근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설문에서는 이를 각각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이동 시간을 범주별로 물었고, 다음으로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부담 가능한 금액을 묻는 방식을 취하였다.

가.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시간

설문 응답자들은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 30분 이내를 39.7%가, 30분에서 1시간 이내를 46.8%가 답하였다. 앞서의 문항과 연결하여 해석해보면, 전체적으로 86.6%의 응답자들이 1시간 이내에 법률구조 사업 담당자를 시·군·구청 내에서 대면 접촉하기를 원하고 있다. 1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람은 모두 13.3% 정도였다.

〈표 4-126〉 법률구조 사업 이용을 위해 이동할 수 있는 시간

활용할 수 있는 이동 시간	N	%
30분 이내	396	39.72
30분에서 1시간 이내	467	46.84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내	102	10.23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내	15	1.50
2시간 이상	16	1.60
중복 응답	1	0.10
합계	997	100.00

주: 이하 분석에서는 중복응답을 제외하고, 1시간 30분 이상 응답의 경우 1시간 30분 이내 응답자 그룹에 포함하여 분석함.

설문 응답자들이 과거 법률서비스를 이용했는지의 여부 등은 지리적 접근성의 내용을 판단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법률구조 사업을 들어보았는지, 그리고 이용해보았는지의 경험에 따라서도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27〉 과거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활용할 수 있는 이동 시간		있었으며 이용했음	있었으나 이용하지 못함	없음	소계
30분 이내	N	189	103	100	392
	%	38.81	40.55	42.02	40.04
30분에서 1시간 이내	N	239	110	109	458
	%	49.08	43.31	45.80	46.78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내	N	59	41	29	129
	%	12.11	16.14	12.18	13.18
합계	N	487	254	238	979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28〉 과거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활용할 수 있는 이동 시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법률구조 사업 이용 경험		
		들어봄	못 들어봄	소계	있음	없음	소계
30분 이내	N	289	103	392	147	141	288
	%	39.64	39.31	39.56	41.88	37.90	39.83
30분에서 1시간 이내	N	348	119	467	163	181	344
	%	47.74	45.42	47.12	46.44	48.66	47.58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내	N	92	40	132	41	50	91
	%	12.62	15.27	13.32	11.68	13.44	12.59
합계	N	729	262	991	351	372	723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29〉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활용할 수 있는 이동 시간		법률홈닥터 배치 지역	법률홈닥터 미배치 지역	소계
30분 이내	N	188	208	396
	%	38.21	41.27	39.76
30분에서 1시간 이내	N	232	235	467
	%	47.15	46.63	46.89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내	N	72	61	133
	%	14.63	12.10	13.35
합계	N	492	504	996
	%	100.00	100.00	100.00

법률서비스 및 법률구조 사업의 이용 경험은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시간에 유의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러나 응답자의 수급지위, 소득수준과 같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정도가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에는 30분 이내의 여유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이며, 차상위복지제도 수급자 및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렇게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경향은 소득수준별로, 주관적 계층 인식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취약계층은 법률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없는 상태이며,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130〉 수급지위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활용할 수 있는 이동 시간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소계
30분 이내	N	227	77	92	396
	%	46.80	37.20	30.56	39.88
30분에서 1시간 이내	N	202	101	161	464
	%	41.65	48.79	53.49	46.73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내	N	56	29	48	133
	%	11.55	14.01	15.95	13.39
합계	N	485	207	301	993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31〉 소득수준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활용할 수 있는 이동 시간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소계
30분 이내	N	90	141	73	77	381
	%	44.12	41.84	38.22	35.48	40.15
30분에서 1시간 이내	N	88	151	94	112	445
	%	43.14	44.81	49.21	51.61	46.89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내	N	26	45	24	28	123
	%	12.75	13.35	12.57	12.90	12.96
합계	N	204	337	191	217	949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32〉 주관적 소득계층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활용할 수 있는 이동 시간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이상	소계
30분 이내	N	308	58	27	393
	%	42.54	32.22	30.68	39.62
30분에서 1시간 이내	N	325	98	43	466
	%	44.89	54.44	48.86	46.98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내	N	91	24	18	133
	%	12.57	13.33	20.45	13.41
합계	N	724	180	88	992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33〉 법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 인식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활용할 수 있는 이동 시간		“평소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쉬운 편이다	소계
각급 법원·검찰청 근처	N	170	207	18	395
	%	42.82	37.57	40.00	39.78
시·군·구청 내	N	174	268	23	465
	%	43.83	48.64	51.11	46.83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내	N	53	76	4	133
	%	13.35	13.79	8.89	13.39
합계	N	397	551	45	993
	%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쉬운 편이다’와 ‘매우 쉬운 편이다’를 한 그룹으로 묶어서 제시하였음.

나.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부담 가능한 금액

설문 응답자들은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20만원 이내를 85.0%가 선택하였고, 나머지 약 10.1%가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 취약계층으로 이뤄진 설문 응답자 그룹에서 부담 가능한 최대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표 4-134〉 법률구조 사업 이용을 위해 부담 가능한 금액

부담 가능한 금액	N	%
20만원 미만	843	84.98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	100	10.08
30만원에서 50만원 이내	37	3.73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	11	1.11
중복 응답	1	0.10
합계	992	100.00

주: 이하 분석에서는 중복응답을 제외하고, 50만원 이상 응답의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 이내 응답자 그룹에 포함하여 분석함.

설문 응답자들이 과거 법률서비스를 이용했는지의 여부 등은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 법률구조 사업을 들어보거나, 이용했던 사람은 20만원 미만을 선택하는 경향이 평균보다 높았다.

〈표 4-135〉 과거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별 부담 가능한 금액

부담 가능한 금액		있었으며 이용했음	있었으나 이용하지 못함	없음	소계
20만원 미만	N	417	213	199	829
	%	86.16	84.19	83.61	85.03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	N	44	27	28	99
	%	9.09	10.67	11.76	10.15
30만원에서 50만원 이내	N	23	13	11	47
	%	4.75	5.14	4.62	4.82
합계	N	484	253	238	975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36〉 과거 법률구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별 부담 가능한 금액

부담 가능한 금액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법률구조 사업 이용 경험		
		들어봄	못 들어봄	소계	있음	없음	소계
20만원 미만	N	621	218	839	312	303	615
	%	85.66	83.21	85.01	89.40	81.89	85.54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	N	74	26	100	27	47	74
	%	10.21	9.92	10.13	7.74	12.7	10.29
30만원에서 50만원 이내	N	30	18	48	10	20	30
	%	4.14	6.87	4.86	2.87	5.41	4.17
합계	N	725	262	987	349	370	719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서비스 및 법률구조 사업의 이용 경험은 부담 가능한 금액에 유의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접근성의 차원에서 응답자의 수급지위, 소득수준과 같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있다. 비수급층도 20만원 미만을 답하는 경향이 매우 높지만, 이 집단에서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를 선택하는 경향은 13.7%가 있었다. 그렇지만 수급자, 차상위 수급자의 경우에는 20만원 미만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았다.

〈표 4-137〉 수급지위별 부담 가능한 금액

부담 가능한 금액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소계
20만원 미만	N	431	177	234	842
	%	89.42	85.92	78.00	85.22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	N	35	22	41	98
	%	7.26	10.68	13.67	9.92
30만원에서 50만원 이내	N	16	7	25	48
	%	3.32	3.40	8.33	4.86
합계	N	482	206	300	988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38〉 소득수준별 부담 가능한 금액

부담 가능한 금액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51만원 이상	소계
20만원 미만	N	183	292	157	170	802
	%	90.15	87.16	83.07	78.34	84.96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	N	14	32	22	27	95
	%	6.90	9.55	11.64	12.44	10.06
30만원에서 50만원 이내	N	6	11	10	20	47
	%	2.96	3.28	5.29	9.22	4.98
합계	N	203	335	189	217	944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39〉 주관적 소득계층별 부담 가능한 금액

부담 가능한 금액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이상	소계
20만원 미만	N	631	141	68	840
	%	87.76	78.33	77.27	85.11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	N	61	27	11	99
	%	8.48	15.00	12.50	10.03
30만원에서 50만원 이내	N	27	12	9	48
	%	3.76	6.67	10.23	4.86
합계	N	719	180	88	987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40〉 법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 인식별 부담 가능한 금액

부담 가능한 금액		“평소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쉬운 편이다	소계
20만원 미만	N	353	447	40	840
	%	89.59	81.42	88.89	85.02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	N	30	66	4	100
	%	7.61	12.02	8.89	10.12
30만원에서 50만원 이내	N	11	36	1	48
	%	2.79	6.56	2.22	4.86
합계	N	394	549	45	988
	%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쉬운 편이다’와 ‘매우 쉬운 편이다’를 한 그룹으로 묶어서 제시하였음.

제6절 법의식 일반

5절에서 선호하는 법률구조의 형태, 그리고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시간 및 부담 수준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제부터는 취약계층의 일반적인 법의식 수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표 4-1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취약계층일수록 법률관련 정보를 주위 사람에게 듣는 경향이 높았다. 이 때 주위 사람이 단순한 지인인지, 아니면 평소에 관계를 맺던 사회복지 공무원, 시·군·구청의 담당 공무원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응답자 중에서 구청, 주민센터 담당자를 별도로 적시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였다.

법률 관련 정보 습득 경로를 보면 어느 계층이든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2순위 정보 습득 매체에서는 집단별 차이도 확인된다. 소득하위층 및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로 구청, 주민센터, 주위 사람을 이용하여 정보를 많이 얻는 편이고, 중간층 집단에서는 인터넷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41〉 주관적 소득계층별 생활법률 관련 정보 습득 경로

경로 구분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소계
언론매체	N	280	74	35	389
	%	38.67	41.11	40.23	39.25
인터넷	N	138	49	34	221
	%	19.06	27.22	39.08	22.30
주위 사람	N	221	38	15	274
	%	30.52	21.11	17.24	27.65
책이나 잡지	N	1	3	1	5
	%	0.14	1.67	1.15	0.50
정부홍보물	N	19	3	1	23
	%	2.62	1.67	1.15	2.32
학교	N	2	0	0	2
	%	0.28	0.00	0.00	0.20
기타	N	6	1	0	7
	%	0.83	0.56	0.00	0.71
구청, 주민센터 등	N	25	5	0	30
	%	3.45	2.78	0.00	3.03
중복응답	N	32	7	1	40
	%	4.42	3.89	1.15	4.04
합계	N	724	180	87	991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42〉 수급지위별 생활법률 관련 정보 습득 경로

경로 구분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소계
언론매체	N	176	96	117	389
	%	36.29	46.38	39.00	39.21
인터넷	N	77	45	100	222
	%	15.88	21.74	33.33	22.38
주위 사람	N	168	46	61	275
	%	34.64	22.22	20.33	27.72
책이나 잡지	N	1	1	3	5
	%	0.21	0.48	1.00	0.50
정부홍보물	N	15	3	5	23
	%	3.09	1.45	1.67	2.32
학교	N	1	1	0	2
	%	0.21	0.48	0.00	0.20
기타	N	6	0	1	7
	%	1.24	0.00	0.33	0.71
구청, 주민센터 등	N	21	3	6	30
	%	4.33	1.45	2.00	3.02
중복응답	N	20	12	7	39

평소에 뉴스에 보도되거나 신문에 실리는 판결에 대한 기사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하위층일수록 법률정보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위층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13.2%였지만, 중간층 이상 집단에서 이 비율은 4.6%로 낮아진다. 그리고 하위층에서는 관심이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42.4%이지만, 중간층에서는 이 비율은 73.6%에 이른다.

〈표 4-143〉 주관적 소득계층별 판결 뉴스에 대한 관심도

관심 정도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소계
전혀 관심이 없다	N	96	12	4	112
	%	13.22	6.67	4.60	11.28
관심이 없는 편이다	N	262	53	13	328
	%	36.09	29.44	14.94	33.03
관심이 있는 편이다	N	308	98	64	470
	%	42.42	54.44	73.56	47.33
매우 관심이 있다	N	60	17	6	83
	%	8.26	9.44	6.90	8.36
합계	N	726	180	87	993
	%	100.00	100.00	100.00	100.00

이러한 경향은 수급지위별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초보장 수급자들은 판결 뉴스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비율이 16.2%에 이르지만, 비수급층에서는 7.3%에 그친다. 평소 법률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경우 본인 또는 지인에게 법률 관련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하게 담당자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반적인 수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

〈표 4-144〉 수급지위별 판결 뉴스에 대한 관심도

관심 정도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소계
전혀 관심이 없다	N	79	13	22	114
	%	16.22	6.28	7.33	11.47
관심이 없는 편이다	N	176	76	75	327
	%	36.14	36.71	25.00	32.90
관심이 있는 편이다	N	193	100	177	470
	%	39.63	48.31	59.00	47.28
매우 관심이 있다	N	39	18	26	83
	%	8.01	8.7	8.67	8.35
합계	N	487	207	300	994
	%	100.00	100.00	100.00	100.00

비슷한 관점에서 평소 각종 계약과정에서 규정(약관)에 대한 관심도를 물었다. 하위층에서는 ‘전혀 읽지 않는다’는 비율이 17.5%로 평균보다 높았다. 대층이라도 읽는다는 응답은 중간층에서 59.8%로 가장 높았다. 이는 본인의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하위층에서 계약관련 등 내용에 큰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과 관련한 교육 등에서는 법률적 문제가 다뤄지는 문서의 중요함에 대한 교육 등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교육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4-145〉 주관적 소득계층별 계약 시 관련 내용의 확인 정도

계약 규정을 읽는 정도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소계
전혀 읽지 않는다	N	127	13	8	148
	%	17.49	7.22	9.20	14.90
별로 읽지 않는다	N	212	52	18	282
	%	29.20	28.89	20.69	28.40
대충 읽는다	N	281	86	52	419
	%	38.71	47.78	59.77	42.20
매우 자세히 읽는다	N	106	29	9	144
	%	14.60	16.11	10.34	14.50
합계	N	726	180	87	993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46〉 수급지위별 계약 시 관련 내용의 확인 정도

계약 규정을 읽는 정도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소계
전혀 읽지 않는다	N	104	18	27	149
	%	21.36	8.70	9.00	14.99
별로 읽지 않는다	N	142	59	81	282
	%	29.16	28.50	27.00	28.37
대충 읽는다	N	164	101	155	420
	%	33.68	48.79	51.67	42.25
매우 자세히 읽는다	N	77	29	37	143
	%	15.81	14.01	12.33	14.39
합계	N	487	207	300	994
	%	100.00	100.00	100.00	100.00

마지막으로 평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의 편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표 4-1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위층은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46.5%로 높았고, 중간층 이상 집단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25.3%로 낮았다. 주관적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우리 국민들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95% 이상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매우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반대로 중하층과 중간층은 어려운 편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표 4-147〉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의 편의 정도

이용의 편의 정도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소계
매우 어렵다	N	337	37	22	396
	%	46.48	20.56	25.29	39.92
어려운 편이다	N	355	133	63	551
	%	48.97	73.89	72.41	55.54
쉬운 편이다	N	31	10	2	43
	%	4.28	5.56	2.30	4.33
매우 쉽다	N	2	0	0	2
	%	0.28	0.00	0.00	0.20
합계	N	725	180	87	992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48〉 수급지위별 법률서비스 이용의 편의 정도

이용의 편의 정도		기초보장 수급	차상위	비수급	소계
매우 어렵다	N	241	76	80	397
	%	49.49	36.71	26.76	39.98
어려운 편이다	N	221	123	208	552
	%	45.38	59.42	69.57	55.59
쉬운 편이다	N	23	8	11	42
	%	4.72	3.86	3.68	4.23
매우 쉽다	N	2	0	0	2
	%	0.41	0.00	0.00	0.20
합계	N	487	207	299	993
	%	100.00	100.00	100.00	100.00

제7절 국민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에는 법률서비스 필요와 이용 경험에 대한 조사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표 4-149〉는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표 4-149〉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 용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만 75세 이하 남녀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31일 이전 출생) ~ 만 75세 이하(1941년 5월 31일 이후 출생) 남녀 * 외국인 제외(귀화한 경우는 국적을 소지한 경우에 조사)
표본단위	가구 내 개인 1인(바른 생일자)
표본크기	전국 500개 집계구(지역) 내 3,839가구(3,839명)
표본추출	2015년 집계구 활용 조사 표본 집계구 500개에서 8가구를 계통 추출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우리 국민들은 지난 5년간 법적 문제의 발생으로 법률 상담, 법률서류 작성 등의 법률서비스의 필요경험을 6.9%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법률서비스 이용 필요는 하위층에서 9.5%로 높았고, 다시 낮아지다가 중상층에서는 7.9%로 높아진다. 즉, 소득 하위층과 중상층(및 상층)에서 법률서비스의 필요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150〉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필요 경험

경험 유무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소계
있었다	N	52	95	98	19	1	265
	%	9.53	6.76	5.95	7.91	27.75	6.90
없었다	N	492	1,304	1,556	218	4	3,574
	%	90.47	93.24	94.05	92.09	72.25	93.10
합계	N	544	1,399	1,654	237	5	3,839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이런 필요가 있을 때 실제로 유·무상의 법률 상담, 법률서류 작성 등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76.3%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법률서비스의 이용 필요가 있을 때, 실제로 이를 이용한 사람은 소득계층에 따라 미세하게 차이가 있었다. 소득하위층은 74.2%가 이용했고, 중간층은 78.7%, 중상층은 80.4%가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였다.

〈표 4-151〉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경험

이용 유무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소계
있었다	N	34	63	69	13	0	179
	%	74.22	75.38	78.65	80.44	0.00	76.32
없었다	N	12	21	19	3	1	56
	%	25.78	24.62	21.35	19.56	100.00	23.68
합계	N	46	84	87	17	1	235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렵다는 응답이 18.3%,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46.0%로 나타나 64.3%의 국민이 법률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95% 이상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과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도 법률서비스 이용 편의에 대해서 소득하위층의 경우에는 어렵다는 응답이 80.9%, 중하층의 경우에는 67.6%에 이르렀다.

〈표 4-152〉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편의

편의 정도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소계
매우 어렵다	N	190	253	234	24	2	703
	%	34.89	18.07	14.13	10.03	47.22	18.30
어려운 편이다	N	250	693	719	105	1	1,767
	%	46.01	49.53	43.46	44.15	12.46	46.03
별로 어렵지 않다	N	83	372	575	82	1	1,113
	%	15.29	26.58	34.76	34.78	12.58	28.99
전혀 어렵지 않다	N	21	81	127	26	1	256
	%	3.81	5.82	7.65	11.04	27.75	6.68
합계	N	544	1,399	1,654	237	5	3,839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앞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64.3%의 국민들에게 그 사유를 물었다. 그에 따르면 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47%로 나타났고, 비용문제가 37.3%로 나타났다. 내용이 어려워서라는 이유는 소득계층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비용문제를 지적하는 경향은 하위층에서 높은 비율로 제시되었다.

〈표 4-153〉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어려움 사유-1순위

사유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소계
내용이 어려워서	N	198	472	460	58	2	1,190
	%	43.82	48.68	47.07	44.32	79.12	47.00
비용이 높아서	N	205	367	339	35	0	945
	%	45.40	37.83	34.68	26.59	0.00	37.34
법조인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N	24	77	110	26	1	237
	%	5.33	7.9	11.23	19.93	20.88	9.37
주변에서 관련 단체 혹은 기관을 찾기 힘들어서	N	25	52	69	9	0	154
	%	5.44	5.33	7.02	7.17	0.00	6.09

〈표 4-154〉 주관적 소득계층별 법률서비스 이용 어려움 사유-2순위

사유		하위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소계
내용이 어려워서	N	136	210	204	18	1	568
	%	30.03	21.69	21.15	14.04	20.88	22.59
비용이 높아서	N	180	403	392	50	2	1,028
	%	39.93	41.68	40.77	38.83	79.12	40.92
법조인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N	83	230	210	29	0	553
	%	18.45	23.76	21.86	23.06	0.00	22.01
주변에서 관련 단체 혹은 기관을 찾기 힘들어서	N	52	119	142	19	0	331
	%	11.44	12.28	14.71	15.17	0.00	13.19
기타	N	1	6	15	11	0	33
	%	0.16	0.61	1.51	8.89	0.00	1.29
합계	N	452	968	963	128	3	2,513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제8절 조사결과 요약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법률서비스의 욕구 및 이용 경험 분야이다. 첫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차상위 수급자 집단이 법률문제가 있었을 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법률복지 서비스가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제공되다 보니 취약계층의 이용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차상위층의 경우에는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소득이 매우 적거나 또는 높은 집단에서는 법률문제의 필요가 낮았고,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인 경우에서 법률문제를 경험했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응답하였다. 취약계층의 경우 경험할 수 있는 법률문제의 범위 내에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보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은 비용 부담이었다. 이에 따라 법률복지 제공에서는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법률서비스의 이용 분야는 부동산, 채권/채무, 매매/증여, 손해배상, 계약/해제, 경매,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분쟁이 포함되는 민사 일반 분야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사 관련(혼인/이혼, 호적/친자, 상속, 가정폭력, 기타) 분

야가 많았다. 소득이 높은 경우 민사 일반의 비중이 높고,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가사 관련 문제의 비중이 높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약계층이 경험하는 법률적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내용적으로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법률서비스의 이용 종류를 보면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의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였다. 이것은 취약계층이 경험하고 있는 법률 관련 문제의 특징을 반영하는 결과인데, 법률적인 다툼을 벌여야 할 사안보다는 관련된 내용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문제, 법절차 상의 문제 등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 분야이다. 첫째, 앞서 법률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정보의 부족이라고 하였으나, 법률구조 사업에 대해서는 다수(73.7%)가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기초보장 수급자의 경우에는 들어본 경험이 더 많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법률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는 대체로 시·군·구청 등 공무원을 통해서 이뤄지고, 다음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 취약계층이 평소에 법률적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지인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법률구조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기초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층 경우에는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가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이었다. 넷째,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비용을 부담하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68만원 가량을 부담하였으며, 그 중 부대비용은 약 20만원 수준이었다.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함에도 부대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각종 서류 발급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8점을 보였으며, 법률구조 사업이 본인의 문제 해결에 도움되었다는 정도도 5점 만점에 평균 3.82점을 보였고, 향후 타인에게 법률구조 사업을 추천하겠다는 의향은 88%가 나타내었다.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복지 욕구에 대한 부분이다. 첫째, 법률구조 사업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적정한 배치 규모에 대해서는 읍·면·동별 1인 배치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구조 사업을 경험해본 사람의 경우에는 시·군·구별 2인 배치에 대한 선호가 높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법률구조 사업의 필요한 상담의 형태는 대면 상담의 필요가 매우 높았다. 특히, 과거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의 경우에는 대면 상담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셋째, 법률구조 사업 담당자의 적절한 배치 장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 내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넷째,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설문 응답자가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이내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부담 가능한 금액은 20만원 미만 수준이었다. 종합해보면 법률구조 사업은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평소에 관련 업무를 보는 기관인 시·군·구청 근처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한 형태로 이뤄지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의식 일반 분야이다. 첫째, 취약계층일수록 법률관련 정보를 주위 사람에게 듣는 경향이 높았다. 언론매체가 주요한 법률정보 취득 매체이며, 2순위 정보 습득 매체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소득하위층 및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로 구청, 주민센터, 주위 사람을 이용하여 정보를 많이 얻는 편이고, 중간층 집단에서는 인터넷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하위층일수록 법률정보에 대한 관심도, 계약서 작성 시 관련 내용의 숙독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층에게 보다 많은 법률교육이, 특히 법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법률서비스 이용에서 어려움은 95% 이상 국민이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하위층은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46.5%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해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시)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국민들은 지난 5년간 법적 문제의 발생으로 법률 상담, 법률서류 작성 등의 법률서비스의 필요경험을 6.9%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법률서비스 이용 필요는 하위층에서 9.5%로 높았고, 다시 낮아지다가 중상층에서는 7.9%로 높아지고 있었다. 둘째, 법률서비스의 이용 필요가 있을 때, 실제로 이를 이용한 사람은 소득 계층에 따라 미세하게 차이가 있었다. 소득 하위층은 74.2%가 이용했고, 중간층은 78.7%, 중상층은 80.4%가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셋째,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은 64.3%의 국민들에게 나타났고, 그 중 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47%로 나타났고, 비용문제가 37.3%로 나타났다. 내용이 어려워서는 이유는 소득계층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비용 문제를 지적하는 경향은 하위층에서 높은 비율로 제시되었다. 즉, 여전히 법률서비스의 접근에 장애로 작동하는 것은 비용 문제라 할 수 있었다.

제 5 장

주요국 법률구조의 이해와 최근 동향

제1절 법률구조의 발전

제2절 주요국 법률구조 제도

제3절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현황 비교 및 최근 개혁 동향

제4절 법률구조의 발전방향

5

주요국 법률구조의 이해와 최근 동향 <<

제1절 법률구조의 발전

1. 법률구조의 확립

법률구조는 영미법에서는 물론 대륙법에서도, 빈곤층에 대한 ‘공정한 심리(fair hearing)’를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에 대한 권리(right to counsel)’로 인식되어 발전하였다(Johnson, 2014, pp.881-884; Rhode, 2005, pp.3-5; Rhode, 2004, pp.47-48). 영미법에서 법률구조가 법률에 규정된 것은 1424년 스코틀랜드와 1495년 잉글랜드에서 ‘빈곤층을 대리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appointment of "learned counsel" to represent paupers)’에 대하여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Rhode, 2005, p.3).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오스트리아가 1781년, 스페인이 1835년에 법제화하기 시작하였고, 독일이 1877년 법률구조를 규정함으로써 법률구조가 ‘변호사의 권리’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민사 사건에 있어 변호사에 대한 권리가 법전에 규정되도록 하였다. 한편 스위스 대법원은 1937년에 민사 사건에 있어 변호사에 대한 권리가 헌법상의 권리임을 선언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에는 유럽인권조약이 체결되었고, 동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가 1979년 Airey v. Ireland 및 2005년 Steel and Morris v. The United Kingdom 등의 판결에서 민사 사건의 변호사에 대한 권리는 실천적(practical)이고 실효적인(effective) 권리로서 국가는 법률구조 제도를 정립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법률구조가 국가적 의무로 확인됨에 따라 위 조약을 체결한 45개 국가들과 4억 명이 넘는 유럽 시민들이 법률구조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Johnson, 2014, pp.885-887).

2. 변호사의 대리 원조 제도의 실효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현대 법률구조 제도 확립

무엇보다도 15세기 이후 변호사에 대한 권리는 법체계와 관계 없이 어느 국가에서든 인정되었던 것으로, 20세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변호사에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빈곤층을 대리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법률구조에 의하여 정부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변호사 및 변호사 단체는 변호사 자치와 특권을 누리는 대가로 당연히 무료로 법률구조에 나아갔다(Johnson, 2014, pp.883-884).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중간 계층(가구의 80 %)을 포함한 광범위한 법률구조 지원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영국은 1949년 법률구조 및 법률 자문법을 제정하여 현대적 법률구조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 국가를 추진하고자 하였던 유럽 각국과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법률구조 제도는 1970년대까지 유럽 각국과 미국으로 확대되었으며, 국가의 지원 예산과 지원 건수 및 지원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3. ‘사법への 접근’ 운동의 발전과 추진력의 한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요구에 따라 영국이 현대적 법률구조 제도를 정립하게 되자,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세계적인 ‘사법への 접근(access to justice)’ 운동이 발생하였다. 이 운동은 1970년대 이후 법률구조에 대한 대규모 자금 투입과 법률구조법의 성립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고, 법률구조는 서구 사회에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법への 접근 운동을 세계적으로 이끈 지도자들은 비록 사람들이 보편적인 권리 주체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실효화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없다면 사람들의 권리는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동등한 접근(equal access to justice)’이라는 이념과 이를 실효화하는 법률구조 제도는 법치주의의 보편적 작동기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스스로 사법への 접근을 세계로 확산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Paterson, Regan, Goriely & Fleming, 1999, pp.1-2).

4. 법률구조의 한계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유럽 각국과 미국이 1980년대 이후의 장기적인 경제적 불황에 직면하면서 복지 국가의 건설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법률구조에 대한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추구가 요구되었다. 특히 현대 법률구조 제도의 발상국이며 법률구조 예산을 세계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던 영국에서 그 경향은 현저하였다. 그 결과 영국 대처 정권(1979~1990년)과 신자유주의자들은 법률구조의 축소와 합리화 및 효율성 강화를 요구하였다.

5. 경제위기와 법률구조의 방향

가. 법률구조의 새로운 방향

사법예의 접근 운동이 장기적인 경제적 불황으로 그 추진력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법률구조에 대한 새로운 정책 이념의 정립을 위하여 1992년에 ILAG(International Legal Aid Group)가 설립되었다. ILAG의 핵심 구성원들은 법률구조의 지향점과 사법예의 접근 운동의 미래 과제를 정리하여 1999년 법률구조의 변혁(The Transformation of Legal Aid)을 발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의 법률구조 제도를 비교법적, 역사적,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사법예의 접근 운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를 고찰하였다. 또한 영국의 법률구조 제도에 대해서도 이를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인 소송대리 지원제도의 틀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제도로서 사회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이념적인 제도로서 운영된바, 법정 중심주의에 지배되어 실제 사회에서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구제로 연결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Paterson, Regan, Goriely & Fleming, 1999, pp.3-4).

2000년 이후 법률구조 제도는 ① 보편적 법률구조의 이념을 수정하여 법률구조의 대상을 선별하며 그 대상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한 수요조사의 확립, ② 법률구조에 대한 재정 또는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복지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구현하여야 하는바 법률구조에 대한 품질 확보(특히 IT 기술과 법률구조의 결합으로 질적 향상 제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요요구 조사 내용은 법률구조에 대한 재정 또는 자금의 투입이

한정적인 시대에 그 투입의 정당성을 정부와 정책 담당자에게 마련해주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법률구조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되었다.

나. 경제위기와 법률구조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이후 장기 불황 하에서 서구 사회는 실업자의 증가, 모기지 연체에 따른 주택 압류 등으로 민사 법률구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그리스 경제 위기의 파급에 따라 영국을(The Scottish legal Aid Board, 2012, p.7).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국가 재정의 긴축에 의하여 법률구조 예산이 삭감되는 사태에 직면하였고 법률구조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었다. 이에 반해 일본(일본 사법지원센터, 2011, p.15)과 중국(Jie & Hui, 2011)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민사 법률구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브라질에서는 기존 변호사에 의한 프로보노 활동에서 나아가 헌법에 법률구조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이를 실행할 공익변호사사무소를 설립하여 예산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Alves, 2010).

제2절 주요국 법률구조 제도

1. 미국의 법률구조¹⁵⁾

가. 개요

미국의 법률구조 제도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형사 법률구조와 민사 법률구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법률구조를 실제로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즉, 형사 법률구조는 공공변호인(Public Defender), 국선변호인(Assigned

15) 이하의 미국의 법률구조에 대한 내용은 이상윤, 최환용, 이세정(2008, pp.17-50)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Counsel), 계약변호인(Contract Defender) 등에 의한 법률구조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민사 법률구조는 법률구조공사(Legal Service Corporation)에 의한 법률구조, 법률구조공사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나 각 주의 법률구조 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법률구조, 법률구조공사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면서 법률구조 제도에 포섭되지 않는 개별적 법률구조로 나눌 수 있다.

나. 형사 법률구조

1) 법적 기초

형사 법률구조의 경우는 수정헌법 제6조¹⁶⁾와 제14조¹⁷⁾를 형사 법률구조 제도의 헌법적 기초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32년에 연방대법원이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변호인의 원조를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승인하게 되었다. 그 후 대상범위가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 나아가 1963년 판결에 의하여 중범죄(felony)로 기소된 모든 피고인에까지 확대되었다. 1972년에는 마침내 구금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에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고, 1984년에 연방대법원은 대상 범위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법률구조의 질까지 고려하여 가난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무료변호의 질은 헌법이 보장하는 수준에 달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2) 공적 변호의 유형

형사 법률구조와 관련해서는 공적 비용으로 가난한 시민을 위한 변호를 제공하는 공적 변호제도(Indigent Defense System)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16) 수정헌법 제6조는 “모든 형사 소추에서 피고인은……자신의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권리를 향유하여야 한다(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ce)”고 규정하고 있다.

17) 수정헌법 제14조는 “……어떠한 주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 내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부정해서는 아니된다(……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고 규정하고 있다.

주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에 고용된 변호사가 형사 국선변호 사건만 전담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공공변호인(Public Defender)제도,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형사 피고인을 위해서 법원이 개업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를 담당하게 하는 국선변호인(Assigned Counsel)제도, 개업변호사나 로펌 또는 민간자선기금·공공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비영리법률구조기관이 주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선변호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계약변호인(Contract Defender)제도를 들 수 있다(Bernhard, 2002, p.309).

가) 공공변호인

공공변호인제도¹⁸⁾는 주나 카운티 등 지방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에 고용된 변호사가 사적 비영리조직을 통하여 또는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주법원에서의 공적 변호는 주로 이 공공변호인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공공변호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변론행위를 하도록 지명되거나 선출된 공직자 또는 준공직자의 지위를 갖고, 자신의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법률적 지식과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국선변호 업무에 전념하여야 하고, 개인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 제도는 후술하는 국선변호인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출발한 것이다. 즉, 법원이 선임하는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적 변호 사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없고, 형사 피고인을 위한 증거 수

18) 공공변호인제도는 주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에 **고용된** 변호사가 전담 변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국 연방 법률에서는 공공변호인의 선임과 사무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개별 주법에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변호인 사무실은 대표공공변호인 아래에 전담변호사, 전문조사관, 변호사 보조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규모가 큰 사무실의 경우에는 사회사업가도 고용되어 있다. 연방공공변호인의 경우 특별히 면직되지 않는 한 4년의 임기로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다수결에 의하여 선임되며, 재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변호사가 행한 변론의 질과 사건 당사자에 대한 전념 정도 및 사무실 운영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의 문제는 당해 지역의 지방검사가 받는 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방항소법원이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변호인제도는 사전 변호인선임의 어려움, 주나 카운티가 공적 계약에 의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계약변호제도가 변호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개업변호사가 계약변호인으로서 공적 변호를 담당하는 것에는 이해의 충돌 등 다양한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부터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집 및 검찰의 증거를 탄핵하기 위한 전문조사관(investigator)을 고용하지 못하는 점에서 효과적인 변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적절한 상설 국선변호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로부터 일정한 변호인으로 하여금 형사 변론을 전문적으로 맡겨 고정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더욱 충실한 국선변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안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여러 주로 확산되었다.

나)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제도는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형사 피고인을 위해서 법원이 미리 작성된 공적 변호인 명부에 있는 개업변호사를 필요할 때마다 변호인으로 지정하여 변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Court-appointed Counsel”이라고도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사제도와 유사하다. 국선변호는 변호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법원은 변호인의 동의 없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변호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나 공공변호인 사무실과 이익의 충돌이 있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공공변호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되며, 이로부터 주로 시골지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국선변호사의 자격으로서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평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체로 윤번제의 형태로 운영된다. 이러한 국선변호인제도는 전술한 공공변호인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다) 계약변호인

계약변호인제도는 개업변호사, 변호사협회, 법무법인 등이 특정 범위의 형사 국선변호 사건을 일정한 비용으로 담당하기로 주나 카운티 등의 지방정부와 계약함으로써 국선변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비영리법률구조기관이 국선변호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이를 민간변호인제도(Private Defender System)라고 하는데 뉴욕법률구조협회(The Legal Aid Society of New York City)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는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변호사의 3/4 정도가 개업변호사라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점에서 많은 지방정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계

약변호인제도도 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한 보충적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계약변호인제도의 운용방식은 계약방식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로 계약하는 형태와 특정한 양의 사건을 사건마다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고 변호하기로 계약하는 형태가 있다. 이 계약변호인제도는 시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국선변호인에 비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인 주나 카운티 등의 지방정부가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질 저하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3) 공적 변호의 내용

형사 법률구조가 제공되는 사건의 범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인신구속이 가능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변호는 최대한 빨리 피고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며,¹⁹⁾ 형사 법률구조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형사 소송의 모든 절차에서 변호를 제공하여야 하고,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일방이 종료를 희망하거나 이익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s)이 있는 경우에 종료된다. 구조 대상자의 선정은 자력 유무에 의하여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125%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서 다른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구조 대상자의 결정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공공변호인이나 법원 또는 법률구조 관련 행정기관 등이 한다. 이러한 변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적 변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형사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빈곤자(indigent)이어야 하고, 실제로 구금형(actual imprisonment)에 처해지는 경우라야 하며,²⁰⁾ 형사 피고가 공적 변호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19) 예컨대 조지아(Georgia) 주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체포되거나 구금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선정되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즉시 피고인을 접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 구금형이라면 기간은 관계가 없으며, 집행유예도 포함된다. 따라서 법정형에 구금형이 있더라도 실제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에는 공적 변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민사 법률구조

1) 법적 기초

형사 법률구조와는 달리 민사 법률구조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일부 사건에서 민사 소송의 당사자인 가난한 항소인을 위하여 무료로 변호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경우는 있지만, 연방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가난한 당사자의 자유가 위태롭게 된 상황이 아닌 한,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민사 소송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승인하고 있지 않다(Johnson, 2000, p.87).²¹⁾ 그 후에도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에 관하여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는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역대 미국 정부 및 의회에서 법률구조공사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사 법률구조의 경우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인정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빈곤한 민사 사건의 당사자에게 법률구조를 요구할 권리가 헌법적으로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법률구조에 투입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형사 법률구조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민사 법률구조의 경우에는 형사 법률구조와는 달리 국가주도보다는 민간적 성격을 가지는 단체나 로스쿨과 연계된 실험적 법률구조 단체가 자생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민사 법률구조는 형사 법률구조와 같이 체계적인 정부주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위한 기구나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고, 이들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인 구조의 실행은 각 지역에 뿌리를 둔 구조 단체(Legal Service Program)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며, 그 재정은 연방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기부금 등으로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각 지역의 구조 제공단체에 연방정부의 예산을 지급하고, 법률구조를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연방정부 하에

21)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민사 소송에서 가난한 당사자가 패소하는 경우에 초래되는 경제적 자유의 손실 및 생계유지수단의 손실, 나아가 그로 인한 가족의 분열 등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자유의 상실에 상당하므로 수정헌법 제14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보장 및 평등 보호는 민사 법률구조에도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설치되어 있는 법률구조공사인 것이다.

2) 법률구조공사에 의한 지원

가) 법률구조공사의 성격 및 조직

법률구조공사는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민사 법률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법에 의한 정의의 실현 및 법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비영리법인이다.

법률구조공사는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며, 이사회에서 법률구조공사의 사장과 임원이 임명된다. 이사회는 상원의 권고와 동의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11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중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6인 이상의 이사가 동일한 정당 소속이 아니어야 된다. 이사회의 이사는 구조 대상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변호사회,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변호사 및 일반대중을 일반적으로 대표하도록 임명된다(Legal Services Corporation Act, 42 U.S.C. 2996, 2996c (a)). 각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대통령이 최초로 임명한 5인에 대하여는 2년으로 한다(Legal Services Corporation Act, 42 U.S.C. 2006c). 대통령은 의결권이 있는 이사 중에서 3년의 임기로 공사 사장을 임명하며, 그 이후에는 이사회에서 매년 공사 사장을 선출한다(Legal Services Corporation Act, 42 U.S.C. 2006c (d)). 이사회의 기능은 일반정책의 수립, 법률구조공사와 각 지방프로그램의 활동기준이 되는 규칙의 제정 및 법률구조공사의 제반 사무의 운영을 맡는다.

나)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선정

법률구조공사는 직접적으로 법률구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의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지방의 독립된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996년부터 경제적·효율적인 법률구조를 위하여 보조금에 대한 경쟁시스템을 채택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자들을 평가한 후 선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법률구조 프로그램은 경쟁적 입찰절차에 의하여 연방기금을 할당받게 되어 있다. 이것은 효율적·경

제적으로 양질의 법률구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단체에 경쟁적 입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보조금을 할당받는 각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배분과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에 대한 지방의 통제를 유지하며, 법률구조 제공자의 변경에 따른 법률구조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²²⁾

여하튼 법률구조공사에 의하여 주별로 할당되는 기금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법률구조 프로그램이 선정·운영되고 있다. 이 지역 법률구조 프로그램은 비영리 법인이며, 법률구조공사의 기금 이외에 비법률구조공사기금도 받아서 집행한다. 지역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이사회는 법률구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결정하게 되며, 지역프로그램의 이사 60%는 지역변호사이어야 하고, 이사의 3분의 1은 법률구조의 적격을 가진 시민이어야 한다.

다) 법률구조의 제공형태

기본적으로는 전담변호사(Staff Attorney)가 법률 상담, 서류 작성, 소송상 대리 등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월급제로 고용되는 전담변호사는 법률구조 활동에 전념하여야 하고,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취급된다. 동시에 변호사 외에도 유사법조인으로서 paralegal이 지역 법률구조 프로그램에 고용되어 전담변호사의 법률구조를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전담변호사는 법률구조에 전념할 의무를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업무의 질이 높고, 빈곤계층의 이익을 위한 법에 의한 사회개혁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며, 빈곤법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근린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법률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담변호사가 기본적으로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하지만, 개업변호사도 법률구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1980년대부터 폭넓은 법률구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변호사참여(Private Attorneys Involvement, PAI) 운동이

22) 만약 지역의 법률구조 프로그램에서 법률구조가 부당하게 거부되거나 제공된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자고충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위원회의 구성은 지역프로그램의 이사회와 동일하다.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인근 사무소에의 비상근참여, 무료법률서비스번호인명부(pro bono panel)에의 등록, 법률서비스공사와 법무법인과의 계약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업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의 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규정 등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법률구조 단체에 소속된 전담변호사가 법률구조를 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개업변호사보다 저렴한 비용 내에서 각 법률구조 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 일본의 법률구조²³⁾

가. 법률구조의 의의

일본에서 법률부조 제도²⁴⁾는 변화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제도의 실현을 구현하는 것을 그 목적의 제도이다. 즉 국민이 가지는 권리의 평등한 실현을 이루기 위해 법률전문가에 의한 원조나 재판비용을 원조하는 제도로써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일본 헌법에서는 법 앞의 평등(헌법 제14조)과 재판을 받을 권리(제32조)를 규정하여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 주장을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에 따른 그 규범의 실질화를 이룩하고자 한다.

나. 법률구조의 발전과정

제2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일본 헌법이 제정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 앞에서의 평등, 생존권의 보장,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규정되어, 이러한 헌법 규정의 실질화를 위하여 법률구조 제도의 창설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어,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법무성과 협의를 거쳐 1950년 민사 법률구조 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본으로 1952년 1월 재단법인 법률구조협회를 설립하였다(정재길, 1991, pp.4-5).

23) 이하의 일본의 법률구조에 대한 내용은 이상운, 최환용, 이세정(2008, pp.81-102)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24) 일본에서는 법률구조를 법률부조라고 칭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그런데 법무부 산하의 법률부조제도연구회가 1998년 3월 민사 법률부조 사업의 개혁을 제안하는 법률부조를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에 유래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화를 정립하고,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의 구축, 정비를 국가의 책무로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위 보고서를 기본으로 하여 민사 법률구조 사업의 근거법인 민사법률구조법이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어 법무대신은 재단법인 법률부조협회를 민사 법률구조 사업을 행하는 공익법인으로 지정하여, 협회는 종래의 사업을 충실히 하면서 새로운 원조를 실시하는 등 일본에 있어서의 법률구조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민사법률부조법 제정 후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법률부조협회는 법률상의 부조를 요하는 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나아가 사법정의를 확보할 목적으로서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주관하여 그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²⁵⁾

한편, 1999년 7월 내각 아래에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2001년 6월의 의견서에서 일본의 법률부조 제도가 헌법 제32조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관점으로 부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민사법률부조법의 성립을 참고로 앞으로 사법제도개혁을 실현시기 위해서는 재정 면에서 충분한 수단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하여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에 대해서 특단의 배려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02년 3월 각의(閣議)에서 결정된 사법제도개혁추진계획에서는 2001년 6월 발표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를 받아 민사 법률부조 제도에 대해서는 대상 사건/대상자의 범위, 이용자 부담의 방식, 운영주체의 방식 등에 대해서 다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하여 한층 충실하게 하여 본부 설치 기한(2005년 11월)까지 일정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시하여 국가에 법률부조의 확충을 요구하게 된다. 이것은 국가에 대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법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민사 법률부조 사업에 대한 보정예산을 계상함과 동시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에 대하여 법률구조 제도는 사법제도개혁의 명확한 원칙과 자기책임원칙

25) 법률부조협회는 본부를 東京都千代田区霞ヶ関1-1-3弁護士会館에 있었고, 지부는 각 변호사회에 대응하여 전국 각지에 설치되었다. 단, 동경에는 3개의 변호사회가 있지만, 법률부조협회의 지부는 동경도지부 1개를 둔다.

에 따른 사후체크, 구제형 사회로의 전환에 불가결한 것으로 국가전략 가운데 위치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긴급의 과제임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관점에서부터 사법의 기본적 제도를 정비할 대개혁으로서의 법률부조 제도는 사법제도개혁의 과정에서 선행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 제도의 성공 여부는 사법제도개혁 전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평가하게 이른다. 이에 2005년 6월 종합법률지원법이 제정되게 된다.

다. 종합법률지원의 실시

종합법률지원의 실시 및 체제의 정비는 민사·형사를 묻지 않고, 전국에서 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법률지원의 실시 및 체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법에 의한 분쟁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해결을 위해 재판 및 그 외의 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정보 및 자료뿐만 아니라, 변호사, 변호사법인 및 인접법률전문직자의 업무 및 변호사회, 일본변호사연합회 및 인접 법률전문직단체의 활동에 관한 정보 및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여 정보 제공의 충실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종합법률지원의 실시 및 체제의 정비 및 발전을 위해서는 자력이 없는 자에게도 민사 재판 등의 절차(법원에 의한 민사 사건, 가사 사건 또는 행정 사건에 관한 절차를 말한다)의 이용을 보다 쉽게 하는 민사 법률부조 사업의 공공성이 높은 것임에 비추어, 그 적절한 정비 및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법률지원의 실시 및 정비를 함에 있어, 신속하고 확실한 국선변호인(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 혹은 재판장 또는 판사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부치는 변호인을 말한다) 및 국선부첨인(소년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소가 소년에게 부치는 변호사인 附添人을 말한다)의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태세의 확보가 도모되어야 한다. 종합법률지원의 실시 및 정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등(범죄에 의한 손해를 입은 자 또는 그자가 사망한 경우 혹은 그 심신의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배우자, 직계의 친족 혹은 형제자매를 말한다)이 형사 절차에 적절하게 관여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받은 손해 또는 고통의 회복 또는 경감을 하기 위한 제도와 그 외의 피해자 등의 원조에 관한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여야 한다. 종합법률지원의 실시 및 체제의 정비에 있어서는 국가, 지방

공공단체, 변호사회, 일본변호사연합회 및 인접법률전문직자 단체, 변호사, 변호사법인 및 인접법률전문직자, 재판외분쟁해결절차(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재판외 분쟁 해결 절차를 말한다)를 하는 자, 피해자 등의 원조를 하는 단체와 그 외의 자 및 고령자 또는 장애자의 원조를 행하는 단체와 그 외의 관계하는 자의 사이에 있어서 제휴의 확보 및 강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국가는 기본이념에 따라 종합법률지원의 실시 및 체제의 정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검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부과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보장 의무를 부과한다.

라. 일본 사법지원센터 설립

1) 센터의 설립

사법제도 이용의 장애를 제거하고, 법률전문직에 의한 서비스를 보다 가까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종합법률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서 종합법률지원법(2005년 법률 제74호)이 제정되었다. 종합법률지원법의 중심축으로 되는 운영주체로서, 독립행정법인의 규정에 따라 최고재판소가 설립·운영에 관여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여 법률상 기관인 일본사법지원센터가 설치되게 되었다.

일본사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이라는 이념 아래에서, 국민을 위한 법적 지원을 하는 중심적인 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지원센터는 사법제도 개혁의 중심축 중 하나의 성과이다.²⁶⁾

지원센터는 이 종합법률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지원센터의 형태는 독립행정법인에 준한 법인이다. 그 특징은 법무성 등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최고재판소를 포함하여 사법기관, 일본변호사연합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 등의 법률전문직의 직능단체도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이

26) 일본사법지원센터의 애칭은 法テラス(법테라스)이다. 이는 법으로 사회를 밝게 비추고자 한다(照らす)의 의미와 별이 잘 드는 좋은 테라스(terrace)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안심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자 한다는 생각에서 명명되었다.

다. 주요한 사무소는 동경에 두며,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한다. 지원센터는 전국의 도도부현청(都道府県庁) 소재지의 50개소에 사무소를 설치하며, 대도시나 변호사나 사법서사가 없는 지역에도 필요에 따라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2) 센터의 업무

법적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법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을 한다. 또한 일반국민이 전국 각지의 사무소에서 지원센터의 전문직원에게 법적 분쟁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담을 받은 직원은 상담 내용에 따라 가장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변호사회나 사법서사회, 지방공공단체 등)를 소개한다. 인터넷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전화에 의한 상담도 접수한다.

자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 변호사나 사법서사에 지불하는 재판대리 비용이나 서류 작성 비용의 대출도 행한다.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변호에서부터 기소 후의 피고인 변호까지 형사 절차의 각 단계를 통하여 일관된 형사 변호체제를 정비한다.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임과 해임만을 하며, 그 외의 모든 사무는 지원센터가 하도록 되었다. 법원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선임도 지원센터의 지명에 근거하여 지명하여야 하며, 법원의 독단이나 자의에 의한 선임을 할 수 없다. 국선대리인은 지원센터와 국선변호의 계약을 맺고 있는 변호사 중에서 지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선변호인의 범위는 종래의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외,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및 나아가 소년국선첨부인에게도 할 수 있도록 되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변호사나 전문기관의 소개나 정보 제공을 한다. 사법과소지역(법률전문직이 적은 지역)에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법의 지역적 편재에 대처하기 위해서 과소지역에 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과소지의 주민이 사법의 접근 및 이용 가능성을 도와주며, 이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유상으로 사건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마. 법률구조 활성화 방안

일본에서는 1952년 법률부조협회가 창설된 이래 5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적 공법인으로 재탄생하여 새롭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법률부조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률부조, 즉 사법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력요건의 완화 혹은 자력요건을 철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력요건의 완화, 철폐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불러 일으키고 경제정책, 정치의 관점에서 엄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누구라도 언제나 법률구조를 받아야 하지만, 법률구조를 받기 어렵고 불충분한 지역에 지원센터의 거점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 접근 가능한 거점의 증대를 위해서는 법률부조 상담의 상담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다각적으로 설치가 고려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업무에 관해서는 콜센터의 충실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역 주변에 지원센터의 안내책자를 필요적으로 설치하여 누구라도 정보로서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적 제약의 극복 및 확대를 위하여 휴일과 초과 근무자를 위한 인원배정과 보수 지급을 위한 재정 확보가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행정절차원조는 고령자 등의 요건 하에서 일본변호사연합회로부터의 수탁업무로서 하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에의 적절한 대응을 고려하면, 장래적으로 이들 수탁사업을 지원센터의 본래 사업으로 하여야 할 법률부조 업무의 내용적 확대가 요망된다. 피의자 국선변호의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우선 국선대리인을 위한 변호사의 항시 대기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3. 영국의 법률구조

가. 발전과정

법률구조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국의 법률구조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국가적 제도로써 운영되어 왔다. 영국에서는 보통법(Common Law) 상 빈곤자를 구조하는 소송 절차가 있었지만, 19세기 말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에 따른 정세 변화로 빈곤자에 대한 구조절차가 제도화되기 시작하여 1930년 빈곤자변호법(Poor Person's Defence Act)이 제정되었으며, 1944년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률구조상담위원회(Committee on Legal Aid and Advice in England and Wales)가 설립되었다.

영국은 1949년 법률구조상담법(Legal Aid and Advice Act of 1949)을 제정하여,

법률구조의 수급대상자를 빈민이 아닌 피구조자라고 하여 빈곤자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법률구조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법률구조 제도를 마련하였다. 동법은 1961년과 1964년에 개정 되었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 이 법은 1974년 법률구조법(Legal Aid Act)으로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후 이 법은 1979년에 개정된 이후 1988년에 다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영국은 1980년대 이후 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법률구조의 축소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도를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1999년 정의에의 접근법(the Access to Justice Act 1999)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설립된 법률서비스협회(Legal Service Commission)를 통하여 법률구조 개선을 모색하였다.

이후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따른 세계 경제위기로 법률구조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축소나 삭감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영국의 법률구조는 2012년 법률구조와 범죄인양형처벌법(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 LASPO)에 의하여 완전히 변화하게 된다. 즉, 2013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이 법은 민사 법률구조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 법률구조법(Legal Aid Act)에 따른 법률구조

1) 운영주체

법률구조법에 따라 법률구조위원회(Legal Aid Board)가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법률구조위원회는 전담변호사를 두고 있지는 않고, 개업하고 있는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개업변호사는 법률구조 사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법률구조위원회에서 법률구조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로 지정되면 비로소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보수는 사후에 법률구조위원회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체계이다.

보수는 일반 사건에 비해 특별히 저렴한 것은 아니며, 법률구조 변호사로 지정되더라도 법률구조 사건만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민경식, 1997, p.39).

2) 법률구조 서비스 내용

가) 민사 법률구조

민사 법률구조는 법원의 민사 소송 절차 및 일부의 행정재판 절차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이다. 신청절차는 민사 법률구조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가 사무변호사를 통해 지역의 법률구조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급자격요건은 일정한 경제력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법률구조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경제력 요건에 대한 심사는 별도로 사회보험청의 법률구조평가국(Legal Aid Assessment Office)이 담당하였다. 허가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민사 법률구조의 효력이 발생하며, 인정된 업무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금(legal aid fund)에서 비용이 지급된다. 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승소함으로써 패소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받거나 재산을 회복 내지 보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구조를 받은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민경식, 1997, pp.39-40).

나) 형사 법률구조

법원의 형사 소송 절차에서 대리인의 변호사 보수를 지원하는 구조서비스이다. 민사 법률구조와는 달리 법원이 법률구조를 허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신청서는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당해 법원은 신청인이 경제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외에 법률구조를 부여하는 것이 사법의 이익에 비추어 요구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순회형사법원(Crown Court)에서는 약20% 정도가 법률구조를 받는다. 구조 결정이 있게 되면 신청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담당변호사는 사건 종결 후 법률구조위원회로부터 변호사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한편 형사 법률구조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아무리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민사 법률구조의 경우와는 달리 기여금을 납부하면 형사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민경식, 1997, pp.39-40).

다) 법률 상담

신청서가 녹색이기 때문에 ‘그린 폼 계획’(the green form plan)이라고 알려져 있다. 법률구조 가운데 하나로 신청인은 영국법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2시간 동안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혼 사건이나 판결에 의한 부부별거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3시간 동안 상담할 수 있다. 물론 상담 자체가 무료는 아니다. 다만 변호사의 상담비를 법률구조위원회가 대신 지급한다(장운성, 1998, p.4).

라) 당직변호사제도(duty solicitor schemes)

당직변호사를 통한 법률구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직변호사위원회와 24개의 지역 위원회(Regional Committee) 300개의 지방위원회(Local Committee) 등 3단계의 위원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당직변호사제도에는 치안판사 당직변호사와 당직변호사 계획 등 두가지 제도가 있다. 치안판사 당직변호사제도는 1982년에 도입된 것으로 치안판사재판소에서 즉각적인 상담과 조언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직변호사계획으로서 1984년에 도입된 것으로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상담과 조언을 하여 주는 것이다(1984년의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매년 약 240,000명의 피의자가 당직변호사를 이용하고 있다(장운성, 1998, p.6).

마) 소송대리구조(Assistance by way of representation: ABWOR)

치안판사법원의 가사심판 절차, 정신보험 신청 절차, 교도소 감독자에 의한 징계 절차 등에서 사무변호사에 의한 대리를 대상으로 한다. 사건의 의뢰를 받은 사무변호사가 의뢰인의 경제력을 심사하고, 경제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구조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률구조 사무소는 대리구조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민경식, 1997, p.41).

3) 재정

법률구조기금은 신청인의 부담금(Contribution)과 상대방이 부담하는 소송비, 소송을 통하여 회복되거나 보존된 신청인의 재산에서 징수한 법정부과금(Statutory), 법률구조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급한 금액으로 조성된다. 1994년과 1995년에 대법원장이 16억 파운드를 지원하였고, 법률구조 신청인에 대한 법정부과금과 부담금이 약 3억 파운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조성된 법률구조기금은 법률구조위원회의 직원 인건비, 운영비뿐만 아니라 법률구조를 수행한 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데 쓰였다. 특이한 것은 법률구조 사건이라고 하여 일반 사건에 비하여 변호사 보수가 저렴한 편이 아니라는 점과 단순히 상담만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상담료가 법률구조위원회로부터 지급된다는 것이다(장운성, 1998, p.3).

다. 정의에의 접근법(Access to Justice Act 1999)에 따른 법률구조²⁷⁾

1) 개요

영국은 1980년 이후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법률구조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법률구조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법률구조 제공 변호사의 비용에 대하여 시간당 보수제를 채택한 것과 전국적 법률구조기금을 통하여 국가예산에서 법률구조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의회는 정의에로의 접근법을 제정하여 법률구조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률구조위원회는 법률서비스협회(Legal Service Commission: LSC)로 대체되었다. 아울러 민사 및 가사 사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공동체법률서비스(Community Legal Service: CLS)가 설립되었고, 형사 사건을 위하여 형사보호서비스(Criminal Defence Service)가 신설되었다. 아울러 이 법은 민사 법률구조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였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조건부 비용 합의가 대부분의 민사 사건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법률서비스협회는 2000년 4월 1일부터 법률

27)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호문혁, 조국(2006, pp.49-65)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구조위원회를 대체하였다.

2) 운영체제

1990년대 말에 비용이 많이 드는 법률구조 제도를 효율적인 제도로 개선하자는 반성적 고려와 동시에 미국에서 성공하였다고 평가되는 Public Defender 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처음으로 형사 법률구조 분야에 한하여 스태프변호사제도인 Public Defender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의에로의 접근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제도 전반을 법률서비스협회가 총괄하게 되었다. 다만 법원에서의 당직변호사제도는 법원이 관장한 이후 이 협회로 이관되었다. 법률서비스협회는 e-Business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용자와 구조 제공자에 대한 대응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는 자발적 법률구조 단체는 계속하여 원래 목적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발적 법률구조 단체에는 Law Center(잉글랜드와 웨일즈에 55개소)와 Citizens' Advice Service(전국 2,800개소)가 있다. Citizens' Advice Service는 기부금과 자원봉사에 의하여 법률구조를 제공하며 상담·조언, 법률정보 제공 및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22,000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 중 79%가 자원봉사자라고 한다.

법률서비스협회는 정의에로의 접근법에 따라 영국의 법률구조 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2004/05년 동 협회의 예산은 연간 20억 파운드에 달하였는데 이 예산으로 협회를 운영하면서 협회와 법률구조 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Law Center와 Citizens' Advice Service도 독립된 법률구조 단체인데 지역정부 등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아 자체 예산을 편성·관리하지만, 예산의 상당부분은 협회와의 계약에 따른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로 충당하고 있다.

3) 형사 법률구조

영국에서는 경찰서 또는 형사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은 재산이나 소득 정보와 상관없이 형사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영국에서는 재판준비 절차를 포함한

법원의 재판 절차 전체에서 형사 법률구조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피의자가 신문을 받는 경우에도 법적 자문과 대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법률서비스협회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형사 법률구조의 유일한 재정 관리기구로서, 변호인 보수 지불 등 비용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데, 형사 법률구조에만 2004/2005년에 11억 9,200만 파운드를 지출하였고 150만 건의 형사 법률구조를 제공하였다. 협회는 당직변호사의 재정을 담당하고, Public Defender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형사 법률구조의 제공 방식에는 JudiCare와 Public Defender의 두 가지가 있다. JudiCare는 형사 법률구조 제공의 주된 방식으로서 2005년을 기준으로 영국 전역에 2,643개의 법률사무소가 형사 법률구조 제공 계약 하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Public Defender 제도는 협회가 직접 변호사를 채용하여 Public Defender로서 형사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변호사들에 대하여 보수를 지불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고용 변호사를 통하여 보다 수준 높은 형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Public Defender 제도를 2001년에 시범실시하기 시작하였고 2004/05년도에는 4,5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였다고 한다. Public Defender 사무실은 하루 24시간, 1주 내내 이용이 가능한데, 주로 구금 상태의 사람에게 자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변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 민사 법률구조

민사 법률구조 사업은 민사 법률구조 제공자인 변호사와 법률회사, Law Center와 Citizens' Advice Service, Quality Mark를 받은 지역조직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된다. 2005년 3월을 기준으로 민사 법률구조 제공계약을 체결한 법률사무소와 비영리단체는 모두 4,430개인데 그 중 법률사무소는 3,989개소였고 비영리단체는 441개였다.

민사 법률구조의 수준은 Quality Mark제도와 The Auditing Process를 통하여 유지되고 있다, 즉 구조 제공자를 3개의 범주로 나누어 질적 수준이 낮은 구조 제공자(청구서의 20% 이상이 거절되는 경우)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되도록 하고 있다. 2005년도 경우 101개(법률회사 66개 포함)의 계약이

해지되었다.

민사 법률구조는 여러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다. 우선 1) 모든 법률문제에 관한 최초의 자문과 조력을 제공하는 Legal Help, 2) 법원 심문절차의 특정 단계에서 대리하여 변론하는 Help at Court, 3) 가사분쟁과 관련한 조력으로서 협상 알선을 통한 분쟁 해결 및 초기 자문과 조력을 제공하는 Approved Family Help, 4) 가사분쟁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Family Mediation, 5) 법원에서의 소송대리인 Legal Representation가 있다. Legal Representation은 조사에 대한 법적 절차로 제한되는 Investigative Help와 법적 절차에서의 대리를 할 수 있는 Full Representation으로 구분된다.

한편 민사 법률구조는 일정한 경우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사적 계약에 의한 조건부 보수제(conditional fee agreement)로 운영되는데, 변호사와 어떠한 내용의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패소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아무런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외에도 변호사들은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초기 상담을 제공하기도 한다.

라. 법률구조와 범죄인양형처벌법(LASPO) 제정 이후

1) LASPO 제정 배경과 의의

영국 정부는 법률구조 제도가 원래 의도하였던 목적을 넘어서 확장되었으며 법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과 얽혀 있다고 생각하였다. 영국 정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는 별도로 법률구조를 실제 필요로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법률 상담과 법률대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심각한 사건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UK Ministry of Justice, 2017, §7).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법률구조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LASPO를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영국 상원에서 14차례 통과가 좌절된 끝에 가까스로 의회를 통과하였다. 그렇지만 이 법은 영국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정의에의 접근권을 약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법무부는 법률구조는 사법 체계의 핵심이라고 하면서도 법률구조는 납세자의 이익과 한정된 재원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법은 1999년

정의에의 접근법에서 특별히 제외되지 않는 한 모든 민사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가 가능하다는 기존 영국의 법률구조 제도를 뒤집었다. 즉 이 법은 법률구조에서 제외되는 사건들에 대하여 명시하고 지원 대상에 대하여도 특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법에 의하면 법률구조의 대상 자격과 범위 등 법률구조에 관한 주요한 내용이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규칙에 의하여 규정되도록 하였다.

2) LASPO에 의한 지원 대상 사건

영국은 1) 이혼, 후견 등과 같은 가사 사건(가정 폭력, 아동학대 및 아동유괴 사건의 경우는 예외), 2) 생명·신체에 대한 상해 사건, 3) 태아를 제외한 의료 사건, 4) 동등대우 및 인신매매 문제 이외의 노동 사건, 4) 심각한 불공정 또는 노숙자 점유 절차 이외의 주택 사건, 5) 교육 관련 사건, 6) 집에 대한 급박한 위험 이외의 채무 문제, 7) 사회보장수급 사건(항소의 경우는 예외임), 8) 구금되지 않은 자의 이민 사건 등은 법률구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률구조의 대상자(수급자)는 법률구조의 대상 범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상자들이 심각한 채무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더 이상 대상자가 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가정폭력, 강제 혼인 및 아동 유괴 등과 관련한 가사 사건, 정신적 보건 사건, 모든 난민 사건 및 주택이 긴급한 위험 하에 있는 자의 채무 및 주택 사건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민사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BBC News, 2013).

3) 법률구조청의 설립

LASPO는 법률구조 결정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LASPO 제정 이전에 영국의 법률구조를 담당하는 기관은 정부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인 법률구조협회(LSC)였다. LSC는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법무장관의 정책 수행을 위한 투명성이 상당히 결여되었고 법무부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지에 대하여도 불분명하였다. 그 결과 LASPO는 LSC를 폐지하고 LAA를 설립하였다(UK Ministry of Justice, 2017, §31). 법률구조 예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통제는 물론 LAA와 법무부의 공동 협력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자 LAA가 설립되었다. 사안별 지원 결정에 대하여 법무부의 통제

가 미치게 함으로써 정책 결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LAA가 설립되었다. 아울러 법률구조 정책이 다른 사법정책들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기관이 설립되었다(UK Ministry of Justice, 2017, §32).

4) 법률구조 개혁의 수행

LASPO에 따른 법률구조에 관한 중요한 개혁은 생명 또는 자유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사건에 보다 집중하기 위하여 정의에의 접근법에 의하여 법률구조 지원이 가능한 특정 사건들을 법률구조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법률구조 제도에 의하여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에게 지급되던 보수의 수준을 삭감하였으며,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지원 자격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근접한 거리의 면접 상담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전화로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였다(UK Ministry of Justice, 2017, §34).

LASPO는 법률구조와 관련된 규정 체계에 대한 개혁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와 관련된 행정에 대하여도 변화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 이 법은 정부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이었던 법률서비스센터(LSC)를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의 법률구조청(LAA)을 신설하였다. 또한 이 법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법률구조사건담당관(Director of Legal Aid Casework: DLAC)을 신설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 법은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법률구조 사건 담당관이 결정한 개별 사건에 대하여 존중하도록 하였다(UK Ministry of Justice, 2017, §35).

5) 법률구조 지원 자격

복지급여(소득보조, 구직자수당, 주거급여, 유니버셜크레딧, 연금크레딧 자격인정자, 소득연계 고용보조수당) 수급자는 법률구조 신청 자격을 가진다. 그 외 신청자는 가처분자산, 소득, 가처분소득의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가처분 자산은 유동자산이며, 저축, 투자금, 고가의 물품 등이 포함된다. 가처분자산이 8천 파운드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이 있으며, 신청 사유가 이민 관련 문제일 경우는 가처분자산이 3천 파운

드 이하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2,657 파운드 이하이며, 만약 아동이 4인 이상인 경우 다섯째 아이부터 1인당 222 파운드가 상한에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신청 자격에는 필수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가처분소득 기준이 있는데 이는 월 733 파운드이다. 즉, 월 소득기준은 충족하지만, 다른 지출이 적어 가처분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영국정부 홈페이지. gov.uk/guidance/civil-legal-aid-means-testing#eligibility-limits. 2017. 11. 30. 인출).

형사 피고인은 법률구조 지원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형사 사건 법률구조의 실패에 따른 비용을 환수하기 위하여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영국 정부는 형사 법률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 도입을 포함한 형사 법률구조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BBC News, 2013).

6) 현황

LASPO 시행 전 영국의 법률구조는 925,000건에 이르렀지만 동 법 시행 1년 이후 법률구조 사건은 479,000건으로 46% 감소하였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사건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88,378건이 법률구조의 지원을 받았지만 LASPO 시행 후 1년 동안 단 145건의 법률구조 지원이 이루어져 99% 이상 감소하였다. 주택 사건은 50%, 일반 가사 사건은 60%나 감소하였다(Amnesty International UK, 2016, pp.8-9).

LASPO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9년 정의에의 접근법(the Access to Justice Act 1999)에서 제외하지 않는 한 모든 민사 사건에 대하여 법률구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LASPO에 의하여 가정폭력, 강제 혼인 및 아동 유괴의 경우에만 법률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사건의 2/3는 법률구조 지원 없이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자신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LASPO에 따라 영국 정부는 형사법 분야를 대폭 개정하였고, 그 법률구조 예산 또한 삭감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 사건 법률구조를 수행하는 법정변호사들은 파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The Guardian, 2014)

LASPO 시행 후 1년 동안 영국 정부가 민사 법률구조에 대한 실제 지출은 원래 예상되었던 £300m에서 £141m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 정부는 민사 법률구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영국 의회 및 기타 기관들은 지방 정부 및 다른 핵심 서비스에 대한 재정비용의 증가가 법률구조 예산의 삭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National Audit Office, 2014). 아울러 LASPO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민사 법률구조는 정의에의 접근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장치가 되었다. 그렇지만 LASPO에 의한 민사 법률구조의 갑작스러운 지원 배제는 사법체계의 안정성에 대하여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Amnesty International UK, 2016, p.8).

4. 네덜란드의 법률구조 제도²⁸⁾

가. 1957년 이전의 법률구조 제도

1957년 이전까지 네덜란드에는 공식적인 민사 법률구조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관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일반 개업변호사들은 가난한 의뢰인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890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 및 형사소송법은 형사 사건의 의무적 변호를 규정하고 있었다. 많은 지방 변호사협회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사 법률구조까지 실시하였다.

1913년에는 지방정부 또는 국가로부터 소액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 법률구조 단체가 설립됨에 따라 이와 같은 법률구조 활동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들 민간 법률구조 단체는 1920년대 중반까지 계속 성장하였다. 네덜란드 변호사들이 이처럼 법률구조에 대해 관대하였던 이유는 법률구조를 “Pro Deo(하느님을 위하여)”라고 부른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빈민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을 재정적 관점에서 고려하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초기 네덜란드 법률구조 제도는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하느님을 섬긴다는 도덕적 의무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이다.

28) 이 부분의 내용은 신승호(2005)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https://www.klac.or.kr/content/view.do?code=73&order=bcCode%20desc&page=3&pagesize=15&gubun=&search_value=&vc=35420에서 2017. 11. 30.인출.

나. 1957년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제도

법률구조를 통해 하느님을 섬긴다는 변호사들의 동기는 결국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네덜란드 변호사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회는 1957년 변호사들의 서비스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자력이 부족한 자를 위한 법률구조법(Wet Rechtsbijstand On-en Minvermogenenden, WROM)’을 제정하고 ‘보수제(Fee system)’를 실시하였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이 최초의 법률구조 프로그램은 사개업변호사제(judicare system) 또는 변호사 배정제도(assignment system)였다. 즉, 위 법률구조법에 의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은 일반 개업변호사로부터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정부는 변호사의 서비스에 대해 신고를 기초로 표준보수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였다. 무료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소송 당사자는 지방정부로부터 파산증명서(certificate of insolvency)를 발급받아 ‘상담사무소(Bureau of Consultation)’를 찾아갔다. 그러면 상담사무소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료 법률구조 신청이正当한지, 그리고 충분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소송 당사자는 일반 개업변호사를 배정받았으며, 배정된 개업변호사는 그 때부터 의뢰인을 대리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한 후 법원서기에게 그의 배당 사건을 제출하면 법원서기는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이 제도는 큰 문제없이 1960년대 말까지 운영되었다. 변호사들은 낮은 보수수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지만, 이러한 불만이 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논쟁으로 이어지는 않았다.

그러나 WROM(자력이 부족한 자를 위한 법률구조법)에 의한 1957년의 법률구조 제도는 당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함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개혁을 촉구한 것은 학생들이었다. 1970년 법과대 학생들이 발간하는 ‘Ars Aequi’라는 잡지에서 학생들은 법률구조 제도의 결함에 대해 기술하면서 당시 법률구조 제도가 실패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변호사들이 전통적이고 주로 상업적인 법률 분야에 치중한 나머지 빈곤층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둘째, 빈민을 대리하도록 사건을 배당받은 변호사들의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미숙한 변

호사들이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부촌에 자리잡고 있는 법률사무소들의 위치가 가난한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하나의 장벽이 된다는 것이었다.

법률구조 제도의 결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학생들만이 아니었다. 학생들의 문제제기 이후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비판을 지지했다. 연구 보고에 따르면 시민들은 1957년 제도가 초점을 맞추었던 소송 지향의 법률구조보다는 법률 상담과 조언을 원하고 있었다. 학생운동에서는 법률구조 제도의 위와 같은 결함을 보완하고자 로샵(Law shop)을 설립하였다. 로샵(Law shop)의 직원은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법과대학 학생들이었다. 얼마 후에는 법률보조직(para-legal)들이 조직한 단체들이 생겨나 빈민관련 분야에 관해 전문화된 법률 상담을 실시하였다. 로샵(Law shop)은 네덜란드 법률구조 제도의 결함을 매우 성공적으로 보완하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 로샵(Law shop)은 매년 6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법적 지원 및 소송대리를 해주었다.

다. 법률구조 사무소(Legal aid bureau)의 설립

로샵(Law shop)의 성공은 정부의 대응을 재촉하였다. 1974년에 법무부는 로샵(Law shop)과 같이 일선에서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법률구조 사무소(Legal Aid bureau)’를 설립하였다. 법률구조 사무소에서는 1957년 제도와 마찬가지로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여 법률구조를 제공한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법률구조 사무소에서는 업무시간 동안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로샵(Law shop)과 마찬가지로 법률 상담 및 조언, 기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유급 변호사를 채용하였다.

법률구조 사무소는 전적으로 법무부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네덜란드의 법률구조 예산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통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네덜란드가 진보적인 법률구조 전달의 세계적인 모델이 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법률구조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네덜란드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법률구조 예산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법률구조의 협력자에서 다소 적대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이었다. 먼저, 변호사들의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보수는 1982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또한, 무료 법률구조를 받기 위한 소득상한선이 하향조정 되었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자력 심사

가 더욱 엄격해지고 정부의 보조를 받는 법률구조 수혜대상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한편, 폴락위원회(Polak Commission)는 법률구조 예산을 감축시키는 대안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폴락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내렸다. 첫째, 법률구조에 대한 수요는 그 성질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둘째, 법률구조 사건의 배정에 대한 쿼터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다. 셋째, 국제조약과 네덜란드 헌법은 법률구조를 하나의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접근권은 사전에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네덜란드 정부는 조약 및 헌법상의 의무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법률구조 예산을 감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1994년 네덜란드 법률구조법에 반영되었다. 1994년 법률에 의한 법률구조 제도가 바로 오늘날 네덜란드의 법률서비스 전달체계이다.

라. 1994년 법률제정 이후의 네덜란드 법률구조 제도

1) 1994년 법률구조법이 가져온 변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1994년 네덜란드 법률구조법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네덜란드의 법률구조 제도에 영향을 미쳤다. 첫째, 소득기준이 하향 조정되면서 법률구조 대상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새로운 법률구조법은 엄격한 자격기준(financial eligibility standards) 뿐만 아니라 보다 엄격한 실체심사를 통해서 국가의 비용 지출을 줄이고자 하였다. 둘째, 법률구조 예산은 1989년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체심사가 보다 엄격해지고 개인 부담금이 추가된 데에 따른 결과였다. 셋째, 이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1994년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 대상자들이 소송대리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여야 하는 재정부담금의 규모를 증가시켰다. 재정부담금은 잠재적인 소송 당사자들로 하여금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수단을 찾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는 많은 법률구조 수혜자들이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무임 승차자(free rider)’라는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이들 무임승차자는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일정액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구조를 신청

하게 되었고, 적어도 도움을 구하기 전에 문제 해결수단으로서 스스로 돕기(Self-help)를 시도하였다. 소송 당사자는 필요한 개인부담금의 수준을 당국이 정할 수 있도록 ‘자력증명서(financial capacity certificate)’를 발급 받은 다음 법률구조 제공자에게 개인부담금을 직접 지불한다. 1997년에 의뢰인들이 부담한 부담금은 적게는 사회보장수당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지불하는 110 네덜란드 길더(약 55달러)부터 많게는 법률구조 대상자 상한선의 소득을 버는 사람이 지불하는 975 네덜란드 길더(약 425달러)까지였다. 자력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의뢰인들에 대해 개인부담금을 부과한 결과 법률구조 사건 수는 단 2년만에 40%나 감소하였다. 과거에는 네덜란드 가정의 62%가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였으나, 1994년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 비율은 43%로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 의회는 자력기준을 약간 상향 조정하는 ‘보상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 후 네덜란드 인구의 약 50%가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넷째, 1994년 법률구조법은 법률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기능을 중앙에 집중시켰다. 즉, 5개의 법률구조위원회(Legal Aid Councils)를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설립하여 이들 위원회로 하여금 기존의 법률구조 사무소(Legal Aid Bureau)의 사무를 승계하고 각 관할지역의 법률구조 시행을 관리·감독하도록 하였다.

2) 법률구조위원회(Legal Aid Council)의 역할

법률구조위원회에서는 법률구조 사건을 변호사에게 배정하는 사무를 관장했다. 네덜란드에서 변호사들이 법률구조 사건을 배당받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법률구조 활동은 젊은 변호사들에게는 기본적인 의뢰인과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많은 기성 로펌들도 법률구조 사업에 참여했다. 법률구조위원회는 소송대리를 신청한 변호사와 직원들의 자격을 심사하였는데, 이는 법률구조를 통해 제공되는 소송대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법률구조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자격요건을 이용하여 달성했다. 즉, 법률구조위원회는 법률구조분야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요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5개의 법률구조위원회는 법률구조를 위한 자격요건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첫째, 변호사들은 최소 사건 수 및 최대 사건 수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최소 사건 수 요건은 변호사와 법률구조위원회의 진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최대 사건 수 요건은 서비스의 표준적인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변호사들은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사무실을 조직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변호사와의 통화가 가능해야 하고, 근무시간 중에 변호사나 비서와의 면담이 가능해야 하며, 변호사는 휴가나 병가시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변호사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셋째, 법률구조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들은 요구를 받으면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헤이그 법률구조위원회에서는 위 세 가지 요건 외에 다음의 네 가지 직업적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첫째,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둘째, 변호사는 향후 3년간 자신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분야에 관한 강의를 들어야 한다. 셋째, 변호사는 위와 관련된 법률 분야에서 적어도 12개의 사건에 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변호사는 각 법률 분야의 발전에 관해 연구하는 지역 스터디 그룹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들은 네덜란드에서 질 높은 법률구조를 보장하고 있다.

3) 법률구조 사무소(Legal Aid bureau)의 지위 변화

법률구조위원회(Legal Aid Councils)의 설립은 기존 법률구조 사무소(Legal aid bureaus)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다. 먼저, 각 법률구조 사무소는 자율성과 직원을 상실했다. 법률구조 사무소는 한때 법률구조기금의 배분을 관리했으나, 1994년 법률구조법 시행 이후에는 한낱 법률구조위원회의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다음으로, 각 법률구조 사무소는 이제 법률구조위원회로부터 법률구조 사건을 배당받기 위해 각 지역의 변호사들과 경쟁해야 했다. 이는 법률구조 사무소가 비록 소규모 이기는 하지만 소송대리를 그 업무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어 소송대리에 있어 변호사들의 경쟁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쟁은 변호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더욱 치열해졌다. 마지막으로, 법률구조 사무소는 네덜란드의 각 대학과 기타 기관들과의 지적 교류를 중단했다. 사회보장법 및 법률구조에 관한 세미나는 198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고, 대학들의 법률구조 제도에 관한 법사회학적 관심도 줄어들었다.

4) 네덜란드의 법률구조기금

1994년 법률구조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의 일부는 가난한 소송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개인 부담금에 의해 충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부금은 변호사 비용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1994년 법률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법률구조 프로그램은 거의 전적으로 정부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 지원은 거의 100% 법무부를 통한 것이다.

제3절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현황 비교 및 최근 개혁 동향

1. 유럽 주요국 법률구조 체계 비교

가. 법률구조 관련 법제 및 기관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즈)과 네덜란드에 있어 법률구조 체계(legal aid system)는 중앙집권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독립된 법률구조위원회(legal aid board)를 가지고 있지만 영국은 법무부가 법률구조 체계를 통제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와는 달리 중앙집권적인 체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법률구조의 제공에 대한 결정이 법원에 있는 법률구조협회(legal aid council)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법률구조위원회(legal aid board)는 자문기구일 뿐이다. 독일은 법률구조에 대한 중앙 차원의 기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이 법률구조의 대상자를 결정할 뿐이다(Hiil, 2014, p.30).

〈표 5-1〉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법령 및 기구

국가	법령	감독기구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Legal Aid Act n° 91-647(1991) o Decree n° 91-1266(1991) o Decree n° 91-1369(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Conseil national de l'aide(CNAL):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 o Service de l'accès au droit et à la justice et de l'aide aux victimes (SADIAV): 법무부 산하 정책기구 o Conseil National des Barreaux(CNB): 감독기구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Art. 3, Art. 20 Grundgesetz o Art. 1, Art. 3 Beratungshilfegesetz(1980) o Artt. 140-142, 364a, 364b Strafprozessordnung(1950) o Artt. 114-127a. Zivilprozessordnung(1950) 	없음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법률구조, 양형 및 처벌법(2012,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LASPO, 2012) o 후속 규칙(2012 - 2013) 	o 법률구조원(Legal Aid Agency: LAA): 감독 및 통제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Art. 18 Constitution o Wet op de Rechtsbijstand(1993) 	o Raad voor Rechtsbijstand (RvR: LAB): 감독 및 통제

자료: Hiil(2014, p.29).

나. 법률구조 제외 사건

국가별로 특정한 사건을 법률구조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법률구조의 감독 및 통제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그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즉 프랑스의 경우 검사의 통제 하에 있는 구금(detention)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구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영국은 1) 이혼, 후견 등과 같은 가사 사건(가정 폭력, 아동학대 및 아동유괴 사건의 경우는 예외), 2) 생명·신체에 대한 상해 사건, 3) 태아를 제외한 의료 사건, 4) 동등대우 및 인신매매 문제 이외의 노동 사건, 4) 심각한 불공정 또는 노숙자 점유 절차 이외의 주택 사건, 5) 교육 관련 사건, 6) 집에 대한 급박한 위험 이외의 채무 문제, 7) 사회보장수급 사건(항소의 경우는 예외임), 8) 구금되지 않은 자의 이민 사건 등은 법률구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Hiil, 2014, p.30).

네덜란드의 경우 1) 세금 관련 사건에서의 행정 심판, 2) 가사 문제와 관련한 행정 심판 절차, 3) 500유로 이하의 사건, 4) 청소년 범죄 사건 등을 법률구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법률구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Hiil, 2014, p.30).

다. 법률구조 대상자 자격 요건

1) 재정 상태

법률구조 대상자(수혜자)의 최대 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각국이 임금에 대하여 다양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곤란하지만 원칙적으로 정부로부터 법률구조에 따른 비용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임금을 비교한 것이다.

〈표 5-2〉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대상자 임금 수준

국가	적용 임금 기준	법률구조 대상 최대 임금 수준
프랑스	월급	929유로
독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월급(MGI) ○ 월간 최대 가처분 소득(MDI) ○ 가처분 자산(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 2,657파운드(MGI), 733파운드(MDI) ○ PA: 2,657파운드(MGI), 315파운드(MDI), 3,000파운드(DC)
네덜란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료: Hiil(2014, p.32).

다만 독일의 경우 법률구조 대상자의 임금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 법률구조는 각 주(州)가 책임지고 있는데 각 주가 법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률구조 실시할지 여부는 결정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가 법률구조에 대한 비용 전부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률구조 신청자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임금 수준에 따라서 자신의 부담 부분이 면제되는 신청자가 있는데 형사 사건에 있어 구금 중인 피고인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네덜란드의 법률서비스카운터는 신청자의 자산이나 재력 상태를 불문하고 법률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Hiil, 2014, p.31).

다음 표는 법률구조의 비용의 일부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자신의 임금 수준에 따라 나머지를 부담하여야 하는 대상자의 임금을 비교한 것이다. 법률구조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구체적인 액수는 그의 최대 임금이나 자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최대 부담액을 제공하고 있다(Hiil, 2014, p.33).

〈표 5-3〉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대상자 최대 임금 수준과 부담액

국가	적용 임금 기준	법률구조 대상 최대 임금 수준	최대부담액
프랑스	월급	1,393유로	○ 변호사 비용의 15%~85%. 여기에 법원의 소송 개시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행정 비용 13 유로 포함
독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A&A: 10유로 ○ PA: 0~300유로
영국	○ 최대 월급(MGI) ○ 월간 최대 가처분 소득(MDI) ○ 가처분 자산(DC)	○ PA: 2,657파운드(MGI), 315-733파운드(MDI), 8,000파운드(DC)	○ 가처분 월급이 315파운드를 넘는 경우 그 35~70%
네덜란드	○ 연봉(AI) ○ 자산(C)	○ 독신자 - 25,200유로(AI) - 20,785유로(C) ○ 아이 또는 부모와 거주하는 자 - 35,600유로(AI) - 20,785유로(C)	○ PA: 193유로 초과 811유로 미만

자료: Hiil(2014, p.33).

법률구조 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법률서비스 제공자, 법률구조위원회 혹은 법률구조 사무소에서 찾아간다. 즉 프랑스, 독일 및 네덜란드는 변호사가 찾아가고 영국의 경우 법무부가 이를 가져간다. 한편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변호사가 위 부담 비용을 받아갈 수 있으므로 그 비용 또한 면제할 수도 있다. 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약 23%의 변호사만이 위 비용을 받아갔다고 한다(Hiil, 2014, pp.33-34).

한편 일정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재정 상태나 임금에 대한 고려 없이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즉 구금 또는 구금의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는 사람(welfare beneficiary)에 대하여도 재정 상태나 임금에 대한 고려 없이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랑스는 사회복지 수혜자에 대하여 영국은 사회복지 수혜자와 미성년자에 대하여 재정 상태나 임금에 대한 고려 없이 법률구조 서비스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NAP의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법원이 지정한 변호인과 함께 신청한자, 2) 망명 신청자, 3) 형사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신청자, 4) 정신병자, 5) 성폭력 혹은 폭압적 범죄 피해자, 6) 특별 피신탁인과 함께 신청한 미성년자 등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Hiil, 2014, p.36).

2) 거주 요건

법률구조 대상자(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EU 국가 내의 시민권자가 다른 EU 국가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유럽위원회 지침 2003/8/EC of 27에 의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률구조에 관하여 공동 규칙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자국법에 따른 일반적인 거주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상자는 실제 및 법률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여야 한다. 독일은 비유럽 회원국 법인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특별한 거주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Hiil, 2014, p.40).

3) 법률구조 이전의 수단 강구

법률구조를 신청하기 이전에 다른 수단들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는지도 문제된다.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는 법률구조를 신청하기 전에 다른 법률적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비용 보험이나 노동조합 가입 등이 법률구조를 신청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프랑스는 우선적으로 법률비용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은 법률비용 보험이나 노동조합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교육, 차별 또는 채무 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먼저 전화 상담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다만 네덜란드는 법률구조를 신청하기 이전에 다른 수단을 우선적으로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Hiil, 2014, p.41).

4) 법률구조의 내용

가) 정보 제공 및 상담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체계 하에서 법률정보의 제공 및 상담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이 법률구조의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정보의 제공과 상담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특정 법률센터에 의하여 증가하고 있다.

〈표 5-4〉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정보 제공 및 상담과 제공기관

국가	정보 및 상담 제공의 내용	제공기관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자문 및 지원의 제공 ○ 법률문서의 작성 지원 ○ 이관/소개(referr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 ○ Conseil national de l'aide(CNAL) ○ Points d'accès au droit(PAD) ○ Maisons de Justice et du Droit(MJD) ○ 변호사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 ○ 사법 지원(Judicial Support) ○ 법원 이외 사건 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결정에 의한 변호사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 교육,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변호사 ○ 신청인을 대리하여 문서작성 및 개입 ○ 문서작성의 지원 ○ 협상 지원 ○ 강제적 전화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 법률센터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 ○ 실제 정보 및 유익한 정보(tips) 제공 ○ 법률 전문가 이관/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htwijzer, 법률서비스카운터

자료: Hiil(2014, p.42).

위와 같은 공식 법률구조 체계 이외에 법률구조 대상자에 대하여 법률정보 및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법률정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역변호사협회,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세입자단체 및 지역공동체를 통하여 법률자문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독일은 법률비용 보험(Legal Expenses Insurance: LEI) 및 노동조합을 통하여, 영국에서는 법률센터(Law centres) 및 노동조합을 통하여 법률정보와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 차별 또는 채무 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먼저 전화 상담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활동가, 변호사(자문 또는 방문), 법률비용 보험, 소비자단체, 주택소유자단체 등을 통하여도 법률정보와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Hiil, 2014, pp.42-43).

나) 협상과 협의

분쟁 상대방과의 협상 및 협의를 변호사 이외의 전문가 또는 단체로부터 받는 것은 법률구조 체계에 포함된다. 다만 독일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률구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협상과 협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조정(중재)이다. 제1차적 법률구조 서비스(primary legal aid service)는 신청자의 대리인에게 법률문서의 작성은 물론 상대방과의 협상 또한 진행할 수 있는 등의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Hiil, 2014, pp.43-44).

〈표 5-5〉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관련 협상과 협의

국가	협상과 협의 강화를 서비스	성격	예상 사용 정도
프랑스	○ 조정(중재, mediation) ○ 화해(조정, Conciliation)	자발적	○ 자료 없음
독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영국	○ 조정(mediation) ○ 중재(arbitration)	자발적	○ 2011년에 15,137건의 가사 조정이 개시되어 9,804건이 합의에 이룸 ○ 민사 법률구조의 1.9%
네덜란드	○ 조정(mediation)		○ 전체 법률구조 가운데 1.8%

자료: Hiil(2014, p.44).

다) 재판 절차에서의 지원 내용

재판 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법률구조의 내용은 나라마다 약간 상이하다. 그렇지만 변호사에 의한 소송 절차의 지원은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다. 기타 법원 비용, 전문가 비용, 번역, 출장 및 문서 복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도 문제된다(Hiil, 2014, p.45).

〈표 5-6〉 유럽 주요국의 법률구조 관련 재판 절차 지원 내용

국가	법원 비용	소송 절차 지원	전문가 비용	번역	출장
프랑스	지원 없음	지원	지원	지원	자료 없음
독일	지원	지원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영국	자료 없음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없음
네덜란드	지원 없음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자료: Hiil(2014, p.45).

라) 변호사에 대한 자격

프랑스, 독일, 영국 및 네덜란드에서 법률구조 대상자(수혜자)는 자신이 원하는 특정 변호사를 재판 절차에서 법률구조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법률구조 체계의 운영에 있어 법률구조 대상자(수혜자)를 대리할 변호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해당 변호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변호사가 법률구조를 통하여 제공하려는 업무 영역의 제공하며, 변호사에 대한 질적 평가를 수행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법률구조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독립된 정부 기관은 없다. 이들 국가에서는 변호사협회가 법률구조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질적 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가 윤리 위반에 대한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법률구조 제공에 대하여 평가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네덜란드의 경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변호사협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법률구조 감독기관은 해당 변호사가 중과실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 변호사 목록에서 그를 제외하고 있다.

법률구조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따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독일에서는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면 된다(Hiil, 2014, pp.46-47).

2. 사건 유형별 법률구조 현황

가. 경찰서 유치 및 재판 전 구속/구금

경찰서에 유치 또는 구금되었을 때 법률지원이 최초로 절실하게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에 경찰서에 유치 또는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법률지원으로 1억 6천만 파운드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개별 사건 당 218 파운드에 해당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등록된 법률구조 변호사들은 경찰서 구금 이후 몇 시간 이내에 법률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구조 대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네덜란드는 2011년에 2천 9백 6십만 유로를 이러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는 개별 사건 당 247.9 유로에 해당한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경찰서 유치 또는 구금 사건에 대하여 법률구조로 지출한 비용은 사건 당 평균 250~300유로에 이른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의 비용 지출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3년도 지침을 통하여 경찰서 구금 기간 동안 변호사접견 권한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프랑스는 2011년 경찰서 구금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의 확대를 이미 법률구조에 반영한 바, 구금 후 최초 24시간 동안 변호사들은 300 유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영국은 경찰서에 유치 또는 구금된 피의자를 위한 전화자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변호인과의 영상 통화를 통하여 접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서에 유치 또는 구금된 피의자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됨으로써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하거나 불합리하게 구금되는 것으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Hiil, 2014, p.70).

나. 형사 사건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는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영국은 프랑스에 비하여 10배 가까운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그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영국은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2억 2천 7백만 파운드를 투입하였고 이는 사건 당 453파운드에 해당한다. 형사법원(Crown Court)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의 경우 6억 6천만 파운드의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사건 당 2,481 파운드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경우 형사 사건 당 소요되는 법률구조 비용은 300유로 정도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형사 사건 당 소요되는 법률구조 비용은 1,350유로 정도로 프랑스보다는 상당히 높지만 영국보다는 매우 낮다.

이와 같이 형사 사건에 소요되는 법률구조의 비용을 감경시키기 위해서 형사 사건 절차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은 공익변호인(public defender)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경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 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정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Hiil, 2014, p.71).

〈표 5-7〉 유럽 주요국의 형사 사건 법률구조 현황

지출	프랑스(2010)	영국(2013)	네덜란드(2013)
총액	119백만 유로	975백만 파운드	168.1백만 유로
국민 1인당	1.8유로	17.2파운드	9.3유로
평균 비용	302유로	766파운드 (형사 원심: 453 파운드 형사 항소: 2,481 파운드)	1,350유로
전체 법률구조 예산 차지 비율	33%	50.9%	34.7%

자료: Hiil(2014, p.71).

다. 가사 사건

가사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는 사법에의 접근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가사 사건은 이혼 및 이혼에 따른 양육과 재산분할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 입양, 상속의 문제까지 포함한다. 가사 사건은 법률구조 예산의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첫 번째로 많은 법률구조 예산이 투입되는 사건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가사 사건에 대하여 각국은 법률구조를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가사 가정 폭력이나 아동 양육과 관련한 법률구조의 피해자나 대상자의 수입이나 자산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기 않고 있다. 다만 이들은 일정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가사 사건이라 하더라도 협의 이혼 사건의 경우 법률구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네덜란드가 그 대표적이다. 프랑스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수입을 모두 고려하여 가사 사건과 관련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수입에 대한 상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사 사건과 관련한 법률구조 예산의 지출 또한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종결된 법률구조 사건을 기준으로 할 때 민사 소송대리에 대한 비용이 전체 법률구조 예산 지출의 37%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민사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예산의 75%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민사 소송대리 비용은 다른 사건 유형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자녀와 관련된 소송 등 가사 소송의 경우 법원의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네덜란드의 경우 법률구조 관련 지출의 23%가 가사 사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체 법률구조 예산의 18%에 해당한다고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이혼이 가사 사건 관련 법률구조 예산에 대한 높은 지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네덜란드에 비하면 프랑스는 법률구조에 대하여 보다 작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사 사건과 관련한 높은 소송비용에 따른 법률구조 예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하여 각국은 가사 소송 절차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사 사건은 법률비용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절차의 단순화를 정책적 수단으로 채택한 것이다. 프랑스, 영국 및 네덜란드는 가사 사건에 대한 조정(mediation)을 장려하였다. 그렇지만 가사 사건에 대한 조정으로는 가사 사건 관련 법률구조 예산을 절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영국을 예로 들어 보면 2012년부터 2013년에 가사 사건에 있어 13,571건의 조정이 개시되었지만 그 67%인 9,087건만이 합의에 이르렀다. 아울러 전체 민사 법률구조 사건 가운데 조정 사건은 1.9%를 차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법률구조에 따른 전체 조정 사건의 98%가 가사 사건에 관한 것이지만 그 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프랑스의 경우 이혼 사건의 경우 의무적인 화해(Conciliation)를 시도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조정을 위한 법률구조는 인정되지 않는다(Hiil, 2014, pp.71-72).

〈표 5-8〉 유럽 주요국의 가사 사건 법률구조 현황

지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국민 1인당	자료 없음	12.5파운드	5.1유로
평균 비용	724 유로(당사자 합의에 의한 이혼) 820 유로(기타 이혼 절차) 386 유로(이혼 이외의 가사 문제)	3,516파운드	850유로
전체 법률구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없음	36.9%	23%

자료: Hiil(2014, p.72).

라. 소비자 사건

소비자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도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소비자 사건들은 민사법이나 계약법 혹은 생명·신체와 관련된 불법행위 사건, 상린관계, 채무, 보험 및 금융서비스 등과 관련된 사건을 통하여 제기된다.

소비자 사건은 배상액이 매우 소소한 금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이를 법률구조로 지원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보통 소비자 문제와 관련한 법률정보 혹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위원회(consumer dispute resolution committee)를 통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법률비용 보험, 소비자단체, 소비자집단소송단체, 무료 법률서비스 등을 통하여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소비자 문제를 법률구조에서 배제하고자 하고 있다. 영국은 2013년 4월 소비자 문제를 법률구조에서 배제하였으며, 네덜란드는 소비자 문제와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 등과 관련된 사건을 법률구조의 대상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Hiil, 2014, p.73).

마. 난민과 이민 사건

난민과 이민 관련 문제는 행정 사건으로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별한 사법기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유럽에서 난민과 이민 사건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지만 최근 시리아 사태 등으로 인하여 난민과 이민 사건을 더욱 증가하고 있다. 네덜란

드의 경우 전체 법률구조 예산의 13%가, 영국의 경우 2%가, 난민과 이민 사건에 투입되고 있다. 유럽 국가에서는 난민과 이민 사건 당 평균 1,000유로를 법률구조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iil, 2014, p.73).

〈표 5-9〉 유럽 주요국의 난민과 이민 사건 법률구조 현황

지출	영국	네덜란드
국민 1인당	0.74파운드	2.95유로
평균 비용	644파운드	940유로
전체 법률구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1.9%	13%

자료: Hiil(2014, p.73).

바. 노동 사건

노동 사건은 법률구조의 주요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유럽 각국의 시민들은 해고, 근로조건, 작업장에서의 사고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노동 사건에 대하여 유럽 각국은 평균 전체 법률구조 예산의 3~5%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유럽 각국에서 노동조합, 노동 관련 보험, 노동단체 등으로 인하여 노동 관련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 프랑스, 독일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사법기관이 존재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노동 관련 사법기관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노동 사건에 대하여는 강제적 화해제도가 시행되는 등 소송 절차의 단순화가 추진되고 있다(Hiil, 2014, p.74).

사. 채무 및 회생 사건

채무 관련 문제는 특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법률구조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더구나 채무 문제는 이혼 및 해고와 같은 다른 법률구조 유형의 사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법률구조 유형이다. 회생의

경우 국가의 법률구조 예산으로 포섭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채무와 관련된 법률구조 예산에 대하여는 조사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프랑스의 경우 법률구조 예산의 5% 정도가 전체 법률구조 예산 가운데 채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영국은 0.05%, 네덜란드는 1%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Hiil, 2014, p.74).

〈표 5-10〉 유럽 주요국의 채무 및 희생 사건 법률구조 현황

지출	영국	네덜란드
국민 1인당	0.02파운드	0.3유로
평균 비용	5,067파운드	1,150유로
전체 법률구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0.05%	1%

자료: Hiil(2014, p.74).

아.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 사건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 사건은 법률구조 수요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지만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 사건에 대한 소송은 물론 및 보험회사와의 협상도 그 절차가 장기간에 이르고 비용 또한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법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률구조에 의하여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제외되는 추세이다. 각국의 입법이나 실무에 있어서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 사건에 대한 비용은 피고인이나 법률비용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네덜란드의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 사건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을 대여하는 서비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Hiil, 2014, pp.74-75).

자. 주택 문제

주택 문제와 관련된 법률구조는 채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울러 주택 문제는 노숙자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비약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각국에 있어 주택 문제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것이다. 주택 문제는 법률비용 보험이나 특별 사법기관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 법률구조 체계가 효과적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주택 문제가 민사 법률구조에 있어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건 당 투입 비용은 주택 문제가 가사 사건에 비하여 2배나 낮은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에서는 정부가 주택 문제를 법률구조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택 문제의 당사자들은 주택 문제 관련 분쟁해결위원회 등을 통하여 변호사의 개입 없이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Hiil, 2014, p.75).

〈표 5-11〉 유럽 주요국의 주택 문제 관련 법률구조 현황

지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국민 1인당	자료 없음	0.45파운드	0.5유로
평균 비용	507유로	2,819파운드	820유로
전체 법률구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없음	1.3%	2%

자료: Hiil(2014, p.75).

차. 사회복지 사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사회복지 사건을 특별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사건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배제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관련 절차가 단순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네덜란드의 경우는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률구조 지출의 8%를 사회복지 사건에 투입하고 있다. 이는 국민 1인당 기준으로 1.7유로에 해당하며, 사건별로는 818유로를 지출하고 있다(Hiil, 2014, p.75).

3. 법률구조에 대한 혁신과 개혁

법률구조(legal aid) 개혁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개인들에 대한 단순한 법률서비스의 제공과는 다르다. “기본적 법률 돌봄(basic justice care)”의 전달(delivery)이라는 기본적인 명제 하의 5개의 개혁적 원칙이 유럽 국가들에 있어 법률구조에 대한 최근의 동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첫째, 시민들은 만일 법률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 법률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법률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법률 정보는 분쟁 해결에 있어 법률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적절한 시간에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함에 있어 유용할 수 있다. 또한 법률정보는 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함은 물론 실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법률구조 새로운 동향은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이 전문가 또는 봉사자들의 지원 하에 법률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의 제공은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률정보를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온라인을 통한 법률정보 및 자문이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 당국, 소비자 연합, 노동조합, 법률 보험자 및 로펌 등에서 이러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법률정보와 자문에 대한 변호사들의 독점은 다른 법률정보 서비스 제공자들이 용이하게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이 용이하게 법률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 매우 고품질의 법률정보와 자문에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바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상당히 많은 법률정보 사이트들은 변호사 소개와 변호사 업무 광고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은 법률정보를 제공할 단체를 설립하거나 자체 법률정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영국은 advicenow.org.uk 종합적인 온라인 법률정보와 자문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초기 대응 법률구조 사무소(first line legal aid offices)가 온라인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법률서비스대응자(legal service counters)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30개 도시에서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법률정보와 자문을 제공해 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법무부(houses of jus-

tice)에 의하여 130개 도시에서 비슷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도 법무부(houses of justice)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핀란드는 법률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법률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긴급하고 심각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이 정확한 법률정보를 지원받고 있는지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법률정보에의 접근을 강화하여 법률구조를 활성화하고 법률정보를 비용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법률정보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Hiil, 2014, pp.76-77).

법률구조에 대한 두 번째 동향은 “혼합된 문제해결 서비스(hybrid problem solving service)”를 개발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문 변호사, 사회 운동가, 기업변호사 및 법무 보험업자들이 변호사, 조정자 및 판사 등의 전통적인 역할들을 혼합화되고 있다. 즉 이들은 변호사와 판사들로 하여금 조정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하고, 조정자들로 하여금 공정한 결과물을 양성하도록 하는 등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기존의 역할에 혼합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 변호사, 사회 운동가, 기업변호사 및 법무 보험업자들은 일선에서 법률구조가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일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변호사와 판사 및 조정자 등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서로 반대하기 보다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소통하는 브릿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법률적 분쟁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이 강화되었으며 비용을 가중시키는 절차들이 감소되었고 법률서비스가 확정된 비용으로 연간 단위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다양한 분쟁 유형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조정(mediation)이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법무보험, 가족 변호사, 고용, 채무 최근 소비자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 등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 다수의 국가들에 있어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 조정이 채택되고 있지만 현실에서 채택되고 있는 비율은 낮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혼합화된 문제해결 서비스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법률구조에도 도입되고 있다. 처음에는 조정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기타 여러 분쟁 해결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2011년과 2012년에 아동양육 사건에 심리학자와 사회 운동가들이 판사를 지원하는 새로운 조정 절차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소송과 관련된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이 법률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개혁은,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법률구조의 대상자들에게는 법률적 문제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도 그와 관련된 사회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혼합된 문제해결 서비스의 발전으로 법률구조 체계는 법률구조 대상자들이 법률구조를 신청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법무보험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Hiil, 2014, pp.76-77).

세 번째 동향은 “순환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standardised ways to cope with recurring issues)”을 개발하는 것이다. 의료보건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최적 치료 정보가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 의사들에게 이용될 수 있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보건과 마찬가지로 법률 분쟁 해결 또한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분쟁 해결 서비스의 질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law) 및 세계적인 관행 기준이 교정과 관련한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혼 상황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서의 협상, 신체적 상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합의는 물론 조정 기법, 제3자 개입의 효율성 등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법적 절차로 귀착됨으로써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십 년 동안 이와 같은 지식은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관련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중요한 법적 절차와 기준으로 정립될 것이다.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은 법률구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영국과 웨일즈는 법률구조에 있어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이 잘 활용되고 있는데,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자 또는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에 의하여 이러한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이 정립되거나 통합되기도 한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법률구조를 담당하는 부처가 법률구조 결정과 관련된 과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Hiil, 2014, pp.78-79).

네 번째 동향은 “간소한 절차의 제공”이다. 최근에는 변호사 없이 제한된 증거 내에서 법률 분쟁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거나 합의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노동 사건 및 사회보장 서비스 관련된 사건에 특화된 법률분쟁 해결 절차를 정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법원이나 중재재판소 등에 접근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쟁 해결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또한 법률구조의 개혁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과 웨일즈가 법률구조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던 가사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사법 개혁을 실시한 것을 들 수 있다(Hiil, 2014, p.79).

마지막의 동향은 “분쟁 해결 및 형사 절차에서의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이다. 유언장, 근로계약서, 별거합의서(separation agreement) 등 법률문서의 작성과 관련된 시장은 변호사 등에 의하여 신속하게 온라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문서를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온라인을 통해 설명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온라인 법률문서 작성 서비스는 표준화됨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여 제공되고 있다. 온라인 분쟁 해결 플랫폼 또한 개발되고 있으며 유럽의 법원들 또한 온라인 소송을 준비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화상 회의 등 첨단 통신기술을 통하여 의뢰인과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자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은 법률구조의 개선을 위한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 법률구조위원회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프랑스 정부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차세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법률분쟁과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하여 공유하고 조직화함으로써, 법률구조 대상자, 고객, 법률서비스 제공자 및 법원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문서의 작성과 제출, 증거의 검토 등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절감될 것이다.

대부분의 법률구조 서비스 관련 당국은 자신들의 앱을 통하여 온라인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률구조 서비스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표준화와 촉진화 및 조직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Hiil, 2014, p.80).

4. 법률구조 개혁의 실행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법률구조 체계에 대한 예산상의 제약에 직면하고 있는바, 대체적 혹은 보완적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확실한 동향은 소송 당사자 및 법률구조 서비스 대상자의 부담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벨기에, 영국 및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에서는 법률구조와 관련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는 요구조건이 강화되었다. 특히 벨기에를 제외한 위 국가들에서 법률구조 대상자의 부담

비중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동향과는 반대로 핀란드는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시장에서 법률서비스를 받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정도의 비용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사실상 지원 금액이 삭감되었다. 영국과 웨일스 및 네덜란드 등에서는 형사 사건에 관한 법률구조 지원금의 감액을 고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민사 및 행정 사건의 경우 법원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2011년부터 법률구조 대상자가 아닌 모든 소송 당사자는 법정 절차에 대한 비용으로 35유로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2013년에 이러한 논란은 없어졌지만 법률구조에 따른 6천만 유로의 예산 부족이 초래되었다. 벨기에 정부는 소송이 아닌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25유로의 법정비용(court fee)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법률구조 관련 비용 절감을 위하여 영국과 웨일즈는 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쟁 유형을 제한하였다. 즉, 이혼, 신체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노동 사건, 채무, 주택 및 사회보장 수당 관련 분쟁 등에 대하여는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네덜란드도 소비자 및 주택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프랑스는 모든 유형의 분쟁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구조 비용의 절감과 관련하여 사법 절차의 개혁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의 재판 절차를 개선하거나 대체적 분쟁 해결 기관에서의 절차 개선이 법률구조 체계의 개선과 결합하여 법률구조 대상자들이 비용 효과적으로 분쟁 해결 기관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법률구조의 개혁을 위하여 프랑스와 같이 민법 및 형법 개정 등 광범위한 사법 개혁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법률구조의 개선을 위한 상당한 보고서와 제안 등이 있었지만 정부가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은 없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사법작동프로그램(Making Justice Working programme)”을 통하여 법원, 재판소, 법률구조, 사법 절차, 사건 관리 및 IT와 데이터 수집 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스코틀랜드는 법원 구성의 강화,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구축, 법관 역량 강화 등과 같은 소송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사법 절차의 단순화와 특성화를 구축하였다.

현재까지 법률구조에 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 개혁이 이루어진 국가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변호사의 대리가 필요한 사법 절차는 벨기에와 아일랜드 등에서 상당 부분 감소하고 있다.

또한 법률구조 개혁과 관련된 제안들이 도입되거나 여전히 논쟁 중이거나 삭제된 경우도 있다. 프랑스는 모든 소송 당사자에 대한 35유로의 세금 또는 법원 비용의 부담이 법률구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에 철회되었다. 폴란드에서는 지방법원의 조직을 고등법원의 지원으로 변경하는 개혁이 비난받아 철회되었다(Hiil, 2014, pp.81-84).

5. 법률구조 개혁에 대한 인식

가. 프랑스

프랑스에서의 법률구조는 궁핍함의 기준에 관한 논쟁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3년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송 당사자에 대한 35유로의 세금 또는 법원 비용이 철회되었다. 그 결과 6천만 유로의 예산 부족을 발생시켰다. 프랑스 정부는 법률구조에 대한 보조적 재원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불쾌해하고 있다. 프랑스의 법률구조 관련 변호사들은 다른 나라의 변호사들과는 달리 정부의 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법률구조 소송 당사자 또는 법률구조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회수하기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에 따른 예산 부족을 확충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에 대한 과세를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는 변호사의 수입료를 내리는 제안도 하였다. 2013년 10월 프랑스의 몇몇 지방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파업을 결정하였다. 변호사들은 수입이 감소하여 더 이상 법률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자신들의 수입료가 매우 낮은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법률구조 관련 예산의 삭감으로 법률구조를 수행한 변호사들의 수입료는 해당 변호사들이 투입한 시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구조 활동을 수행한 대다수가 젊은 변호사들로서 이를 통하여 사건을 수입하였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64%의 법률구조 관련 사건들이 전체 변호사의 9%에 의하여 처리되었다. 만일 변호사들이 이와 같은 법률구조 활동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하고 수입을 올리지 못한다면 법률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이후 법률구조에 대하여 검토하고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보고서들이 제출되었다. 모든 보고서들이 법률구조의 범위, 역할, 금액, 수입 상한, 재원 및 조직 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법률구조의 예산이 두 배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2013년에는 법률구조의 개혁에 관하여 법률구조의 대상자 자격을 위한 경제적 능력의 단계를 단순화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Hiil, 2014, p.85).

나. 독일

독일에서 법률구조는 법원 시스템에 통합되어 그 일부로 인식되고 있는바, 높은 사회적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법률구조 개혁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법률구조에 대한 지출은 관심을 끌고 있다. 법률구조는 각 주(州)의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각 주는 관련 비용의 감소를 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독일 연방 정부는 법원에의 접근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각 주는 연방 정부에 법률구조에 대한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2004년에 변호사 비용을 상승시키는 개선안이 실현되었다. 그 결과 법률구조 관련 지출이 18~20%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렇지만 실상은 법률구조 비용이 상승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률구조를 통해 법원으로 제기된 소송 건수가 감소하였다. 다만 가족법 관련 법률구조가 약간 상승하였고 이것이 법률구조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법률구조에 있어 관련 비용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다. 비용은 계쟁된 소송물의 가치에 근거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재산가치가 작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 자체는 매우 복잡한 법률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는바, 사실상 이들은 소송비용 체계에 따른 이득을 보고 있다(Hiil, 2014, p.85).

다.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영국에서는 2012년 LASPO법에 의하여 법률구조에 대한 개혁이 최근 단행되었다. 동 법에 의하면 법률구조의 대상 자격과 범위 등 법률구조에 관한 주요한 내용이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규칙에 의하여 규정되도록 하였다. 법률구조는 대상자, 법률전문가는 물론 정책 결정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야기하였다. 영국 정부

는 법률구조 비용이 불확정적이고 비지속적이며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법률구조의 대상자(수급자)는 법률구조의 대상 범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상자들이 심각한 채무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더 이상 대상자가 되지 못하였다. 법률구조 개혁은 2013년부터 효력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소송에 있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및 네덜란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구조 변호사들은 변호사 비용의 감소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형사 법률구조를 수행하는 법무변호사들은 파업을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의 법률구조 개혁은 법률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의회로부터도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의회의 위원회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구조 개혁은 사법예의 접근에 대한 근본적인 보통법적 권리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렇지만 위 보고서는 법률구조 개혁에 관한 최대의 쟁점인 법률구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률 영역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법률구조 관련 전문가 집단은 최근 법률구조의 절차를 단순화시키고 법률 정보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용이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Hiil, 2014, pp.86-87).

라. 네덜란드

2012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법률서비스카운터(legal service counters: Juridisch Loket)를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네덜란드의 경우 법률구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도 일정한 유형의 법률 사건에 대하여는 법률구조를 제한하는 등의 법률구조에 대한 개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변호사들의 시간당 비용계산을 삭감하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2013년 11월 네덜란드 형사 법률구조 변호사들은 관련 예산 삭감에 항의하기 위하여 파업에 돌입하였다. 즉, 복잡한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현재 시간 당 104 유로에서 70유로로 삭감하는데 대하여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변호사들은 70유로라는 시간당 비용으로는 영업비용조차 보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법률구조를 이행할 변호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변호사 비용이 감소하더라도 법률구조를 수행할 변호사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에서는 법률구조 대상 자격에 대한 축소 또는 엄격한 제한에 대하여는 변호사 비용에 관한 문제만큼 심각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Hiil, 2014, pp.87-88).

제4절 법률구조의 발전방향

1.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

가. 소송비용 부담의 다양한 수단

법률구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재정적 한계에 따라 법률구조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사자 본인의 자기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민사 법률구조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법률구조 대상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으로 하여금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권리보호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변호사와의 사이에서 성공보수를 체결하도록 하거나, 변호사가 프로보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Hodges et al., 2010, p.20).

권리보호 보험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법적 분쟁에 있어 소송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독일의 권리보호 보험이 대표적인 예로서, 민사 법률구조 사건의 경우 승소를 하더라도 패소자로부터 상환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보수가 법률(독일 민사소송법 제91조 제1항 및 제123조, 변호사 보수법 제49조)에 의하여 제한되기 때문에, 변호사는 민사 법률구조보다는 권리보호 보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잉글랜드)에서는 자동차 보험 또는 화재 보험 등에 미리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 특약을 규정하여 덤으로써,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물론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충당할 뿐만 아니라, 분쟁 후 성공보수 등에 대하여도 지불하도록 하여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성공보수는 승소한 경우에 인용된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변호사 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패소한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미국의 전면 성공보수(Contingent Fee)가 있다. 한편 영국의 조건부 성공 보수(Conditional Fee Arrangements)는 승소한 경우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시간당 요금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을 기준으로 최대 100%까지 가산을 인정하고, 패소한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에 대한 패소자 부담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패소하면 패소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위험이 있는 바, 조건부 성공 보수를 체결할 때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소송비용에 대한 사후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후 보험료는 당사자 내지 변호사가 부담하고 있다.

소송비용에 대한 사전 권리보호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예측가능성을 중시하고 변호사 비용을 제어하고 소송비용을 억제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조건부 성공 보수와 사후 권리구제 보험이 결합하는 경우, 원고는 패소한 경우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지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소송 활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원고의 변호사는 과도한 소송 활동을 실시하게 되며, 승소한 피고의 변호사는 더 많은 성공 보수를 청구함으로써 패소한 원고의 보험 회사에 대해 소송비용을 가증시키는 경향이 있다(Tuil & Visscher, 2010, p.92). 제3자에 의한 소송비용의 제공은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해당 소송과 무관한 제3자(개인 또는 단체)가 당사자의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감정인 비용 및 기타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또는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판결의 인용 금액 또는 합의에서 정한 금액에 따른 일정액을 제3자에 대하여 상환한다.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제3자는 당사자에게 제공한 소송비용을 상환하지 않는다. 또한 승소한 상대방의 소송비용에 관해서도 일정한 경우 제3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소송비용의 제공에 대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변호사는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아 소송을 수행하지만, 화해, 소의 취하 등의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합의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제3자는 개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 회사, 파산 관리 회사뿐만 아니라 은행, 투자 회사 및 헤지 펀드 등이 보통이다. 새로운 시장에서 수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등 상당한 자금력과 전문성 및 조직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제3자에 의한 소송비용의 제공은 원래 파산관재인이 파산 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되었던 것이다. 제3자에 의한 소송비용의 제공은 법률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소송 및 중재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집단 소송의 경우에도 원고가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공보수의 경우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좌우되지만 제3자에 의해 소송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와 관련된 위험은 제3자에게 전가된다. 제3자에 의한 소송비용의 제공과 성공보수 혹은 민사 법률구조는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소송비용을 조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Garber, 2010, p.1).

나. 법률구조에 대한 재정적 한계와 새로운 법률구조 방법

일반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조달받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에 있어 중요하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패소 위험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과 관련된 위험을 감경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패소자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위험이 높다. 그러나 상대방이 화해(settlement)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했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화해의 신청 금액보다 판결의 인용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패소 당사자에게 청구 할 수 없다(1998년 민사소송규칙 제36조). 이러한 의미에서 영국에서의 화해의 신청은, 법원에 의한 당사자의 합의 형성을 도모하려고하는 것은 아니라, 각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소송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

당사자의 자력과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국에서 민사 법률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사 법률구조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력이 요구되고 및 승소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한다. 패소한 경우에도 법률구조의 수급자는 승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영국은 1980년대까지 대부분의 중산층이 민사 법률구조를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법률구조 예산이 점차 감소하였기 때문에 자격이 엄격화된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는 중간소득층은 민사 법률구조의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영국은 조건부 성공보수를 민사 법률구조의 대안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기존에는 패소자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성공보수는 승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였다. 그런데 1999년 사법에의 접근 방법(Access to Justice Act of 1999)에 의하여, 일반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성공보수 및 권리보호 보험료를 패소한 당사자에 대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27조, 제29조). 이와 같은 민사 법률구조의 대안이 인정됨에 따라, 법률구조의 수급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의료 분쟁을 제외한 각종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민사 법률구조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영국은 전후 사회보장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의 하나로, 민사 법률구조의 대상과 예산 규모도 확대 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승하는 법률구조 예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 상담에 대한 비용 지급 도입, 민사 법률구조 수급 자격의 엄격화 등의 다양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사·가정 사건에 대한 예산은 계속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법률구조 예산은 형사 사건 때문에 증가되어 왔다(Legal Services Commission, 2012, p.61) 한편 민사 법률구조의 수급 자격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기 때문에 사법에 대한 접근을 실현하는 수단은 사회복지국가의 이념에 바탕을 둔 민사 법률구조로부터, 권리보호 보험, 성공보수 또는 제3자로부터의 소송비용 제공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다.

영국의 2012년 법률구조범죄인양형처벌법(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of 2012: LASPO)은 재정 건전화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 법률구조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대금지급 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일차적으로 성공보수 혹은 권리보호 보험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민사 법률구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도록 하였다(UK Ministry of Justice, 2010a, §4.25, §§4.163-4, 169). 이미 1999년 법률구조개혁법에 의하여 의료소송 이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사 법률구조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12년 법률구조개혁법은 의료소송의 경우에도, 태아에 대한 손해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민사 법률구조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의료소송 등 민사 법률부조에서 제외된 사건에 관해서는 성공보수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영국 항소법원의 명령에 따라 잭슨 경은 소송비용의 문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2010년에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조건부 성공보수가 체결되어 있는 교통사고 사건이나 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승소한 당사자의 변호사와 패소한 당사자의 보험회사 사이에 사후 보험료 및 성공보수(시간급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가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이후 사후 보험료도 상승하고 있다고 하였다. 잭슨 경은 1999년 법률구조개혁법의 시행 이전과 같이 사후 보험료를 패소자로부터 상환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원고는 조건부 성공보수를 체결하고, 패소한 경우에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료 및 성공보수는 패소한 피고의 보험 회사로부터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승소 당사자의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억제하는 요인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도 사후보험료와 마찬가지로 패소 당사자의 보험 회사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패소자로부터 상환해서는 안된다고 제안한 것이다. 잭슨 경은 패소자로부터 사후보험료 및 성공 보수를 상환하지 않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대신에 재산적 손해의 경우 그 배상액의 10%를 더 인정해주는 것이다. 교통사고 등과 같이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에 관한 상대방의 소송비용 지불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을 도입하고, 승소한 당사자에게 상환할 성공 보수를 일실 이익 등을 제외한 손해 배상액의 25%로 제한하는 것이다.

잭슨 경의 이러한 제언에 대해서는 사후보험료 및 성공보수를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상환하는 것 자체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대체 조치를 논할 필요가 없고, 피고에 대해서만 패소자부담 원칙을 인정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화해 신청을 할 경우에는, 비록 원고의 소송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령할 여지를 인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의 합리성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와 피고 보험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2012년 LASPO은 잭슨 경의 권고를 채택하여(UK Ministry of Justice, 2010b, Cm7947).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상환을 인정하지 않고, 의료 소송에 관하여는 보험료

의 환급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46조). 승소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성공보수의 상환을 마련하고 있기(동법 제44조) 때문에 변호사로 하여금 의료소송 등 복잡한 사건을 수임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민사 법률구조의 예산에 한계가 있는 이상, 권리보호 보험, 성공보수 및 제3자에 의한 소송비용의 제공 등 소송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 혹은 교통사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원고가 금전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전면적인 성공보수 제도가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다(Hodges et al., 2010, p.537). 그렇지만 비금전적 청구에 관한 소송비용의 적절한 조달 수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모든 사건 유형에 상응하는 소송비용의 조달 수단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Hodges et al., 2010, p.111).

한편 소송비용을 누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를 정의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지고 있다. 소송비용을 당사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지 또는 제3자로부터 조달하고 있는지의 구별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자금은 물론 은행을 통하여 차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률구조 수급자도 자격 요건에 따라 분담금을 당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국고 지출과 자기 부담이 병존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성공보수제 및 제3자로부터 소송비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보험회사 등 제3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제소할지, 화해할 것인지 또는 재판 이외의 분쟁 해결절차에 의한 해결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당사자와 제삼자의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영국의 2012년 LASPO는 가정폭력에 관하여는 민사 법률구조의 우선 영역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가사 사건은 중재(mediation)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민사 법률구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UK Ministry of Justice, 2010a, §§4.64-4.73).

이러한 영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소송비용의 부담 측면에서도 법률홈닥터를 통한 분쟁의 사전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법률홈닥터에 의해 소송의 제기, 화해 등의 절차에 대한 상담과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송비용과 관련한 부

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률홈닥터를 통하여 대체적 분쟁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으며 분쟁의 신속한 해결로 사회적 갈등 비용 또한 최소화시킬 수 있다.

2.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확대

가. 대체적 분쟁 해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있어서는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가 중시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분쟁의 신속하고 저렴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중재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한 해결이 중시되고 있다. 재판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반면, 대체적 분쟁 해결은 당사자 본인이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 형성 과정이 중요하고, 당사자의 필요성과 관심에 따라 실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금전 배상 이외의 유연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등 재판 절차와 비교하여 당사자의 만족도가 일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호주 등의 민사 사법제도 개혁은 사법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재판 절차의 신속화, 소송비용의 억제와 함께 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EU 각국도 국제분쟁에 있어 사법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민사 및 상사 사건에 대해 대체적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침을 제정하였다.

사법에 대한 접근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불필요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UK Ministry of Justice, 2010a, §2.13) 일면 서로 모순되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분쟁절차에의 적극적 참여, 신속한 분쟁 해결 및 소송비용의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체적 분쟁 해결은 사법에의 접근을 보다 충실히 실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사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상사 사건에서도 법원은 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1998년 민사 소송 규칙을 통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 이외의 분쟁 해결 절차를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제소 전에도 대체적 분쟁 해결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에 민사조정위원회(Civil Mediation Council)를 설립함은 물론 중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재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5년에 당사자 및 대리인을 위해 중재 이용 상담을 마련하였다. 당사자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상대방의 화해와 대체적 분쟁 해결의 이용을 거절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부과하였다(1998년 민사소송규칙 제26.4조, 제44조).

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한 법률구조의 확대

영국의 1996년 가족법은 이혼절차에서 불합리하게 높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송보다 상담 및 중재 이용을 장려하고, 가사 사건에 대한 중재의 경우 법률구조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법률구조 예산의 증가로 정부가 중재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 법률구조 예산의 삭감이나 민사 재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재를 장려함으로써 보다 쉽고 저렴한 방법으로 분쟁 해결을 유도하고 있지만, 중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정책적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재는 어디까지나 재판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며, 본래 민사 재판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재를 강조하고 있는데, 중재가 단순히 민사 법률구조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대체적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제공과 법률 상담이 중요하다. 호주에서는 비영리 법인인 커뮤니티 법률 센터(Community Legal Centre)가 경제적,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에게 정보 제공, 법률 상담 및 대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체적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체적 분쟁 해결을 운영함으로써 분쟁 당사자들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영국에서도 대체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과 법률 상담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화 상담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과 상담의 적극적인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UK Ministry of Justice, 2010a, §4.270, §4.283). 그러나 이와

같은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이용이 기존의 대면에 의한 법률 상담을 대체하고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적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제공과 법률 상담이 중요한데 우리의 경우 법률홈닥터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법률홈닥터가 경제적,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에게 정보 제공, 법률 상담 및 대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률홈닥터는 대체적 분쟁 해결에 대한 대면 상담은 물론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바, 분쟁에 대한 사전적 예방은 물론 분쟁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담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하여 법률구조와 관련된 예산을 절감하고 경제적,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법률구조를 실행함은 물론 분쟁의 조속한 해결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홈닥터를 통하여 대체적 분쟁 해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법률구조의 운영 기관의 독립성 확보

영국은 법률구조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제공하는 소송대리 및 법률 상담에 대한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되지만, 법률구조를 운영하는 주체는 변호사의 전문가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무변호사(solicitor)협회가 실시하고 있다.

한편 대처 정권 하에서 제정된 1988년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의 운영 주체로서 독립행정법인인 법률구조위원회(Legal Aid Board)를 설치하여, 법률구조의 운영 주체와 법률서비스의 제공 주체를 분리하는 동시에, 동 위원회에 법률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계 인사들도 참여하도록 하였다. 대처 정권 하에서는 의료, 교육 등 공공 부문에서도 시장 원리의 도입을 강조하여 법률구조에 대하여도 효율성과 질적 충실도를 도모하였기 때문이다. 법률구조의 개혁에 대하여 오로지 법률구조 운영 주체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공공사업 부분에서와 같은 과감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률구조에 따른 운영비와 사무 작업의 증가로 사무변호사협회에서 법률구조를 운영하는 것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독립된 기구의 설치에 이른 것이다.

1997년 총선에서 블레어 노동당 정권이 탄생하자, 법률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이 이루어졌다. 1999년 법률구조개혁법은 일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사 법률구조 사업(특히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비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과, 지역의 요구와 우선 사항에 따라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하에 법률구조의 운영 조직 및 대상에 대한 개혁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학교, 건강 보험 등의 공적 부문의 효율성과 품질 강화를 중시하는 당시의 사회적 환경에 강한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법률구조가 기능 부전에 빠진 가장 큰 원인으로 변호사의 전문가 직업의 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 이와 같은 1999년 법률구조개혁법에 따라 법률서비스협회(Legal Services Commission)가 법에 근거하여 새로이 설치되었고, 법률구조위원회를 대신하여 법률구조의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법률서비스협회는 일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요구사항 및 우선 사항에 따라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법률서비스협회는 각 지방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 및 전국적인 법률구조 계획 수립 및 실시, 자금의 운용, 계획에 대한 진척 상황 및 지출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서비스협회는 기존의 민사·가사 법률 지원을 통합한 지역사회 법률서비스 및 형사 법률구조를 통합한 형사 소송 서비스의 운영 및 예산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법률서비스협회는 대법원이 미리 책정한 지역사회 법률서비스 예산에 대하여 우선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 배분을 실시한다. 2007년부터는 법무부가 대법원을 대신하여 법률구조의 정책 결정 및 자금 제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 법률서비스에 관한 정책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법률서비스협회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법률서비스협회의 중앙 집권적인 정책 형성 및 예산 배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예산 배분이 유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회계감사원은 법률 상담 및 소송대리에 대해 자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후 2010년 총선에서 보수당과 자유당의 연립 정권이 탄생하자, 법률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우선 법무부에 의한 법률구조 정책 결정과 법률서비스협회의 예산 배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간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민사 법률구조의 개별 사안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법률구조의 정책 결정을 둘러싼 법무부와 법률서비스협회의 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민사 법률구조 및 형사 법률구조에 대한 우선 결정 및 법률구조에 대한 거버넌스 수립이 필

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이 보고서는 ①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거버넌스와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할 것, ② 정책 결정과 책임을 일체화하기 위해 법률서비스협회를 행정기관의 사업부에 통합하는 방안, 법원에 통합하는 방안,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영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고, ③ 민사 법률구조 및 형사 법률구조에 대한 예산 분리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법률구조 정책 및 재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독립행정법인인 법률서비스협회를 폐지하고 법률구조를 법무부의 한 부문에 통합하는 입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LASPO에서 법률서비스협회를 폐지하고(제38조), 법률구조의 운영 주체를 법무부의 사업부에 통합하였다(제37조). 이제 법률구조는 정부의 책임 하에서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개별 법률구조 사건의 처리에 있어 독립성·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특히 2012년 LASPO은 민사 법률구조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구조의 수급 결정의 판단에 있어서 중립성 유지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영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만일 법률구조공단에 대하여,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이유로, 통폐합, 민영화 등의 정책적 결정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구조의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무부 소속하에 법률홈닥터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에 있어 효율성과 질적 수준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소결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영국 등 유럽 국가와 호주, 캐나다 등의 많은 나라에서는 법률구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 실업자, 사회적 약자, 결손 가정, 노령인구 등에 대한 법률지원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법률구조 예산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이상, 권리보호 보험, 성공보수제, 프로보노 및 제3자에 의한 소송비용의 제공 등 다양한 소송비용 조달 수단이 등장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은 시대적 요청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구조 대상자의 확정, 법률구조의 대상을 재판 및 법률 상담에 한정할 것인지 여부, 재판이외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확충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영국은 2012년 법률구조 개혁을 통하여 민사 법률구조의 대상을 한정하고, 성공보

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소송비용의 제공 등 민간 자금의 활용, 기존의 소송대리에서 대체적 분쟁 해결로의 전환,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의 주체를 독립행정법인으로부터 법무부의 한 부서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제도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법률구조의 개혁은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시도된 것으로 향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법무부 소속으로 법률홈닥터를 새로이 시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구조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바, 법률구조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점에서 외국의 법률구조 개혁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송비용의 부담 측면에서 법률홈닥터를 통한 분쟁의 사전적 해결이 중요하다. 또한 법률홈닥터를 통하여 대체적 분쟁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으며 분쟁의 신속한 해결로 사회적 갈등 비용 또한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하여 법률구조와 관련된 예산을 절감하고 경제적,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법률구조를 실행함은 물론 분쟁의 조속한 해결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홈닥터를 통하여 대체적 분쟁 해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제 6 장

취약계층 지원 법률구조 제도 발전 방안

제1절 법률복지 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제2절 법률복지 지원체계의 홍보 개선

제3절 법률교육의 확대 및 부대비용 부담 완화

6

취약계층 지원 법률구조 제도 << 발전 방안

본 연구는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르면, 이는 법률복지 발전 방안이라 칭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지금까지 법률복지, 또는 법률구조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함에 있어서 ‘법률상 구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국민에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에 개입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왔다(호문혁, 조국, 2006; 이상윤 등, 2008, p.13 재인용). 이 과정에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수요자가 경제적인 사정이나, 또는 수요자 본인이 문제를 적실히 이해하지 못한 이유 등에서 사법기관에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법률문제는 취약계층이 가지는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즉, 그들이 가진 문제가 매우 전문적이고 난해하여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문제일 수 있지만, 반대로 한 두 개의 실타래만 풀어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 관련법, 사회복지 상담기법 및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최균 등, 2011, p.95).

본 연구는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소송구조 보다는 법률 상담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로 찾아보고자 하였다. 소송과 같은 법률서비스 영역에서의 전문적인 분야를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가족 분야, 금융·부채 분야, 고용·노동 분야 각 분야에서는 가장 전문적인 내용으로 법률지원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내용은 다양한 전문적 공급자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내에서 각종 정보와 자원을 매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수요자 중심성이라는 목적 하에 일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련의 체계를 살펴본다. 법률구조 제도 발전 방안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 <표 6-1>과 같은 방식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표 6-1> 법률복지 발전 방안 자문회의 개최 내역

번호	일정	대상	참석자
1차	2017년 7월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자문회의	프로보노 센터장
2차	2017년 8월 2일	희망복지지원단 자문회의	희망복지지원단 4인 (인천 부평구청, 안동시 옥동주민센터, 전주 완산구청, 전주 덕진구청)
3차	2017년 8월 9일	법률홈닥터 자문회의	법률홈닥터 5인 (서울시협의회, 서대문구, 종로구, 안산시, 김해시)
4차	2017년 8월 11일	공익변호사 자문회의	분야별 공익변호사 3인
5차	2017년 8월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자문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 2인(발전기획팀장, 소속 변호사), 마을변호사제도 참여 변호사 1인(천안시)
6차	2017년 11월 20일	고용분야 자문회의	대구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배치 법률홈닥터 1인
7차	2017년 12월 6일	금융분야 (서면) 자문회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선임,
8차	2017년 12월 7일	자활분야 자문회의	희망복지지원단 3인 (군산시청, 금산군청, 서천읍사무소)

자문회의는 통합사례관리 등 취약계층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을 우선 묻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어려움을 밝히도록 하였다. 연구진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법률홈닥터 등을 면담하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제1절 법률복지 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1.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 체계 필요

가. 취약계층 중심의 법률복지 지원 체계 강화 필요

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취약계층을 상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필요하면,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해당 시군구에 고문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상담하고,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사례를 위임하고 있다. 즉, 문제가 소송 과정으로 진행될 경우에 최종적인 해결과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관련 상담 등 전문분야의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분야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는 법적인 용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본인의 문제가 어떠한 법률적 쟁점 사안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일지는 몰라도, 일반적인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취약계층 대상의 서비스 공급체계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취약계층은 물적·인적 자원이 없는 상황이므로 법률구조공단의 정형화된 공급체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서류를 작성해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 및 각종 증빙자료의 청구 과정을 취약계층이 직접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사례관리 단계에서 힘들게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선 복지현장에서 법률관련 문제를 다뤄본 이들의 중론이다.

한편으로 현장의 사회복지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은 공무원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 지난 10여 년간 사회복지 현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경험한 이들은, 법률지원 체계의 조직이 획일화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업무 협조가 쉽지 않다는 한계도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적인 법률지원 체계는 정형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지 수

요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체계는 아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이 어떤 분야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난 이후에야 필요한 상담, 서류작성, 소송과정까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이 법률 분야는 그 전문성 때문에 진입이 어려우며, 그래서 취약계층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취약계층을 일선에서 상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의견은 취약계층이 요구하는 법률적인 문제 중에서 상당수는 간단한 수준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서만 보내도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하나의 행위에 상당한 과정이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적인 법률지원 체계에서의 일상적인 상담은 어렵고 내방고객만 상대하려고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²⁹⁾ 또 각종 소송 관련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 후 접수해야 하는 과정도 매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다.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취약계층은 간단한 신청서라도 본인이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그 자체로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는 별개로 수요자 중심의 현장 접근성이 높은 형태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지난 2011년 법률상담터가 도입되고, 2013년 마을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법률상담터 제도가 취약계층이 일상적인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군·구청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취약계층과의 대면 접촉 가능성을 높였다면, 마을변호사 제도는 전화 상담 등이 가능한 형태로 정서적 친근감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전자는 법무부 소속으로 1차 법률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고 있어 배치된 지역 내에서 매우 높은 상담실적을 보이지만, 후자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배치 지역은 광범위하고 상담실적 자체는 낮은 상황이다. 한편 법률상담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마을변호사 제도는 거주민인 경우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마을변호사 제도는 취약계층 중심의 법률복지 지원 체계로 이해하기

29) 물론 갈등의 소지가 풍부한 법률적인 문제는 간략한 상담이 어렵다는 점에서 전화를 통한 상담보다는 내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보다는 지리적 문제로 인해서 법률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대응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필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는 마을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의 배치 현황과의 중복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분야 쟁점 사안 사례집 등 작성 필요

특히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법률관련 서비스를 의뢰하였을 경우에 클라이언트와 변호사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일선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용어,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취약계층을 이해하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이 이해하는 수준과 다르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추는 상담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도 사회복지를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이라고 한다면, 수요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서비스 공급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화된 상담사례집의 작성이 필요하다. 즉, 취약계층이 다수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로서 민사 일반(부동산, 채권/채무, 매매/증여 등)의 상담사례집을 작성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취약계층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장애 판정, 장기요양 등급 인정, 소득평가액 제도, 부양의무자 자격 인정 등으로 인한 각종 사회보장의 수급 자격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다. 법률 상담, 법률교육 등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 확장을 통한 수요 창출

취약계층 중심의 법률복지 제공이 적정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

기될 수 있다. 일선에서 법률서비스를 복지적 관점에서 제공하는 전문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임에도, 이들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충분한가에 대한 의구심도 생긴다. 예를 들어,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솔루션 회의가 매주 1회 이상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매번 법률 관련 쟁점을 가진 사례가 등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보통 일선에서 솔루션 회의가 2~3 케이스를 담당하면서 열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체계적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률적 고민을 함께 해주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앞서 전문서비스는 법률서비스의 잠재적 이용자가 자신의 문제를 파악한 이후에 접근하는 문제를 가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복지 서비스 역시 사업의 내용을 어렵고, 복잡하게 설정하게 되면 수요자 접근성이 낮아진다. 반대로 법률 상담, 법률교육 등을 통해서 법률복지의 수요를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자문회의에서는 지금까지는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원기관에 신청을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이용률이 낮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수요자 중심으로 눈높이를 맞춰 법률서비스가 지원된다면 상당한 수준으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통합사례관리사는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였다. 즉, 이전에는 기초보장도 신청하는 것이 까다로웠지만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많이 확대되고, 또 여러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졌다는 것이다. 즉,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라. 법률서비스 제공 과정의 조력자 제도 필요

또한 법률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가 법률 전문가에게 대상자를 안내하는 과정까지는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 과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전문가가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 대한 조력자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법원, 경찰 퇴직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처럼 ‘법률복지상담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복잡한 소송

은 변호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인이 단순한 법 관련 내용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들이 활동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취약계층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에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은 전문적인 법률지원 체계보다는 사회복지협의회나, 자치단체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에 법률복지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법무부의 법률홈닥터는 이런 의도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지역의 복지네트워크(다양한 복지관, 협의회 등)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한편 법률홈닥터의 역할을 1차 법률서비스(법률 상담·정보 제공, 법 교육, 소송구조 알선, 분쟁 해결 방안 및 법률문서 작성방법 안내 등)를 확대하여, 법률관련 제 문제 과정의 지원자로 설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전문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법률복지 지원체계 구축 필요

취약계층 법률구조 발전 방안을 논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서비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모델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책 대안의 한 방향은 이러한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공급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공급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질 것인가, 통합성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스페셜리스트인가, 제너럴리스트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발생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한 업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 폭력의 문제나, 개인파산, 회생 등의 문제를 다룬다.

그런데 법률복지의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매우 복잡한 것은 아니고, 또한 매우 전문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즉,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작은 실타래를 풀어주면 된다는 인식이 많다. 한편으로, 일선의 통합사례관리사 등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행정관료화 된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전문성을 강조하다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가 정확히 그 분야에 해당해야만 도움

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초기 상담에서 거부당했던 경험들이 이런 인식을 키운다. 그래서 전문성을 버리게 되면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다. 오히려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시·군·구청의 일반 업무 진행 중에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연계하는 것은 전문성에 따른 접근의 두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렇지만 전문가 영역으로 작동하더라도 업무 간 연계가 잘 이뤄지는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상담서비스(채무조정, 재무상담, 불법추심상담 등)를 지원하고 있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서민채무자대리인, 기타(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소송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시·군의 무한돌봄센터에서 통합사례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참석하여, 대상자가 채무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문적인 업무 처리 기관과 패스트 트랙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가 들어갈 경우에는 우선 처리하는 방식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서울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와 연계를 하고 있는데, 센터 내담자에게 서류 준비를 시키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담사에게 문의하며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발급하고, 팩스로 받아야 하는 보험관련 서류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서류는 센터의 팩스를 통해 센터에서 받아 놓는다고 한다. 그리고 서류준비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파산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센터의 소견서와 서울 회생법원 패스트 트랙 의견서를 준비하고, 센터의 서류준비까지 완료되면 공단의 담당자에게 접수 예약을 한다.

법무부도 이렇게 마을변호사와 법률구조기관과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마을변호사의 상담 후 구조요건을 파악하여 구조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축된 연락망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공단에 송부하면, 신청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직접 주민에게 연락하여 구비서류 안내, 상담일정 예약 등 절차를 진행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법무부,

2015).

그러므로 1차 법률서비스와 소송구조로 연계되는 전체적인 법률구조 체계 하에서 1차 법률서비스 제공기관과 전문 법률구조기관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사회복지상담공무원이 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하는 경우 상담접수 방법을 안내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법률홈닥터가 관련 내용을 상담하고, 소송구조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건을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직접 의뢰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3. 지역의 법률 및 권익보장 필요에 따른 법률홈닥터의 배치

본 보고서에서는 앞서 제시한 법률구조 발전 방안의 두 가지 제안, 즉 ‘취약계층과 대화가 통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필요’, ‘전문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법률복지 지원 체계 구축 필요’에 대해서 현재 정책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즉,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마을 변호사 등이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중 후자의 경우에는 제도적 개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전자의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 제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사례관리는 지역별로 활동의 편차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즉, 지역 내 통합사례관리가 열심히 이뤄지는 지역은 법률홈닥터의 참여를 요구하는 솔루션 회의도 자주 개최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솔루션 회의 자체가 자주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솔루션 회의는 2015년 1월~6월 기간 중에는 시군구 단위에서 월 5.14회 가량 개최된 것으로 알려지며, 2016년 1월~6월 기간 중에 월 1.85회 개최된 것으로 알려진다(이현주 등, 2016, p.93). 사회복지 분야는 기본적으로 대인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자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있고, 지역의 복지자원을 활용할 의지가 높을 경우에는 법률복지 서비스와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법률홈닥터의 배치에 있어서도 일선 복지현장의 수준을 고려한 배치가 검

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복지 관련 업무가 많은 지역에 법률홈다터를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6-1] 통합사례관리-초기상담지

초기상담내역															
상담번호					상담일자	201*년 *월 *일						() 자 상담			
상담자	○○○				소속	**동				연락처					
상담경로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요청방문 : () <input type="checkbox"/> 사제관리자의 발원(동시회담) <input type="checkbox"/> 기간 내 의뢰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의뢰 () <input type="checkbox"/> 동장 및 이웃주민 등() <input type="checkbox"/> 129콜센터 이관() <input type="checkbox"/> 좋은이웃들() <input type="checkbox"/> 병장부의뢰() <input type="checkbox"/> 보건소의뢰() <input type="checkbox"/> 복지사각지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담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기관 방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정방문 <input type="checkbox"/> 내방 <input type="checkbox"/> 전화														
대상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락처	가정전화 : **-*-*-* 휴대전화 : ***-*****				주소	<input type="checkbox"/> 동분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input type="checkbox"/> 실거주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가구유형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장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가구 <input type="checkbox"/> 조손가구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부모가구 <input type="checkbox"/> 새터민가구 <input type="checkbox"/> 공동체가구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가구 <input type="checkbox"/> 노인부부가구 <input type="checkbox"/> 청장년인가구 <input type="checkbox"/> 부부중심가구 <input type="checkbox"/> 이혼모부가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유형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사글세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 무상임대 <input type="checkbox"/> 기타(우허거, 고시원 등)														
가족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 여부	장애 등록	가구원특성 생애 주기	대상 특성	학력	직업	대상자가 생각하는 가구원별 문제				개인별 전화번호	
										문제	문제원인	원하는 지원	우선순위		
	본인	○○○		동거	-	중장년		중졸	일용직	11	알콜중독	생계비	1		
	자	△△△		동거	-	청소년		중재학	-	14	학업성적부진	도사학	2		
상담내용 - ○○○(남)은 전처와 노점을 운영하여 영세한 생활을 하다가, 부인의 부채관련 문제로 이혼하고 자녀(남) 1명을 양육하고 있는 부자세대임. 이혼 후 자녀는 인척에게 맡기고 홀로 노숙과 성매매생활을 해오다 자살의 도움으로 월세보증금 3백, 4백만원(월)을 얻어 다시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 지속적인 음주 및 자살기도로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정신건강센터, 알콜상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음급상황이 해소되었으나, 최근 또다시 우울감과 함께 음주문제를 보이고 있음. - 가족, 자녀 : ○○○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 의해 양육되었으며, 부양의무자인 부는 주민등록상으로도 행방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할. 이혼한 전처는 재가한 상태임. 부자의 애착관계는 양호하며 자녀가 부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가사 등 일상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주거 : 자인의 매대로 보증금 없이 월 25만원에 거주하여 주거성능은 전반적으로 양호함. 자녀가 ○○○구 ○○○동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면서 인근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함. - 경제 : 비정기적인 일로 가구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적 지원의 욕구는 표면적으로 없음. - 고용, 직업 : 사례관리 선정 당시, 최저임금 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다 신고하였으나 이후 재상당시 실제 소득이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하였음. 최근 남편이 물리면서 경정기 심해 일거리를 구하기가 더 어렵다고 함. 자활사업 참여 등은 희망하지 않음. - 신체, 정신건강 : 만성 알콜중독 및 이로 인한 신체적 질병, 자살기도 등으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후 퇴원함. 이후 음주관리를 하며 문제없이 잘 지내다가 최근 실을 비관하며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음으로 이로 인해 근로활동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상생활 : 비음주시 큰 어려움은 없음. 가사활동 수행함. - 교육 : 자 △△△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부모 표면적인 갈등은 없으나, 부모의 경제입원, 자살기도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학업성적이 매우 부진함.															
주요문제	<input type="checkbox"/> 인연해, 방임, 기타 안전의 문제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관계(친인척, 이웃, 동료관계 등)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활환경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제적 문제 <input type="checkbox"/> 법률 및 권익보장 문제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유지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 및 학습의 문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가족생활보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복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통합사례관리대상 / 서비스 연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통합사례관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서비스연계)				<input type="checkbox"/> 가족생활 문제(가족관계, 보육, 간병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취업 및 직무수행상의 문제										
상담결과 판정의견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통합사례관리대상 / 서비스 연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통합사례관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서비스연계)														
상담자 종합의견	일몰문제로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개입했던 사례로, 당시 음급상황 해소되어 사례관리 종료하였으나, 최근 문제상황이 재발하여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 및 주거지원, 자녀학습지원을 통한 안정적 생활유지를 돕기 위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재추천하고자 함.														

자료: 보건복지부(2017e, p.162).

[그림 6-1]은 현재 통합사례관리 진행에서 초기 사정 과정에서 상담 기록지이다. 여기에는 ‘주요문제’를 적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법률 및 권익보장 문제’를 기록할 수 있다. 이때 법률 및 권익보장 문제는 법, 옹호, 인권 등과 관련하여 권리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상의 초기 상담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인 행복e음의 사례관리 영역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를 통계화하여 추출하면 해당 지역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로 법률적 문제를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법률홈다터 배치 기준 수요자 욕구 정도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현주 등(2016)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통합사례관리에 참여하는 가구원의 주요 문제를 읍면동 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률 및 권익 보장 부분은 2015년 1월에는 0.24건, 2016년 10월에는 0.15건의

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략 4개 동 또는 7개동에서 월 1건 정도 법률 및 권익 보장과 관련한 문제가 등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전국의 약 3천여 개 행정동 단위로 보면 매월 약 430건에서 750건 정도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한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6-2〉 가구원별 주요문제(읍면동 단위)

(단위: 건)

	2015.1.	2016.10.
안전	1.21	0.71
건강	5.28	7.23
일상생활	24.06	13.57
가족관계	0.42	0.57
사회적관계	0.36	0.51
경제	20.56	21.18
교육	3.04	1.07
고용	0.33	0.30
생활환경	1.18	1.48
법률권익보장	0.24	0.15
기타	4.44	3.50

주: 가구원별, 읍구영역문제별 카운트
자료: 이현주 등(2016, p.90).

물론 법률홈닥터의 배치 문제는 매우 첨예한 문제이다. 법률홈닥터가 법률 소외계층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을 고려하면, 마을변호사 등이 배치되지 않는 최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필요도 물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은, 즉 법률시장 자체가 매우 협소한 지역일 수 있어서 법률홈닥터의 배치 실익이 매우 낮아질 수 있다. 즉, 적절한 수준에서 법률복지 필요와 법률서비스 공급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배치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현재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이뤄지는 통합사례관리를 중심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이는 어느 정도 통합사례관리의 운영 방식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통합사례관리 회의가 개최되더라도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필요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법률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식될 경우에만 법률홈닥터 또는 해당 지역의 자문·고문변호사의 참석을 요청하거나, 또는 마을변호사의 상담 결과를 사례관리회의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통합사례관리 회의에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경우에 법률홈닥터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법률적 욕구 해결에도 개입이 필요

본 연구는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개선을 목표로 일선의 현장 전문가를 만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 사례관리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특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상대하는데 있어서, 법률적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전체가 사례검토 회의에서 다뤄지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법률적 조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률홈닥터가 사업을 기획하여, 지역의 복지담당 공무원의 애로를 해결하는 사례도 있었다. 무연고자의 잔여재산 처리가 공무원에게는 매우 복잡한 행정을 요구하는데, 일본에서 유행하였던 엔딩노트를 벤치마킹하여 자필유언의 형태를 통해 유언집행자를 설정하는 작업을 법률홈닥터가 함께 작업한 것이다. 이것은 법률홈닥터가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짓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판단된다.

제2절 법률복지 지원체계의 홍보 개선

법적 쟁점 사안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를 염두에 두고 관련 내용을 눈여겨보지 않는다. 본 연구의 수요자 실태조사에서도 하위층일수록 법률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으며, 또한 계약서 작성 시 관련 내용의 숙독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신에 특정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찾게 된다. 그런 점에서 법률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의 홍보는,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법률복지를 표방하는 법률홈닥터는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서 전국을 권역으로 나눠서 배치하고 있다. 즉, 법률홈닥터는 각 거점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권역의 다른 연계 자치단체에서 솔루션회의 또는 통합사례회의에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참여하고 있다. <표 6-3>는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사업 안내 책자에 소개된 법률홈닥터의 거점기관 현황표이다. 즉, 거점지역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있으니, 인접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표 6-3> 권역별 법률홈닥터 거점기관 현황(2014년 기준)

순번	지역	법률홈닥터 거점지역	연계 자치단체
1	수도권지역	안성시청	평택, 오산, 용인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 양평군
		안산시	화성, 시흥, 군포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의왕, 성남, 과천,
		광명시	부천, 서울 금천구, 안양
		남양주	구리, 하남, 양평, 가평, 의정부
		동두천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김포시	
		서울 은평구청	경기 고양
		서울 강서구청	
		서울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서울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서울 서대문구	강북, 노원,
		서울 종로구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서울시협의회(중구)	송파, 광진, 강동
		인천시 협의회(남동구)	서구, 계양구, 동구, 부평구, 중구, 남구, 연수구, 용진군
		인천 강화군	강화군
2	충청지역	태안군청	서산, 당진, 홍성
		천안시청	아산, 연기, 예산, 세종특별자치시,
		논산시청	청양, 공주, 계룡, 보령, 부여, 서천,
		대전 동구	충북 옥천군, 충북 영동군, 대전 대덕구
		대전사회복지협의회(중구)	충남 금산군, 대전 서구, 유성구

순번	지역	법률홈닥터 거점지역	연계 자치단체
3	경남지역	부산 사상구청	영도구 동구, 서구, 사하구, 부산진구, 중구, 북구, 동래구, 금정구, 강서구
		부산 남구청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광역시
		김해시 사회복지협의회	밀양, 양산, 창녕, 의령, 창원, 함안,
		남해군청	거제, 통영, 사천, 진주, 고성, 산청, 하동, 함양, 거창, 합천
4	경북지역	대구 수성구	중구, 남구, 동구, 청도, 군위, 의성
		대구 달서구	북구, 서구, 달성군, 구미, 김천, 고령, 칠곡, 성주,
		경산시청	경주, 포항, 영천, 영덕, 울릉, 울진,
		영주시청	문경, 상주, 안동, 봉화, 영양, 청송, 예천
5	전남지역	전남사회복지협의회(목포)	강진, 고흥, 장흥, 진도, 해남, 완도, 신안, 보성
		광주 서구	광산구, 북구, 나주, 영암, 함평, 장성, 영광, 무안
		광주 남구	동구, 광양, 순천, 여수, 곡성, 구례, 담양, 화순
6	전북지역	전북사회복지협의회(전주)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순창, 임실, 남원
		완주군청	군산, 익산, 진안, 무주, 장수
7	강원지역	강원사회복지협의회(춘천)	철원, 화천, 양구, 홍천, 횡성, 평창, 원주, 영월, 정선
		속초시청	고성,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인제
8	제주지역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자료: 보건복지부(2017e, p.259).

그런데 자문회의 과정에서 만난 많은 사회복지공무원은 법률홈닥터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통합사례관리 안내 책자에 법률홈닥터에 대해서 간단한 정도로만 소개되고 있었다.

먼저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법률홈닥터 제도가 권역별로 운영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홈닥터의 역할에 대한 공무원 대상의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법률홈닥터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방안, 특히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책자 등에 법률홈닥터 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복지박람회 등에 법률홈닥터를 소개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장통합정보망의 복지자원 통합DB에는 해당 지역의 복지자원 및 제공 서비스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해당 정보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이 법률복지 관련 자원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복지자원DB에 법률홈닥터 제도를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6-4〉 법률복지 관련 복지자원 통합DB 등록 내용

□ 주요 서비스 정리
○ 사회복지시설에서 법률 상담(53건), 무료 법률 상담(21건), 인권 처리, 법률교육 등이 각 4회 이상 등록됨.
○ 지자체 발굴 자원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123건), 법률 상담(73건), 법률상담(21건), 법률지원(19건),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자문, 무료 법률 상담지원 등이 각 5회 이상 등록됨.
□ 유사 서비스 현황
○ 대부분의 서비스명에서 ‘법률 상담’이라는 단어가 포함됨.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 법률 상담 및 지원, 권익보장 및 법률, 상담센터-법률 상담, 법률 상담서비스, 무료 법률구조 사업, 법률서비스 제공, 각종 상담서비스 등은 동일한 서비스임. 상담 부문에 따라 가정폭력상담 및 법률지원, 채무조정, 개인파산 관련 상담, 다문화가족에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 무료 가정법률 상담 사업, 법률/재정상담 등의 서비스명이 붙음.
○ 상담 이외에 상담기관 연계, 소송 진행, 소송 지원, 사건 조사, 고소, 무료 변호 등이 있음.

자료: 정해식 등(2014, p.209)

마지막으로 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 및 일반인들이 복지관련 서비스를 검색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홈페이지가 ‘복지ro’이다. 이 홈페이지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각 중앙 부처의 360여개 복지서비스 및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등록된 법률관련 지원체계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이 유일하다. 즉,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물론이고 법률상담소도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상담소를 필요한 법률복지 지원 체계를 ‘복지로’에 등록하여 취약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수 있는 지원체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28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그림 6-2] 복지ro '법률홈닥터' 검색결과



함께 만드는 복지

검색

주관 인기검색어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온라인신청

복지도움요청

부정수급신고

복지서비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찾기

간편 검색

상세 검색

민간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조회

복지서비스 등록 · 수정

나의 복지정보 조회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서비스 신청일 알아보기

복지서비스 신청서식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복지정책 제안

2017 Guide Book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례집

보건복지 관련 상담서비스

(국번없이) 129

민간 복지서비스

기업, 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아 이용해 보세요.

서비스	법률홈닥터		
기관명	법무부		
기간	2015-06-26 ~ 2099-12-31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02-2110-3000	이메일	

지원대상

-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신청방법

- 각 지역 법률홈닥터를 통해 신청(www.moj.go.kr 법률홈닥터 검색)

신청페이지 URL 주소

http://www.moj.go.kr

중앙부처 관련 인기 서비스

- 독립유공자 등 단순수훈유족생계부조금(제수비 ...)
- 고엽제 특별지원
- 민영교통시설이용(버스, 내항여객선, KTX 등)
- 도서관 여객선 운임지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지자체 관련 복지 서비스

-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 신문구독료
-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구비)
- 노인복지 노인교실운영지원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자료: 복지ro 홈페이지.

제3절 법률교육의 확대 및 부대비용 부담 완화

1. 취약계층 대상 법률교육 확대

본 연구에서 실시한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취약계층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서 이용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였다'이다. 그리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내용은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이었다.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조사」에서는 취약계층은 법률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조사」에서 법률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에 대해서 매우 어렵다는 응답은 전체의 39.9%,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은 55.5%를 차지했다. 즉 법률 관련 서비스의 이용은 쉽지 않다. 그리고 응답자 중 약 5%만이 평소 법률관련 교육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이 본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잘못 알고 있는 법률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간단한 대처로 해결할 문제를 키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 부대비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원 확보 필요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조사」에서 취약계층은 법률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액이지만 부대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대비용이 10만원 이하였다는 응답은 37명에서, 11만원 이상이었던 응답도 27명에게서 나타난다. 특히 복지수급자의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비용부담이 적었지만, 차상위 계층 등에서는 법률구조 사업 이용 비용이 오히려 크게 높아지는 상황이 확인되었다.

한편, 통합사례관리 등 일선 현장에서 법률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문제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 현재 일선 복지현장에서는 통합사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별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비용을 청구하거나, 또는 이러한 부대비용에 대한 외부 지원을 별도로 신청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문제로 인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있지 않았다. 즉, 법률적인 문제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

합사례관리 중에서도 특별한 개입이 필요한 사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비용의 문제로 인한 미개입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대비용의 문제 역시 체계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제 7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과 함의

제2절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과 함의

1. 법률구조 서비스 공급자 내용 분석

우리나라에서 법률복지는 국민에게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법률구조가 법률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법률복지는 보편적인 서비스 이용 가능성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법률복지의 측면에서 보자면 법률서비스의 이용 욕구 자체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할 때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³⁰⁾ 이러한 법률복지의 관점에서 보자면 법률구조 서비스의 공급자를 다양화, 다각화하는 것은 ‘법률소외 계층 해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구조 체계는 공급 측면, 재원 측면, 법률서비스의 형태 측면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서 법률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법률서비스 제공 방식은 수요자가 본인의 관련한 법적 쟁점을 이해하고 해당 법률구조 기관을 찾아가는 방식과 법률서비스의 제공자가 관련한 문제를 찾아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사회복지 영역에서 논의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복지영역의 각종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정작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법이다.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경우에도 각종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이러한 구조제도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상담원, 법률

30) 1995년 국무총리 산하 세계화추진위원회가 한 분과로서 사법개혁을 추진하였다. 여기에는 법조인의 수 확대(사법시험 합격자 증원) 이외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방안, 변호사 보수의 적정화, 공익법무관 제도 및 공공변호사 제도 등을 통한 법률복지의 확충을 제안하고 있었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p.26)

홈닥터, 마을변호사의 법률구조 공급체계를 분석하였다.

이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크게 소송구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 상담 등의 내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법률구조의 대상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인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상담원은 변호사가 배치되어 소송구조에 나서고 있으나, 업무 성과를 살펴보면 명칭과 같이 상담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었다.

1차적인 법률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찾아가는 서비스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법률서비스 이용의 지리적 접근성 문제를 낮췄고, 또 비용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을 낮추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2016년 기준으로 60명의 법률홈닥터가 연간 약 39천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해서, 마을변호사는 약 1200명이 최대 약 1만 여건의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어 전문적으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와 아닌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³¹⁾ 즉, 법률홈닥터는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방식이고, 마을변호사는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문제에 대한 법률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찾아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2.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법률서비스 현황 분석

우리 사회에서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 각 분야로 구분하였을 때, 법률구조 지원 체계는 상당히 갖춰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아동·가족 분야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부채 분야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혹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법률지원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제도가 작동하고

31) 2018년부터는 법률홈닥터가 65명 배치될 예정에 있어, 법률홈닥터를 이용한 법률 상담의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있으며, 그 외에도 소액채당금제도,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적인 문제가 가지는 특징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 이유로는 문제 및 상황이 심각해진 이후에야 법률적인 지원 체계가 작동한다는 점, 예방적 차원의 법률 상담 및 찾아가는 법률복지 지원에 미흡하다는 점, 법률복지 지원체계까지의 유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특히 전문적인 지원기간으로 서비스 이용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문 지원기관의 진입장벽이 높을 경우에는 지원체계의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는 보조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 분석

본 연구에서는 법률복지 및 법률구조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법률서비스의 욕구 및 이용 경험에서의 특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서 차상위 수급자 집단이 법률문제가 있을 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보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비용 부담이었다. 법률서비스의 이용 분야는 민사 일반이 가장 많았으며, 이용한 서비스 종류는 주로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이었다.

둘째,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이다. 법률구조 사업에 대해서는 다수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기초보장 수급자의 경우에는 들어본 경험이 많았다. 이러한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인지는 주로 시·군·구청 등 공무원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었다. 법률구조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기초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층은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한 경험이 50%를 넘었다.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8점을 보였으며, 타인에게 이를 추천하겠다는 의향도 88%에 가서 나타났다.

셋째, 법률복지 욕구에 대한 부분이다. 법률구조 사업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적정한 배치 규모에 대해서는 읍·면·동별 1인 배치가 가장 높았지만, 실제로 법률구조 사업을

경험해본 사람의 경우에는 시·군·구별 2인 배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률구조 사업에서는 전화 상담보다는 대면 상담의 선호가 높았으며, 법률구조 사업 담당자의 적절한 배치 장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 내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법률구조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설문 응답자가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이내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부담 가능한 금액은 20만원 미만 수준이었다. 종합해보면 법률구조 사업은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평소에 관련 업무를 보는 기관인 시·군·구청 근처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한 형태로 이뤄지는 것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었다.

4. 주요국의 법률구조의 이해와 전망

1980년대 이후 장기적인 경제 상황 변화에 직면하면서 유럽 각국과 미국은 법률구조에 대한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소송대리 지원제도의 틀에 따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법률구조 지원제도가 법정 중심주의에 지배되어 실제 사회에서 궁핍한 사람을 위한 진정한 구제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일본, 중국의 경우에는 민사 법률구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에는 법률구조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실행할 공익변호사를 확대하는 등 각국은 법률구조의 발전 상황에 따른 다른 대응을 하고 있었다.

법률구조 예산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이상, 권리보호 보험, 성공보수제, 프로보노 및 제3자에 의한 소송비용의 제공 등 다양한 소송비용 조달 수단이 등장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은 시대적 요청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구조 대상자의 확정, 법률구조의 대상을 재판 및 법률 상담에 한정할 것인지 여부, 재판 이외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확충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법무부 소속으로 법률홈닥터를 새로이 시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구조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바, 법률구조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점에서 외국의 법률구조 개혁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송비용의 부담 측면에서 법률홈닥터를 통한 분쟁의 사전적 해결이 중요하다. 또한 법률홈닥터를 통하여 대체적 분쟁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으며 분쟁의 신속한 해결로 사회적 갈등 비용 또한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법

률홈닥터 제도를 통하여 법률구조와 관련된 예산을 절감하고 경제적,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법률구조를 실행함은 물론 분쟁의 조속한 해결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홈닥터를 통하여 대체적 분쟁 해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을 위해 법률복지 공급자 조사, 취약계층이 경험할 수 있는 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복지서비스·법률서비스의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이 경험하였고 요구하는 법률복지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특히, 통합사례관리, 각종 상담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률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법률구조 제도와 연계하였던 경험이 있는 일선 현장의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법률복지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한 법률복지 제도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공급자가 필요하다. 법률문제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이며, 그 하위에 다양한 세부 분야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 지원 체계에서는 취약계층이 상담의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각종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진입장벽이 높다. 무료 법률 상담 등 금전적 지원,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의 상담을 통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취약계층에게는 전문분야로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는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취약계층을 이해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공급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법률홈닥터를 법률복지 수요가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확대 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럼에도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법률복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앞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 넓은 분야의 상담이 가능한 전문가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소송구조 또는 각 전문분야에서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셋째, 현재 법률홈닥터가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법률복지 필요에 따른 배

치를 검토해야 한다.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는 법률 및 권익보장에 대한 필요를 적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지역의 법률복지 욕구를 반영한 배치가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욕구와 더불어서 지역 내 활동하는 민간 변호사 등의 공급 수준을 비교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법률복지 지원체계의 홍보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법률복지 지원 체계의 양적 확대에 주력해왔다면,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다섯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교육의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부대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 고용노동부. (2017). 2017년판 고용노동백서.
- 고용노동부. (2017. 7. 3.). 노동위원회 법률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 무료 선임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7).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관계부처합동(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국무조정실. (2017. 4. 25.). 마을변호사, 우리 동네의 든든한 지원군.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국회사무처. (2012).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제311회 국회 정기회, 제 11호).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17. 12. 8. 인출.
- 기획재정부. (2017).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대한법률구조공단. www.alio.go.kr에서 2017. 11. 28. 인출.
- 길현중. (2014) 한국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일선 서비스 공급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김대홍. (2012). 법률구조 대상의 확대방안. 법과사회, 43, pp.135-164.
- 김성규. (2014)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31(1), pp. 21-36.
- 김은지, 장혜경, 황정임, 최인희, 김소영, 정수연, 성경.(2015).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지경, 이상준 (2015).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고용노동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완, 김문길, 이주미 외(2016). 저소득층 빈곤환경실태와 자활지원 연계방안. 연구16-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형길. (2006). 한국의 법률구조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전문자료실. http://www.klac.or.kr/file/html_file/010601_korea.hwp에서 2017. 12. 8. 인출.
- 대한민국 정부(201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대한민국법원. (2017).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help.scourt.go.kr에서 2017. 12. 8. 인출.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 민경식. (1997). 법률구조제도의 세계적 흐름과 동향-법률구조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의 관점에서. 법학논집, 제22집.
- 민경식. (2002). 법률복지 실현을 위한 법률구조제도의 개선방안. 중앙법학, 4(1), 7-34.
- 박근후, 조남택, 윤지현, 윤이환, 김수희. (2016). 임금채권보장제도 확대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사법 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 법무부 인권구조과. (2017. 5. 1.)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법무부 '법률홈닥터'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068764> 에서 2017. 12. 5. 인출.
- 법무부. (2015). 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 법무부. (2015. 6. 5.). '1마을 1변호사' 「마을변호사 제도」 순항 중. 법무부 보도자료.
- 법무부. (2016. 6. 2.).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 개최. 법무부 보도자료.
- 법무부. (2016). 20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법무부.
- 법무부. (2017). 2017년 법무부 업무보고.
- 법무부. (2017. 3. 8.) 마을변호사 배정현황(2017. 2. 27. 기준).
http://m.moj.go.kr/HP/COM/bbs_M/ListShowData.do?strNbodCd=noti2505&strWrtNo=15&strAnsNo=A&strFilePath=&strRtnURL=MWEB409020&strOrgGbnCd=100000&strOrgGbnCd_Home=100000&strThisPage=1&strSrchGbn=&strSrchWord 에서 2017. 11. 28. 인출.
- 법원행정처. (2002). 소송구조실무.
- 법제처. (201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에서 2017. 12. 8. 인출.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7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7c). 2017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www.bokjiro.go.kr>.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사법 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nifa.or.kr>.
- 서울시. (2017. 7. 7.). 서울시 마을변호사, 7월부터 424개 전체 동으로 확대 시행. 서울시 보도자료.
- 세계일보. (2015. 6. 10.) 법무부, SH·LH 임대아파트 주민 대상 무료법률상담.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50610002617> 에서 2017. 12. 5. 인출.
- 신승호. (2005. 10. 16.). 네덜란드의 법률구조제도. https://www.klac.or.kr/content/view.do?code=73&order=bcCode%20desc&page=3&pagesize=15&gubun=&search_value=&vc=35420에서 2017. 11. 30. 인출.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에서 2017. 10. 13. 인출.
- 여성가족부. (2015).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 (2017).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여유진, 김미곤, 정은희, 이주미, 정희선, 권지성, 김광혁, 김은지, 조준용, 황정미. (2016).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영국정부 홈페이지. gov.uk/guidance/civil-legal-aid-means-testing#eligibility-limits. 2017. 11. 30. 인출
- 오윤해. (2013).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연구: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KDI.
- 오은진, 이택면, 김현중 (2015).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여성취업지원기관 역할 정립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유재원 (2016).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 사업의 현황과 과제. NARS 현장조사보고서 제 47호. 국회입법조사처.
- 이동률. (2010). 소송구조의 현황과 개선방안. 민사소송, 14(2), pp.789-818.
- 이상윤, 최환용, 이세정. (2008).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구조제도의 체계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이재성, 안준기(2016).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고용형태별 비교분석. 산업관계연구, 26(1), pp.147-173.
- 이현주, 강혜규, 정해식, 전지현. (2016). 지역사회 자원관리·사례관리의 민관협력체계 연구(1) - 자원관리·사례관리의 민관협력 실태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일본 사법지원센터. (2011). 법률구조 통계 연보 2010년판. <http://www.houterasu.or.jp/cont/100180234.pdf> 에서 2017. 11. 30. 인출
- 장운성. (1998). 영국법률구조의 특성과 문제점. 법률구조, 통권 제24호.
- 전경숙. (2016).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후 현장변화와 대응체계의 개선과제. 입법과 정책, 8(1), pp. 475-503.
- 정재길. (1991). 일본의 법률부조제도와와의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성제 김학수박사 정년퇴임 기념호.
- 정해식, 정영철, 이현주, 박세경, 정은희, 우선희. (2014). 복지자원 관리·운영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중앙노동위원회 (2011). 부당해고 구제신청 분석을 통한 지역노동시장의 특성 연구.
- 천정아. (2014). 법률구조활동과 여성변호사의 역할. 이화젠더법학, 6(2), pp. 129-157.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2017). 센터 지원 현황. <http://www.youthlabor.co.kr>에서 2017.10.30. 인출
- 최균, 신동면, 장진용, 김희철. (2011).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한 서민 법률서비스 지원네트워크

크 도입방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코리아리서치. (2016). 2016년 법률홈닥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2차) 결과보고서.

통계청. (2017).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통계청 e-나라지표.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www.index.go.kr에서 2017. 12. 8. 인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각연도). 상담통계 자료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http://lawhome.or.kr>에서 2017. 12. 8. 인출.

허남순. (2015). 한국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미와 과제.

현대호·김명아. (2015). 2015 국민법익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호문혁, 조국. (2006). 법률구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개혁추진위원회, 49-65

황승흠, 조지만, 양천수, 김대홍, 박종현, 윤성현. (2016).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업의 활성화 방안.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황승흠(2012). 법률구조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재구성, 대한법률구조공단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황승흠. (2009). 한국사회의 민사 법률구조의 이념과 현실. 법학논총, 21(2), pp. 247-280.

황승흠. (2012). 법률구조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성. 법과사회, 43, pp. 71-106.

Amnesty International UK. (2016, Oct.). *CUTS THAT HURT-The Impact of Legal Aid Cuts in England on Access to Justice*.

Alves, C. (2010). *The Brazilian National Report prepared for the 2011 ILAG Conference*.

BBC News. (2013, March 20). Q & A: Legal aid changes. <http://www.bbc.com/news/uk-21668005>에서 2017. 11. 30.인출

Bernhard, A. (2002). *Take Courage: What the Courts Can Do to Improve the Delivery of Criminal Defense Services*. 63 U. Pitt. L. Rev.

Garber, S. (2010). *Alternative Litigation Financing in the United States*. Rand Corporation: Arlington VA.

Hiil. (2014). *Legal Aid in Europe: Nine Different Ways to Guarantee Access to Justice*. <http://www.alio.go.kr/popReportTerm.do?apbald=C0055&reportFormRootNo=10101>에서 2017. 11. 28. 인출.

Hodges, C., Vogenauer, S., & Tulibacka, M. (2010). *The Costs and Funding of Civil Litigation, Portland*. Oregon: Hart Publishing

Jie, G., & Hui, X. (2011). *China: The National Report of China prepared for the*

2011 ILAG Conference.

- Johnson, E. (2000). *Equal Access to Justice: Comparing Access to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Industrial Democracies*. 24 Fordham Int'l L. J.
- Johnson, E. (2014). *To Establish Justice for All(Volume3)*. Santa Barbara: Prager,
- Legal Services Commission. (2012). *Annual Report and Accounts*.
- National Audit Office. (2014, Jan.). *Implementing Reforms to Legal Aid*. 17 November 2014.
- Paterson, A., Regan, F., Goriely, T., & Fleming, D. (1999). *The Transformation of Legal Ai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hode, D. L. (2004). *Access to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hode, D. L. (2005). *Pro Bono in Principle and in Practic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The Guardian. (2014. 9. 9.) <https://www.theguardian.com/law/datablog/2014/sep/09/legal-aid-in-england-and-wales-what-is-changing>에서 2017. 11. 30. 인출.
- The Scottish legal Aid Board. (2012). *Annual Report 2011-2012*.
- Tuil, M., & Visscher, L. (2010). *New Trends in Financing Civil Litigation in Europe*. Massachusetts: Edward Elgar Publishing. Inc..
- UK Ministry of Justice. (2010a). *Proposals for the Reform of Legal Aid in England and Wales*.
- UK Ministry of Justice. (2010b). *Proposals for Reform of Civil Litigation Funding and Costs in England and Wales*.
- UK Ministry of Justice. (2013). *Explanatory memorandum to the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 (Consequential, Transitional and Saving Provisions) Regulations 2013*.
- UK Ministry of Justice. (2017).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 Post-Legislative Memorandum - Submitted to the Justice Select Committee on 30 October 2017*.

부 록 <<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 조사표>



시·도		사군구	
응답자 ID			

법률복지 수요자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법률복지 수요자의 법률복지 서비스 욕구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본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응답하기 불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하고 조사 참여를 중단하시더라도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없을 것입니다.

조사 내용은 정책대안 수립과 연구의 학술적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과 개인 정보는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라며,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주관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 문 의 처: (주)한국리서치 장보현 부장 ☎ 02-3014-0172

[응답자 기록사항]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만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세

A. 법률서비스 욕구 및 이용경험

A1. 귀하께서는 과거에 법률상담, 소송대리, 법률사무지원 등 법률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었으며 이용했음 → A1-1번에 응답하고 A2번으로
 ② 있었으나 이용하지 못함 → A1-1번과 A1-2에 응답하고 B1번으로
 ③ 없음 → B1번으로

A1-1. 당시에 어떤 분야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셨습니다?

(여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경험 순으로 2개까지만 기입합니다.)

1개인 경우에는 1개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1순위	2순위

분야	사례
① 민사일반(부동산, 채권/채무, 대매/중여, 손해배상, 계약/해제, 경매,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기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② 행정일반(행정처분, 조세, 행정심판, 행정소송, 기타)	수급자 선정 산재보험 신청 장애등급 결정 등
③ 가사관련(혼인/이혼, 호적/친자, 상속, 가정폭력, 기타)	호적관계 정리
④ 형사관련(고소, 재산범죄, 명예훼손, 성관련범죄, 사기/공갈죄, 교통사고, 폭행, 기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다단계 사기 피해 폭행 피해자/피의자
⑤ 상사관련(회사관련,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⑥ 지식산업담당(특허, 저작권/상표)	

→ A1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A2번 문항으로

→ A1번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A1-2번 문항으로

A1-2. 귀하께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어디서 이용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였다
- ② 주변에 관련단체 혹은 기관을 찾기가 힘들었다
- ③ 상담, 서류 작성 등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 ④ 비용이 부담되었다
- ⑤ 기타 _____

→ B1번 문항으로

※ 아래 A2번~A2-3번 문항은 A1-1번의 1순위 사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A2. 귀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법률지원을 이용하십니까?

- ① 일반 변호사(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 ③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또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④ 전국 60곳의 시청, 구청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된 변호사(법률홈닥터)
- ⑤ 마을변호사(전화상담)
- ⑥ 공익변호사
- ⑦ 기타 _____

A2-1. 귀하께서 당시 이용하셨던 법률지원은 다음 중 어느 경우였습니까?

- ① 법률상담 및 정보 제공
- ②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 ③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 ④ 소송 제기 및 용소(원고의 소송에 피고로서 응함)
- ⑤ 권리 보전(압류, 가압류, 가처분 관련)

A2-2. 귀하께서 당시 법률지원 이용에 지불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만원

(변호사 상담비용, 법원에 지급한 인지대 및 송달료,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

→ 무료인 경우 '0' 기입하고, B1번 문항으로

A2-3. 귀하께서는 당시 법률지원 이용료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 ② 별로 부담되지 않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부담되었다
- ⑤ 매우 부담되었다

B. 법률구조사업 인지 및 이용경험

B1. 귀하께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구조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 법률구조사업이란? 】

- 법률구조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법률구조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 한국가정법률사무소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① 있음 → B1-1번으로

② 없음 → C1번으로

B1-1. 어떤 경로로 법률구조사업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 ① 홍보책자를 통해서
- ② TV, 신문광고 및 언론을 통해서
- ③ 인터넷을 통해서
- ④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 ⑤ 시·군·구청 등 공무원을 통해서(사례관리사 포함)
- ⑥ 상담소 및 복지관 등 복지기관을 통해서
- ⑦ 법원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 ⑧ 기타 _____

B2. 귀하께서는 과거에 법률구조사업을 이용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 B2-1번으로

② 없음 → C1번으로

B2-1. 귀하께서는 어떤 기관의 법률구조사업을 이용하셨습니다?

(여러 기관을 이용한 경우 최근 경험 순으로 2개까지만 기입합니다.

1개인 경우에는 1개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1순위	2순위

- ①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
-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정폭력, 아동양육비 등 문제 지원)
- ③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혼인관계, 상속/유언, 가정폭력 등 문제 지원)
- ④ 법률홈닥터(전국 60곳의 시청, 구청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된 변호사)
- ⑤ 마을변호사(전화 상담)
- ⑥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⑦ 기타 _____

B2-2. 다음 중 어떤 종류의 법률구조사업을 이용하셨습니다?

(여러 종류를 이용한 경우 최근 경험 순으로 2개까지만 기입합니다.

1개인 경우에는 1개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1순위	2순위

- ① 법률상담 및 정보 제공
- ②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 ③ 법률서류 및 문서 작성 도움
- ④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 ⑤ 소송 제기(원고의 소송에 피고로서 응함)
- ⑥ 권리 보전(압류, 가압류, 가처분 관련)

B3. 다음 중 어떤 분야의 법률구조사업을 이용하셨습니까?

(여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경험 순으로 2개까지만 기입합니다.)

1개인 경우에는 1개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1순위	2순위

분야	사례
① 민사일반(부동산, 채권/채무, 매매/중여, 손해배상, 계약/해제, 경매,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기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② 행정일반(행정처분, 조세, 행정심판, 행정소송, 기타)	수급자 선정 산재보험 신청 장애등급 결정 등
③ 가사관련(혼인/이혼, 호적/친자, 상속, 가정폭력, 기타)	호적관계 정리
④ 형사관련(고소, 재산범죄, 명예훼손, 성관련범죄, 사기/공갈죄, 교통사고, 폭행, 기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다단계 사기 피해 폭행 피해자/피의자
⑤ 상사관련(회사관련,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⑥ 지식산업담당(특허, 저작권/상표)	

※ 아래 B3-1번~B3-6번 문항은 B3번의 1순위 사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B3-1. 귀하께서 당시 법률구조사업 이용에 대해 지불한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변호사 상담 비용, 법원에 지급한 인지대 및 송달료,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 포함)

()만원

→ 무료인 경우 '0' 기입하고, B3-4번 문항으로

B3-2. 귀하께서 법률구조사업 이용과 관련하여 지불한 기타 부대비용은 얼마입니까?

(부대비용: 인지대, 각종 서류발급(병원진단서 등) 비용 등)

()만원

B3-3. 이용하신 법률구조사업에 대해 지불한 비용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 ② 별로 부담되지 않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부담되었다
- ⑤ 매우 부담되었다

B3-4. 이용하신 법률구조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 ② 약간 불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

B3-5. 이용하신 법률구조사업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②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되었다
-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B3-6. 이용하신 법률구조사업을 주위 다른 분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C. 법률복지 욕구

C1. 지역에 법률구조사업을 제공하는 변호사 수(공익변호사)는 몇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읍/면/동별 1인 배치
- ② 시/군/구별 3인 배치
- ③ 시/군/구별 2인 배치
- ④ 시/군/구별 1인 배치
- ⑤ 2~3개 시군구에 1인 배치

C2. 법률구조사업을 제공하는 변호사와 어떤 형태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화상담으로도 충분
- ② 대면상담이 필요함

C3. 법률구조사업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어디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각급 법원·검찰청 근처
- ② 시·군·구청 내
- ③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내

C4. 어떤 종류의 법률구조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취약계층 전달 변호사를 통하여 계약,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상시적 법률상담
- ② 민사소송 등 소송 진행시 소송구조
- ③ 개업 변호사 전화번호 연계 등을 통한 법률 상담

C5. 귀하께서 법률구조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벼운 내용의 상담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주시요.)

- ① 30분 이내
- ② 30분에서 1시간 이내
- ③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내
- ④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내
- ⑤ 2시간 이상

C6. 귀하께서 법률구조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부담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20만원 미만
- ②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
- ③ 30만원에서 50만원 이내
- ④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

D. 법의식 일반

D1. 귀하께서 생활법률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습니까? 다음 중에서 자주 접하는 경로를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언론매체(신문, TV, 라디오 등)
- ② 인터넷
- ③ 주위 사람
- ④ 책(법전)이나 잡지(법령 정보지)
- ⑤ 정부홍보물
- ⑥ 학교
- ⑦ 기타 _____
- ⑧ 시·군·구청 및 동주민센터나 상담소·복지관 등 복지기관

D2. 귀하께서는 평소에 뉴스에 보도되거나 신문에 실리는 판결에 관한 기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 ② 관심이 없는 편이다
- ③ 관심이 있는 편이다
- ④ 매우 관심이 있다

D3. 귀하께서는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 또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에 있는 규정(약관)을 어느 정도 자세히 읽어 보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① 전혀 읽지 않는다
- ② 별로 읽지 않는다
- ③ 대충 읽는다
- ④ 매우 자세히 읽는다

D4. 귀하께서는 평소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렵다
- ② 어려운 편이다
- ③ 쉬운 편이다
- ④ 매우 쉽다

D5. 귀하께서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법률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출장교육을 진행합니다.)

- ① 교육을 받아본 적 있다
- ② 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

E. 응답자 일반사항

E1.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

E2. 귀댁의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수로, 반드시 1명 이상 기입) ()명

E3. 최근 3개월 귀댁의 월평균 총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원

E4.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댁의 가구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하위층
- ② 중하층
- ③ 중간층
- ④ 중상층
- ⑤ 상위층

E5. 귀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차상위복지제도 수급 대상입니까?

-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② 차상위복지제도 수급(차상위 자활사업참여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령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③ 비수급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